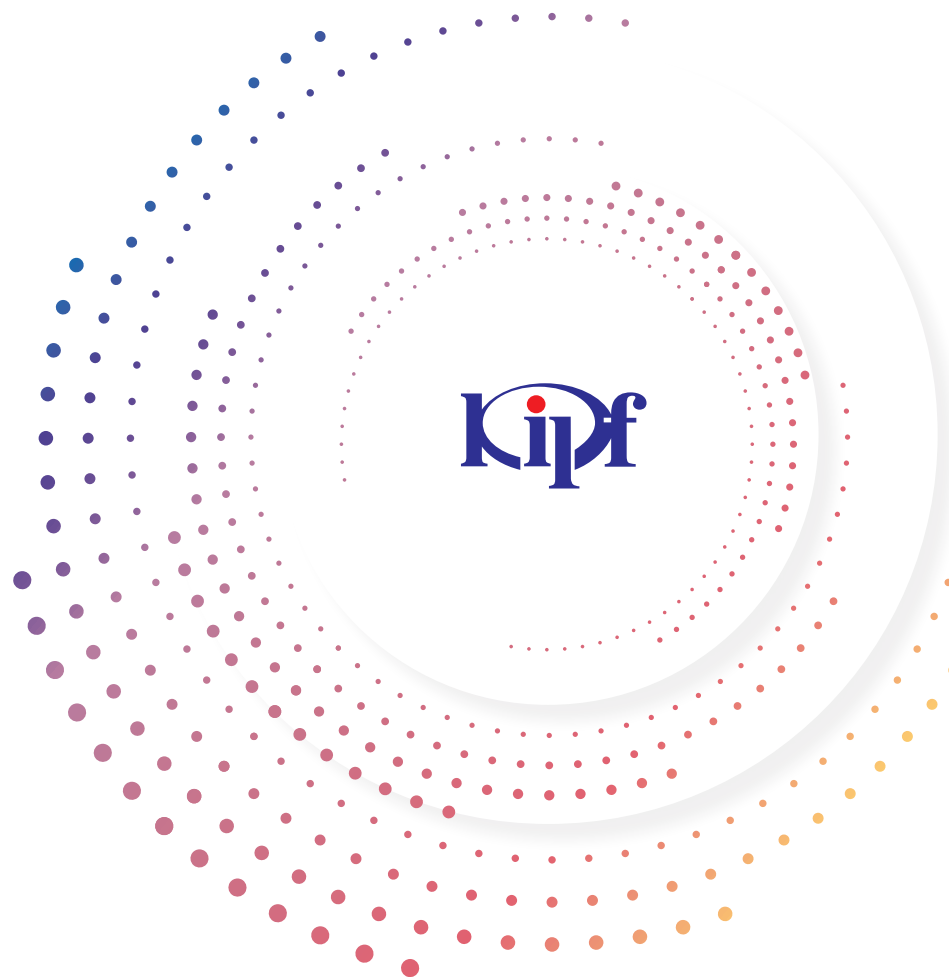


2025. 7.

# 재정 동향

2025 | 상반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재정 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연구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 센터장

**김정환** 재정제도분석팀장

**강민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EU)

**구윤모**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미국)

**김은숙**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김인유**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스웨덴)

**김진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호주)

**박신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중국)

**박창우**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일본)

**박하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중국)

**봉재연** 재정지출분석센터 책임연구원(IMF, OECD)

**염보라**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독일)

**오윤서**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프랑스)

**이정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일본)

**한혜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EU)

**황보경**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IMF, OECD)

**김도현** 재정지출분석센터 위촉연구원(대한민국)

**김미영** 재정지출분석센터 위촉연구원(EU)

2025. 7.

# 재정 동향

2025 | 상반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재정  
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logo for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is centered within a decorative graphic. The graphic consists of several concentric, overlapping circles of varying shades of light blue. Each circle is composed of numerous small white dots, creating a textured, dotted effect. The 'kipf' logo itself is rendered in a white, serif font, with the letters 'i' and 'p' featuring lowercase-style descenders.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modern, set against a solid light blue background.

# Contents

## 제1부

---

### 국내 재정동향

---

I. 국내 재정동향	2
1.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2
2. 2024년 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발표	3
3.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	4
4.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5
5.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6
6.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7
7.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8
8. 「2025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	10
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11
10.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12

## 제2부

---

### 국제기구 재정동향

---

I. 유럽연합(EU)	16
1. 유럽연합(EU) 예산	17
2. European Semester	23
3. 통화 정책	36
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42
II. 국제통화기금(IMF)	61
1. 경제·재정전망 및 평가	61
2. 연례협의	72
3. 금융지원	78

---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80
1. 경제·재정전망 및 평가 .....	80
2. 주요 경제지표 동향 .....	92

## 제3부

---

### 주요국 재정동향

---

I. 미국 .....	110
1. 예산 및 결산 .....	111
2. 주요 정책 및 이슈 .....	129
II. 일본 .....	159
1. 예산 및 결산 .....	160
2. 주요 정책 및 이슈 .....	165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181
III. 독일 .....	185
1. 예산 및 결산 .....	186
2. 주요 정책 및 이슈 .....	191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212
IV. 프랑스 .....	224
1. 예산 및 결산 .....	225
2. 주요 정책 및 이슈 .....	233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	239
V. 영국 .....	256
1. 예산 및 결산 .....	257
2. 주요 정책 및 이슈 .....	269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288

---

VI. 호주 .....	295
1. 예산 및 결산 .....	296
2. 주요 정책 및 이슈 .....	301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314
VII. 중국 .....	318
1. 예산 및 결산 .....	319
2. 주요 정책 및 이슈 .....	321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336
VIII. 스웨덴 .....	343
1. 예산 및 결산 .....	344
2. 주요 정책 및 이슈 .....	353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362
[주요 자료 출처] .....	372

---



2025년 상반기 재정동향

# 제 1 부

## 국내 재정동향

### I. 국내 재정동향

# I 국내 재정동향<sup>1)</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01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2025. 2. 10.)

- 2월 10일, 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 총세입 535.9조원, 총세출 529.5조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이며,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잉여금은 2.0조원(일반회계 0.4조원, 특별회계 1.6조원) 기록

표 1-I-1 2024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 (D)	세잉여금 (E=C-D)
합계	535.9	529.5	6.5	4.5	2.0
일반회계	437.3	435.4	1.9	1.4	0.4
특별회계	98.6	94.0	4.6	3.0	1.6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보도자료, 2025. 2. 10., p. 3.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도현 위촉연구원(dhgim@kipf.re.kr)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보도·발표·게재자료 등을 발췌·정리하여 작성

**02 2024년 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발표(2025. 2. 27.)**

- 정부는 2월 27일 2024년 말 대외채무 동향을 발표
  - 대외채권은 1조 681억달러로 전년 말(1조 445억달러) 대비 236억달러 증가
  - 대외채무는 6,700억달러로 전년 말(6,725억달러) 대비 25억달러 감소
    - (만기별)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69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62억달러 증가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232억달러로 87억달러 감소
    - (부문별) 중앙은행(+3억달러),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117억달러)의 외채가 증가한 반면, 정부(△94억달러)와 은행(△51억달러)의 외채는 감소
  - 순대외채권은 3,981억달러로 전년 말(3,720억달러) 대비 261억달러 증가
  
-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 단기외채/총외채(21.9%) 비중,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35.3%) 전년 대비 증가
    - \* 직전 5개년 평균: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27.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37.1%
  -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171.8%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

**표 1-I-2 대외채무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비
총 외채(억달러)	4,707	5,506	6,307	6,733	6,725	6,700	△25
단기외채(억달러)	1,355	1,601	1,651	1,740	1,407	1,469	+62
장기외채(억달러)	3,353	3,906	4,656	4,993	5,319	5,232	△87
단기외채/총외채(%)	28.8	29.1	26.2	25.8	20.9	21.9	+1.0%p
단기외채/보유액(%)	33.1	36.1	35.7	41.1	33.5	35.3	+1.8%p
대외채권(억달러)	9,572	10,344	10,825	10,351	10,445	10,681	+236
순대외채권(억달러)	4,864	4,838	4,519	3,618	3,720	3,981	+261

주: 통계는 「2024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 2025. 2. 27. 참조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말 대외채권채무동향」, 보도자료, 2025. 2. 27., p. 2.

- (향후 대응) 미국 신정부 정책 파급영향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

## 03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2025. 3. 25.)

### ■ 정부는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

### ■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2024. 8.)에 따른 2024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 국세감면율은 16.3% 추정

-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1.6조원, 2.4%\*)하나 국세수입총액 감소(△6.0조원)로 국세감면율 상승 예상

\* 국세감면액 증가율(%): ('19) 12.8, ('20) 6.7, ('21) 7.7, ('22) 11.4, ('23) 9.8, (5년 평균) 7.6

표 1-I-3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실적)	2024년(전망)	2025년(전망)
국세감면액(A)	69.8	71.4	78.0
국세수입 총액(B) <sup>1)</sup>	370.4	364.4	412.2
국세감면율[A/(A+B)]	15.8	16.3	15.9
국세감면 한도 <sup>2)</sup>	14.3	14.6	15.6

주: 1) 국세수입 총액: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2) 국세감면 한도(「국가재정법」 제88조)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홍보자료, 보도자료, 2025. 3. 25., p. 4.

### ■ 202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
-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 뒷받침
-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추진

## 04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발표(2025. 3. 25.)

- 정부는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
  -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
  - 또한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
- 2026년 예산은 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② 산업경쟁력 강화 ③ 지속가능한 미래 ④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분야에 투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
  -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
  - (산업경쟁력 강화) AI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
  - (지속가능한 미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
  -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
- 한편 세입기반 약화와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
  - (재정지출 효과 제고)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융합·협업을 강화
  -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
    -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시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 강구
  - (투자재원·방식 다각화) 민간자원과 민감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05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2025. 4. 8.)**

- 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
  - (총세입) 2023년 결산 대비 39.0조원 증가(+7.8%)한 535.9조원
    - 국세수입: 경기둔화 여파 지속 등으로 2023년 대비 7.5조원 감소한 336.5조원
    - 세외수입: 공자기금예수금 확대 등으로 2023년 대비 46.5조원 증가한 199.4조원
  - (총세출) 2023년 결산 대비 39.0조원 증가(+8.0%)한 529.5조원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 594.5조원(전년 대비 20.5조원 증가), 총지출 638.0조원(전년 대비 27.3조원 증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GDP 대비 △1.7%)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1.2조원 흑자, GDP 대비 2.4%
  - (관리재정수지) 104.8조원 적자, GDP 대비 △4.1%

**표 1-I-4 2024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결산	예산	결산	2023년 결산 대비	2024년 예산 대비
총수입(A)	573.9	612.2	594.5	20.5	△17.7
총지출(B)	610.7	656.6	638.0	27.3	△18.6
통합재정수지(C=A-B) (GDP 대비, %)	△36.8 (△1.5)	△44.4 (△1.8)	△43.5 (△1.7)	△6.8 (△0.2%p)	0.9 (0.1%p)
사회보장성기금수지(D)	50.3	47.2	61.2	11.0	14.0
관리재정수지(E=C-D) (GDP 대비, %)	△87.0 (△3.6)	△91.6 (△3.6)	△104.8 (△4.1)	△17.7 (△0.5%p)	△13.1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별첨, 보도자료, 2025. 4. 8., p. 3.

**06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5. 4. 18.)**

-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해 1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 (구성) 이번 추경은 ① 재해·재난대응 ②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③ 민생지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로 구성
  - (재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1조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1조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 (재정총량 변화) 총지출이 본예산 대비 12.2조원 증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Delta$ 2.8%에서  $\Delta$ 3.2%로 증가,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6.0조원 증가

**표 1-I-5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조원)

주요 내용	규모
<b>① 재해·재난 대응</b>	<b>3.2</b>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
<b>② 통상 및 AI 지원</b>	<b>4.4</b>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AI 생태계 혁신	1.8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b>③ 민생 지원</b>	<b>4.3</b>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b>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b>	<b>0.2</b>
<b>총 규모</b>	<b>12.2</b>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보도자료, 2025. 4. 18., p. 3.

**07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25. 5. 1.)**

-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을 증액하여 정부안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추경 규모 확대
    -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용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 감액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Delta 2.8\%$ 에서  $\Delta 3.3\%$ 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

**표 1-I-6 재정 총량표**

(단위: 조원, %)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A)	2025년 추경		증감	
			정부안 (B)	국회 확정 (C)	본예산 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 총수입	612.2	651.6	652.8	652.8	+1.3	-
(증가율)	( $\Delta 2.2$ )	(6.4)	(6.6)	(6.6)		
◇ 총지출	656.6	673.3	685.5	687.1	+13.8	+1.6
(증가율)	(2.8)	(2.5)	(4.4)	(4.6)		
■ 통합재정수지	$\Delta 44.4$	$\Delta 21.7$	$\Delta 32.6$	$\Delta 34.3$	$\Delta 12.5$	$\Delta 1.6$
(GDP 대비, %)	( $\Delta 1.8$ )	( $\Delta 0.8$ )	( $\Delta 1.2$ )	( $\Delta 1.3$ )	$\Delta 0.5\%p$	$\Delta 0.1\%p$
■ 관리재정수지	$\Delta 91.6$	$\Delta 73.9$	$\Delta 84.7$	$\Delta 86.4$	$\Delta 12.5$	$\Delta 1.6$
(GDP 대비, %)	( $\Delta 3.6$ )	( $\Delta 2.8$ )	( $\Delta 3.2$ )	( $\Delta 3.3$ )	$\Delta 0.5\%p$	$\Delta 0.1\%p$
■ 국가채무	1,195.8	1,273.3	1,279.4	1,280.8	7.4	1.4
(GDP 대비, %)	(47.4)	(48.1)	(48.4)	(48.4)	+0.3%p	+0.1%p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보도자료, 2025. 5. 1., p. 4.

- 주요 증액 내역
  - (재해·재난 대응: +0.1조원)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0.03조원,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0.09조원
  - (통상 및 AI 지원: +0.1조원)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0.01조원, AI 생태계 혁신 +0.1조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02조원

- (민생 지원: +0.8조원)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0.4조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4조원
- (기타: +0.9조원) 건설경기 보강 +0.8조원, APEC 정상회의 등 +0.04조원

■ 주요 감액 내역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축소(△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193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3개 사업 총 △2,381억원 감액

표 1-I-7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5년 1회 추경안(A)	2025년 1회 추경(B)	증감 (B-A)
◇ 총지출	656.6	673.3	685.5	687.1	+1.6
1. 보건·복지·고용	237.6	248.7	249.1	249.7	+0.6
2. 교 육	95.2	98.5	98.5	98.6	+0.1
3. 문화·체육·관광	8.7	8.8	8.8	8.8	+0.1
4. 환 경	12.5	13.0	13.1	13.2	+0.0
5. R&D	26.5	29.6	29.7	29.7	+0.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2	34.1	34.0	△0.2
7. SOC	26.4	25.4	25.6	25.9	+0.3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26.4	26.6	+0.1
9. 국 방	59.4	61.2	61.2	61.2	-
10. 외교·통일	7.5	7.7	7.7	7.7	+0.0
11. 공공질서·안전	24.4	25.0	25.7	25.8	+0.1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0.7	111.6	112.0	+0.4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보도자료, 2025. 5. 1., p. 8.

## 08 「2025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2025. 5. 28.)

-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5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
- (기금존치평가 결과) 기술보증기금 등 19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개 기금 폐지, 3개 기금 조건부 존치, 9개 기금 사업조정 및 수입원 발굴, 4개 기금 사업 발굴 및 지출소요 모니터링 권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을 통한 중장기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 권고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
  - 기후대응기금 등 중기가용자산 과소 기금 9개는 사업조정 및 수입원 발굴 권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과다 기금 4개는 사업 발굴 및 지출소요 모니터링 등 권고
- (기금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27개 기금을 대상으로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은 전년 대비 평점 상승, 국민연금기금은 평점이 소폭 하락했으나, '양호' 등급 유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은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상승
  - 국민연금기금은 해외투자 수익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상대수익률 저조로 평점이 소폭 하락하여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 유지
-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할 예정

**0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5. 6. 19.)**

-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5조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 (구성) 이번 추경은 ①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②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③ 세입 경정으로 구성
  - (재원)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을 활용하고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
  - (재정총량 변화) 제1회 추경에 비해 총지출은 14.9조원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0.9%p 증가, 국가채무는 GDP 대비 0.6%p 증가

**표 1-I-8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조원)

주요 내용	규모
<b>① 경기 진작</b>	<b>15.2</b>
소비여력 보강	11.3
건설경기 활성화	2.7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
<b>② 민생 안정</b>	<b>5.0</b>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
고용안전망 강화	1.6
취약계층 물가안정 지원	0.7
지방재정 보강 등	1.3
<b>③ 세입경정</b>	<b>10.3</b>
<b>총 규모</b>	<b>30.5</b>

자료: 기획재정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보도자료, 2025. 6. 19., p. 3.

**10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25. 7. 4.)**

-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진작, 민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30.5조원에서 31.8조원으로 추경 규모 확대
    - 2.4조원을 증액하고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 감액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

**표 1-I-9 재정 총량표**

(단위: 조원, %)

	2025년 본예산	2025년 1회 추경 (A)	2025년 2회 추경		증감	
			정부안 (B)	국회 확정 (C)	1회 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 총수입	651.6	652.8	642.4	642.4	△10.4	-
(증가율)	(6.4)	(6.6)	(4.9)	(4.9)		
◇ 총지출	673.3	687.1	702.0	703.3	16.2	1.3
(증가율)	(2.5)	(4.6)	(6.9)	(7.1)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21.7 (△0.8)	△34.3 (△1.3)	△59.6 (△2.2)	△60.8 (△2.3)	△26.6	△1.3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73.9 (△2.8)	△86.4 (△3.3)	△110.4 (△4.2)	△111.6 (△4.2)	△12.5	△1.6
■ 국가채무 (GDP대비, %)	1,273.3 (48.1)	1,280.8 (48.4)	1,300.6 (49.0)	1,301.9 (49.1)	21.1	1.3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보도자료, 2025. 7. 4., p. 4.

- 주요 증액 내역
  - (경기진작: +2.1조원) 소비여력 보강 +2.0조원, 건설경기 활성화 +0.02조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0.1조원
  - (민생 안정: +0.3조원) 취약계층 지원(발달장애인, 영유아, 농어민 등) +0.3조원

■ 주요 감액 내역

-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을 통해 △1.1조원 감액
  -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하여 펀드 사업(3개 사업, △1,600억원) 감액
  -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ODA 사업 조정(3개 사업, △74억원)으로 감액

표 1-I-10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1회 추경	2025년 2회 추경안(A)	2025년 2회 추경(B)	증감 (B-A)
◇ 총지출	673.3	687.1	702.0	703.3	+1.3
1. 보건·복지·고용	248.7	249.7	252.0	251.7	△0.4
2. 교육	98.5	98.6	96.2	96.2	+0.1
3. 문화·체육·관광	8.8	8.8	8.9	8.9	-
4. 환경	13.0	13.2	12.8	12.9	+0.1
5. R&D	29.6	29.7	29.7	29.7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4.0	35.5	35.5	△0.2
7. SOC	25.4	25.9	26.2	26.0	△0.1
8. 농림·수산·식품	25.9	26.6	26.8	27.0	+0.1
9. 국방	61.2	61.2	61.4	61.3	△0.1
10. 외교·통일	7.7	7.7	7.5	7.3	△0.2
11. 공공질서·안전	25.0	25.8	25.8	25.8	-
12. 일반·지방행정	110.7	112.0	125.3	127.2	+1.9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보도자료, 2025. 7. 4., p. 8.



## 제2부

# 국제기구 재정동향

- I. 유럽연합(EU)
- II. 국제통화기금(IMF)
-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I 유럽연합(EU)<sup>2)</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1 EU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분류
2025. 2. 18.	EU 이사회, 2026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	EU 예산
2025. 6. 4.	EU 집행위원회, 2026년 EU 연간 예산안 발표	
2025. 1. 21.	EU 이사회(경제재정위원회),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 관련 21개 회원국 재정 지출 경로 승인	European Semester
2025. 1. 21.	EU 이사회, 안정성장협약의 초과적자시정절차 회원국에 대한 권고 채택	
2025. 2. 18.	EU 이사회, 헝가리 재정 지출 경로 승인	
2025. 6. 4.	EU 집행위원회, 2025년 Europea Semester 하의 봄 패키지 발표	
2025. 3. 19.	EU 집행위원회, 유럽 방위 백서 및 재무장(ReArm) 계획 발표	
2025. 4. 22.	EU 집행위, 국방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EU 예산 규정의 개정안 발표	
2025. 5. 27.	EU 이사회, 1,500억유로 규모의 유럽안보조치(SAFE) 대출 수단 승인	
2025. 4. 17.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하향 조정	통화 정책
2025. 5. 26.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글로벌 유로(Euro)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	
2025. 6. 5.	유럽중앙은행(ECB), 2025년 6월에 정책금리 0.25%p 인하 결정	
2025. 3. 7.	EU 통계청,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 통계 발표	경제 통계
2025. 1. 22.	EU 통계청, 2024년 3분기 재정통계(재정수지·채무) 발표	재정 통계
2025. 4. 22.	EU 통계청, 2024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	
2025. 3. 17.	EU 집행위원회, 『2024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4)』 발표	보고서
2025. 5. 19.	EU 집행위원회, 2025년 봄 경제전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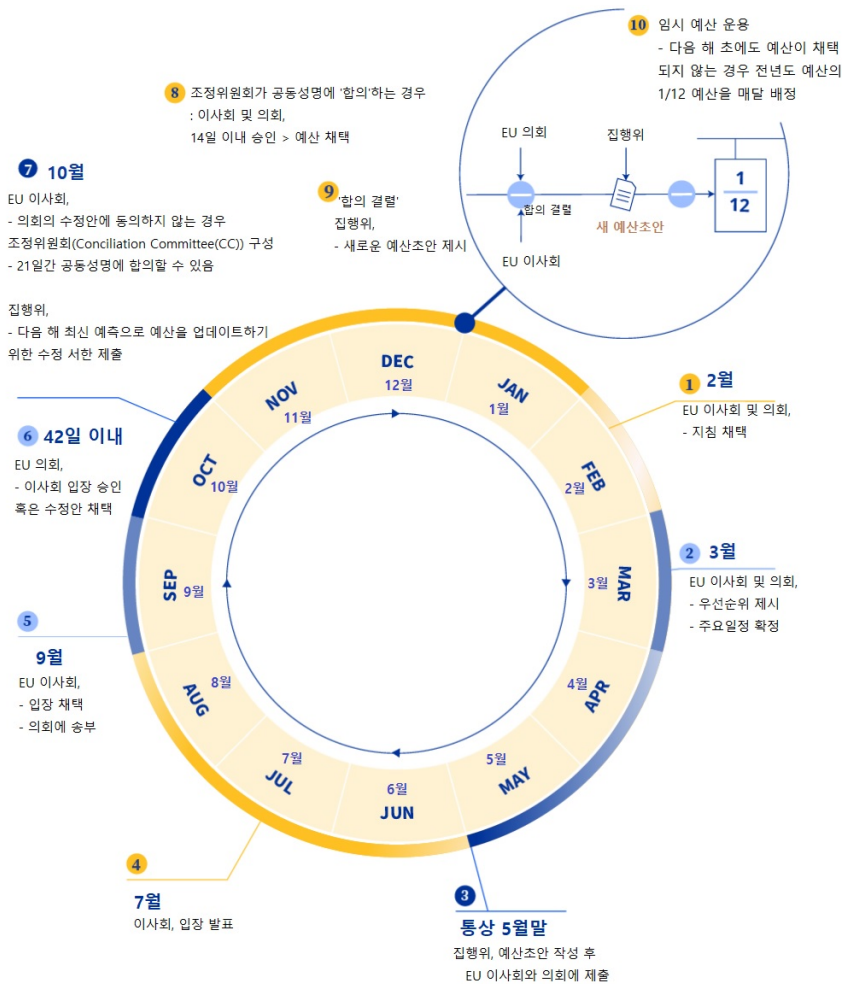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민재 선임연구원(mckang@kipf.re.kr), 한혜란 선임연구원(hrhan@kipf.re.kr), 김미영 위촉연구원(mykim21@kipf.re.kr)

# 01 유럽연합(EU) 예산

※ EU 연례 예산은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국가 예산을 보완하여 농촌·저개발 지역 개발, 환경 보호, Erasmus+ 등 교육·연구 지원, EU 국경 보호, 국제 개발 촉진, 인권 증진 등을 지원함. EU 집행위원회가 7년간의 장기 예산인 다년도 재정체계에서 합의된 지출 우선순위와 한도 내에서 매년 연례 예산을 편성하고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 순으로 EU 예산이 확정됨<sup>3)</sup>

그림 2-I-1 EU 연간 예산 일정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 - EU budget timing*, 2025. 2. 4.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budget-timeline/>, 검색일자: 2025. 7. 7.

3) European Union, "How the EU budget is adopted," [https://european-union.europa.eu/institutions-law-budget/budget/how-eu-budget-adopted\\_en](https://european-union.europa.eu/institutions-law-budget/budget/how-eu-budget-adopted_en), 검색일자: 2025. 7. 7.

표 2-I-2 EU 연간 예산 일정

통상 시기	주체	내용
2월	EU 이사회 및 의회	예산편성 지침 채택
3월	EU 이사회 및 의회	우선순위 제시, 주요 일정 합의
통상 5월 말	EU 집행위	예산 초안 작성 후 EU 이사회 및 의회에 제출
7월	EU 이사회	예산 초안에 대한 입장 발표
9월	EU 이사회	입장 채택 및 의회에 송부
42일 이내	EU 의회	이사회로부터 입장 전달받은 후 42일 이내 의회는 이사회 입장 승인 혹은 의회 수정안 채택
10월	EU 이사회	의회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소집되고, 21일간 공동성명(Joint text)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 부여
	EU 집행위	다음 해 최신 예측으로 예산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수정 서한 제출
11월~	(조정위원회 합의) 이사회와 의회	14일 이내에 승인 → 예산 채택
	(조정위원회 합의 결렬) 집행위	새로운 예산 초안을 제출
새해 초	-	새해 초에도 연간 예산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 임시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1/12 규모의 예산을 매월 할당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 - EU budget timing*, 2025. 2. 4.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budget-timeline/>, 검색일자: 2025. 7. 7.

#### ■ EU 이사회, 2026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2025. 2. 18.)<sup>4)</sup>

- (의의)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내년 예산안 초안을 준비하는 데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는 EU 예산 편성 지침을 설정
- (역할 및 원칙) EU 단년도 예산의 주요 역할인 EU 장기 목표 달성 및 정치적 우선순위<sup>5)</sup> 이행을 강조(전년과 동일)
  - 실제 필요에 맞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4) EU 이사회, "EU annual budget 2026: Council sets guidelines for next year's EU budget," 2025. 2. 1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2/18/eu-annual-budget-2026-council-sets-guidelines-for-next-year-s-eu-budget/>, 검색일자: 2025. 2. 19.

5) EU는 5년마다 EU의 우선순위와 목표 달성 방법을 포함하는 전략적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EU 장기 예산인 다년도 재정 체계에 반영함. 2024~2029년 전략적 의제는 2024년 6월 27일 EU 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으로, 세 가지 우선순위 '자유롭고 민주적인 유럽', '강하고 안전한 유럽', '번영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을 2024~2029년 전략적 의제로 설정함. 참고로 이전 기간인 2019~2024년 전략적 의제는 시민과 자유 보호, 강하고 활력 있는 경제기반 구축, 기후 중립적·친환경적이며 공정하고 모두를 위한 유럽 건설, 세계무대에 유럽의 이익과 가치 전파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함(EU, "European Union priorities 2019-20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european-council/strategic-agenda-2024-2029>, 검색일자: 2025. 2. 20.).

- 수 있도록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상한 내에서 충분한 여력이 필요
- (올해 주안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과 차세대 EU 이자 재원 문제를 언급
    - (우크라이나)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유지하고, 회복과 장기 재건에 힘쓰는 등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강조
    - (차세대 EU) 차세대 EU 프로그램의 이자 지급 비용을 2025년 기존 예산 한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026년 예산 초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예산 집행 잔여 금액 및 우선순위 재조정, 특별수단 항목 등을 통해 조달)
    - (EU 프로그램 이행 보장) 지역 긴급 지원 프로그램<sup>6)</sup>과 같이 EU 차원의 프로그램 이행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

#### ■ EU 집행위원회, 2026년 EU 연간 예산안 발표(2025. 6. 4.)<sup>7)</sup>

- ※ EU의 연간 예산은 매년 EU 집행위원회가 EU 장기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입장 채택 또는 조정 절차 등 합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확정됨
- (편성 방향)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EU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경쟁력, 이민 관리, 안보 및 국방, 전략적 투자 등 EU의 주요 우선순위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산 규모) 2026년 EU 예산안은 승인기준<sup>8)</sup>으로 1,933억유로, 지급기준으로 1,922억 유로를 편성했고,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1,053억유로를 통해 이를 추가로 보완

6) Regional Emergency Support to Reconstruction(RESTORE) 프로그램은 EU 차원에서 EU 회원국에 재난 및 위기 발생에 대응하여 구조 및 재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EU 집행위, "Regional Emergency Support to Reconstruction - amending regulation proposal," 2024. 10. 16.,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information-sources/publications/legislation/2024/regional-emergency-support-to-reconstruction-amending-regulation-proposal\\_e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information-sources/publications/legislation/2024/regional-emergency-support-to-reconstruction-amending-regulation-proposal_en), 검색일자: 2025. 2. 27.)

7) EU 집행위원회, "EU budget 2026: Providing crucial funding for EU priorities in times of global volatility," 2025. 6. 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396](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396), 검색일자: 2025. 6. 20.  
 \_\_\_\_\_, "Questions and answers on Draft Annual Budget 2026," 2025. 6. 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1397](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1397), 검색일자: 2025. 6. 20.  
 \_\_\_\_\_,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6*, 2025,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statement-estimates-2026\\_en](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statement-estimates-2026_en), 검색일자: 2025. 6. 20.

8) 예산 금액은 승인(commitments)기준과 지급(payments)기준으로 제시됨. 승인기준은 미래의 지급을 위해 해당 연도에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계약 의무의 총 금액을 의미함.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또는 과거에 체결된 법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임. 지급기준 예산은 승인기준 예산과 같은 해에 집행될 수도 있고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이후 다수 해에 걸쳐 집행될 수 있음.

-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승인기준으로 3.1% 감소하고 지급기준으로 23.8% 증가
- 2026년 예산안 규모는 EU 회원국 GNI의 1.0% 수준임
- 기타 특수 기금을 제외하면 EU의 장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의 2026년 한도액보다 지급기준으로 186억 유로의 여유자금(margin)을 확보
- (주요 예산 배분)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주요 예산 부문에 재원을 편성함<sup>9)</sup>
  - (Heading 1-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연구·혁신, 전략적 투자, 단일시장, 우주 부문 등에 승인기준 221억유로, 지급기준 233억유로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
    - (연구·혁신) 연구·혁신 분야에 약 141억유로를 편성했으며, 이 중 약 130억유로는 EU의 주요 연구·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배정하고 유럽반도체법의 자금 조달도 지원
    - (유럽 전략적 투자)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sup>10)</sup>에 30억유로, Digital Europe 프로그램<sup>11)</sup>에 10억유로, InvestEU 프로그램<sup>12)</sup>에 약 3억유로를 배정하는 등 유럽 전략적 투자에 약 46억유로를 편성
    - (단일시장) 단일시장 프로그램(Single Market Programme)<sup>13)</sup>에 약 6억유로, 사기방지과 과세 및 세관 협력에 약 2억유로를 배정하는 등 단일시장 분야에 약 10억유로를 편성
    - (우주) 우주 부문에 약 23억유로를 배정했으며, 이는 주로 유럽 우주 프로그램(European Space Programme)<sup>14)</sup>에 지출 예정
  - (Heading 2-결속, 회복력 및 가치) 경제·사회·지역적 통합과 회복력 및 가치 분야에

9) 이하 내용의 예산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승인기준 금액임.

10) 운송, 에너지, 디지털 분야의 EU 국가 간 상호 연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그램

11) 기업, 시민, 공공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고급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보장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

12) 유럽의 지속 가능한 투자, 혁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자금을 활용해 주요 우선순위 분야에 투자를 촉진

13) 식품 안전,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시장 감독, 유럽 표준 개발 등의 분야에 EU 단일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도록 자금을 지원

14) 지구 관측, 위성 항법, 연결성, 우주 연구·혁신 관련 핵심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

승인기준 예산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약 717억유로, 지급기준 예산은 전년 대비 67.9% 늘어난 약 746억유로를 편성

-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경제적·사회적·지리적 통합과 친환경적 전환 및 EU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통합 부문에 약 421억유로를 배정하고, 유럽 사회 기금 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sup>15)</sup>를 통한 사람·사회적 결속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145억유로를 배정
- (회복력 및 가치) 교육 및 이동 기회 창출을 위해 Erasmus+<sup>16)</sup>에 43억유로, 예술인·창작가 지원을 위해 약 4억유로, 정의·권리·가치 제고 지원에 약 3억 3천만유로 등 회복력 및 가치 분야에 약 151억유로를 배정
- (Heading 3-천연자원 및 환경) 천연자원 및 환경 분야 예산은 승인기준 약 570억유로, 지급기준 531억유로로 전년 대비 각각 0.4%, 2.0% 증가
  - (농업 및 해양 정책) 공동 농업정책에 538억유로,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에 8억유로 등 농업 및 해양 정책 부문에 약 548억유로를 지원
  - (환경 및 기후 대응)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LIFE 프로그램<sup>17)</sup>에 약 8억유로, 녹색 전환에 따른 취약 부문 지원을 위한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에 약 13억유로 등 총 약 22억유로를 지원
- (Heading 4-이주 및 국경관리) 이주 및 국경관리 예산은 승인기준 약 50억유로, 지급기준 약 39억유로로 전년 대비 각각 4.6%, 21.3% 증액하여 편성
  - (국경 관리) 통합국경관리기금(Integrated Border Management Fund)<sup>18)</sup>에 12억유로, 유럽 국경 및 해안경비대(Frontex)에 11억 3천만유로 등 국경 보호에 약 27억유로를 편성
  - (이주 및 이민) EU 우선순위에 따른 이민자 및 망명자 지원에 약 21억유로 등 이주 관련 지출에 약 23억유로 편성
- (Heading 5-안보 및 국방) 안보 및 국방 분야 예산은 승인기준 28억유로, 지급기준 23억유로로 전년 대비 각각 6.5%, 5.0% 증액 편성

15) EU의 고용, 사회적 포용, 교육, 숙련 기술에 대한 정책과 구조개혁을 지원

16) EU의 교육, 직업 훈련, 청년,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17) 환경 및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기술, 방법 등을 개발, 실증, 홍보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18) EU의 국경 관리, 비자 정책, 세관 통제 장비 등을 지원하는 기금

- (안보) 내부 안보 기금(Internal Security Fund)<sup>19)</sup> 지원 약 3억 3천만유로, 유로폴 (Europol) 예산 약 2억 6천만유로 등 안보 부문 예산은 승인기준 약 8억유로를 편성
- (국방)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sup>20)</sup>의 방위력 개발 및 연구 지원에 10억유로, 군사 동원 지원에 약 2억 5천만유로 등 국방 문제 대응을 위해 승인기준 약 20억유로를 편성
- (Heading 6-파트너 및 세계) 전 세계 파트너와 이해관계 지원을 위해 승인기준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약 155억유로, 지급기준은 전년 대비 14.5% 늘어난 약 165억유로를 편성
- 인접국 지원·개발 원조·국제협력<sup>21)</sup>에 약 101억유로, EU 사전가입지원(IPA III)<sup>22)</sup>에 22억유로, 서부발칸지역 발전기금에 5억유로, 인도적 지원 기금에 약 19억유로 등 배정
- 우크라이나 기금(Ukraine Facility)을 통해 38억 9천만유로를 추가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67억유로의 추가 대출을 지원

표 2-I-3 2026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6년 예산안						2026년 경제회복 기금 (NGEU) <sup>1)</sup>
	2026년		2025년		전년 대비 변화율(%)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2,054	23,309	21,480	20,461	2.7	13.9	1,379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1,726	74,617	77,980	44,445	-8.0	67.9	99,329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56,593	59,698	66,366	33,260	-14.7	79.5	25
2.b. 회복력 및 가치	15,134	14,920	11,614	11,185	30.3	33.4	99,303
3. 천연자원 및 환경	56,972	53,133	56,731	52,092	0.4	2.0	4,610
4. 이주 및 국경관리	5,010	3,887	4,791	3,204	4.6	21.3	-
5. 안보 및 국방	2,804	2,251	2,633	2,143	6.5	5.0	-
6. 파트너 및 세계	15,505	16,512	16,308	14,426	-4.9	14.5	-
7. 유럽 공공 행정	13,475	13,475	12,845	12,845	4.9	4.9	-
기타 특수 기금	5,716	5,023	6,670	5,594	-14.3	-10.2	-
<b>합계</b>	<b>193,262</b>	<b>192,207</b>	<b>199,438</b>	<b>155,209</b>	<b>-3.1</b>	<b>23.8</b>	<b>105,318</b>
<b>(EU 27개국 GNI 대비 %)</b>	<b>1.00%</b>	<b>1.00%</b>	<b>1.07%</b>	<b>0.84%</b>	-	-	-

주: 1)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은 지급기준

자료: EU 집행위원회,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6, 2025.*

19) EU의 내부 안보 강화를 위해 테러, 중대 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보안 관련 위험 관리 등을 지원

20) 유럽의 국방 분야 연구개발과 방위 산업 기반 육성을 지원

21) Global Europe: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22) IPA(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III은 EU 가입을 지원하고자 가입 후보국이 EU의 규정과 정책에 점진적으로 부합하도록 개혁 채택·이행을 지원

## 02 European Semester

※ European Semester는 EU 회원국들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맞추어 조율하기 위한 연간 순환과정임

### 가. 안정성장협약 이행

- EU 이사회(경제재정위원회),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 관련 21개 회원국 재정 지출 경로 승인(2025. 1. 21.)<sup>23)</sup>
  - (개요)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시행(2024. 4.)의 다음 단계로 EU 이사회는 EU 27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첫 번째 중기 재정 구조 계획(순지출<sup>24)</sup> 경로 포함)을 설정하는 권고안을 채택함
    - (이전) 2024년 10월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에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제출하였고,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기 재정 구조 계획에 관한 평가 보고서<sup>25)</sup>를 발표함
    - (이사회 승인)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평가 보고서의 재정 경로 수치에서 변경 없이 이번 EU 이사회에서 승인
      - 순지출 경로와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승인받은 21개 국가는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sup>26)</sup>이 해당되고, 6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독일)은 계획 제출 지연 등으로 포함되지 않음
  - (목적)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은 새로운 EU 경제 거버넌스의 근간으로 회원국들의 개혁 및 투자를 포함한 재정 경로를 담고 있고, 채무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의 촉진에 기여함
    -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위한 단일 운영 지표로서 각 회원국의 순지출 경로는 향후 4~5년 동안 회원국에서 재정정책 수립과 건전한 재정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

23) EU 이사회,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Council sets fiscal expenditure paths for 21 member states," 2025. 1.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1/21/economic-governance-framework-council-sets-fiscal-expenditure-paths-for-21-member-states/>, 검색일자: 2025. 1. 22.

24) 순지출은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을 의미하고, 총지출에서 이자지출, 주기적 실업수당, 일회성지출,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11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pp. 16~17, 2024. 12. 6.,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참고

26)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목표)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은 재정 조정 기간(기본 4년<sup>27)</sup>) 종료 시점에 정부 채무를 감소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 (재정 조정 기간 연장) 5개국(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은 조건부로 재정 조정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약속한 개혁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이 필요
- EU 이사회, 안정성장협약의 초과적자시정절차 회원국에 대한 권고 채택(2025. 1. 21.)<sup>28)</sup>
  - EU 이사회는 7개국(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초과적자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
    - (초과적자시정절차) EU 국가들은 EU 조약에 따라 GDP 대비 3% 적자 및 60% 채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초과적자가 발생한 경우 강화된 감독하에 시정절차를 시행하여 채무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함
    - (이전 단계) 7개국은 2024년 7월 초과적자시정절차 시정이 필요한 국가로 결정되었고,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시행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함<sup>29)</sup>
  - (권고안) 각 회원국에 대한 수정 예산 경로와 시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EU의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제출한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의 각 회원국 목표와 일치함
    - (벨기에) 2027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2.4%, 2026년 1.9%, 2027년 2.0%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프랑스) 2029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이 2025년 0.8%, 2026~2028년 1.2%, 2029년 1.1%를 준수해야 함
      - (변경) 2024년 11월 집행위 2025년 0.0%, 2026~2028년 1.4%, 2029년 1.3% 권고에서 변경됨
    - (이탈리아) 2026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1.3%,

27) 4년 혹은 5년(국가별 입법 주기에 따라 다름)

28) EU 이사회, "Stability and growth pact: Council adopts recommendations to countries under 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25. 1.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1/21/stability-and-growth-pact-council-adopts-recommendations-to-countries-under-excessive-deficit-procedure/> 검색일자: 2025. 1. 22.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6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p. 18., 2024. 12. 6.,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2026년 1.6%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몰타) 2027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이 2025년 6.0%, 2026~2027년 5.8%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폴란드) 2028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6.3%, 2026년 4.4%, 2027년 4.0%, 2028년 3.5%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루마니아) 2030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5.1%, 2026년 4.9%, 2027년 4.7%, 2028년 4.3%, 2029년 4.2%, 2030년 3.9%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슬로바키아) 2027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3.8%, 2026년 0.9%, 2027년 1.6%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 EU 이사회, 헝가리 재정 지출 경로 승인(2025. 2. 18.)<sup>30)</sup>

- 2024년 4월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sup>31)</sup>에 따라 재정 지출 경로를 담은 국가별 중기 재정 구조 계획에 대한 EU 집행위와 이사회의 평가·승인이 진행 중
  - (21개국) 2025년 1월 21일 EU 27개 회원국 중 21개국 회원국의 재정 지출 경로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함(헝가리 포함 6개국은 제출 지연 등으로 제외)

30)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Council sets fiscal expenditure path for Hungary and adopts recommendation to correct its excessive deficit situation," 2025. 2. 1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2/18/council-sets-fiscal-expenditure-path-for-hungary-and-adopts-recommendation-to-correct-its-excessive-deficit-situation/>, 검색일자: 2025. 2. 19.

\_\_\_\_\_,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Hungary," 2025. 2. 7.,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894-2025-INIT/en/pdf>, 검색일자: 2025. 2. 19.

31) • (목표) 2024년 4월말부터 발효된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과 개혁·투자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함.

• (개정) 기존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적자 3%, 채무 60%)은 유지하고, 각 회원국별 채무 감축 기간을 기본 4년~최대 7년 허용하고 있음.

• (준칙)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에 따른 재정준칙은 국가별 순지출\* 경로를 통해 재정 운용 수칙과 내용에 있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은 총지출에서 이자지출, 주기적 실업수당, 일회성지출, 팬데믹 관련 긴급 조치를 제외한 금액

- (수치) 조정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반정부 채무를 신뢰할 수 있는 하향 경로 혹은 신중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보장

- (내용) 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투자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EU 우선순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함.

- (헝가리) 2024년 7월 EU 이사회는 헝가리가 재정적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초과적자 상태로 판단되었고, 초과적자 시정을 위한 요구 사항이 증기 재정 구조 계획에 반영됨
- 헝가리는 재정 지출 경로로 2025~2028년 평균 순지출 증가율을 4.0%로 설정하였고, 이사회는 이행 약속 및 투자 계획에 대해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 (거시경제 가정) 잠재 GDP 성장률은 2024년 1.4%, 2025년 1.5%, 2028년 1.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 디플레이터 성장률은 2024년 7.2%, 2025년 4.1%로 감소한 후 2028년 3.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재정 지출 경로) 명목 순지출 증가율을 2025년 4.3%, 2026년 4.0%, 2027년 3.9%, 2028년 3.7%로 설정<sup>32)</sup>
  - (이행 시 재정전망) 약속한 순지출 경로를 따르고 가정이 실현될 경우, 헝가리 일반정부 채무는 2024년 GDP 대비 74.0%에서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68.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4.9%에서 2026년 2.5%, 2028년에는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표 2-I-4 헝가리 재정 지출 경로(순지출 증가율) 이행 약속 및 이행 시 재정전망**

(단위: %, GDP 대비 %)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5 ~ 2028 평균 증가율	2038
순지출 명목 증가율(%)	-	4.6	4.3	4.0	3.9	3.7	4.0	-
순지출 증가율 누적 (2023년 대비 총 증가율)(%)	-	4.6	9.1	13.5	17.9	22.2	-	-
잠재 GDP 성장률(%)	-	1.4	1.5	1.7	1.7	1.6	1.6	-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	7.2	4.1	3.5	3.4	3.4	3.6	-
<b>순지출 경로 이행 시 재정 예상</b>								
일반정부 채무(GDP 대비 %)	73.4	74.0	73.5	71.3	69.9	68.2	-	54.5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6.7	-4.9	-3.6	-2.5	-2.0	-1.5	-	-2.2

자료: EU 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Hungary," 2025. 2. 7.,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894-2025-INIT/en/pdf>, Table 3 & Table 4, 검색일자: 2025. 2. 19.

32) EU 회원국이 순지출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재정준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 집행위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 재정완화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는 이사회에 초과적자시 정절차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 초과적자시정절차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와 미준수 시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됨.

## ■ EU 집행위원회, 2025년 European Semester 하의 봄 패키지\* 발표(2025. 6. 4.)<sup>33)</sup>

- \* 매년 5월경 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EU 연례 정책 조정 주기인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내에서 봄 패키지를 통해 각 회원국에 경제정책과 개혁에 관한 권고를 전달한 후, 국가별 실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EU 집행위의 권고는 전년 가을에 발표된 가을 패키지에 제시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각 회원국의 경제·사회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함
- ※ 봄 패키지는 재정, 고용, 구조개혁, 경쟁력, 사회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보고서들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고, 이번 동향은 봄 패키지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봄 패키지 공식 발표문(Spring Package Communication)<sup>34)</sup> 중 재정·거시경제 감시 내용을 정리함<sup>35)</sup>

### 1) 개혁된 안정성장협약<sup>36)</sup>하의 재정 감시

- (의의) 2025년 봄 패키지는 2024년 4월부터 개혁된 안정성장협약에 따른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첫 번째 연간 감시 주기 마무리를 의미
  - 2024년 독일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집행위에 첫 번째 중기재정구조계획을 제출하였고, 2025년 4월 말 회원국들은 집행위에 중기계획의 이행 상황을 연례 이행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s)를 통해 보고함
- (평가) 집행위는 중기재정계획 이행(순지출 경로, 구조개혁, 투자 등)과 초과적자시정 절차, 적자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함(방위 관련 ‘국가 예외 조항’ 적용을 평가에 반영)
  - (국가 예외 조항<sup>37)</sup> 공동 발동)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과 방위 관련 투자

33)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2025. 6. 4.,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5-european-semester-spring-package\\_en](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5-european-semester-spring-package_en), 검색일자: 2025. 6. 10.; \_\_\_\_\_, 2025 “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Communication,” 2025. 6. 4.,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5-european-semester-spring-package-communication\\_en](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5-european-semester-spring-package-communication_en), 검색일자: 2025. 6. 10.

34)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Communication,” 2025. 6. 4.,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5-european-semester-spring-package-communication\\_en](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5-european-semester-spring-package-communication_en), 검색일자: 2025. 6. 10.

35) 봄 패키지 구성 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 보고서(Country reports): 회원국의 경쟁력에 관한 주요 과제를 분석
- 회원국 권고안(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CSRs): 개혁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제시
- 국가 예외 조항(national escape clause) 발동에 대한 EU 이사회 권고안
- 재정 감시 관련 보고서(「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26조 3항에 따른 보고서): 3% 재정적자 기준을 초과한 회원국(스페인,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핀란드)에 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
- 특정 국가에 대한 예산안 초안(벨기에) 및 중기 재정 계획(리투아니아)에 대한 의견 보고서
- 5개 회원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로스, 아일랜드)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이후 감시 보고서
- 고용 정책 가이드라인 연장(유지) 제안 보고서

36)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재정 규율 체계로, 1997년 발효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규율 기능을 수행

부족과 지출 비효율로 인한 EU 방위 역량 저하에 대응하여, EU 재정 규율하에서 방위비 증가 허용

- 2025년 3월 EU의 대규모 방위력 강화 전략인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Readiness 2030)’<sup>38)</sup>에 따라 국가 예외 조항을 발동하여 회원국의 국방 예산 증가를 한도 내에서 허용하여 이사회가 권고한 순지출 증가율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16개국이 국가 예외 조항 적용을 요청하였고, 집행위 채택 후 이사회 승인이 대기 중
  - 16개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 이사회 승인으로 이 조항이 발동되면 해당 국가는 2025~2028년 동안 GDP의 최대 1.5%까지 순지출 상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수 있음
- (초과적자시정절차<sup>39)</sup>) 초과적자가 이전에 확인된 8개 회원국에 대해 이사회 권고에 따른 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6개국은 절차 유보로 평가함
  - 초과적자시정절차 유보 6개국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 몰타
  - 벨기에는 중기재정구조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재정 경로를 권고 받았고, 이사회 승인 대기 중인 상태
  - 루마니아<sup>40)</sup>는 순지출 증가율이 조정 경로를 크게 초과하는 등 집행위는 ‘실질적 조치

37) 국가 예외 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은 2024년 4월부터 도입된 EU 규정으로 “회원국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공공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승인된 순지출 경로로부터 이탈”을 허용함(Article 26 of Regulation (EU) 2024/1263)(EU 집행위, “Accommodating increased defence expenditure withi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 검색일자: 2025. 6. 26.)

38) 2025년 3월 발표된 유럽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최대 8천억유로(회원국의 국방 예산 증가 허용(재정 규제 완화) 6,500억유로,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대출 기금 1,500억유로) 안보 프로젝트(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69566/EPRS\\_BRI\(2025\)76956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69566/EPRS_BRI(2025)769566_EN.pdf), 검색일자: 2025. 6. 18.)

39)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가 발동되는 기준은 ① 재정적자 - 일반정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를 위반했거나, 위반 위험이 있는 경우(예외로 일시적/예외적 또는 현저히 감소 중인 경우) ②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고, 기준치와의 차이를 만족스러운 속도로 줄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예외로 충분한 속도로 감소 중인 경우).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반 위험이 있는 경우 집행위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재정위원회에 검토를 거쳐 이사회 판정 및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를 결정함(EU 공식 법령 웹사이트(EUR-Lex), “Article 126 TF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12012E126>, 검색일자: 2025. 6. 26.)

40) 2019년부터 GDP 대비 3% 재정적자 기준 이상의 초과적자 상태(일시적이지 않음)로 판단되었고, 여러 해 동안 이 기준을 초과함. 정부의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 노력이 미흡했으며, 공공 부문 임금과 연금 인상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여 적자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됨.

없음' 결정을 이사회에 권고하였고, 재정 및 거시경제 안정성의 유지와 EU 자금 지원을 위해 초과적자시정절차 요건을 신속히 충족시켜야 함

- (중기재정구조계획 이행 상황 평가\*) 재정 평가에서 12개국은 최대 순지출 증가율 상한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투자 및 개혁 조치 이행 여부도 평가함

\* 이번 평가는 2025년 봄 경제전망에 근거한 예비 평가이며, 2025년 가을 추가 평가, 2026년 봄 최종 평가가 이뤄질 예정

- (재정 평가) 3개국(벨기에,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은 중기재정구조계획상의 순지출 경로가 EU 규정에 부합한다는 집행위 평가와 이사회 승인 완료

- 리투아니아는 집행위 중기계획 승인 권고받음
- 오스트리아는 집행위 평가 및 이사회 승인 대기 중이며, 독일은 중기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평가가 어려우며 2025년 7월 말까지 제출 예정
-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대체로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음(스페인은 2025년 순지출 증가율은 상한선을 초과했지만, 연간 0.3%, 누적 0.6%의 GDP 초과 기준은 충족함, 포르투갈은 국방비 관련 예외를 고려하면 누적 초과는 0.6% 미만)
-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상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탈 위험이 있다고 평가

- (투자 및 구조개혁 약속 이행 평가) 중기재정구조계획 이행 평가의 재정 조정 기간 연장 조건인 투자 및 개혁 조치를 약속한 국가들의 투자 및 개혁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함

- 6개국(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루마니아)이 해당됨
- 루마니아는 2025년 1월 25일 이사회 권고에 대한 이행은 불충분으로 간주함

- (재정적자 기준 준수 여부 평가) 4개 회원국(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라트비아)에 대해 재정적자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은 2024년 일반정부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기준을 초과하였고, 라트비아는 2025년 초과가 예상되어 평가 대상이 됨
- 핀란드, 스페인, 라트비아는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는 불요하며, 오스트리아는 초과적자 존재 여부를 규정하는 결정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고 판단

2) 회원국의 거시경제 불균형 평가<sup>41)42)</sup>

- (평가 필요성) EU 단일시장의 안정성과 통화 동맹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거시경제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함<sup>43)</sup>
  - 지속 가능한 성장, 재정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
- (평가 결과) 2024년 12월 발표한 2025년 경고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에서 심층 검토 대상<sup>44)</sup>으로 선정된 10개국의 거시경제 불균형의 존재 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 추세를 보임
  - 2025년에 심층 검토 대상 회원국은 사이프러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에스토니아가 해당
  - (에스토니아) 최근 몇 년간 비용 경쟁력 악화 및 장기 침체,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전반적 취약성은 현재 완화된 상태로 평가되어 불균형 없음으로 간주
  - (독일) 높은 경상수지 흑자 관련 취약성이 완화되었고, 최근 정책 진전을 고려하여 불균형 없음으로 평가됨
  - (사이프러스) 경제 성장 및 재정 흑자 지속으로 대외 및 민간 부채 관련 취약성이 완화되었으며, 주요 취약성 대응을 위한 정책 이행으로 불균형 없음으로 평가. 단

41)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는 ① 매년 EU 집행위가 거시경제 불균형 스코어보드(13개 지표)와 정성적 판단을 기초로 위험 징후가 있는 국가를 '경고 메커니즘 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AMR)'로 식별 ② 경고 메커니즘 보고서에서 심층검토(In-Depth Review(IDR)로 불균형의 존재 여부, 지속성 등을 평가 ③ 불균형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 예방적 조치로 국가별 권고에 반영/과도한 불균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정 조치로 과도한 불균형 절차(Excessive Imbalance Procedure(EIP))를 시행하여 국가에 시정 계획 제출 요청 및 필요 시 제재 부과

42)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의 거시경제 불균형 판단은 총 13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짐. ① 대외 불균형과 경쟁력 지표(5개)로 경상수지(3년 평균으로 GDP 대비 -4%에서 +6% 사이), 순국제 투자지위(GDP 대비 -35%), 실질실효환율(42개 교역 상대국 기준, 3년간 % 변화, 기준선에서 유로존 국가는 ±3%, 비유로존 국가는 ±10% 이내 변동), 선진국 대비 수출 실적(3년간 변화, -3%), 명목 단위노동비용 지수(시간당)(3년간 % 변화, 유로존 국가는 9%, 비유로존 국가는 12%) ② 대내 불균형 지표(6개)로 일반정부 총부채(GDP 대비 60%), 가계 부채(비영리기관 포함, 통합 기준, GDP 대비 55%), 비금융법인 부채(통합 기준, GDP 대비 85%), 가계 신용 흐름(비영리기관 포함, 통합 기준, 전년도 부채잔액 대비 14%), 비금융법인 신용 흐름(직접투자 제외, 통합 기준, 전년도 부채잔액 대비 13%), 명목 주택가격지수(1년 % 변화, 9%) ③ 고용지표(2개)로 실업률(15~74세 노동력 인구 기준, 10%),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5~64세 인구 기준, 3년간 변화율 -0.2%p 이하)를 기준으로 함(EU 통계청, "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 Information on data," <https://ec.europa.eu/eurostat/web/macroeconomic-imbalance-procedure/information-data>, 검색일자: 2025. 6. 26.).

43) EU 공식 법령 웹사이트(EUR-Lex), "Regulation (EU) No 1176/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on the prevention and correction of macroeconomic imbalances,"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176/oj>, 검색일자: 2025. 6. 26.

44) 심층검토(In-Depth Review, IDR) 대상국은 거시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거나, 겪을 위험이 있다고 집행위가 판단하여 더 면밀한 분석과 정책을 권고하고, 지적된 문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EU 차원의 권고 혹은 시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여전히 거시경제 불균형 상태이며, 관련 취약성이 상당한 수준
- (루마니아) 과도한 거시경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2024년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비용 경쟁력 악화로 취약성이 더욱 심화됨

## 나. 안정성장협약 내 유연성: 국방예산 확대 논의

### ■ EU 집행위원회, 유럽 방위 백서<sup>45)</sup> 및 재무장(ReArm) 계획 발표(2025. 3. 19.)<sup>46)</sup>

45) 방위 백서 및 재무장 계획 관련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3월 10~11일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에 비추어 '유럽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 회원국들이 주로 단독으로 또는 해외에서 방위 물품을 여전히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2024. 9.)에서 확인함.
- 2025년 3월 6일 유럽 이사회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유럽 및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연합에 대한 실존적 도전'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역할을 줄이고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함.
- 2025년 3월 19일 EU집행위는 "유럽 방위 백서 및 재무장 계획/준비 2030"을 발표함.
- 국방 지출에 관해 안정성장협약의 국가면책조항 적용을 원하는 회원국은 2025년 4월 말까지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EU 이사회 조정을 통해 회원국 공동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EU 집행위는 접수된 요청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6월에 이사회 권고안을 채택하며 7월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을 준비할 예정  
(EU 집행위원회,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 검색일자: 2025. 4. 1.); \_\_\_\_\_,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by Mario Draghi, September 2024"; \_\_\_\_\_,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 검색일자: 2025. 4. 1.; \_\_\_\_\_, "Commission unveils the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and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검색일자: 2025. 4. 1.; \_\_\_\_\_,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Accommodating increased defence expenditure withi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 검색일자: 2025. 4. 1.)

46)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unveils the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and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검색일자: 2025. 3. 21.; \_\_\_\_\_, "Acting on defence to protect Europeans," 2025.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defence/future-european-defence\\_en](https://commission.europa.eu/topics/defence/future-european-defence_en), 검색일자: 2025. 3. 21.; \_\_\_\_\_,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30b50d2c-49aa-4250-9ca6-27a0347cf009\\_en?filename=White%20Paper.pdf](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30b50d2c-49aa-4250-9ca6-27a0347cf009_en?filename=White%20Paper.pdf), 검색일자: 2025. 3. 21.; \_\_\_\_\_, "Questions and answers on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2025.

- EU 집행위와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30년을 기점으로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 방위태세(Readiness 2030)” 로드맵에 따른 방위 백서를 발표하고, EU 집행위는 투자 패키지인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을 제안
- (방위 백서) 지난 몇 년간 유럽 방위 투자 및 지출 부족에 대응하여 회원국별 방위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방위 강화 및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7개 핵심 방안을 제시함
  - 회원국들이 지정한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하면서 국가별 방위 역량 격차 해소
  - 공동 조달을 통해 유럽 방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강화 및 유럽-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연계 강화
  - 규제 개선을 통해 EU 단위 방위 시장 통합 촉진
  -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혁신
  -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 태세 향상(군사 기동성, 전략 물자 비축, 국경 강화)
  -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방위 협력 확대
- (재무장(ReArm) 계획) EU 집행위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총 8,000억유로 이상의 방위 투자 패키지를 제안함
  - ① 회원국 방위 지출 확대)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재정준칙을 준수하면서 회원국들이 재정 여력을 갖도록 조건\* 충족 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예외 조항인 국가면책조항<sup>47)</sup> 적용을 허용함
    - \* EU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상 방위 지출 항목 증가만 가능하고, 연간 최대 GDP의 1.5% 까지, 최장 4년간 가능
  - ② 유럽안보조치(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도입) EU 예산 여유 재원을 담보로 최대 1,500억유로를 조달하여 방위 투자를 지원하며, 대출 형태로 요청 국가에

3.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790](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790), 검색일자: 2025. 3. 25.

47) 국가면책조항(the National Escape Clause: NEC)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면책조항(the General Escape Clause)과 다르게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공공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순지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예외사항이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서는 안 됨. i)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음 ii)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해당 회원국의 공공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 iii) 국가면책조항에 따른 이탈은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함. 국가면책조항(NFC) 활성화 절차는 EU 규정 제26조에 따름(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Accommodating increased defence expenditure withi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box 1',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 검색일자: 2025. 3. 25.)

지급<sup>48)</sup>

- (③ 민간 자본 동원) 유럽투자은행이 방위·안보 프로젝트로 대출 범위를 확대토록 하고, 2025년 3월 EU 집행위가 추진 발표한 저축투자연합<sup>49)</sup>이 방위 산업 등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EU 집행위, 국방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EU 예산 규정의 개정안 발표(2025. 4. 22.)<sup>50)</sup>

- (배경) 2030년까지 방위 강화를 위한 안보·방위 로드맵인 ‘유럽 방위 백서(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 Readiness 2030)’ 목표에 따라 EU 국방 기술 및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함
- (방향)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한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EP)<sup>51)</sup>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 역량 향상, 증대, 혁신을 유도하고, 국방 프로젝트에 관한 EU 자금 접근 절차를 간소화함
- (① STEP 범위 확대) 국방 관련 기술 및 제품, 특히 유럽 방위 백서(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 Readiness 2030)의 우선 역량 기술을 포함하도록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EP)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프로젝트에 STEP 인증(seal)<sup>52)</sup>을 부여함

48)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안한 유럽안보조치(SAFE)는 회원국이 유럽 방위 기술 및 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공공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하는 금융 수단임.

- 최소 2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방위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 1,500억유로 규모에서 시장금리 대비 우대 적용한 이자와 대출기간의 혜택(최대 45년)으로 대출금을 지원함.
- 대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EU 채권은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4%를 초과할 수 없는 한도에 따라 EU 예산 본부에서 보증 지원함.
- 긴급 조달과 장기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미사일, 탄약, 드론, AI 무기체계 등 우선품목을 정하고 지원하며, 이러한 공공조달 제품은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함.
- 신청 국가는 유럽 방위산업 투자 계획(European Defence Industry Investment Plan)을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가 계획의 전략성, 부합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 지원을 승인함(EU 집행위원회, “Proposal for a COU 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 검색일자: 2025. 3. 27.).

49) 저축투자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은 EU의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 저축이 생산성이 높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가계의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조달 환경을 개선하며, 금융시장의 통합 등을 추진(EU 집행위,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https://finance.ec.europa.eu/regulation-and-supervision/savings-and-investments-union\\_en](https://finance.ec.europa.eu/regulation-and-supervision/savings-and-investments-union_en), 검색일자: 2025. 4. 2.)

50) EU 집행위, “EU budget set for defence-related boost under new regulation,” 2025. 4. 2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76](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76), 검색일자: 2025. 4. 23.

51)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STEP))은 유럽 산업을 지원하고, 유럽 핵심 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세 가지 부문(디지털 기술과 딥 테크놀로지 혁신, 청정 및 자원 효율적인 기술, 생명공학)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해당 투자 분야에 대한 자금을 조달·지원함(EU,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https://strategic-technologies.europa.eu/index\\_en](https://strategic-technologies.europa.eu/index_en), 검색일자: 2025. 4. 28.)

- ‘유럽 방위 기금’, ‘호라이즌 유럽’,<sup>53)</sup>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sup>54)</sup>의 선정 프로젝트에 STEP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방위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함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민간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이중용도(dual-use) 및 방위 관련 혁신 스타트업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이중용도 응용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토록 하여, AI 기가팩토리<sup>55)</sup> 구축 및 운영으로 국방 기술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② EU 예산 내 이전 허용) 각 EU 회원국들이 원하는 경우 EU 예산 내 결속 기금 (cohesion funds)<sup>56)</sup>에서 ‘유럽방위기금’이나 ‘탄약생산지원법’<sup>57)</sup>과 같은 방위 프로그램으로 이전을 허용하여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 52) STEP Seal은 유럽연합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품질 인증 마크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유럽연합의 전략적 의존성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경우 부여함. STEP 인증을 받으면 EU 예산(유럽지역개발기금, 결속 기금 등)에서 자금 지원을 촉진하여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며, STEP 포털에 등록되어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를 더 잘 알릴 수 있음. STEP 인증은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함. 2024년 12월 STEP Seal을 처음으로 받은 프로젝트 130개가 발표된 바 있음(EU,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 For investors,” [https://strategic-technologies.europa.eu/investors\\_en#paragraph\\_190](https://strategic-technologies.europa.eu/investors_en#paragraph_190), 검색일자: 2025. 5. 2.)
- 53)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연구와 혁신 지원을 위한 2021~2027년 EU 장기 예산하의 EU 예산 항목 중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총 예산은 935억유로로 편성되어 있음(EU 집행위, “Horizon Europe,” [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horizon-europe\\_en](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horizon-europe_en), 검색일자: 2025. 4. 25.)
- 54)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 연구와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고급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확산과 같이 다섯 가지 중요한 분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2021~2027년 EU 장기 예산하의 EU 예산 항목 중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총 예산은 75.9억유로로 편성되어 있음(EU 집행위, “Digital Europe Programme,” [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digital-europe-programme\\_en](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digital-europe-programme_en), 검색일자: 2025. 4. 28.)
- 55) 약 10만개의 최첨단 시칩을 탑재한 대규모 공장 시설로, 기존 AI 공장보다 4배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함. 2025년 2월 파리에서 열린 AI Action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EU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2천억유로의 AI 투자를 유치하는 이니셔티브인 InvestAI를 발표하였고, AI 행동 계획을 2025년 4월 발표함. AI 행동계획에서는 다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EU의 AI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다섯 가지 핵심 축 - 대규모 AI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AI 기가팩토리 구축 포함), 대용량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성 증대, EU 전략 부문에서 알고리즘 개발 및 AI 도입 촉진, AI 기술 강화 및 인재 양성, 규제 간소화)(EU 집행위, “Commission sets course for Europe’s AI leadership with an ambitious AI Continent Action Plan,” 2025. 4. 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1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13), 검색일자: 2025. 4. 29.)
- 56) EU의 경제·사회·영토 차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중 하나로,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EU 평균의 90% 미만인 회원국이 해당됨 (EU 집행위, “Cohesion Fund,”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cohesion-fund\\_e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cohesion-fund_en), 검색일자: 2025. 5. 7.)
- 57) 유럽 전역에 탄약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EU 회원국들이 국방 관련 공급망 병목 현상과 탄약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탄약 재고를 보충하고,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5억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하고 있음(EU 집행위, “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 (ASAP) at a glance,”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eu-defence-industry/asap-boosting-defence-production\\_en](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eu-defence-industry/asap-boosting-defence-production_en), 검색일자: 2025. 4. 29.)

- (③ 국방 관련 인프라 강화) 결속 기금을 유럽연결사업(CEF)<sup>58</sup>에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이중용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AI, 5G 시스템 등과 같은 이중용도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CEF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
  - (다음 단계) 이번 개정안 패키지는 EU 차원의 국방 분야 규제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EU 집행위에서 발표될 예정인 국방 분야 간소화 패키지(Omnibus Defence Simplification Package)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예정
- EU 이사회, 1,500억유로 규모의 유럽안보조치(SAFE) 대출 수단 승인(2025. 5. 27.)<sup>59</sup>
- (유럽안보조치(Security Action for Europe) 승인) 유럽 재무장 계획 및 준비(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sup>60</sup>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이사회는 유럽안보조치(SAFE)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함
    - 집행위원회는 자본 시장에서 최대 1,500억유로를 조달하여 EU 회원국에 미사일 방어, 드론 또는 핵심 국방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제공
    - 유럽 방위 산업 투자 계획에 따라 수요가 있을 경우 관심 있는 회원국에 지급될 예정
  - (향후 절차) 회원국들은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가 이를 평가함
    - 집행위원회는 대출 규모와 사전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이행 결정을 채택
      - 대출금의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는 사전 자금 조달은 잠재적으로 2025년부터 가장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보장
    - 회원국은 지급 요청서를 제출할 때 이행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1년에 두 번 수행할 수 있고 지급에 대한 마지막 승인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함

58) 유럽연결사업(Connecting Europe Facility(CEF))은 EU 차원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교통, 에너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연결된 유럽 횡단 네트워크의 개발을 지원함. 운송, 에너지, 디지털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고, 2021~2027년 EU 장기 예산하의 EU 예산 항목 중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총 예산은 207.3억유로로 편성되어 있음(EU 집행위, "Connecting Europe Facility," [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connecting-europe-facility\\_en](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connecting-europe-facility_en), 검색일자: 2025. 4. 29.)

59) EU 집행위원회, "EU Member States endorse €150 billion SAFE defence loan instrument to boost European defence capabilities," 2025. 5. 2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340](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340), 검색일자: 2025. 5. 28.

60)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unveils the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and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검색일자: 2025. 5. 23.

## 03 통화 정책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하향 조정(2025. 4. 17.)<sup>61)</sup>
  - (정책금리) 4월 23일부터 세 가지 주요 금리<sup>62)</sup>를 각각 0.25%p 하향 조정
    - 수신금리(Deposit facility rate) 2.50 → 2.25%
    -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 rate) 2.65 → 2.40%
    -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 2.90 → 2.65%

표 2-I-5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6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4월
수신금리	2.50	3.00	3.25	3.50	3.75	4.00	3.75	3.50	3.25	3.00	2.75	2.50	2.25
기준금리	3.00	3.50	3.75	4.00	4.25	4.50	4.25	3.65	3.40	3.15	2.90	2.65	2.40
한계대출금리	3.25	3.75	4.00	4.25	4.50	4.75	4.50	3.90	3.65	3.40	3.15	2.90	2.65

주: 날짜는 금리 변경이 적용된 시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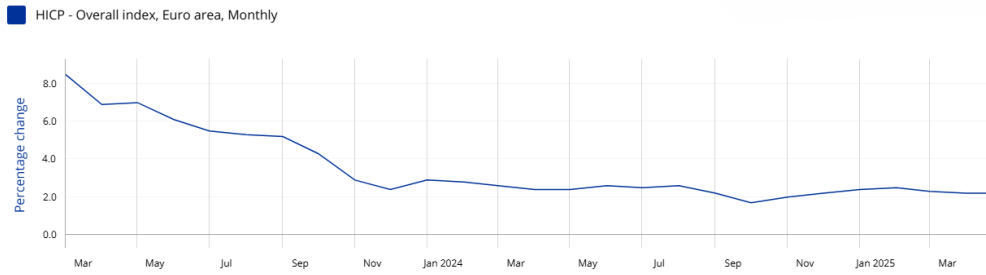
자료: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 물가상승률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2% 목표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

61) 유럽중앙은행(ECB),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5. 4.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5/html/ecb.mp250417~42727d0735.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_\_\_\_\_, "Monetary policy statement Press conference," 2025. 4.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5/html/ecb.is250417~091c625eb6.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5/html/ecb.is250417~091c625eb6.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_\_\_\_\_, "Our monetary policy statement at a glance - April 2025,"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visual-mps/2025/html/mopo\\_statement\\_explained\\_april.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visual-mps/2025/html/mopo_statement_explained_april.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62) 유럽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유로지역의 세 가지 금리 지표는 수신금리(Deposit facility rate),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 rate),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임. ① 수신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하루 동안 초과 유동성을 예치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2024년 3월에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는 이 금리를 통해 통화정책의 기초를 계속 조정(steer)해 나간다고 명시함 ② 기준금리는 적정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앙은행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공개시장운영(Main Refinancing Operations, MRO)에 적용되는 정책금리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자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됨 ③ 한계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로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그림 2-I-2 EU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



Source: EUROSTAT

주: 2023년 3월 ~ 2025년 3월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ECB Data Portal," <https://data.ecb.europa.eu>, 검색일자: 2025. 4. 18.

- (경제) 경제 상황은 이례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글로벌 무역 긴장과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이 경제전망을 어렵게 만드나 소비 요인과 투자 정책 등이 회복력을 구축해 음
  - 새로운 무역 장벽과 공급망 혼란, 금융시장의 긴장,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음
  - 견실한 노동시장,<sup>63)</sup> 높은 실질 소득, 통화정책의 영향이 소비를 뒷받침하며, EU 및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이 제조업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참고〉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국채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을 보완하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조치를 취해오며 경제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
  - (2025년 상반기 계획) 2025년 상반기에 최대 900억유로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연간 총 1,600억유로의 채권 발행 목표를 설정하고 12개월 만기 EU-Bill을 도입하여 단기 자금 조달을 확대할 예정임
  - (2024년 하반기 채권 발행) 2024년 하반기에 643억유로의 장기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중 80억유로는 NextGenerationEU<sup>64)</sup> 녹색 채권으로 발행함. 2024년에 조달된 총 장기 자금은 1,381억유로에 달하며, 이는 단일 연도에 EU가 발행한 채권 중 가장 높은 금액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25. 3. 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5DC0070>, 검색일자: 2025. 4. 30.

63) 2025년 2월 실업률은 6.1%로 하락하여 유로화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64) 차세대 EU(NextGenerationEU)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유럽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디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 3월 2.2%로 전월 대비 0.1%p 감소하였으며,<sup>65)</sup>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5년 3월 2.4%로 전월 대비 0.2%p 감소함<sup>66)</sup>

**표 2-I-6 EU 소비자 물가지수(HICP)<sup>1)</sup>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25년 1월	2025년 2월	2025년 3월
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	2.5	2.3	2.2
근원 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2.7	2.6	2.4
에너지 물가지수 상승률	1.9	0.2	-1.0
식료품 물가지수 상승률	2.3	2.7	2.9
상품 물가지수 상승률	0.5	0.6	0.6
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	3.9	3.7	3.5

주: 1) 소비자 물가지수(HICP, th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유로 지역의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소비 목적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ECB Data Portal," <https://data.ecb.europa.eu>, 검색일자: 2025. 4. 21.

- (평가)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무역 차질이 심화하면서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
  - 글로벌 무역 긴장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고조는 수출을 저해하여 유로지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유로화 강제는 물가상승률을 더욱 낮추도록 작용할 수 있음
  - 금융 시장이 악화하면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 의지를 떨어뜨리며, 무역 긴장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국내 수요에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이 수입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률을 높일 수 있음
  - 국방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나 중기적으로 투자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도할 수 있음

지탈적이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임시 회복 수단임. 집행위원회는 차세대 EU 자금의 최대 30%를 녹색 채권으로 지원할 예정(EU 집행위원회, "NextGenerationEU,"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eu-borrower-investor-relations/nextgenerationeu\\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eu-borrower-investor-relations/nextgenerationeu_en), 검색일자: 2025. 4. 30.)

65) 유럽중앙은행(ECB), "Inflation and consumer prices," [https://www.ecb.europa.eu/stats/macroeconomic\\_and\\_sectoral/hicp/html/index.en.html](https://www.ecb.europa.eu/stats/macroeconomic_and_sectoral/hicp/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4. 21.

66) 유럽중앙은행(ECB), "HICP - All-items excluding energy and food, Euro area (changing composition), Monthly," 2025. 5. 2., <https://data.ecb.europa.eu/data/datasets/ICP/ICP.M.U2.N.XEF000.4.ANR>, 검색일자: 2025. 5. 7.

- (구조개혁의 필요성) Christine Lagarde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 설명 연설에서 언급하기를,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유로지역 경제를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정 및 구조 정책\*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함

\* 세 가지 정책은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Mario Draghi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2024. 9.)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①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sup>67)</sup>은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며, 규정 간소화를 포함한 제안을 신속하게 채택해야 함
- ② 저축 투자 연합(Savings and Investment Union)<sup>68)</sup>은 EU 시민들에게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위험 자본에 대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완성해야 함
- ③ 디지털 유로(Digital Euro)<sup>69)</sup>의 잠재적 도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입법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글로벌 유로(Euro)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2025. 5. 26.)<sup>70)</sup>

- (배경) 지난 세계 경제는 미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분열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증대는 유로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67)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은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으로서 3대 과제(i) 혁신 격차 해소 ii) 경제 탈탄소화 iii) 공급망 의존도 감소)와 다섯 가지 지원 요소(① 규정 간소화 ② 단일 시장 내 장벽 제거 ③ 효율적인 금융 지원 ④ 기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⑤ 정책 간 협력 강화)를 발표함(EU 집행위원회, “Competitiveness compass,” 2025. 1. 29.,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eu-competitiveness/competitiveness-compass\\_en](https://commission.europa.eu/topics/eu-competitiveness/competitiveness-compass_en), 검색일자: 2025. 4. 28.).

68) 저축투자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은 EU의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 저축이 생산성이 높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가계의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조달 환경을 개선하며, 금융 시장의 통합과 단일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함(EU 집행위원회,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SIU),” 2025. 3. 19., [https://finance.ec.europa.eu/regulation-and-supervision/savings-and-investments-union/factsheet-savings-and-investments-union\\_en](https://finance.ec.europa.eu/regulation-and-supervision/savings-and-investments-union/factsheet-savings-and-investments-union_en), 검색일자: 2025. 4. 28.).

69) 디지털 유로(Digital Euro)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유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려는 목표를 가짐. 2020년 10월에 디지털 유로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a digital euro”)가 처음 발간되었고, 2023년 6월에 디지털 유로와 현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Single Currency Package: new proposals to support the use of cash and to propose a framework for a digital euro”)을 발표함(EU 집행위원회, “Digital euro,” [https://www.ecb.europa.eu/euro/digital\\_euro/html/index.en.html](https://www.ecb.europa.eu/euro/digital_euro/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4. 28.; EU 집행위원회, “The role of the digital euro in digital payments and finance,” 2025. 2. 28., <https://www.ecb.europa.eu/press/inter/date/2025/html/ecb.in250228~7c25c90e4d.en.html>, 검색일자: 2025. 4. 28.).

70) 유럽중앙은행(ECB), “Earning influence: lessons from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currencies,” 2025. 5. 26., <https://www.ecb.europa.eu/press/key/date/2025/html/ecb.sp250526~d8d4541ce5.en.html>, 검색일자: 2025. 5. 27.

- (글로벌 유로의 기회(A global euro moment))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설함
  -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로화가 더 큰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유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강조
  - 미국 달러의 글로벌 외환 보유액은 약 58%로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이와 동시에 중앙은행은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축적하고 있음
  - 유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통화로서 외환 보유액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 투자자 신뢰확보가 미흡한 상황
- (글로벌 유로의 필수 요소)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함
  - ① (지정학적 기반 확보) 무역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안보 역량 구축
    - 디지털 유로는 국가 간 거래를 촉진,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에 투자하므로 지정학적 토대는 견고한 국방 파트너십에 기반함
  - ② (경제적 토대 강화) 보다 통합된 유럽 자본 시장을 형성해 글로벌 자본을 유지
    - 단일 시장 완성, 신생 기업 활성화, 규제 완화, 저축투자연합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내 경제를 개혁해야 함
  - ③ (법적 안정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단결
    - 최근 미국 제도에 대한 신뢰 약화가 달러와 국채 매도, 주식 하락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예측 가능한 정책 결정과 법치주의로 경쟁력을 활용함
    - 다수결 확대 등 EU는 정치적 통합과 단일 목소리를 형성하여 통합된 유럽으로서 통화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를 강화함

■ 유럽중앙은행(ECB), 2025년 6월에 정책금리 0.25%p 인하 결정(2025. 6. 5.)<sup>71)</sup>

71)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press release, 2025. 6. 5.,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5/html/ecb.mp250605-3b5f67d007.en.html>, 검색일자: 2025. 6. 23.; \_\_\_\_\_, "Monetary policy statement," 2025. 6. 5.,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5/html/ecb.is250605-f00a36ef2b.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5/html/ecb.is250605-f00a36ef2b.en.html), 검색일자: 2025. 6. 23.; \_\_\_\_\_,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6. 23.

- (배경)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는 물가상승률 전망, 기초적 물가상승률(underlying inflation)<sup>72)</sup>의 움직임과 통화정책 전달 강도 등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금리 인하를 결정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HICP)<sup>73)</sup>은 현재 중기 목표(2%)에 가까운 상황으로, 2025년에 2.0%, 2026년에 1.6%, 2027년에 2.0%로 전망되고 근원물가상승률은 2025년에 2.4%,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1.9%로 전망
    - 에너지 가격 추정치 하락, 유로화 강세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전망 대비 2025년과 2026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
  - (경제성장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5년 0.9%, 2026년 1.1%, 2027년 1.3%로 전망
    -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단기에는 기업투자과 수출에 압력이 되나, 국방 및 인프라 관련 정부투자 확대는 중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
  - (리스크) 경제성장 전망의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우세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글로벌 무역 정책 여건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불확실한 상황
    -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향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선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나, 긍정적으로 해소될 경우 특히 물가상승률은 기준선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정책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는 2025년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3대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한다고 결정
  - (수신금리(Deposit facility rate)) 2.25 → 2.00%
  -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 rate)) 2.40 → 2.15%
  -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 2.65 → 2.40%

72) 기초적 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일시적 변동성이 크고 글로벌 요인에 민감한 품목의 영향을 제거한 물가임.

73)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표 2-I-7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6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4월	6월
수신금리	2.50	3.00	3.25	3.50	3.75	4.00	3.75	3.50	3.25	3.00	2.75	2.50	2.25	2.00
기준금리	3.00	3.50	3.75	4.00	4.25	4.50	4.25	3.65	3.40	3.15	2.90	2.65	2.40	2.15
한계대출금리	3.25	3.75	4.00	4.25	4.50	4.75	4.50	3.90	3.65	3.40	3.15	2.90	2.65	2.40

주: 날짜는 금리 변경이 적용된 시점을 의미  
 자료: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6. 23.

- (자산매입) 이 외에도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과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에 대한 만기 도래 채권의 원금 재투자 중단은 지속할 예정

## 0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 가. 경제 통계

- EU 통계청,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 통계 발표(2025. 3. 7.)<sup>74)</sup>
  - (전체) 2024년 4분기 계절 조정된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유로지역에서 0.2%, EU 전체에서는 0.4%(2024년 3분기에는 두 지역 모두 0.4% 성장)
    - 2024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이 0.9%, EU는 1.0%(2023년 모두 0.4%)
    -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2%, EU 1.4%(3분기 각각 1.0%, 1.1%)
  - (회원국별) 전 분기 대비 아일랜드(+3.6%)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덴마크(+1.6%)와 포르투갈(+1.5%) 순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았음
    - 몰타(-0.7%), 오스트리아(-0.4%), 독일·핀란드(각각 -0.2%)는 감소
  - (GDP 기여도) 가계 소비는 유로지역 +0.2%p, EU +0.3%p로 긍정적이었고, 정부 지출과 설비투자는 모두 +0.1%p 기여한 반면, 재고 변화는 -0.2%p로 부정적 영향을

74) EU 통계청, "GDP up by 0.2% and employment up by 0.1% in the euro area," 2025. 3. 7.,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07032025-ap>, 검색일자: 2025. 3. 10.

미쳤으며, 수출입 차이는 유로지역과 EU 모두에서 미미

- (고용) 2024년 4분기 고용은 전 분기 대비 유로지역 +0.1%, EU +0.2% 증가하였고, 2024년 연간 고용은 유로지역 +1.0%, EU +0.8% 증가(2023년엔 각각 +1.4%, +1.2%)
- (회원국별) 전 분기와 비교하여 2024년 4분기 고용 증가율은 루마니아(+2.0%)가 가장 높았고, 스페인(+0.9%), 그리스·포르투갈(각 +0.5%) 순이었으며, 고용 감소율은 크로아티아·핀란드(-0.4%), 라트비아·스웨덴(-0.2%) 순으로 높았음

표 2-I-8 EU 27개국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및 고용 증가율

(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고용 증가율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국가	Q2	Q3	Q4	Q2	Q3	Q4	Q2	Q3	Q4	Q2	Q3	Q4
벨기에	0.3	0.3	0.2	0.9	1.2	1.1	0	0	0.1	0.2	0.2	0.2
독일	-0.3	0.1	-0.2	-0.2	-0.3	-0.2	0	-0.1	0	0.2	0.1	0
에스토니아	0.2	0.2	0.7	-0.7	-0.2	1.1	0.7	-1.2	0.1	1.2	0.7	0.2
아일랜드	-0.4	4.1	3.6	-3.1	3	9.2	1.4	0.8	0.3	2.7	3.6	2.5
그리스	1.2	0.4	0.9	2.1	2.3	2.6	0	0.1	0.5	1	1.1	1.4
스페인	0.8	0.8	0.8	3.3	3.5	3.5	0	0.7	0.9	1.8	1.9	2.3
프랑스	0.3	0.4	-0.1	1	1.2	0.6	0.1	0.1	0	0.6	0.5	0.4
크로아티아	1.2	0.4	1.4	3.2	4.2	3.6	1.2	1	-0.4	6.5	6.9	4.2
이탈리아	0.1	0	0.1	0.6	0.6	0.6	0.1	0.6	-0.1	1.7	2.3	1
사이프러스	0	0.9	0.3	3.4	3.6	2.9	0.4	0.5	0.3	2.1	2.2	1.7
라트비아	0	-0.2	0	0	-0.9	-0.4	-0.1	-0.6	-0.2	-0.7	-1.2	-1
리투아니아	0.4	1.1	0.8	1.6	2.6	3.7	1.4	0.6	0.4	1.9	0.8	1.7
룩셈부르크	0.6	0.2	:	-0.1	1.2	:	0.2	0.3	0.4	1.1	1.1	1.1
몰타	2.8	-0.6	-0.7	8	5	2.8	0.7	1.4	0.4	5.7	5.3	3.8
네덜란드	1.1	0.8	0.4	0.8	1.7	1.8	0.1	0.1	0.3	1.1	0.9	0.7
오스트리아	-0.4	-0.3	-0.4	-1.8	-1.3	-1.2	0	0.1	0	0	0	0
포르투갈	0.4	0.2	1.5	1.5	1.9	2.8	0.2	0.5	0.5	1.4	1.7	1.7
슬로베니아	0.1	0.4	0.6	0.9	1.3	1.1	-0.1	-0.1	-0.1	0.3	0	-0.3
슬로바키아	0.3	0.3	0.5	2	1.7	1.7	0	0	0	-0.3	-0.1	-0.2
핀란드	0.2	0.5	-0.2	-1.2	0.9	1.2	-0.3	0.2	-0.4	-1.3	-0.1	-0.8
<b>유로지역 20개국</b>	<b>0.2</b>	<b>0.4</b>	<b>0.2</b>	<b>0.5</b>	<b>1</b>	<b>1.2</b>	<b>0.1</b>	<b>0.2</b>	<b>0.1</b>	<b>0.9</b>	<b>1</b>	<b>0.7</b>
불가리아	0.8	0.8	0.9	2.4	2.8	3.4	0.4	0.1	0.3	1.7	0.9	1
체코	0.3	0.6	0.7	0.5	1.4	1.8	0.5	0	-0.1	0.2	0.4	0.3

표 2-I-8 의 계속

구분	경제성장률						고용 증가율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국가	Q2	Q3	Q4	Q2	Q3	Q4	Q2	Q3	Q4	Q2	Q3	Q4
덴마크	1.4	1.3	1.6	4	3.8	4.1	0.1	0.1	0.4	0.9	0.7	0.9
헝가리	-0.2	-0.6	0.5	1.2	-0.7	0.1	0	0	0.2	0.3	0.1	0.3
폴란드	1.4	0.1	1.3	3.8	2	3.7	-0.2	0	0.2	-0.6	-0.3	-0.8
루마니아	0.1	0.1	0.8	0.8	-0.1	0.7	-0.7	-3.1	2	3.7	-0.2	0
스웨덴	0.2	0.6	0.8	0.4	0.9	2.4	-0.1	-0.1	-0.2	-0.2	-0.4	-0.6
<b>EU 27개국</b>	<b>0.3</b>	<b>0.4</b>	<b>0.4</b>	<b>0.8</b>	<b>1.1</b>	<b>1.4</b>	<b>0.1</b>	<b>0</b>	<b>0.2</b>	<b>0.9</b>	<b>0.8</b>	<b>0.5</b>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3. “.” 표시는 데이터 없음

자료: EU 통계청, “GDP up by 0.2% and employment up by 0.1% in the euro area,” 2025. 3. 7.,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07032025-ap>, 검색일자: 2025. 3. 10.

## 나. 재정 통계

### ■ EU 통계청, 2024년 3분기 재정통계(재정수지·채무) 발표(2025. 1. 22.)<sup>75)</sup>

- (재정수지) 2024년 3분기 유로지역<sup>76)</sup>과 EU 27개국<sup>77)</sup>의 일반정부 GDP 대비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각각 2.6%, 2.9%로 전 분기 대비 0.5%p, 0.4%p 감소함
  - (유로지역) 2024년 3분기 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47.0%로 전 분기에 비해 약 350억유로 증가한 수입과 명목 GDP 증가의 영향으로 전 분기에 비해 0.5%p 상승
    - 총지출은 전 분기 대비 약 180억유로 증가하였고 명목 GDP 상승으로 인해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율은 전 분기와 동일한 49.6%를 기록함
  - (EU) 2024년 3분기 EU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전 분기 대비 각각 420억유로, 270억유로 증가하여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46.4%로 전 분기 대비 0.4%p 상승하였고, 총지출은 49.3%로 전 분기 대비 0.1%p 상승함

75)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9% in the EU,”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bp>, 검색 일자: 2025. 1. 23.; \_\_\_\_\_, “Government debt at 88.2% of GDP in euro area,”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ap>, 검색일자: 2025. 1. 23.

76) 유로지역은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로 2024년 1월 기준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임.

77) EU 회원국은 유로지역 20개국에서 7개국(덴마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체코, 폴란드, 헝가리)을 더한 27개국으로 구성

- (채무<sup>78</sup>/<sup>79</sup>) 2024년 3분기 말 유로지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88.2%로 전 분기와 동일하고, EU에서도 전 분기와 동일한 81.6%를 나타냄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은 2023년 3분기에 비해 88.4%에서 88.2%로 0.2%p 감소한 반면, EU에서는 81.5%에서 81.6%로 0.1%p 증가함
  - (구성) 채무 구성 비율은 채무증권(Debt Securities)<sup>80</sup>, 대출(Loans), 통화-예금(Currency and Deposits) 순으로 높고, 유로지역은 각각 84.0%, 13.4%, 2.6%로 구성되고, EU는 각각 83.6%, 13.9%, 2.5%로 구성됨
  - (국가별) 2024년 3분기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그리스 158.2%, 이탈리아 136.3%, 프랑스 113.8%, 벨기에 105.6%, 스페인 104.3% 순으로 높았고, 에스토니아 24.0%, 불가리아 24.6%, 룩셈부르크 26.6% 순으로 낮음
  - (전 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와 비교 시 13개 회원국에서 3분기에 채무 비율이 증가했으며(불가리아 2.4%p, 루마니아 2.0%p 등), 14개국에서는 감소함(포르투갈 -3.2%p, 슬로베니아 -2.6% 등)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3분기와 2024년 3분기를 비교했을 때, 16개 국가에서 채무 비율이 증가하였고(핀란드 6.7%p, 에스토니아 5.3%p 등), 11개 회원국에서는 감소함(그리스 -10.0%p, 포르투갈 -8.8%p 등)

78) 일반정부 채무 범위는 분기 말 일반정부 총채무(명목기준)로, ESA 2010(유럽 국가 및 지역 계정 시스템, EU 회계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통화 및 예금(AF.2), 채무증권(AF.3) 및 대출(AF.4)로 구성

79) GDP 대비 채무 비율에서 GDP는 지난 네 분기 동안의 분기별 GDP의 합(최근 1년 동안의 GDP)을 사용하며, 분기별 채무 통계는 연간 채무 수치와 발표일이 같은 경우 동일하나, 발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및 연간 데이터 간의 차이가 발생함.

80)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은 채무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채무상의 권리가 부여된 채권, 예시로 국채 혹은 회사채가 있음.

**표 2-I-9**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4년 3분기 계절조정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3분기	2024년 2분기(잠정)	2024년 3분기(잠정)	
			전 분기 대비(%p)	
<b>유로지역(20개국)</b>				
재정수지	-3.6	-3.1	-2.6	0.5
총수입	46.0	46.5	47.0	0.5
총지출	49.6	49.6	49.6	0.0
<b>EU</b>				
재정수지	-3.6	-3.3	-2.9	0.4
총수입	45.6	46.0	46.4	0.4
총지출	49.1	49.2	49.3	0.1

주: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9% in the EU,”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bp>, 검색일자:  
2025. 1. 23.

**표 2-I-10**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4년 3분기 일반정부 계정조정 재정수지 및 채무

(단위: GDP 대비 %)

구분	계절조정 재정수지				채무				
	2023년 3분기	2024년 2분기 (잠정)	2024년 3분기 (잠정)	전 분기 대비 (%p)	2023년 3분기	2024년 2분기 (잠정)	2024년 3분기 (잠정)	전년 동기 대비 (%p)	전 분기 대비 (%p)
<b>유로지역(20개국)</b>	-3.6	-3.1	-2.6	0.5	88.4	88.2	88.2	-0.2	0.0
<b>EU</b>	-3.6	-3.3	-2.9	0.4	81.5	81.6	81.6	0.2	0.1
벨기에	-3.7	-4.9	-4.3	0.6	105.3	106.6	105.6	0.4	-0.9
불가리아	-4.4	-3.5	-8.7	-5.2	20.9	22.1	24.6	3.6	2.4
체코	-3.8	-2.6	-2.7	-0.1	42.8	42.7	43.6	0.8	1.0
덴마크	3.6	4.1	2.7	-1.4	34.3	33.9	33.6	-0.7	-0.3
독일	-2.4	-2.4	-2.3	0.2	63.8	61.9	62.4	-1.4	0.4
에스토니아	-3.4	-3.1	-1.7	1.4	18.7	23.8	24.0	5.3	0.2
아일랜드	1.4	2.8	14.5	11.7	43.0	42.7	42.2	-0.8	-0.5
그리스	-0.7	1.5	2.2	0.7	168.1	160	158.2	-10	-1.8
스페인	-4.0	-3.2	-3.5	-0.3	107.4	105.3	104.3	-3.1	-1.0
프랑스	-5.6	-5.7	-6.3	-0.6	111.5	112.4	113.8	2.4	1.4
크로아티아	-0.7	-3.3	-2.3	1.0	63.3	60.0	59.7	-3.6	-0.4
이탈리아	:	:	:	:	135.5	136.9	136.3	0.8	-0.6
사이프러스	5.3	3.1	4.9	1.9	75.1	70.5	69.7	-5.4	-0.8
라트비아	-4.5	-1.3	-1.6	-0.3	44.2	46.4	47.7	3.5	1.3

표 2-I-10 의 계속

구분	계절조정 재정수지				채무				
	2023년 3분기	2024년 2분기 (잠정)	2024년 3분기 (잠정)	전 분기 대비 (%p)	2023년 3분기	2024년 2분기 (잠정)	2024년 3분기 (잠정)	전년 동기 대비 (%p)	전 분기 대비 (%p)
리투아니아	-0.1	-1.4	-1.8	-0.4	36.7	37.4	38.4	1.7	1.0
룩셈부르크	-0.4	0.0	-0.1	-0.2	25.8	26.8	26.6	0.8	-0.2
헝가리	-5.7	-5.1	-4.8	0.3	74.6	75.8	76.0	1.3	0.2
몰타	-2.5	-2.4	-2.1	0.3	47.1	46.4	45.3	-1.8	-1.1
네덜란드	-0.4	-0.6	0.1	0.6	44.5	43.3	42.2	-2.3	-1.1
오스트리아	-3.6	-4.0	-5.2	-1.2	78.6	82.9	83.2	4.6	0.4
폴란드	-6.4	-8.3	-6.7	1.6	48.6	52.3	53.5	4.9	1.2
포르투갈	2.4	2.5	2.2	-0.3	106.3	100.7	97.5	-8.8	-3.2
루마니아	-6.3	-7.3	-8.6	-1.4	49.5	51.1	53.1	3.6	2.0
슬로베니아	-2.5	-1.9	-2.1	-0.1	71.0	69.5	66.9	-4.1	-2.6
슬로바키아	-5.0	-5.3	-1.7	3.6	58.3	60.4	60.3	2.0	-0.1
핀란드	-3.2	-5.3	-5.3	0.0	74.8	80.1	81.5	6.7	1.4
스웨덴	-0.6	-1.4	-2.0	-0.5	30.2	31.6	31.6	1.4	0.1

주: 1. EA(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는 비공개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9% in the EU,”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bp>, 검색일자: 2025. 1. 23.; \_\_\_\_\_, “Government debt at 88.2% of GDP in euro area,”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ap>, 검색일자: 2025. 1. 23.

■ EU 통계청, 2024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2025. 4. 22.)<sup>81)</sup>

- (재정수지) 2024년 4분기 EU 계절조정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 유로지역<sup>82)</sup> 3.2%로 3분기에 비해 두 지역 모두 0.4%p 증가
- (유로지역) 2024년 4분기 정부 GDP 대비 총수입은 46.6%로 총수입 증가에도

8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4% in the EU,”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cp>, 검색일자: 2025. 4. 23.; \_\_\_\_\_, “Government debt at 87.4% of GDP in euro area,”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bp>, 검색일자: 2025. 4. 23.

82) 경제통화연합(EMU)에 속하는 EU 모든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으로(2023년 기준), 해당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포함됨. 비유로지역 (Non-euro area)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가 해당됨(EU 집행위, “What is the euro area?,”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uro/what-euro-area\\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uro/what-euro-area_en), 검색일자: 2025. 4. 29.)

불구하고 명목 GDP가 더 크게 증가하여 3분기에 비해 0.4%p 감소하였고, 정부 총지출은 약 260억유로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0.1%p 증가한 GDP 대비 49.9%로 나타남

- (정부 부채) 2024년 4분기 말 유로지역의 GDP 대비 부채는 87.4%로 전 분기 대비 0.7%p 감소하였고, EU도 81.6%에서 81.0%로 0.6%p 감소함<sup>83)</sup>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은 GDP 대비 87.3%에서 87.4%, EU는 80.8%에서 81.0%로 소폭 증가함
  - (일반정부 부채 구성) 유로지역의 경우 채권 84.0%, 대출 13.5%, 통화 및 예금 2.5%, EU 전체에서는 채권 83.4%, 대출 14.1%, 통화 및 예금 2.4%로 구성됨
  - (회원국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sup>84)</sup>는 그리스(153.6%), 이탈리아(135.3%), 프랑스(113.0%), 벨기에(104.7%), 스페인(101.8%) 순이고,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23.6%), 불가리아(24.1%), 룩셈부르크(26.3%) 등으로 나타남
  - (회원국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4분기 전년 동기와 비교 시 16개 회원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했고, 11개 회원국은 감소함
    - (증가) 부채 비율은 루마니아 +5.9%p, 폴란드 +5.7%p, 핀란드 +4.5%p, 슬로바키아 +3.6%p, 에스토니아 +3.4%p, 오스트리아 +3.3%p, 프랑스 +3.2%p 순으로 크게 증가함
    - (감소) 부채 비율은 그리스 -10.3%p, 키프로스 -8.6%p, 크로아티아 -4.3%p, 스페인 -3.3%p, 포르투갈 -2.8%p, 덴마크 -2.5%p, 아일랜드 -2.4%p 순으로 크게 감소함

83) 정부 부채의 변동은 재정수지 적자/흑자 발생과 일반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금융 자산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거나, 금융 자산 취득을 위해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으므로 적자/흑자 외에도 금융 자산 순 취득 등이 분기 정부 부채 변동과 연관될 수 있음. 2024년 4분기 유로지역의 금융자산 순취득(net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은 마이너스(-)로 전 분기 대비 재정적자는 증가했으나, 금융 자산 매각으로 부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 (EU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quarterly data - Evolution of deficit and debt," 2025. 4. 18.,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overnment\\_finance\\_statistics\\_-\\_quarterly\\_data#Evolution\\_of\\_deficit\\_and\\_debt](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overnment_finance_statistics_-_quarterly_data#Evolution_of_deficit_and_debt), 검색일자: 2025. 5. 7.).

84) 2024년 EU 재정준칙 개편으로 기존 재정준칙(GDP 대비 3% 재정적자, 60% 정부 채무 이내)은 유지되나, EU는 국가별 점진적 재정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 추이, 신용 등급 변화, 재정건전성 노력 등을 고려하여 EU 차원의 즉각적인 부채 감축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임.

표 2-I-11 2024년 4분기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 재정통계(계절조정)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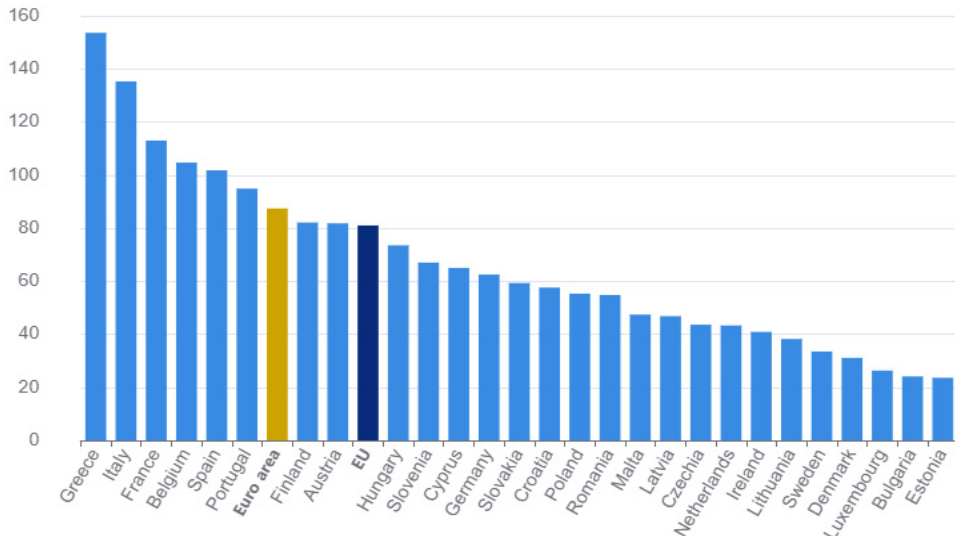
구분	2023Q4	2024Q3	2024Q4
<b>유로지역 20개국</b>			
재정수지	-4.0	-2.8	-3.2
정부수입	46.3	47.0	46.6
정부지출	50.3	49.8	49.9
정부부채	87.3	88.1	87.4
<b>EU 27개국</b>			
재정수지	-3.9	-3.0	-3.4
정부수입	45.9	46.4	46.1
정부지출	49.9	49.4	49.5
정부부채	80.8	81.6	81.0

주: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4% in the EU,"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cp>, 검색일자: 2025. 4. 23.; \_\_\_\_\_, "Government debt at 87.4% of GDP in euro area,"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bp>, 검색일자: 2025. 4. 23.

그림 2-I-3 2024년 4분기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자료: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at 87.4% of GDP in euro area,"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bp>, 검색일자: 2025. 4. 23.

## 다. 주요 보고서

- EU 집행위원회, ‘2024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4)’ 발표(2025. 3. 17.)<sup>85)86)</sup>

※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sup>87)</sup>의 연례 중간 업데이트 보고서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과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S0, S1, S2)를 기초로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함

- (경제전망) EU 경제는 점진적인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음
  - (GDP 성장률) 2024년 EU의 실질 GDP 성장률은 0.9%, 2025년 1.5%, 2026년에는 1.8%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2023년 6.4%에서 2024년 2.6%, 2025년 2.4%, 2026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채무 비율은 소폭 증가 예상
  - (재정적자) 2025년 추가 긴축 재정과 2026년 경제 활력 회복으로 각각 GDP 대비 3.0%, 2.9%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3년 3.5%, 2024년 3.1%)
    - 2025년에는 각국에서 추가 긴축 재정 운영이 예상되나, 그 효과는 세수 감소와 기타 요인들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기존 정책 조치에 따라 적자 감소 전망
  - (채무) EU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3년 82.1%로 2020~2023년 사이에 9%p 감소하였으나, 2026년까지 83.4%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 $r - g$ )로 인한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sup>88)</sup>와 재정 외 요인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sup>89)</sup>이 주로 영향을 미침

85) EU 집행위원회,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4*, 2025. 3. 17.,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 검색일자: 2025. 3. 19.

86) EU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Debt은 일반정부 총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를 의미하고, 발행 국채 및 단/장기 차입의 명목상 채무를 포함하며, 우발부채는 포함하지 않음. 본 동향에서는 정부 보증 채무와 연금 지급 약속 등을 포함하는 부채(Liabilities)와 구분하여 채무로 표기

87)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는 EU 회원국의 단기, 중기,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로 3년마다 발간

88) 채무가 이자 지출과 경제성장(인플레이션 및 실질 성장 포함)에 의해 자연스럽게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금리와 성장률 간의 차이( $r-g$ )에 크게 좌우됨.

89) 특정 기간 동안 정부 재정적자와 채무 수준 변화 간의 불일치를 의미함. 이 조정은 재정수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정부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한 것으로, 예를 들어 민영화·대출·자산 매입 같은 금융 거래, 현금 유동성의 축적 혹은 사용, 채무의 가치 변동(예: 환율 변동), 현금주의 기준과 발생주의 기준 간의 회계 차이 등이 해당됨.

표 2-I-12 EU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 분석 주요 내용

구분	단기 위험	중기 위험	장기 위험
측정 지표	<p><b>S0 지표</b> 재정 및 금융-경쟁력 변수들을 기반으로 한 조기 경보 지표(총재정조달 수요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0 지표의 재정 하위 구성변수</b>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총채무, 순채무, 총재정조달 수요, 금리-성장률 차, 정부지출 증감률 등</li> <li>• <b>S0 지표의 금융-경쟁력(financial &amp; competitiveness) 하위 구성 변수</b> 실질 GDP 성장률, 만기수익률 구조, 순대외자산 포지션, 가계 순저축률, 민간부문 부채, 경상수지 등</li> </ul>	<p><b>채무지속가능성(DSA) 분석(Toolki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시나리오(정책불변, 향후 10년)</li> <li>• 결정론적 분석(Deterministic Analysis, 4개 경제 충격 반영)</li> <li>• 확률론적 분석(Stochastic Analysis, 광범위한 불확실성 고려)</li> </ul>	<p><b>S1 지표</b> 2070년까지 국가채무를 GDP의 60%로 낮추기 위해 2026년에 필요한 재정 노력 측정(2024년 고령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고령화 관련 지출 변화 전망 반영)</p> <p><b>S2 지표</b> 장기적으로 채무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6년에 필요한 재정 노력 측정 (2024년 고령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고령화 관련 지출 변화 전망 반영)</p>
추가 분석	<p><b>추가 검토(위험/위험 완화 요인)</b> (부채 구조, 공공 채무 외 정부 부채(특히 우발부채), 정부 자산 및 순채무 등 포함)</p>		

주: 1. 원문 내용을 토대로 설명 추가  
 자료: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Report 2024*, 2025, Graph 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 검색일자: 2025. 3. 19.

◦ (단기\*) 전년에 비해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세계 금융위기 수준보다는 낮음

- \* 향후 1년간 재정 스트레스 가능성을 식별하는 종합 지표(S0)로, 재정·금융·경쟁력 관련 25개 변수를 결합하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함. S0 지표의 하위 구성 요소는 '재정 리스크'와 '금융-경쟁력 리스크'로 크게 구분되고, S0 지표와는 별도로 단기 총 자금 조달 수요(Gross Financing Needs, GFNs)를 함께 고려함
- (전체) EU 회원국 27개국 중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고위험에 해당하는 국가는 2개국이고, 중위험은 1개국, 저위험 국가는 24개국으로 평가
- (고위험)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재정적자, 국제수지 불균형 등으로 단기 리스크가 높음
  - 두 국가는 2024년 금융 긴축 여건과 높은 경상수지 적자, 대외 순채무 상태 등으로 거시경제 및 금융 취약성이 있고, 2024년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취약성이 있음
- (중위험) 라트비아는 경기조정 재정수지가 임계값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중위험으로 판단되었으나, 경계선 수준으로 그러한 요인이 없었다면 저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었음

- (중기\*)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11개국에서 높은 채무 수준이 지속되거나, 채무 증가로 인해 중기 리스크가 높음

\*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을 사용하여, 기준 시나리오는 향후 10년간(이번 보고서 기준 2035년까지) 정책 불변을 가정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추가 2개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판단함.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네 가지 충격 요인(네 가지 충격 요인은 과거 재정 행태로의 회귀, 계획된 재정 구조조정 일부만 실행, 낮은 'r-g(이자율-성장률)' 차이, 금융시장의 일시적 혼란을 가정)을 가정하여 민감도를 분석하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5년간(2029년까지) 광범위한 잠재 충격을 가정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함. 중기 총 자금 조달 수요를 바탕으로 잠재 유동성 분석을 보완하여 중기 재정 리스크를 평가함

- (EU) 재정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령화 비용 증가와 이자 지출의 점진적 상승으로 향후 10년 동안 채무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sup>90)</sup>
- (전체)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 고위험 국가는 11개국이고, 중위험은 9개국, 저위험 국가는 7개국으로 평가
- (고위험)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이미 채무 비율이 높고 계속 증가),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채무 비율이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그리스(채무 비율이 감소하나 높은 수준 유지) 등
- (중위험) 독일,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2035년까지 채무 60% 초과 전망), 리투아니아(채무 증가 가능성 높음), 불가리아, 체코(채무 비율은 60% 미만 유지, 재정 조정 여력 제한적), 포르투갈(채무 수준이 여전히 높고 추가 재정조정 여력 제한적) 등
- (저위험)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7개국
  - 네덜란드는 일부 시나리오에서 채무 비율이 60%에 근접하지만 전반적으로 위험이 낮음
- (장기\*)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 슬로바키아는 고령화 비용 증가로 장기 리스크가

90) 시나리오별 예측: 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예측 기간 동안 'r-g(이자율 성장률 차이)'가 점점 커지며 2035년까지는 약간 음(-)의 값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며, 재정 긴축이 없는 경우 'r-g 차이'가 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는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압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정책 불변 가정 하에 향후 10년 동안 고령화 비용 증가와 이자 지출의 점진적 상승으로 채무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② 네 개의 충격을 반영한 대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낮은 적자 수준(지난 15년간 평균)으로 다시 수렴한다면, 채무 증가 폭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덜 뚜렷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조정이 미약하거나, 'r-g' 차이가 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일시적인 금융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채무 증가 속도는 더 악화될 수 있음 ③ 불확실성을 가능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시나리오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보여줌. ③-1. 2029년까지 유로지역 채무 비율이 GDP 대비 80~101% 사이에 있을 확률이 80%이며, ③-2. 2029년 채무 수준이 2024년 89.1%보다 낮은 확률은 43%, ③-3. 2029년 채무 비율이 91%를 초과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확률은 반반인 것으로 나타남.

높았고, 그 외 14개국은 중간 수준의 장기 리스크로 평가

\* 2070년까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60%로 낮추기 위해 2026년에 필요한 재정 노력을 측정하는 S1지표와 장기적으로 채무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필요한 재정 노력을 측정하는 S2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평가함

- (전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 고위험 국가는 4개국이고, 중위험은 14개국, 저위험 국가는 9개국으로 평가
- (고위험) 4개국은 공통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크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초기 재정 상태가 불리하여 요구되는 재정 조치가 더 많음
- (중위험) 14개국 중 체코,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리투아니아,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고령화 비용 증가),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초기 재정 상태가 저조함),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고령화 비용 증가와 초기 재정 상태가 저조한 점 둘 다 해당됨
  - 이탈리아는 2070년까지 채무 비율을 60%로 낮추기 위해 대규모 재정 조정이 필요함
- (저위험) 불가리아는 2023년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개선됨

◦ (추가 리스크 요인\*) 대부분 국가에서 채무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기 채무 증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부 국가들의 채무 만기 연장 등이 위험 완화 요인으로 판단됨

\* 정량 평가를 보완하여 정성적 측면에서 채무 구조, 우발 부채, 정부 자산 및 순부채 등의 가별 특성과 제도적 요인 고려

- (위험 요인) 단기 채무 비율의 증가와 비유로지역 회원국의 외환 리스크 노출이 위험 요인으로 판단되며, 우발 부채 위험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위험 완화 요인) 일부 국가들의 채무 만기 연장, 다양한 투자자 기반의 유지,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증가, 일부 회원국의 보유 금융 자산 증가가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함

표 2-I-13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 분류

국가	단기 리스크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중기 리스크		장기 리스크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기준시나리오, 2035년 채무 전망 (GDP 대비 %)	
벨기에	저	고	126	고
불가리아	저	중	39	저(중)
체코	저	중	53	중
덴마크	저	저	17	저
독일	저	중	66	중
에스토니아	저	저	30	저
아일랜드	저	저	13	중
그리스	저	고	119	저
스페인	저	고	112	중
프랑스	저	고	142	중
크로아티아	저	중	63	저
이탈리아	저	고	157	중
사이프러스	저	중	34	저
라트비아	중(저)	중(저)	65	저
리투아니아	저	중	58	중
룩셈부르크	저	저	21	고
헝가리	저	고(중)	85	중
몰타	저	저(중)	46	고
네덜란드	저	저	50	중
오스트리아	저	고(중)	98	중
폴란드	저	고(중)	95	중
포르투갈	저	중(고)	74	저
루마니아	고(저)	고	106	중
슬로베니아	저	중	68	중(고)
슬로바키아	고(저)	고	96	고
핀란드	저	고	96	중
스웨덴	저	저	26	저

주: 1. 전년도 보고서에서 리스크 분류가 변화된 경우 ( ) 안에 전년도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표기  
 자료: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Report 2024," 2025, Table 1 & 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 검색일자: 2025. 3. 19.

## ■ EU 집행위원회, 2025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5. 5. 19.)<sup>91)</sup><sup>92)</sup>

※ EU에서는 연 4회 경제전망(겨울·봄·여름·가을 전망)을 발표하며, 봄과 가을 전망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체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치를 업데이트함. 2024년 11월 15일에 발표된 가을 경제전망<sup>93)</sup>이 이번 봄 경제전망 이전 최신 경제전망임

○ (경제) 2025년 EU와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1.1%, 0.9%로 2024년과 유사하나, 2026년에는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EU 1.5%, 유로지역 1.4%의 성장이 가속될 전망

- (실질 GDP)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미국 무역 정책과 관세 인상,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가을 전망(EU 1.5%, 유로지역 1.3%로)에서 모두 0.4%p 낮아짐

- (소비)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물가상승률 둔화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저축률 하락은 제한적이며, 민간 소비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25년 1.5%, 2026년 1.6%로 예상되며, 공공 소비 증가율은 2025년 1.7%에서 2026년에는 1.3%로 감소할 전망

- (투자) 고정 자산 투자인 총고정자본형성<sup>94)</sup>은 2024년 1.9%로 감소한 이후 2025년 1.5%, 2026년 2.4%로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

• 2025년 회복세에 진입하여 2026년에는 설비 투자보다 인프라·R&D·주택 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전망

- (노동) 경제활동 인구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2026년 EU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91) EU 집행위원회, *Spring 2025 Economic Forecast: Moderate growth amid global economic uncertainty*, 2025. 5. 19.,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spring-2025-economic-forecast-moderate-growth-amid-global-economic-uncertainty\\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spring-2025-economic-forecast-moderate-growth-amid-global-economic-uncertainty_en), 검색일자: 2025. 5. 20.; \_\_\_\_\_,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5," 2025. 5. 19.,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spring-2025\\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spring-2025_en), 검색일자: 2025. 5. 20.

92) 이번 봄 경제전망 가정은 미국 관세가 2025년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복원되지 않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25%를 제외한 기본 관세 10% 적용을 전제로 함. 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후보국/비EU 국가에 대한 경제전망을 담고 있으며, 특별 이슈로 미국 관세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해외 시장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긴장에 대한 기업 조정, 국방비 증가의 경제적 영향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 코너로 주택시장 반등 신호, 독일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의 경제적 영향, 금리 변화가 유로지역 가계 순이자소득에 미치는 영향, EU 수출 성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의 비교,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EU-미국 무역 관계를 분석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람.

9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11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pp. 2~7을 참고하기 바람(<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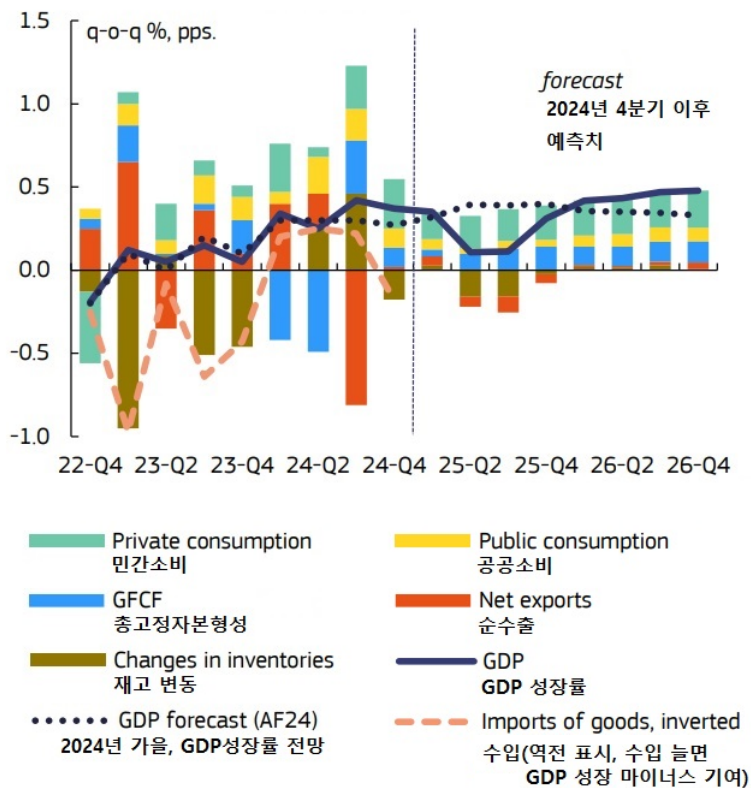
94) 경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계·설비·장비, 건설주택, 비주거용 건물, 인프라 등), 지식 자산(소프트웨어, R&D 등)은 포함하고, 토지·금융자산·재고 변화는 포함되지 않음.

5.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생산성 개선과 구인 수요가 높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명목 임금은 상승하나, 증가율은 둔화할 전망(근로자 1인당 명목 임금 증가율 2024년 5.3%, 2025년 3.9%, 2026년 3.0%)
- (수출) 세계 수요 둔화와 EU 제품 경쟁력 약화, 무역 불확실성으로 EU 수출 증가율은 크게 하향 조정되어 2025년 0.7%로 전망되고, 2026년 2.1%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
- (수입)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중국산 수입 경로의 재조정과 유로화 강세가 수입 감소 압력을 일부 완화

그림 2-I-4 EU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과 수요 기여도

(단위: %, %p)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5*, 2025. 5. 19., Graph I.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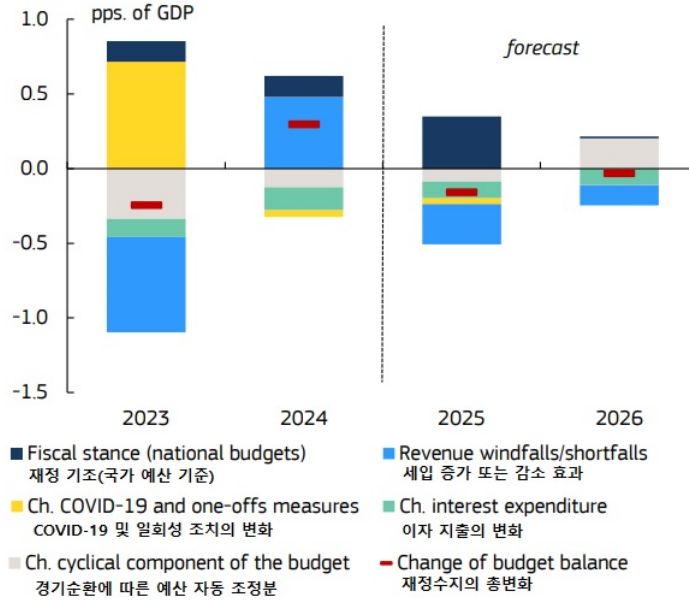
- (물가) 무역 긴장 등의 물가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어 2025년 중반부터 목표치에 근접하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
  - (물가상승률) 유로지역은 2024년 2.4%, 2025년 중반에는 유럽중앙은행 목표치 2%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평균 1.7%로 전망되며, EU는 2026년 1.9%까지 완화될 전망
  - (부문별) 공급 측면인 에너지·산업재 하방 압력이 수요 측면인 식품·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률 상방 압력 보다 우세하여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 하락 요인) 에너지 가격 하락, 미중 무역관계 약화로 인한 EU 내 비에너지 산업재의 경쟁 심화, 유로화 강제로 수입품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 상승 요인) 식품 및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은 물가상승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함
- (재정)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EU 3.2%, 유로지역 3.1%에서 2025년에는 0.1%p 이상 소폭 증가하고, 2026년까지 EU는 3.4%, 유로지역은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재정적자는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재정기조는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자극을 줬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올해 재량 순지출을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기준선과 비교)로, 재정적자가 커져도 그것이 과거 정책의 결과라면 현재 재정기조는 중립적일 수 있음
    - (재정 기조(Fiscal stance)<sup>95)</sup>) 2024년 EU와 유로지역 모두 다소 긴축 재정 기조를 보였던 것에서 2025년부터 평균적으로 중립 재정 기조로 전환된 후 2026년에도 유지 전망
    - (회원국별 재정적자) 2024년에는 11개 회원국이 GDP 대비 3% 초과 재정적자를

95) 재정 기조는 재량 재정정책이 단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올해 정부의 재량적 순지출(이자·실업 급여·일회성 지출 제외)에서 세입 변화 효과를 뺀 값이, 작년 지출이 물가 상승과 잠재성장률만큼 자동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얼마나 초과(또는 미달)했는지를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지표. 재정 기조 값이 GDP 대비 -0.25%에서 +0.25% 사이에 있는 경우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간주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 -0.25% 미만(~ -0.25%)인 경우 확장적(expansionary) 재정 기조, +0.25% 초과(+0.25%~)인 경우 긴축적(contractionary) 재정 기조로 판단(Cepparulo et al., "An 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Economic Brief 080, European Commission,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eb6d27e8-df9f-4df8-849f-5a6c66d6914a\\_en?filename=eb080\\_en.pdf](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eb6d27e8-df9f-4df8-849f-5a6c66d6914a_en?filename=eb080_en.pdf), 검색일자: 2025. 5. 28.)

기록한 반면, 2026년에는 9개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sup>96)97)</sup>

그림 2-I-5 EU 일반정부 재정수지 변동의 요인

(단위: GDP 대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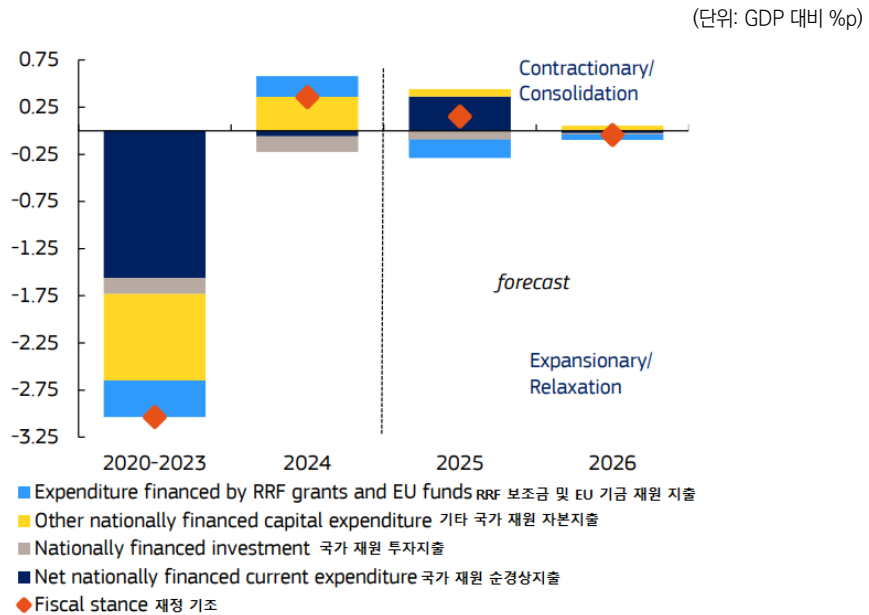


주: 2023년은 세입 급감으로 수지 악화, 2024년은 세입 회복과 재정 기조 완화로 수지 개선, 2025년은 세입 부족과 이자 지출 증가로 수지 약간 악화, 2026년은 대부분 요인들의 안정화로 수지 거의 변동 없음(편집자 주).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5*, 2025. 5. 19., Graph I.8.1

96) GDP 대비 3% 재정적자 기준은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성장협약(Stable Growth and Pact, SGP)에 따른 기준  
 으로, 2024년 재정프레임워크 개혁에 따라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초과적자시정절차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각 국의 개혁·투자 계획을 반영한 중기 재정조정 경로를 통해 EU 집행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관리함.

97) 2024년 GDP 대비 3% 초과 재정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벨기에 -4.5%, 스페인 -3.2%, 프랑스 -5.8%, 이탈리아  
 -3.4%, 몰타 -3.7%, 오스트리아 -4.7%, 슬로바키아 -5.3%, 핀란드 -4.4%, 헝가리 -4.9%, 폴란드 -6.6%, 루마니아  
 -9.3%가 해당되고, 2026년 GDP 대비 3% 재정적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벨기에 -5.5%, 프랑스  
 -5.7%, 라트비아 -3.1%, 오스트리아 -4.2%, 슬로바키아 -5.1%, 핀란드 -3.4%, 헝가리 -4.7%, 폴란드 -6.1%,  
 루마니아 -8.4%로 전망.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가 2024년 초과 국가에서 2026년 GDP 대비 3% 이내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라트비아가 초과 국가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

그림 2-I-6 EU의 재정 기조와 구성 요소



주: 세로 축 플러스(+) 값은 긴축적/재정건전화, 마이너스(-) 값은 확장적/완화적. 2020~2023년은 매우 확장적, 2024년은 약간 확장적, 2025년은 중립에 가까운 확장적, 2026년은 중립적 재정 기조로 평가됨(편집자 주).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5*, 2025. 5. 19., Graph I.8.7

- (정부 부채<sup>98</sup>) 2024년 EU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82%이고, 유로지역은 89% 수준에서 안정된 후 2026년 각각 84.5%, 9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부채 비율의 완만한 증가는 경제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진 상황과 일시적 지출, 회계 조정 등에 따른 조정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
  - 2026년 5개국(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위험) EU와 미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GDP 감소 및 물가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으며, 세계 금융 여건과 EU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와 EU와 미국 간의 긴장 완화, 독일의 인프라 및 국방 지출 증가는 EU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후 재해 발생 증가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불안정성은 EU 성장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함

98)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표 2-I-14 2024~2026년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의 경제전망(2025년 봄 경제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sup>1)</sup>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벨기에	1.0	0.8	0.9	4.3	2.8	1.8	5.7	6.1	5.8	-0.2	-0.7	-1.0	-4.5	-5.4	-5.5
독일	-0.2	0.0	1.1	2.5	2.4	1.9	3.4	3.6	3.3	6.1	5.3	5.3	-2.8	-2.7	-2.9
에스토니아	-0.3	1.1	2.3	3.7	3.8	2.3	7.6	7.6	7.3	-2.0	-2.1	-2.0	-1.5	-1.4	-2.4
아일랜드	1.2	3.4	2.5	1.3	1.6	1.4	4.3	4.3	4.4	17	12.6	11.6	4.3	0.7	0.1
그리스	2.3	2.3	2.2	3.0	2.8	2.3	10.1	9.3	8.7	-8.3	-8.2	-7.9	1.3	0.7	1.4
스페인	3.2	2.6	2.0	2.9	2.3	1.9	11.4	10.4	9.9	3.1	2.7	2.8	-3.2	-2.8	-2.5
프랑스	1.2	0.6	1.3	2.3	0.9	1.2	7.4	7.9	7.8	-0.9	-0.6	-0.6	-5.8	-5.6	-5.7
크로아티아	3.9	3.2	2.9	4.0	3.4	2.0	5.0	4.6	4.5	-0.7	-1.1	-1.1	-2.4	-2.7	-2.6
이탈리아	0.7	0.7	0.9	1.1	1.8	1.5	6.5	5.9	5.9	0.9	1.3	1.6	-3.4	-3.3	-2.9
사이프러스	3.4	3.0	2.5	2.3	2.0	2.0	4.9	4.7	4.6	-7.0	-6.5	-5.9	4.3	3.5	3.4
라트비아	-0.4	0.5	2.0	1.3	3.0	1.7	6.9	6.8	6.6	-3.3	-3.9	-3.5	-1.8	-3.1	-3.1
리투아니아	2.8	2.8	3.1	0.9	2.6	1.2	7.1	6.8	6.6	2.6	2.0	1.9	-1.3	-2.3	-2.3
룩셈부르크	1.0	1.7	2.0	2.3	2.1	1.8	6.4	6.6	6.4	2.3	0.8	0.3	1.0	-0.4	-0.5
몰타	6.0	4.1	4.0	2.4	2.2	2.1	3.1	3.1	3.1	3.6	3.7	3.4	-3.7	-3.2	-2.8
네덜란드	1.0	1.3	1.2	3.2	3.0	2.0	3.7	3.9	4.0	10.0	10.2	10.6	-0.9	-2.1	-2.7
오스트리아	-1.2	-0.3	1.0	2.9	2.9	2.1	5.2	5.3	5.2	2.0	2.4	2.3	-4.7	-4.4	-4.2
포르투갈	1.9	1.8	2.2	2.7	2.1	2.0	6.5	6.4	6.3	1.7	1.2	0.9	0.7	0.1	-0.6
슬로베니아	1.6	2.0	2.4	2.0	2.1	1.9	3.7	3.7	3.8	4.6	4.7	4.8	-0.9	-1.3	-1.5
슬로바키아	2.1	1.5	1.4	3.2	4.0	2.9	5.3	5.3	5.3	-1.6	-2.3	-2.5	-5.3	-4.9	-5.1
핀란드	-0.1	1.0	1.3	1.0	1.7	1.5	8.4	8.6	8.3	-0.8	-0.7	-0.7	-4.4	-3.7	-3.4
<b>유로지역 20개국</b>	<b>0.9</b>	<b>0.9</b>	<b>1.4</b>	<b>2.4</b>	<b>2.1</b>	<b>1.7</b>	<b>6.4</b>	<b>6.3</b>	<b>6.1</b>	<b>3.3</b>	<b>3.0</b>	<b>3.0</b>	<b>-3.1</b>	<b>-3.2</b>	<b>-3.3</b>
불가리아	2.8	2.0	2.1	2.6	3.6	1.8	4.2	4.0	3.8	-0.8	-1.1	-1.0	-3.0	-2.8	-2.8
체코	1.1	1.9	2.1	2.7	2.2	2.0	2.6	2.6	2.6	1.2	0.8	0.5	-2.2	-2.3	-2.2
덴마크	3.7	3.6	2.0	1.3	1.6	1.5	6.2	6.2	6.3	13	13.7	13.5	4.5	1.5	0.6
헝가리	0.5	0.8	2.5	3.7	4.1	3.3	4.5	4.4	4.3	2.4	2.0	1.5	-4.9	-4.6	-4.7
폴란드	2.9	3.3	3.0	3.7	3.6	2.8	2.9	2.8	2.8	0.2	1.0	0.7	-6.6	-6.4	-6.1
루마니아	0.8	1.4	2.2	5.8	5.1	3.9	5.4	5.3	5.2	-8.5	-7.9	-7.0	-9.3	-8.6	-8.4
스웨덴	1.0	1.1	1.9	2.0	2.2	1.6	8.4	8.7	8.4	7.0	6.8	7.0	-1.5	-1.5	-0.8
<b>EU 27개국</b>	<b>1.0</b>	<b>1.1</b>	<b>1.5</b>	<b>2.6</b>	<b>2.3</b>	<b>1.9</b>	<b>5.9</b>	<b>5.9</b>	<b>5.7</b>	<b>3.2</b>	<b>3.0</b>	<b>3.0</b>	<b>-3.2</b>	<b>-3.3</b>	<b>-3.4</b>

주: 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5*, 2025. 5. 19, Table 1

## II 국제통화기금(IMF)<sup>99)</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7.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025. 2. 6.	IMF 집행위원회,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5. 4. 1	IMF 집행위원회, 스웨덴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5. 4. 2	IMF 집행위원회, 일본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5. 4. 22.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A Critical Juncture amid Policy Shifts' 발표
2025. 4. 23.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2025. 5. 2.	IMF 집행위원회, 2026-28회계연도 중기예산 승인
2025. 6. 30.	IMF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확대신용제도(EFF) 8차 검토 완료

자료: 저자 작성

### 01 경제·재정전망 및 평가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Global Growth: Divergent and Uncertain' 발표(2025. 1. 17.)<sup>100)</sup>
  - (동향)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의 제조업과 수출 약세, 일본의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부 국가는 예측치보다 부진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한 소비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함
  - (경제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3.3%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2000~2019년) 평균인 3.7%보다 낮은 수준임

9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경 선임연구원(hwangbo@kipf.re.kr), 봉재연 책임연구원(bongjy@kipf.re.kr)

10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5," 2025. 1. 17.,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1/17/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5>, 검색일자: 2025. 1. 20.

- 이번(2025년 1월) 전망치는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WEO)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주로 미국의 상향 조정이 다른 주요국의 하향 조정을 상쇄했기 때문
  - (미국)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반영된 강건한 잠재수요와 완화된 통화정책, 양호한 금융 여건에 힘입어 2025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2025년 경제성장률은 1.0%로 2024년의 제조업 약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0.2%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에 금융여건 완화와 신뢰회복에 힘입어 1.4%로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
  - (기타 선진국) G7 국가와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이 소비를 지지하는 한편,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제한되어 2025년 2.1%, 2026년 2.3%의 경제성장을 전망
  - (중국) 2024년의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2024년 11월에 발표된 재정패키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2025년 4.6%, 2026년 4.5%로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인도) 2025년과 2026년에 6.5%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전망) 세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25년 4.2%에서 2026년 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이 신흥시장 및 개도국보다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에 더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2025년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존과 중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 차이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금리를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미국과 기타 국가 간의 정책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위험) 중기적으로 세계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우세하며, 단기적 위험은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 미국은 상방위험이 우세한 반면, 대부분의 다른 주요국에서는 높은 정책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조정(특히 유럽의 에너지 및 중국의 부동산 문제)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지배적임

- 특히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와 미국의 확장적 재정조치(감세 등), 규제 완화 정책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제시됨
- 반면 무역협정 체결, 노동 공급 확대, 자원 배분 개선,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의 노력은 중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정책 권고)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적 위험을 억제하고, 경제적 완충력을 재건하며, 중기 경제전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통화정책) 물가상승 압력과 상방위험이 있는 국가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이 빠르게 냉각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한 국가의 경우 다소 완화된 기조로 전환해야 함
  - (재정정책) 재정건전화 조치는 각 경제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성장 친화적인 접근을 취하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경제 잠재력을 유지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외환시장) IMF의 통합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sup>101)</sup>에 따라 외환시장 심도가 얇고 외화 부채가 상당한 국가의 경우 일시적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이동관리조치,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통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구조개혁 등) 노동시장, 경쟁, 보건, 교육, 디지털 분야에서의 표적화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무역 분절화를 막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력 강화가 필수적임

101) IMF의 통합정책체계는 국제 자본 흐름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적 접근법(analytical approach)으로, 환율제도만으로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관리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제공함. 이 체계는 정책 수단간 상호작용, 국가별 특성, 초기 조건, 충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 사용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표 2-II-2 2025년 1월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

(단위: %)

구분	추정		전망		2024년 10월 전망 대비 <sup>1)</sup>	
	2023	2024	2025	2026	2025	2026
세계 경제	3.3	3.2	3.3	3.3	0.1	0.0
선진국	1.7	1.7	1.9	1.8	0.1	0.0
미국	2.9	2.8	2.7	2.1	0.5	0.1
유로지역	0.4	0.8	1.0	1.4	-0.2	-0.1
독일	-0.3	-0.2	0.3	1.1	-0.5	-0.3
프랑스	1.1	1.1	0.8	1.1	-0.3	-0.2
이탈리아	0.7	0.6	0.7	0.9	-0.1	0.2
스페인	2.7	3.1	2.3	1.8	0.2	0.0
일본	1.5	-0.2	1.1	0.8	0.0	0.0
영국	0.3	0.9	1.6	1.5	0.1	0.0
캐나다	1.5	1.3	2.0	2.0	-0.4	0.0
그 외 선진국 <sup>2)</sup>	1.9	2.0	2.1	2.3	-0.1	0.0
<b>한국</b>	1.4	2.2	2.0	2.1	-0.2	-0.1
신흥개도국	4.4	4.2	4.2	4.3	0.0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5.7	5.2	5.1	5.1	0.1	0.2
중국	5.2	4.8	4.6	4.5	0.1	0.4
인도 <sup>3)</sup>	8.2	6.5	6.5	6.5	0.0	0.0
유럽 신흥개도국	3.3	3.2	2.2	2.4	0.0	-0.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	2.4	2.5	2.7	0.0	0.0
중동 및 중앙 아시아	2.0	2.4	3.6	3.9	-0.3	-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6	3.8	4.2	4.2	0.0	-0.2
<b>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sup>4)</sup></b>	<b>0.7</b>	<b>3.4</b>	<b>3.2</b>	<b>3.3</b>	<b>-0.2</b>	<b>-0.1</b>
선진국	0.0	2.2	2.1	2.5	-0.5	-0.3
신흥개도국	2.0	5.4	5.0	4.6	0.3	0.2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sup>5)</sup>	-16.4	-1.9	-11.7	-2.6	-1.3	1.0
비연료	-5.7	3.4	2.5	-0.1	2.7	-0.9
<b>세계소비자물가<sup>6)</sup></b>	<b>6.7</b>	<b>5.7</b>	<b>4.2</b>	<b>3.5</b>	<b>-0.1</b>	<b>-0.1</b>
선진국 <sup>7)</sup>	4.6	2.6	2.1	2.0	0.1	0.0
신흥개도국 <sup>6)</sup>	8.1	7.8	5.6	4.5	-0.3	-0.2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4. 10. 22.~2024. 11. 19.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국가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됨

1) 현재 및 2024년 10월 WEO 전망에 대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4년 10월 WEO 전망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3-24회계연도는 2023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을 기준으로 2025년 6.8%, 2026년 6.5%

4)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5)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4. 11. 20. 기준) 기준 배럴당 미국달러 평균 유가는 2025년 69.76달러, 2026년 67.96달러

6) 베네수엘라 제외

7) 물가상승률: 유로존 2024년 2.8%, 2025년 2.1%, 일본 2024년 2.7%, 2025년 2.0%, 미국 2024년 2.2%, 2025년 1.9%

자료: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5, January, Table 1, p. 8. (한국수치는 p. 10, Annex 참고)

■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Critical Juncture amid Policy Shifts’ 발표(2025. 4. 22.)<sup>102)</sup>

※ 세계경제전망 보고서(2025년 4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제1장의 내용을 위주로 요약함

- 제1장. 글로벌 전망과 정책, 제2장. 실버경제의 부상: 인구고령화의 글로벌 영향, 제3장. 여정과 교차점(Journeys and Junctions): 이민 및 난민 정책의 파급 효과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까지 안정적이었으며, 2025년 1월의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2025년 1월 WEO 업데이트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무역 상대국들의 대응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예측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미국이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이 세계에 적용하는 실효관세율은 대공황 당시 수준을 넘어 급등했고,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로 전 세계 관세율은 크게 상승함
  - 만약 이러한 급격한 관세 인상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성장률은 2025년 2.8%, 2026년 3%\*로, 2025년 1월 WEO 기준으로 두 해 모두 3.3%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로 전망됨
  - \* 현재 시점의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전망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세계경제전망(WEO) 자료에서는 전망 기준일에 따라 다양한 전망을 함께 제시함.<sup>103)</sup> 해당 수치는 2025년 4월 4일 기준 이용 가능한 정보(4월 2일 관세 및 초기 대응 포함)를 기반<sup>104)</sup>으로 한 전망에 해당
  - 경제성장률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무역조치로 인한

10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A Critical Juncture amid Policy Shifts*, 2025. 4. 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4/22/world-economic-outlook-april-2025?cid=bl-com-SM2025-WEOEA2025001>, 검색일자: 2025. 4. 23.

103) 현재 무역긴장의 급격한 확대로 정책모호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전망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 WEO 자료(2025년 4월)에서는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2025년 4월 4일 기준 이용 가능한 정보(4월 2일 관세 및 초기 대응 포함)를 기반으로 한 기준 전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2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망을 추가로 제시하였음. ① 4월 관세를 제외(4월 2일 이전 예측 (3월 말 마감) 기준 전망치로 2024년 10월 WEO 이후의 모든 이전 정책 발표 내용 포함)한 전망에서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2%로 전망하였으며, ② 4월 9일 이후 기준(일부 국가에 부과된 높은 관세 유예 및 미-중 간 보복관세 조치 등 관련 내용 반영)으로 한 전망에서는 2025년 2.8%, 2026년 2.9%로 전망하였음.

104) 2025년 2월 1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2월 4일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 3월 4일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4월 2일에는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함. 중국은 2월 10일에 발효된 일부 미국 농산물, 에너지 원자재 및 농기구 수입품과 3월 10일에 발효된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10~15%의 관세 부과 등 4월 4일까지 이용 가능한 관세 관련 다양한 조치들을 고려하여 전망함.

직접적인 효과와 무역연계 파급효과, 불확실성 등 간접적 효과에 기인함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24년 1.8%에서 2025년 1.4%,\* 2026년 1.5%로 예상
    - \*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에 대한 대폭적인 하향 조정과 스페인에 대한 상향 조정이 포함
  -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 긴장, 수요 모멘텀 약화 등으로 인해 2025년 1월 WEO 업데이트 전망 대비 0.9%p 낮은 1.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불확실성 증가와 관세로 인해 2025년 0.8%로 소폭 하락한 후, 2026년 1.2%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성장률은 2025년 1월 WEO 전망 기준(2025년 2.0%, 2026년 2.1%)에서 2025년 1.0%, 2026년 1.4%로 하향 조정됨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2024년 4.3%에 이어 2025년 3.7%, 2026년 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최근 무역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2025년 1월 WEO 전망 기준(2025년 4.6%, 2026년 4.5%)에서 두 해 모두 4.0%로 하향 조정됨
- (위험) 무역전쟁이 가속화하고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글로벌 무역 흐름을 위축시키고, 자산 가격 조정 및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단기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음
-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장기화로 주요 국가에서는 소비와 투자 둔화로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박과 노동 생산성 둔화, 인구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책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자본 유출과 금융 환경 긴축이 우려되며, 일부 국가에서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책권고) 각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부채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요구됨
- (무역정책의 안정성 회복) 안정적이고 투명한 무역환경 조성으로 무역긴장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적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왜곡된 무역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
  - (통화정책)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민첩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 일부 국가는 인플레이션과 생산량 간의 상충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물가압력이 높아지는 다른 국가에서는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이 필요
- (재정정책) 국가들은 부채와 저성장, 금융 비용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및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
  - (국방관련 지출) 국방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부채로 일부 조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지출 삭감이나 새로운 세입으로 이를 상쇄하도록 해야 함
  - (기술과 성장) 정부는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할 필요

표 2-II-3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

(단위: %, %p)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5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4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4	2025	2026	2025	2026	2025	2026
<b>세계 경제</b>	<b>3.3</b>	<b>2.8</b>	<b>3.0</b>	<b>-0.5</b>	<b>-0.3</b>	<b>-0.4</b>	<b>-0.3</b>
<b>선진국</b>	<b>1.8</b>	<b>1.4</b>	<b>1.5</b>	<b>-0.5</b>	<b>-0.3</b>	<b>-0.4</b>	<b>-0.3</b>
미국	2.8	1.8	1.7	-0.9	-0.4	-0.4	-0.3
유로지역	0.9	0.8	1.2	-0.2	-0.2	-0.4	-0.3
독일	-0.2	0.0	0.9	-0.3	-0.2	-0.8	-0.5
프랑스	1.1	0.6	1.0	-0.2	-0.1	-0.5	-0.3
이탈리아	0.7	0.4	0.8	-0.3	-0.1	-0.4	0.1
스페인	3.2	2.5	1.8	0.2	0.0	0.4	0.0
일본	0.1	0.6	0.6	-0.5	-0.2	-0.5	-0.2
영국	1.1	1.1	1.4	-0.5	-0.1	-0.4	-0.1
캐나다	1.5	1.4	1.6	-0.6	-0.4	-1.0	-0.4
기타선진국 <sup>2)</sup>	2.2	1.8	2.0	-0.3	-0.3	-0.4	-0.3
<b>한국</b>	<b>2.0</b>	<b>1.0</b>	<b>1.4</b>	<b>-1.0</b>	<b>-0.7</b>	<b>-1.2</b>	<b>-0.8</b>
<b>신흥시장국 및 개도국</b>	<b>4.3</b>	<b>3.7</b>	<b>3.9</b>	<b>-0.5</b>	<b>-0.4</b>	<b>-0.5</b>	<b>-0.3</b>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5.3	4.5	4.6	-0.6	-0.5	-0.5	-0.3
중국	5.0	4.0	4.0	-0.6	-0.5	-0.5	-0.1
인도 <sup>3)</sup>	6.5	6.2	6.3	-0.3	-0.2	-0.3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3.4	2.1	2.1	-0.1	-0.3	-0.1	-0.4
러시아	4.1	1.5	0.9	0.1	-0.3	0.2	-0.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2.4	2.0	2.4	-0.5	-0.3	-0.5	-0.3

표 2-II-3 의 계속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5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4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4	2025	2026	2025	2026	2025	2026
유럽연합	1.1	1.2	1.5	-0.2	-0.2	-0.4	-0.2
아세안-5 <sup>4)</sup>	4.6	4.0	3.9	-0.6	-0.6	-0.5	-0.6
저소득 개도국	4.0	4.2	5.2	-0.4	-0.2	-0.5	-0.4
<b>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b>	<b>3.8</b>	<b>1.7</b>	<b>2.5</b>	<b>-1.5</b>	<b>-0.8</b>	<b>-1.7</b>	<b>-0.9</b>
<b>수입</b>							
선진국	2.4	1.9	2.0	-0.3	-0.4	-0.5	-0.5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5.8	2.0	3.4	-3.0	-1.1	-2.9	-1.2
<b>수출</b>							
선진국	2.1	1.2	2.0	-0.9	-0.6	-1.5	-1.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6.7	1.6	3.0	-3.4	-1.7	-3.0	-1.3
<b>원자재 가격(미 달러)</b>							
오일 <sup>5)</sup>	-1.8	-15.5	-6.8	-3.8	-4.2	-5.1	-3.2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3.7	4.4	0.2	1.9	0.3	4.6	-0.6
<b>소비자 물가<sup>6)</sup></b>	<b>5.7</b>	<b>4.3</b>	<b>3.6</b>	<b>0.1</b>	<b>0.1</b>	<b>0.0</b>	<b>0.0</b>
선진국 <sup>7)</sup>	2.6	2.5	2.2	0.4	0.2	0.5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sup>6)</sup>	7.7	5.5	4.6	-0.1	0.1	-0.4	-0.1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5. 3. 6.~2025. 4. 3.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 규모 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조정

- 1) 2025년 1월 WEO 업데이트 및 2024년 10월 WEO 예측에 대한 반올림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차이
- 2) G7과 유로지역 국가 제외
- 3)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12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5)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 파테(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임. 2024년 배럴당 미국 달러 기준 평균 유가는 79.17달러였으며, 선물시장을 기준으로 가정한 가격은 2025년 66.94달러, 2026년 62.38달러
- 6) 베네수엘라 제외
- 7) 2025년과 2026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유로존 2.1%, 1.9%, 일본 2.4%, 1.7%, 미국 3.0%, 2.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Apr, 2025. 4. 22. Table 1.1을 참고하여 작성; 한국의 수치는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참고하여 작성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2025. 4. 23.)<sup>105)</sup>

※ 재정감시보고서(2025년 4월)자료는 다음과 같이 총 2개의 장(제1장. 불확실성하의 재정정책, 제2장. 공공여론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에너지 보조금과 연금 개혁의 본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제1장의 내용을 위주로 요약함

105) IMF, *Fiscal Monitor 2025 April: Fiscal policy under Uncertainty*, 2025. 4. 2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5/04/23/fiscal-monitor-April-2025>, 검색일자: 2025. 4. 24.

- (전망)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가 간 대응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키고 하방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 2025년 4월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관세정책과 무역 긴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 공공채무는 2025년까지 GDP 대비 95.1%(전년 대비 2.8%p 상승)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팬데믹 당시의 정점을 넘어 GDP의 약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17%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음
- (위험) 높은 관세와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출 감소와 생산 위축을 유발해 부채 수준을 높이고 있음. 특히 금융조건이 더 어려운 신흥시장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부채 증가) 관세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채무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매출 감소와 생산 축소가 부채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금융시장 불안정) 미국의 금리상승과 신흥시장의 스프레드 확대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상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국방비 지출 증가) 유럽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필수적인 사회지출과 공공투자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제한되고 있음
  - (외국 원조 감소) 국제적 외국 원조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저소득 국가들은 필수적인 사회적 지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도적 위기와 개발 목표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무역 및 생산성 둔화) 무역 긴장과 낮은 생산성은 전반적인 경제안정성을 저하시키며, 특히 중국과 미국의 낮은 내수와 재정 적자가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책권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각국은 각 국가의 재정여력과 경제적 상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부채감소와 경제성장 간 균형을 맞춘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
  - (국가별 대응) 각국의 정책 대응은 국가별 재정여건과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함
    - 재정여력에 따른 대응: 재정여력이 제한된 국가의 경우 공공지출을 우선시하고

실업수당과 같은 자동 안정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새로운 지출은 다른 부문의 지출 삭감이나 새로운 세입으로 상쇄하도록 함.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예시: 독일)는 가용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 프레임 워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

- 선진국: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우선순위 재조정, 연금 및 의료 개혁 추진,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
- 미국: 공공채무를 줄이고 지속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구축 및 지출조정 필요
- 중국: 재정확장을 통한 경제지원과 무역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 필요
- 저소득 개발도상국: 과도한 재정긴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허성 금융 (concessional financing)<sup>106</sup>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필수적
-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세계개혁을 통한 지출 합리화와 세수 기반 확대 및 세수 관리 강화필요
  - (재정정책과 금융안정성) 심각한 금융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직접 대출, 보증 및 자본 투입 등을 통해 금융혼란을 완화하도록 해야 함
  -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 준칙 준수, 예측 강화, 중기계획과 연간 예산의 통합,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한 명확한 비상 계획수립 등을 통한 재정프레임 워크 강화가 필요하며, 중기 부채관리 전략 수립으로 자금조달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구조적 개혁 및 성장 촉진) 재정 및 구조 개혁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부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며, 연구 개발, 인프라, 교육 등에 대한 투자와 지출효율성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해야 함

106) 양허성 금융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이 빈국에 일반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이율, 상환 기간 등)으로 제공하는 대출을 의미하며, 주로 저소득 국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표 2-II-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b>재정수지</b>							
세계경제	-5.0	-5.1	-4.7	-4.5	-4.5	-4.5	-4.6
선진국	-4.7	-4.3	-3.9	-3.8	-3.9	-3.9	-4.0
캐나다	-2.1	-1.9	-1.6	-1.4	-1.2	-1.0	-0.8
유로지역	-3.1	-3.2	-3.4	-3.5	-3.5	-3.6	-3.7
프랑스	-5.8	-5.5	-5.9	-6.1	-6.1	-6.0	-6.1
독일	-2.8	-3.0	-3.5	-3.9	-4.1	-4.3	-4.4
이탈리아	-3.4	-3.3	-2.8	-2.6	-2.4	-2.5	-2.5
스페인 <sup>1)</sup>	-3.2	-2.7	-2.4	-2.3	-2.2	-2.1	-2.0
일본	-2.5	-2.9	-3.1	-3.3	-4.0	-4.6	-5.3
영국	-5.7	-4.4	-3.7	-3.1	-2.8	-2.6	-2.3
미국	-7.3	-6.5	-5.5	-5.4	-5.6	-5.5	-5.6
기타선진국	-0.5	-0.6	-0.3	-0.1	-0.1	-0.2	-0.2
<b>한국</b>	<b>-0.6</b>	<b>-0.4</b>	<b>-0.5</b>	<b>-0.4</b>	<b>-0.4</b>	<b>-0.4</b>	<b>-0.4</b>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5.5	-6.1	-5.9	-5.5	-5.4	-5.3	-5.3
<b>국가채무</b>							
세계경제 <sup>2)</sup>	92.3	95.1	96.7	97.5	98.2	98.9	99.6
선진국	108.5	110.1	110.9	111.5	112.0	112.6	113.3
캐나다 <sup>3)</sup>	110.8	112.5	110.9	109.4	107.9	106.2	104.1
유로지역	87.7	88.7	89.7	90.4	91.1	91.9	92.9
프랑스	113.1	116.3	119.1	121.6	123.9	126.1	128.4
독일	63.9	65.4	67.0	68.5	70.4	72.5	74.6
이탈리아	135.3	137.3	138.5	138.6	138.2	137.7	137.7
스페인	101.8	100.6	99.0	97.6	96.0	94.5	93.0
일본	236.7	234.9	233.7	232.1	231.2	231.1	231.7
영국	101.2	103.9	105.4	106.1	106.5	106.5	106.1
미국 <sup>3)</sup>	120.8	122.5	123.7	124.9	125.9	127.0	128.2
<b>한국</b>	<b>52.5</b>	<b>54.5</b>	<b>55.7</b>	<b>56.6</b>	<b>57.5</b>	<b>58.4</b>	<b>59.2</b>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69.5	73.6	76.7	78.4	79.7	80.9	82.0

주: 1. 모든 국가의 평균은 미국달러로 환산된 명목 GDP 기준

2. 추정치(estimates)와 전망(projections)은 2025년 4월 14일까지 이용 가능한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모든 경우에 최신 발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1) 금융부문 지원 포함

2) 부채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부채 불포함

3) 국가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 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캐나다,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부채 및 순부채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부채를 제외하도록 조정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5 April, 2025. 4. 23. Table 1.1, 1.2를 참고하여 작성; 한국의 수치는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Table A1, A7에서 발췌

## 02 연례협의

- IMF 집행위원회, 한국과의 연례협의<sup>107)</sup> 결과 발표(2025. 2. 6.)<sup>108)109)</sup>
  - (현황) 한국은 2023년의 급격한 경기 둔화 이후 경제성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융안정성 위험도 감소함
    - 지난 협의<sup>110)</sup>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대체로 IMF가 제시한 이전 정책 권고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
  - (전망)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2%)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글로벌 공급망 긴장 완화, 국제 유가 하락,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어 1.9%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5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아웃풋 갭이 해소되면서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에 반도체 수요의 회복 덕분에 크게 개선되어 GDP 대비 4.2%까지 확대되었으나, 2025년에는 반도체 포함 주요 수출품의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 및 중간재 수입 확대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축소되어 GDP 대비 3.6%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
  - (위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
  - (정책) IMF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대응이 물가 상승 억제와 금융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107)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108)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Republic of Korea," 2025. 2. 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2/06/pr-2530-korea-imf-concludes-2024-art-iv-consultation-with-republic-of-korea>, 검색일자: 2025. 2. 11.

109)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2025. 2. 7., <https://doi.org/10.5089/9798229000161.002>, 검색일자: 2025. 2. 11.

110) 2023년 11월에 발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통화정책)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 중인 점을 환영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함
- (재정정책) 2025년 예산에서 계획된 재정 건전화 조치를 지지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야심찬 중기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
  - 연금 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재정준칙 도입, 세수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특히 에너지보조금 축소),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경제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한해) 등의 개혁을 제안
- (금융 안정성 및 부동산시장 대응) 현재 금융 안정성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부동산시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
  - 당국은 주택시장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개선하는 조치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성장잠재력 제고) 한국의 노동력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를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면서, 청년층 소득 개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 포괄적 개혁을 권고
  - 외환 및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
  - 서비스 및 중소기업 부문의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노동 및 상품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AI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것을 제안
- (장기적 경제회복력 강화) 경제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혁신 촉진, 규제 간소화, 수출 및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권고
  - AI 도입에 대비한 정책 마련과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향후 일정) IMF 협정 제4조에 의거한 다음 연례협의 보고서는 2026년 초에 발표 예정

**표 2-II-5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경제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sup>1)</sup>	2025년 <sup>1)</sup>
실질GDP증가율(연평균)	2.7	1.4	2.2	2.0
실업률	2.9	2.7	2.7	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연평균)	5.1	3.6	2.3	2.0
종합재정수지(Overall balance, GDP 대비 %) <sup>2)</sup>	-2.8	-1.5	-1.5	-1.2
일반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debt, GDP 대비 %) <sup>3)</sup>	49.8	51.5	52.8	54.1
경상수지(GDP 대비 %)	1.4	1.9	4.2	3.6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8,582			

주: 1) 2024, 2025년은 예측치

2) 종합재정수지는 순융자/순차입에서 정책융자(policy lending)을 제함.

3) 쿼터는 2025년 1월 6일 기준

자료: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2. 5.

**표 2-II-6 IMF 권고사항 이행 현황**

구분	IMF 권고사항	정책 실행 조치
통화정책	-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시행	- 한국은행은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히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재정정책	- 긴축적 재정 기조를 유지	- 정부는 2024년 상당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 합리화를 추진한 일부 징후가 나타남
	- 국내 에너지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	- 국내 에너지 가격은 2023년에 상승한 후, 2024년에 다시 동결됨
주거 및 금융정책	- 금융지원 조치는 일시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유지해야 함	- 금융지원 조치는 목표지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시적 조치는 만료됨
	- 주거정책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면서도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함	- 신속한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책의 초점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전환됨
	-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규제, 감독 및 위험 관리가 필요함	- 대손충당금 확대, 금융 감독 강화,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가계부채 및 비금융기업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함	- 민간 부문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표 2-II-6 의 계속

구분	IMF 권고사항	정책 실행 조치
구조적 정책	- 재정정책을 잘 설계된 규칙 기반 체계(well-designed rule-based framework)에 고정해야 함	- 2022년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이 여전히 논의 중
	- 세수 확보 및 지출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	- 정부는 중기적으로 지출 합리화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구상 중
	- 연금개혁 추진(기여율 인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 고려)	- 새로운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구조개혁 진전이 어렵지만, 당국은 근무시간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여성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소하여 성별 격차를 축소	
	-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서비스를 포함한 신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 규제 혁신 및 현장 장애 요인 해결이 이루어짐
	-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개혁, 부문별 인센티브 도입, 석탄세 확대 등을 통해 기후정책 강화	- 정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1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며, 추가 기후 정책을 수립할 예정

자료: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Annex I, p. 47, 2025. 2. 5.

■ IMF 집행위원회, 스웨덴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5. 4. 1.)<sup>111)</sup>

- (전망) 2023년 경기 위축 이후 202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GDP 성장률은 2024년 1%에서 2025년은 1.9%로 상향 전망
  - 2026년에는 정책 지원 효과로 2.2%까지 상승 후, 잠재 성장률(1.5~1.75%)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은 성공적으로 억제되었으며,<sup>112)</sup> 예측 기간 동안 목표(2%)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예상
- (위험)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의 균형은 하향 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여기에는 지리경제적 분열, 무역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 증가, 그리고 민간 소비의 약세 등이 포함됨
  - 인플레이션은 내수가 계속 침체될 경우 2025년 이후에도 목표를 밑돌 수 있으나, 반면

111)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Sweden," 2025. 4. 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5/04/01/Sweden-2025-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65801>, 검색일자: 2025. 4. 30.

112) 스웨덴의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with a Fixed Interest Rate, CPIF)는 주택 관련 비용 중 금리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고 계산된 지표로 스웨덴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인플레이션 지표에 해당함. CPIF 인플레이션은 2025년 1월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3년 평균 6%에서 2.2%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인함(자료: <https://www.elibrary.imf.org/view/journals/002/2025/079/article-A001-en.xml>, 검색일자 2025. 7. 24.).

원자재 가격 상승 재조정, 무역 장벽 강화, 코로나 가치 하락 등 글로벌 충격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 가능

-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줄고,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이 안정적이어서 금융안정성에 대한 하방위험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일부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
- 높은 불확실성, 생산성 증가 둔화 및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인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음
- (정책 권고) 재정정책은 경제성장과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고, 녹색 전환을 촉진하며,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우선으로 해야 함. 또한 생산성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
  - 2025년 예산의 중도 확장적 기조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녹색 전환, 포용성 강화,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우선순위 설정 강조
  - 현재의 중립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데이터에 기반한 기민한 대응을 권고
  - 높은 가계 부채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위험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당국이 경계를 유지하고 규제 및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
  -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교육 성과 향상, 노동 이동성 지원, R&D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
  - EU 단일시장 통합 강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노력도 중요

**표 2-II-7 스웨덴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경제지표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 GDP 증가율(연평균)	1.0	1.9	2.2
실업률	8.4	8.2	8.0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CPI, 연평균)	2.0	2.1	2.0
구조적재정수지(GDP 대비 %)	-0.8	-1.1	-0.6
일반정부 총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32.6	33.7	33.9
경상수지(GDP 대비 %)	7.4	6.8	6.0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4,430		

주: 1. 2024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5년, 2026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5년 1월 31일 기준

자료: IMF, "Sweden: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4. 1.

■ IMF 집행위원회, 일본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5. 4. 2.)<sup>113)</sup>

- (전망) 일본 경제는 수십 년간의 초저물가 상태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며, 실질임금 상승과 민간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25년 GDP 성장률은 1.2%로 예상됨
  - 유가·식품 가격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이 2025년 말 일본은행의 2% 목표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 상승세에 따라 가처분소득·소비·민간투자가 확대될 전망
  - 경상수지 잔액(current account balance)은 2024년 GDP 대비 4.8%로 확대되었으며, 대외 여건은 전반적으로 중기 펀더멘털에 부합
- (위험) 성장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균형된 상태로 평가됨
  - 세계경제 둔화, 내수부진, 금융여건 변화가 하방위험을 야기하며, 반대로 임금상승·지역 통합 심화는 상방위험 요소로 작용
- (정책 권고) 재정 측면에서는 세수 증가로 적자 폭이 예상보다 적었으나, 중기적으로는 적자 확대가 우려되며,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 수립이 필요
  - 공공부채 증가에 대비한 명확한 계획과 보조금 합리화 및 양질의 공공투자 유지가 바람직
  -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규율 강화 권고
  -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 철회가 적절하다고 언급
  -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중소기업 부실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부분 감독 강화 필요

113)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Japan," 2025. 4. 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5/04/01/Japan-2025-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65846>, 검색일자: 2025. 4. 30.

표 2-II-8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경제지표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 GDP 증가율(연평균)	0.1	1.2	0.8
실업률	2.5	2.5	2.5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CPI, 연평균)	2.7	2.4	2.0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GDP 대비 %)	-2.1	-2.3	-2.3
공공채무(Public debt, GDP 대비 %)	236.7	233.1	230.7
경상수지(GDP 대비 %)	4.8	4.4	4.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30,820		

주: 1. 2024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5년, 2026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5년 2월 28일 기준

자료: IMF, "Japan: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4. 2.

### 03 금융지원

■ IMF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sup>114)</sup> 8차 검토 완료(2025. 6. 30.)<sup>115)</sup>

- (배경) 2023년 3월, IMF와 우크라이나 당국은 4년간 총 156억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제도(EFF)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EFF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물가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2025년 5월, IMF 실무진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EFF 협정의 8차 검토에 대한 직원 차원의 합의(staff level agreement)를 이루었으며, 2025년 6월, IMF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서 약 5억달러(3억 7,000만SDR<sup>116)</sup>)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114) 확대신용제도(EFF)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최대 4년 동안 승인될 수 있으며 4년 반~10년 동안 12회 반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음. EFF는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반하며 일반적으로 출자 금액의 연간 한도는 쿼터의 200%이며, 약정 기간 동안 누적 한도는 쿼터의 600%에 해당함.

115) IMF,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the Eighth Review of the Extended Arrangement under the Extended Fund Facility for Ukraine," 2025. 6. 3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6/30/pr-25227-ukraine-imf-completes-8th-rev-of-ext-arrang-under-eff>, 검색일자: 2025. 7. 1.

116)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1969년 IMF가 회원국의 공식 준비금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국제 준비금 자산으로, IMF 및 기타 국제기구의 계정 단위 역할을 함. SDR 자체는 통화가 아니라 보유자가 필요할 때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인민폐, 일본 엔, 영국 파운드의 5개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을 기반으로 함. SDR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할 수 있음(<https://www.imf.org/en/Topics/special-drawing-right>, 검색일자, 2025. 6. 20.).

- 이에 따라 1~7차(2023년 3월~2025년 3월) 검토를 통해 지원된 약 101억달러를 포함해 총 누적지출액은 106억달러에 이릅니다
- 우크라이나 당국은 3월 말 정량적 성과기준(QPC)<sup>117</sup>과 구조적 벤치마크<sup>118</sup>를 모두 충족했으며,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이행과 개혁 추진에 합의함
-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 3년차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성장률이 2~3%로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IMF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 식품 및 인건비 상승으로 4월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1%를 기록함.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조치는 적절하였으며, 향후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추가 통화긴축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재정 및 대외 지원) 전쟁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높고,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G7의 ERA 이니셔티브<sup>119</sup>와 같은 외부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외부지원만으로는 적자 충당, 재정 지속 가능성 회복, 중요 지출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지출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국내 수입 기반 확충 노력(조세행정개선, 탈세 방지, 투자환경 개선 등)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공투자관리) 전쟁 이후 복구와 재건,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투자 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가 필수적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공투자관리(PIM) 체계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으며, 향후 전략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자원배분을 통해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17) EFF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준비금의 최소 보유 수준 유지, 재정적자 상한선 준수, 국립은행(NBU)의 통화정책 관련 자산부채 관리 기준 충족, 국영은행에 대한 신규 자본 투입 제한, 정부의 외부 채무 상환 연체 방지 등에 대한 정량적 성과기준(QPC)을 충족해야 함.

118) 구조적 벤치마크는 제도 개혁과 관련된 이행 과제를 말하며, 우크라이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이행하였거나 진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음. 국가증권 시장위원회(NSSMC)에 대한 독립적 준법·청렴성 평가 착수, 국영기업 이사회 구성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준비, 공공투자관리(PIM) 체계 개선 조치 이행, 세입 전략(NRS) 이행 진척 및 세무행정 현대화, 국가반부패청의 외부감사이행 등

119) G7의 ERA 이니셔티브는 예외적 수익 조기 활용 대출 이니셔티브(Extraordinary Revenue Acceleration Loans Initiative)의 약자로, 러시아의 동결된 국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동결 자산 이자 등)을 빠르게 동원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약 500억달러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말함. 이 대출은 양자 간 대출(bilateral loans) 형태로 제공되며, 각국은 법적·제도적 여건에 맞춰 자금을 집행하며, 2024년 12월부터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며, 우크라이나의 긴급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됨.

###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sup>120)</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Ⅲ-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6.	OECD, 2024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5. 2. 11.	OECD, 2024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5. 2. 20.	OECD,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5. 3. 17.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발표
2025. 3. 20.	OECD, 글로벌 부채보고서(Global Debt Report) 제2판 발표
2025. 4. 17.	OECD, 2024년 4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5. 5. 13.	OECD, 2024년 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5. 5. 22.	OECD,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5. 6. 3.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발표
2025. 6. 11.	OECD, 2025년 1분기 G20 GDP 성장률 발표

자료: 저자 작성

## 01 경제·재정전망 및 평가

### ■ OECD, 2025년 중간경제전망보고서 발표(2025. 3. 17.)<sup>121)</sup>

- (현황) 지난해 세계 경제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2024년 연간 3.2%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음. 이는 실질소득 증가와 저금리가 요인이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지출 둔화, 소비자 신뢰 부진, 대외 수요 변동 등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상쇄됨
- 최근 지표들에 따르면 글로벌 성장 전망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1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경 선임연구원(hwangbo@kipf.re.kr), 봉재연 책임연구원(bongjy@kipf.re.kr)

121)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5: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2025. 3. 17, <https://doi.org/10.1787/89af4857-en>, 검색일자: 2025. 3. 18.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음

- 무역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여 지속되면 세계 성장(global growth)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음
  -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여 임금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고,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품 인플레이션도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2%에서 2025년 3.1%, 2026년 3.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G20 경제권에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가계 지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연간 GDP 성장률은 2025년 2.2%, 2026년 1.6%로 최근의 강세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지정학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성장세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1.0%, 2026년 1.2%로 예상
  - (중국)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책 지원의 효과가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4.8%에서 2026년 4.4%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 2025년 1.5%로 이전 전망 수준(2.1%, 2024년 12월 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며 2026년 2.2%로 전망
- (인플레이션 전망) 많은 경제권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이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음.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이전에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G20 경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은 2025년 3.8%에서 2026년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근원물가 상승률(core inflation, 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026년에도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전망은 캐나다와 미국 간, 멕시코와 미국 간의 양자 관세가 4월부터 거의 모든 상품 수입에 대해 25%p가 추가로 인상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임. 관세 인상률이

낮거나 더 작은 범위의 상품에 국한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성장은 여전히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위험) 현재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압력이 가중되면,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 재조정과 시장 변동성의 추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음
  -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광범위하게 증가하면 기업투자를 약화시키고, 세계교역량을 감소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
  - 현재 많은 국가들의 경우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면 명목임금 증가로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됨
  - 경제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 시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향후 2년간 높은 부채 수준과 상당한 채용자 수요로 인해 채권 시장과 민간 신용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정책권고) 불확실성 증가와 미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무역장벽으로 인한 압력은 생산성을 강화하는 정책개혁과 지속적인 국제협력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
  - (통화정책) 최근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에서 정책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무역 비용이 높아져 임금 및 물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 (유로존) 2025년 하반기까지 정책 금리가 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책 금리는 기준 전망치에서 2026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2026년 초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경우 모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일본) 통화정책 조정이 점진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정책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영국) 향후 2년 동안 점진적인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무역 긴장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는다면, 기초물가상승률(underlying inflation)<sup>122)</sup>이 완만하거나 완화된 상태가 예상되는

122) 기초물가(underlying inflation)는 소비자물가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큰 품목의 영향을 제거한 것으로, 중기시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상이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최근 물가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기초물가 흐름파악이 중요해짐(한국은행, [제2023-19호]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 Headline, Core, and Underlying inflation,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lId=10077939&menu>)

경제에서는 정책 금리 인하가 계속 될 수 있음

- (재정정책)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로 인한 대규모 지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대응, 국방지출 강화 등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조치가 필요함
  - 신흥 시장경제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가운데 인적·물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국가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일부 저소득 국가는 교육·보건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무역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해결책이 요구됨. 지속적으로 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중기 조정 경로(medium-term adjustment paths) 내에서 지출 억제, 재분배, 수익 증대 등의 노력이 필수적임. 또한 많은 유럽 내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상의 조정 및 지출의 속도와 구성에 있어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국제협력과 구조적 정책개혁) 보호무역주의의 증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성장둔화 전망 우려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간 보복적으로 무역장벽을 크게 높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함
- 기업이 공급업체와 구매자를 모두 다각화하도록 장려하는 등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업 진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며, 국가 간 무역 및 자원 흐름에 대한 규제 장벽을 줄이는 등의 개혁이 필요
  -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은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 정부는 고속 디지털 인프라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유지하며 근로자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기술 축적과 숙련된 인력의 효과적인 배분을 촉진하는 정책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장벽 증가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업의 형성과 성장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함께 잘 설계된 주택 및 노동 시장 정책, 평생 학습 참여 등 노동 이동성을 지원하는 조치들은 기술 불일치 (skills mismatch)를 줄일 수 있음

표 2-III-2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24	2025년		2026년	
		중간경제전망	2024년 12월 전망 대비 차이	중간경제전망	2024년 12월 전망 대비 차이
세계	3.2	3.1	-0.2	3.0	-0.3
G20 <sup>1)</sup>	3.3	3.1	-0.2	2.9	-0.3
호주	1.1	1.9	0.0	1.8	-0.7
캐나다	1.5	0.7	-1.3	0.7	-1.3
유로 존	0.7	1.0	-0.3	1.2	-0.3
독일	-0.2	0.4	-0.3	1.1	-0.1
프랑스	1.1	0.8	-0.1	1.0	0.0
이탈리아	0.7	0.7	-0.2	0.9	-0.3
스페인 <sup>2)</sup>	3.2	2.6	0.3	2.1	0.1
일본	0.1	1.1	-0.4	0.2	-0.4
<b>한국</b>	<b>2.1</b>	<b>1.5</b>	<b>-0.6</b>	<b>2.2</b>	<b>0.1</b>
멕시코	1.5	-1.3	-2.5	-0.6	-2.2
튀르키예	3.2	3.1	0.5	3.9	-0.1
영국	0.9	1.4	-0.3	1.2	-0.1
미국	2.8	2.2	-0.2	1.6	-0.5
아르헨티나	-1.8	5.7	2.1	4.8	1.0
브라질	3.4	2.1	-0.2	1.4	-0.5
중국	5.0	4.8	0.1	4.4	0.0
인도 <sup>3)</sup>	6.3	6.4	-0.5	6.6	-0.2
인도네시아	5.0	1.9	-0.3	5.0	-0.1
러시아	4.1	1.3	0.2	0.9	0.0
사우디아라비아	1.2	3.8	0.2	3.6	-0.2
남아프리카공화국	0.6	1.6	0.1	1.7	0.0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대국(permanent invitee)

3)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5, p. 5, Table 1

■ OECD, 글로벌 부채보고서(Global Debt Report) 제2판 발표(2025. 3. 20.)<sup>123)</sup>

- (개요) 글로벌 부채보고서(제2판)에서는 2024년 말까지의 글로벌 국채 및 기업 부채시장의 최신동향 분석과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국채차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채시장(debt markets)이 기후전환 자금지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부채 규모 현황 및 전망) 몇몇 주요 국채 수익률은 정책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반면, 국가부채와 기업 부채는 모두 증가하였음. 이러한 높은 부채 수준과 높은 차입 비용과 더불어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정부와 기업들은 2024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25조달러를 신규로 차입했으며, 이는 2007년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에 해당
    - 이러한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부채시장을 통하여 조달한 데 기인하였으며, 엄격한 은행 규칙과 규제로 기업들이 채권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에 기인
  -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총 국채와 회사채 부채는 100조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GDP 대비 부채(중앙정부의 시장성 부채를 기준으로 정의됨) 비율은 인플레이션으로 일시적인 완화 효과가 있는 후, 여러 OECD 회원국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
      - \* OECD 회원국 GDP 대비 부채비율(총액)은 2023년 82%(54조달러)에서 2024년 84%(55조달러)로 증가함. 이 수치는 2025년 85%(59조달러)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임
- OECD 회원국들의 신규 국채 발행 규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점을 찍고 난후, 2022년 12조달러로 감소한 후 2023년 14조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거의 16조달러에 도달하였고, 2025년에는 17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그림 II-3-1] 참고)
  - 신흥시장국가들의 채권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1조달러에서 2024년 3조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흥시장의 미지급 부채 수준은 2007년 4조달러에서 2024년 12조달러에 육박

123) OECD, *Global Debt Report 2025: Financing Growth in a Challenging Debt Market Enviro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ee42b13-en>. 검색일자: 2025. 3. 21.

-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회사채 부채는 35조달러에 달하며, 신디케이트론<sup>124)</sup>은 25조달러, 민간 신용규모는 최소 1조 6천억달러에 달함
- (차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위험) 현재 미지급 부채의 금리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되어 만기 도래 시 높은 금리로 재융자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만기 도래 현황: 향후 3년 이내에 총 국채의 42%와 전체 회사채 채권의 38%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OECD 회원국의 국채 중 약 45%가 2027년까지 만기 도래 예정이며, 신흥시장에서 향후 3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미지급 채권의 비율은 거의 40%에 달할 전망
  - 차입 비용 증가: 2021년 이후 GDP 대비 이자 비용이 빠르게 상승 중이며, 2024년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에서 GDP 대비 정부 이자 지급비용이 증가하여 총 3.3%에 달함
  - 기업 채권 시장의 변화: 2008년 이후 기업 채권 발행은 급증했지만, 기업 투자 성장은 둔화됨. 이는 기업이 차입금을 생산적 투자보다는 리파이낸싱 및 주주 배당 등에 활용하여 기존 부채가 생산적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통해 상환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함
- (부채시장의 변동성 증가) 중앙은행들은 2024년에도 양적 긴축을 지속하면서 부채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어 투자자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해외 투자 수요 지속 여부는 국제 금융 흐름 및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충격 발생 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음
  - 투자자 구성 변화: OECD 회원국에서 중앙은행의 국내 국채 보유율이 2021년 29% → 2024년 19%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가계(5 → 11%)와 외국인 투자자(29 → 34%)의 비중이 증가
- (넷제로(Net-Zero)<sup>125)</sup> 전환과 투자 확대 필요성)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124)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말함.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 기능이 혼합된 융자 형태임. 한 국가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에 사용되고 있음(자료: 기획재정부, 『시사 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644>, 검색일자: 2025.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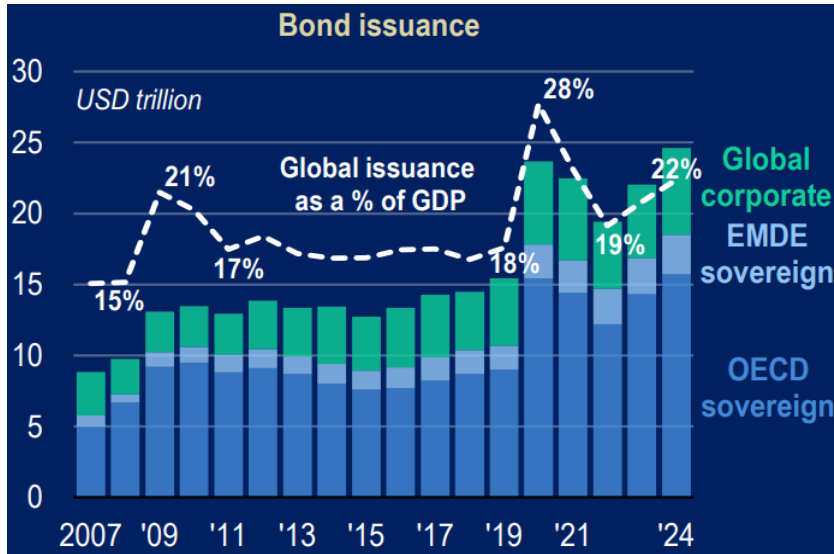
125) '넷제로(Net-Zero)'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하며 탄소중립이라고도 말함(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이란」, <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9&menuLevel=2&menuNo=11>, 검색일자: 2025. 3. 24.).

부문의 대규모 투자 증가가 필요하나, 높은 부채와 이자 비용으로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공공 vs. 민간 투자 시나리오: 공공 부문 주도 시 2050년까지 선진국에서는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5%p, 중국 4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시장(중국 제외)에서는 2040년까지 1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민간 부문 주도 시 기업 차입이 급증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급속한 발전이 필요함
- 기후목표 달성과 금융개혁의 필요성: 신흥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자금 조달을 확대하면 GDP 대비 에너지 기업의 부채가 3배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 규제 개혁 및 자본 시장 발전이 필수적이며, 현재 투자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선진국은 2041년, 신흥시장은 2050년까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 (부채시장 활용의 전략적 접근 필요) 부채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양질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성장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 및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함
  -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국방비 증가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채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기후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개발되어야 함
  - 기후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에서 부채시장이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음. 공공부문만으로는 기후 전환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민간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면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이 필요. 금융규제 개혁은 특히 신흥시장에서 자본시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부채시장의 자금지원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임

그림 2-III-1 2024년 국가 및 기업 차입 현황

(단위: 조달러)



주: EMDE(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 해당  
 자료: OECD, *OECD Global Debt Report 2025*, p. 15, Infographic 1

■ OECD, 세계경제전망보고서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발표(2025. 6. 3.)<sup>126)</sup>

※ OECD는 연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회원국, G20에 대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3월과 9월에 중간 업데이트(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를 발표함

○ (동향) 세계경제는 여전히 높은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장벽 증가로 인해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 대응 속도와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관세인상과 추가적인 무역장벽 도입의 불확실성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성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요인들이 정책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투자, 소비심리,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2.9%로

126)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5., 2025. 6. 3.,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volume-2025-issue-1\\_83363382-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volume-2025-issue-1_83363382-en.html). 검색일자: 2025. 6. 5.

둔화될 것으로 전망(5월 중순 기준 관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근거)<sup>127)</sup>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권별 전망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경제는 2025년 GDP 성장률이 1.6%에서 2026년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특히 금리인하 지연과 재정정책 조정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GDP 성장률이 2025년 1%에서 2026년 1.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외국 수요 회복에 따른 효과에 기인함.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를 뒷받침할 전망이며, 임금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2025년 하반기까지 핵심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25년 0.7%에서 2026년 0.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 소비는 강력한 임금 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2.1%에서 2025년 1.0%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증가된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수출 성장과 기업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는 2025년 후반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실질임금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5년 4.7%에서 2026년 4.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 약세와 수출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내수 소비 증대 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는 2025년 4.1%에서 2026년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G20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3.6%에서 2026년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급망 안정화와 비용 압력 완화로 인한 것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물가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음
- (위험) OECD는 세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시함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될 경우,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성장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상은 최종 제품 가격과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며, 실질 환율 하락은 수입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관세로 인한 가격

127) 2025년 3월 전망과 비교하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 2026년 전망치는 3.0%였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2025년 2.9%(0.2%p 하향 조정)와 2026년 2.9%(0.1%p 하향 조정)로 하향 조정됨.

상승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의 재정적 스트레스) 기업의 재정 압박이 금융기관 간 위험 가격 조정을 촉발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경제 둔화와 무역 비용 상승이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
- (집중된 시장의 위험 및 레버리지 위험) 시장 집중도가 높아 특정 기업이나 산업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파될 위험이 큼. 갑작스러운 가격하락과 채권수익률 상승은 레버리지 투자 기금의 강제 매각을 촉발해 시장 변동성을 증폭할 수 있음
- (신흥시장의 경제위험) 국가 부채 수준이 증가하고 2025~2026년에 많은 정부 채권이 만기를 맞아 차입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저소득 국가들은 외화 차입 의존도가 높아 금융시장 변동성과 해외 원조감소로 인해 환율 변화와 재정적 위험 증가가 우려
- (정책 권고)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이 필요. 또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이들에게 임시지원을 제공하며,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실행이 필요
  - (국제 무역정책)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면 경제성장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세 인하, 무역 협정 강화, 서비스 무역 장벽 완화가 생산성 및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의 역할) 무역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이 임금과 가격 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각국 중앙은행이 신중한 정책결정을 해야 함. 관세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마다 다를 것이며, 정책금리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정부의 재정정책) 공공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은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함. 단기적으로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활용해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화할 필요
  - (구조적 정책 개혁) 보호무역주의 증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낮은 성장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개혁이 필요함.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가 정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혁신 및 노동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

표 2-III-3 실질 GDP 성장률 및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Q4	Q4	Q4
실질 GDP 성장률 <sup>1)</sup>								
세계 <sup>2)</sup>	3.4	3.4	3.3	2.9	2.9	3.4	2.6	3.0
G20 <sup>2)</sup>	3.5	3.8	3.4	2.9	2.9	3.5	2.6	3.0
OECD <sup>2)</sup>	2.3	1.8	1.8	1.4	1.5	1.9	1.1	1.7
미국	2.5	2.9	2.8	1.6	1.5	2.5	1.1	1.6
유로존	1.9	0.5	0.8	1.0	1.2	1.2	0.7	1.7
일본	0.8	1.4	0.2	0.7	0.4	1.4	0.1	0.4
한국 <sup>3)</sup>	2.9	1.4	2.1	1.0	2.2	1.2	1.8	2.3
비 OECD <sup>2)</sup>	4.4	4.7	4.5	4.1	3.9	4.6	3.8	4.0
중국	6.8	5.4	5.0	4.7	4.3	5.2	4.3	4.5
인도 <sup>4)</sup>	6.8	9.2	6.2	6.3	6.4			
브라질	-0.4	3.2	3.4	2.1	1.6			
OECD 실업률 <sup>5)</sup>	6.5	4.8	4.9	5.0	4.9	4.9	5.0	4.9
물가상승률 <sup>1)</sup>								
G20 <sup>2),6)</sup>	3.0	6.3	6.2	3.6	3.2	4.7	3.4	2.8
OECD <sup>7)</sup>	1.7	7.1	5.1	4.1	3.2	4.3	4.1	2.8
미국 <sup>8)</sup>	1.3	3.8	2.5	3.2	2.8	2.5	3.9	2.1
유로존 <sup>9)</sup>	0.9	5.4	2.4	2.2	2.0	2.2	2.0	2.0
일본 <sup>10)</sup>	0.9	3.3	2.7	2.8	2.0	2.9	2.1	2.1
한국 <sup>3)</sup>	1.2	3.6	2.3	2.1	2.0	1.6	2.2	2.0
OECD 재정수지 <sup>11)</sup>	-3.1	-4.6	-4.7	-4.6	-4.7			
세계무역성장률 <sup>1)</sup>	3.3	1.2	3.8	2.8	2.2	4.0	2.0	2.8

주: 1) %, 마지막 세 열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

2) 구매력 감안한 명목 GDP 이동 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3) 한국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Economic Outlook, No. 117, database 참고

4) 회계 연도 기준

5) 경제활동 인구 대비 %

6) 헤드라인 물가상승률

7)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민간 소비 이동평균

8)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9) 조화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10) 소비자물가지수(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11) GDP 대비 %

자료: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5, p. 13, Table 1.1

2. OECD Economic Outlook, No. 117, 검색일자: 2025.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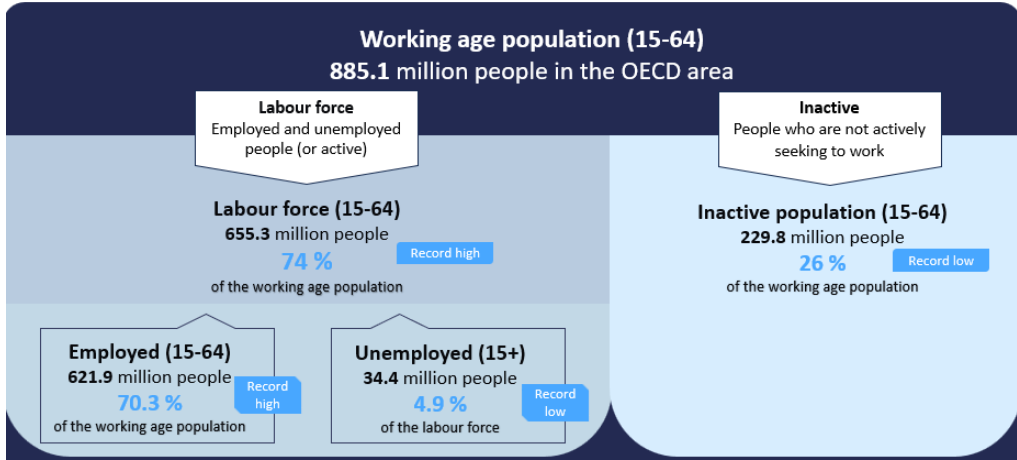
## 02 주요 경제지표 동향

### ■ OECD, 2024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4. 1. 16.)<sup>128)</sup>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3분기에 각각 70.3%, 74.3%로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OECD 38개국 중 13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OECD 3분의 2 국가(G7 국가 중 이탈리아, 프랑스만 예외)에서 고용률이 OECD 평균인 70.3% 이상으로 집계됨
  -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의 고용률은 80%를 상회하는 한편, 튀르키예는 고용률이 55.2%로 가장 낮은 국가로 집계됨
  - 전 분기 대비 고용률은 룩셈부르크(70.3→69.2%), 칠레(64.9→64.1%)순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코스타리카(59.6→62.3%)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약 4분의 3 국가에서 OECD 평균인 7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율도 각각 67.1%, 81%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24년 11월에 4.9%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4월 이후 5.0%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2024년 11월 실업률은 각각 5.9%, 6.3%로 4개월 연속 최저 수준을 유지

128)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third quarter of 2024," 2025. 1. 16.,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1/labour-market-situation-updated-january-2025.html>, 검색일자: 2025. 1. 17.

그림 2-III-2 2024년 3분기 OECD 노동시장



자료: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6," January 2025, Figure 1

표 2-III-4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19	2023				2024		
				Q4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67.7	69.3	70.0	68.9	70.0	70.1	70.1	70.2	70.2	70.3	
G7	71.1	72.4	73.0	72.3	73.0	73.0	73.1	73.0	73.0	73.1	
유럽연합	68.3	69.8	70.4	68.0	70.4	70.4	70.6	70.7	70.9	70.9	
유로지역	67.8	69.4	70.1	68.6	70.1	70.0	70.2	70.3	70.6	70.5	
호주	74.6	76.9	77.2	74.4	77.2	77.2	77.1	76.9	76.8	77.2	
캐나다	73.5	75.6	75.8	74.6	76.0	75.7	75.4	75.0	74.8	74.2	
프랑스	67.3	68.1	68.5	66.5	68.5	68.4	68.4	68.7	69.0	69.2	
독일	75.6	76.7	77.2	75.8	77.2	77.2	77.3	77.4	77.4	77.4	
이탈리아	58.3	60.2	61.5	59.0	61.4	61.5	62.1	62.1	62.0	62.5	
일본	77.9	78.5	78.9	78.1	78.9	79.0	79.2	79.1	79.3	79.5	
<b>한국</b>	66.5	68.5	69.2	67.0	69.3	69.4	69.5	69.5	69.5	69.6	
스페인	62.6	64.3	65.4	63.4	65.4	65.7	65.7	65.7	66.1	66.3	
영국	75.1	75.3	75.1	76.5	75.2	74.8	75.0	74.5	74.5	74.9	
미국	69.4	71.3	72.0	71.7	72.0	72.0	72.0	72.0	71.9	71.8	

자료: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6," January 2025, p. 4, Table 1 일부 발췌

표 2-III-5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19	2023				2024		
				Q4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72.2	73.1	73.7	72.9	73.7	73.7	73.8	73.9	74.0	74.0	
G7	75.1	75.6	76.2	75.5	76.2	76.2	76.3	76.3	76.4	76.5	
유럽연합	73.6	74.5	75.0	73.0	75.0	75.0	75.2	75.4	75.4	75.4	
유로지역	73.6	74.5	75.0	74.1	75.0	75.0	75.2	75.4	75.5	75.4	
호주	78.7	80.0	80.2	78.3	80.2	80.2	80.3	80.0	80.1	80.6	
캐나다	79.5	79.8	80.2	79.1	80.3	80.2	80.0	79.8	79.9	79.5	
프랑스	73.0	73.6	73.9	72.7	74.0	73.9	74.0	74.3	74.6	74.8	
독일	78.5	79.3	79.7	78.2	79.7	79.7	79.9	80.1	80.1	80.2	
이탈리아	64.5	65.6	66.7	65.4	66.6	66.7	67.1	67.0	66.7	66.6	
일본	80.3	80.7	81.1	80.0	81.1	81.2	81.4	81.3	81.5	81.7	
<b>한국</b>	<b>69.0</b>	<b>70.5</b>	<b>71.1</b>	<b>69.6</b>	<b>71.1</b>	<b>71.3</b>	<b>71.4</b>	<b>71.5</b>	<b>71.5</b>	<b>71.4</b>	
스페인	73.7	74.0	74.5	73.8	74.4	74.7	74.6	74.6	74.8	74.8	
영국	78.4	78.1	78.3	79.4	78.6	78.1	78.0	77.9	77.8	78.3	
미국	73.4	74.0	74.7	74.4	74.6	74.8	74.9	74.9	74.9	75.0	

자료: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6," January 2025, p. 5, Table 2 일부 발췌

표 2-III-6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2	2023	2023	2024			2024		
			Q4	Q1	Q2	Q3	9월	10월	11월
OECD 전체	5.0	4.8	4.9	4.9	4.9	4.9	4.9	4.9	4.9
G7	4.1	4.1	4.1	4.2	4.3	4.3	4.3	4.3	4.3
유럽연합	6.2	6.0	6.1	6.1	6.0	5.9	5.9	5.9	5.9
유로지역	6.8	6.6	6.5	6.5	6.5	6.3	6.3	6.3	6.3
호주	3.7	3.7	3.9	3.9	4.1	4.1	4.1	4.1	3.9
캐나다	5.3	5.4	5.8	5.9	6.2	6.5	6.5	6.5	6.8
프랑스	7.3	7.3	7.5	7.5	7.5	7.5	7.5	7.6	7.7
독일	3.1	3.0	3.1	3.3	3.5	3.4	3.4	3.4	3.4
이탈리아	8.1	7.7	7.5	7.1	6.7	6.1	6.0	5.8	5.7
일본	2.6	2.6	2.5	2.5	2.6	2.5	2.4	2.5	2.5
<b>한국</b>	<b>2.9</b>	<b>2.7</b>	<b>2.8</b>	<b>2.8</b>	<b>2.8</b>	<b>2.5</b>	<b>2.5</b>	<b>2.7</b>	<b>2.7</b>
스페인	13.0	12.2	11.9	11.8	11.6	11.3	11.2	11.2	11.2
영국	3.8	4.1	3.9	4.3	4.2	4.3	4.3	...	...
미국	3.7	3.6	3.8	3.8	4.0	4.2	4.1	4.1	4.2

주: 1. '...'는 데이터 없음

자료: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6," January 2025, p. 7, Table 4 일부 발췌

■ OECD, 2024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5. 2. 11)<sup>129)</sup>

- OECD 회원국의 2024년 3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한 반면,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전 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
  - 2024년 3분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증가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질가계소득이 증가함
    - \* 데이터가 제공된 19개국 중 12개국은 증가, 6개국은 감소, 1개국은 변동 없음
  - 캐나다의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1.1%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독일은 전 분기의 감소세에서 반등하여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0.9%, 실질 GDP가 0.1% 증가했으며, 특히 부동산 소득의 증가가 영향을 미침
  - 프랑스는 주로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실질가계소득이 0.7% 증가하며 5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1인당 실질 GDP도 0.3% 증가
  - 이탈리아와 미국의 실질가계소득은 각각 0.4%, 0.1%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임
  - 영국은 세금이 근로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0.1% 감소했으며, 1인당 실질 GDP 역시 0.2% 감소
- 기타 OECD 회원국 중 스페인은 부동산 소득의 큰 증가에 기인하여 실질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상승(2.2%)한 반면, 덴마크는 주로 부동산 및 자영업 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가장 큰 하락 폭(-1.8%)을 기록
  - 스페인의 가계가처분소득에서 부동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분기 6.6%에서 2024년 3분기에 10.4%로 증가함
  - 부동산 소득 비중 증가 현상은 스페인 외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와 프랑스는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가처분소득에서 부동산 소득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

129) OECD, "Growth in real household income remains subdued in third quarter of 2024," 2025. 2. 11.,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2/growth-and-economic-well-being-thir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5. 2. 13.

표 2-III-7 분기별 1인당 실질가계소득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1.1	0.7	1.1	0.7	0.0	0.5	1.2	0.2	0.2
G7	1.0	0.2	1.1	0.3	0.2	0.3	1.2	0.2	0.3
캐나다	-0.6	0.8	-1.9	0.4	0.5	-0.6	0.2	0.7	1.1
프랑스	1.5	1.1	-1.0	-0.3	0.3	1.0	0.3	0.5	0.7
독일	0.9	-0.8	-1.1	1.3	-0.1	-0.1	0.9	-0.4	0.9
이탈리아	0.5	-3.1	1.6	0.2	0.7	-0.1	1.2	1.0	0.4
일본	0.4	-0.1	-0.8	...	...	...	...	...	...
영국	0.2	1.8	-0.9	1.1	-0.3	0.7	1.1	1.4	-0.1
미국	1.2	0.4	2.2	0.4	-0.1	0.5	1.1	0.0	0.1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은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4," 2025. 2. 11, Table1, p. 3.

표 2-III-8 분기별 1인당 실질GDP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0.3	0.2	0.3	0.3	0.2	0.2	0.3	0.3	0.3
G7	0.3	0.3	0.4	0.3	0.3	0.2	0.1	0.3	0.4
캐나다	0.0	-1.0	0.3	-0.4	-1.0	-0.9	-0.2	-0.1	-0.4
프랑스	0.4	0.0	-0.2	0.6	0.1	0.4	0.0	0.2	0.3
독일	0.3	-0.6	-0.1	-0.2	0.1	-0.5	0.2	-0.4	0.1
이탈리아	0.6	-0.3	0.4	-0.2	0.2	-0.1	0.4	0.2	0.0
일본	-0.3	0.5	1.4	0.5	-0.9	0.3	-0.4	0.6	0.5
영국	-0.2	0.1	-0.1	-0.2	-0.4	-0.5	0.5	0.1	-0.2
미국	0.5	0.6	0.5	0.4	0.8	0.5	0.2	0.5	0.6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4," 2025. 2. 11, Table1, p. 3.

그림 2-III-3 가계처분소득 대비 부동산소득 비중(2019년 4분기~2024년 3분기)



주: 계절조정 데이터, Q4 2019=100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4," 2025. 2. 11., Figure 2, p. 2.

■ OECD,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2. 20.)<sup>130)</sup>

- 2024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잠정)은 0.3%로 전 분기 대비 0.2%p 둔화되었으며, G7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은 국가별로 엇갈린 성장세가 반영되어 전 분기 대비 소폭(0.1%p) 둔화된 0.4%를 기록
  -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은 각각 0.4%→-0.1%, 0.1%→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가 위축된 모습을 보임
  - 프랑스의 성장 둔화는 지난 3분기 동안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견인했던 경제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4분기 상품 수입의 증가와 재고 축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독일의 경우 수출이 3분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이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미국의 성장률은 전 분기 0.8%에서 0.6%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투자 및 수출 감소에 기인함

130) OECD, "OECD GDP growth slows slight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4," 2025. 2. 20.,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2/gdp-growth-fourth-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5. 2. 24.

-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3분기 이후 변동 없이 0.0%로 유지됨
- 반면 일본의 성장률은 0.4%에서 0.7%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상품 수입 감소에 따른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 덕분임
- 캐나다는 0.3%에서 0.4%로, 영국은 0.1%에서 0.2%로 각각 성장세가 소폭 상승
- 연간 추정치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2024년 연간 GDP 성장률은 1.7%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이는 2023년 성장률인 1.8%보다 낮은 수준임
- GDP 데이터가 제공된 28개 회원국 중 5개국은 2024년에 경제 위축을 겪었으며, 10개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13개국은 성장세가 지속됨

표 2-III-9 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	0.3	0.5	0.5	0.4	0.3	0.4	0.5	0.5	0.3
G20	0.5	1.0	0.9	0.8	0.6	0.8	0.7	0.8	...
유럽연합 27개국	-0.2	0.1	0.0	0.1	0.1	0.3	0.2	0.4	0.1
유로지역 20개국	-0.1	0.0	0.1	0.0	0.0	0.3	0.2	0.4	0.0
G7	0.4	0.6	0.4	0.5	0.4	0.3	0.5	0.5	0.4
캐나다	-0.1	1.0	0.2	-0.1	0.2	0.5	0.5	0.3	0.4
프랑스	0.1	-0.1	0.7	0.2	0.5	0.1	0.3	0.4	-0.1
독일	-0.5	0.1	-0.2	0.2	-0.4	0.2	-0.3	0.1	-0.2
이탈리아	-0.2	0.4	-0.2	0.3	-0.1	0.4	0.2	0.0	0.0
일본	0.2	1.3	0.6	-0.9	-0.1	-0.5	0.7	0.4	0.7
영국	0.3	0.1	0.0	-0.1	-0.3	0.7	0.5	0.1	0.2
미국	0.8	0.7	0.6	1.1	0.8	0.4	0.7	0.8	0.6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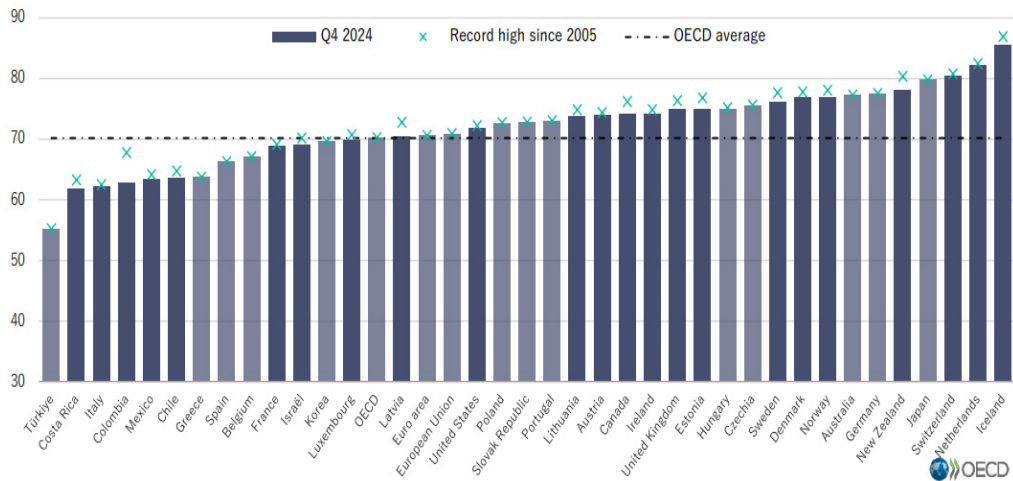
2. '...'는 데이터 없음

자료: OECD, "OECD GDP growth slows slight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4," 2025. 2. 20., Table 1

■ OECD, 2024년 4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5. 4. 17.)<sup>131)</sup>

- OECD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4분기에 각각 70.2%와 73.9%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전 분기에 기록한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임
  - 두 지표 모두 38개 OECD 회원국 중 11개국<sup>132)</sup>에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에 해당
- 2024년 4분기 고용률은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OECD 평균인 70.2%를 초과하였음
  - 튀르키예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의 고용률은 80%를 상회하며,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보임(그림 2-III-4, <표 2-III-10> 참고)

그림 2-III-4 OECD 회원국의 고용률



주: 2024년 4분기 고용률은 호주, 벨기에,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르키예 뿐만 아니라 OECD, 유로 지역, 유럽연합(청색광으로 표시된 막대)에서도 사상 최고치의 0.1%p 이내로 나타남.  
 자료: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p. 2, Figure 2

131) OECD, "labour-market-situation-oecd-04-2025," 2025. 4. 17.,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4/labour-market-situation-oecd-04-2025.pdf>, 검색일자: 2025. 4. 18.

132) 호주, 벨기에,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튀르키예

- 2024년 4분기 기준 15~64세 사이의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의 거의 4분의 3에서 OECD 평균인 73.9%보다 높았음(〈표 2-III-11〉 참고)
- 2024년 전체로 볼 때, OECD 고용률은 2023년보다 소폭 높았으며(0.2%p 상승), 이는 주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를 반영한 것임
- 2024년 전체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튀르키예(60.6%), 멕시코(65.7%), 이탈리아(66.6%)가 가장 낮은 수준임
- 유로지역의 2024년 전체 고용률은 2023년 대비 0.4%p 증가한 70.6%로, 이는 실업률 하락과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을 모두 반영한 것임
- 독일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실업률 상승으로 상쇄되어 고용률 변화가 거의 없었음
- OECD 실업률은 2023년 4.8%, 2024년 4.9% 수준을 보였으며, 2025년 2월 기준 4.8%를 유지하고 있음(〈표 2-III-12〉 참고)
- 2025년 2월 기준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5.7%, 6.1%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캐나다 6.6%, 미국 4.1%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

표 2-III-10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19	2023		2024			
				Q4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69.3	70.0	70.2	68.9	70.1	70.1	70.2	70.2	70.3	70.2
G7	72.4	73.0	73.0	72.3	73.0	73.1	73.0	73.0	73.1	73.1
유럽연합	69.8	70.4	70.8	68.1	70.4	70.6	70.7	70.8	70.9	70.9
유로지역	69.4	70.1	70.5	68.5	70.0	70.2	70.3	70.5	70.5	70.6
호주	76.9	77.2	77.1	74.1	77.2	77.1	76.8	76.8	77.2	77.3
캐나다	75.6	75.9	74.7	74.5	75.8	75.6	75.2	74.9	74.3	74.2
프랑스	68.1	68.5	69.0	66.7	68.3	68.4	68.7	69.0	69.2	68.9
독일	76.9	77.2	77.4	75.8	77.2	77.3	77.4	77.4	77.4	77.6
이탈리아	60.2	61.5	62.2	59.0	61.4	62.1	62.1	62.0	62.5	62.2
일본	78.5	78.9	79.4	78.1	79.0	79.2	79.1	79.3	79.5	79.8
<b>한국</b>	<b>68.5</b>	<b>69.2</b>	<b>69.5</b>	<b>67.0</b>	<b>69.4</b>	<b>69.5</b>	<b>69.5</b>	<b>69.5</b>	<b>69.6</b>	<b>69.6</b>
스페인	64.3	65.4	66.1	63.4	65.7	65.7	65.7	66.1	66.3	66.3
튀르키예	52.8	53.8	55.2	50.3	53.8	54.4	55.1	55.1	55.2	55.2
영국	75.1	75.1	74.8	76.4	74.9	74.9	74.5	74.6	74.9	75.0
미국	71.3	72.0	71.9	71.7	72.0	72.0	72.0	71.9	71.8	71.7

자료: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Table 1 일부 발췌

표 2-III-11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19	2023			2024			
				Q4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73.1	73.7	74.0	72.9	73.8	73.8	73.9	74.0	74.0	73.9	
G7	75.6	76.2	76.4	75.5	76.2	76.3	76.3	76.4	76.5	76.4	
유럽연합	74.5	75.0	75.4	73.0	75.0	75.2	75.3	75.4	75.4	75.3	
유로지역	74.5	75.0	75.4	74.1	75.0	75.2	75.4	75.4	75.4	75.3	
호주	80.0	80.2	80.4	78.3	80.2	80.3	80.0	80.1	80.6	80.6	
캐나다	79.8	80.3	79.8	79.1	80.3	80.2	80.0	80.0	79.6	79.6	
프랑스	73.6	73.9	74.5	72.7	73.8	74.1	74.4	74.6	74.8	74.4	
독일	79.4	79.7	80.2	78.2	79.7	79.9	80.1	80.2	80.3	80.4	
이탈리아	65.6	66.7	66.6	65.4	66.7	67.1	67.0	66.7	66.6	66.2	
일본	80.7	81.1	81.6	80.0	81.2	81.4	81.4	81.5	81.7	81.9	
<b>한국</b>	<b>70.5</b>	<b>71.1</b>	<b>71.5</b>	<b>69.6</b>	<b>71.3</b>	<b>71.4</b>	<b>71.5</b>	<b>71.5</b>	<b>71.4</b>	<b>71.6</b>	
스페인	74.0	74.5	74.6	73.8	74.7	74.6	74.5	74.8	74.8	74.4	
튀르키예	59.2	59.6	60.6	58.2	59.4	59.8	60.5	60.6	60.6	60.6	
영국	78.1	78.3	78.2	79.4	78.2	77.9	77.9	77.9	78.4	78.5	
미국	74.0	74.7	74.9	74.4	74.8	74.9	74.9	74.9	75.0	74.9	

자료: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Table 2 일부 발췌

표 2-III-12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3	2024	2023	2024					2024				2025	
			Q4	Q1	Q2	Q3	Q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OECD 전체	4.8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8	4.8
G7	4.1	4.3	4.2	4.2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유럽연합	6.0	5.9	6.1	6.1	6.0	5.9	5.8	5.9	5.8	5.8	5.8	5.8	5.8	5.7
유로지역	6.6	6.4	6.5	6.5	6.4	6.3	6.2	6.3	6.2	6.2	6.2	6.2	6.2	6.1
호주	3.7	4.0	3.9	3.9	4.0	4.1	4.0	4.1	4.1	3.9	4.0	4.1	4.1	4.1
캐나다	5.4	6.4	5.7	5.9	6.3	6.6	6.7	6.6	6.6	6.9	6.7	6.6	6.6	6.6
프랑스	7.4	7.4	7.6	7.5	7.4	7.4	7.3	7.4	7.4	7.3	7.3	7.3	7.3	7.4
독일	3.0	3.4	3.1	3.3	3.4	3.5	3.4	3.5	3.4	3.4	3.5	3.5	3.5	3.5
이탈리아	7.7	6.5	7.5	7.1	6.7	6.3	6.1	6.2	6.0	6.0	6.3	6.2	5.9	5.9
일본	2.6	2.6	2.6	2.6	2.6	2.5	2.5	2.4	2.5	2.5	2.5	2.5	2.5	2.4
<b>한국</b>	<b>2.7</b>	<b>2.8</b>	<b>2.8</b>	<b>2.8</b>	<b>2.8</b>	<b>2.5</b>	<b>3.0</b>	<b>2.5</b>	<b>2.7</b>	<b>2.7</b>	<b>3.7</b>	<b>2.9</b>	<b>2.7</b>	<b>2.7</b>
스페인	12.2	11.4	11.9	11.8	11.6	11.3	10.7	11.1	10.9	10.7	10.6	10.5	10.4	10.4
튀르키예	9.4	8.7	8.8	8.8	8.8	8.7	8.6	8.7	8.8	8.5	8.4	8.4	8.2	8.2
영국	4.1	4.3	3.9	4.3	4.2	4.3	4.4	4.3	4.4	4.4	4.4	4.4	4.4	...
미국	3.6	4.0	3.8	3.8	4.0	4.2	4.1	4.1	4.1	4.2	4.1	4.0	4.1	4.1

자료: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Table 3 일부 발췌

■ OECD, 2024년 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5. 5. 13.)<sup>133)</sup>

- 2024년 4분기 OECD의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이전 분기의 0.2%보다 상승하여 0.5%로 나타났으며,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와 동일하게 0.4%를 유지
  - 2024년 전체적으로 OECD의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2023년의 1.7%에서 다소 증가한 1.8%로 나타남. 2024년 4분기에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남
  -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데이터가 제공되는 19개 국가 중 9개 국가는 증가한 반면, 7개 국가는 감소했으며, 3개 국가는 변화가 없었음.<sup>134)</sup> G7 국가 중 영국, 미국에서만 실질가계소득이 증가했으며, 나머지는 감소하거나 성장이 없었음
  - 영국은 주로 근로자 보수와 사회 복지의 증가에 힘입어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1.5%의 증가를 보였고,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소폭 하락함
  - 미국의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0.3%로, 이는 주로 근로자 보수의 증가에 기인하며,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0.5%로 상승함
  - 이탈리아는 순부동산소득(Net Property Income) 감소와 사회기여금 증가로 인해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0.6%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소폭 증가함
  - 독일은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이 -0.5%,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0.2%로 모두 감소함
  -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이 전 분기 각각 1.4%와 0.9%였으나, 2024년 4분기는 0.0%로 변동이 없었음

133)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4," 2025. 5. 13.,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5/growth-and-economic-well-being-fourth-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5. 5. 15.

134) 1인당 실질가계소득에서 가계소득은 국가계정 측정치인 '가계의 총 처분 소득(gross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s)'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세금과 사회 기여금을 공제한 후 가계가 받는 총 소득을 나타냄. OECD 회원국 38개 중 가계 총 처분 소득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국가는 총 13개 국가이며, 25개 국가 중 발표 시점에 데이터가 있는 국가는 총 19개 국가에 해당함. 가계소득이 증가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호주(총 9개국)이며,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 칠레, 덴마크,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총 7개국),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 스페인(총 3개국)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OECD, "Methodological Notes: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2024. 8,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methods/QSA-Methodological-Note.pdf>;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households-economic-well-being-the-oecd-dashboard.html?oecdcontrol-395f5898a9-var2=2024-Q3>, 검색일자: 2025. 5. 30.)

-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된 1인당 실질가계소득의 연간 증가는 지난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에 기인함

**표 2-III-13 분기별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2	2023				2024				
	Q4	Q1	Q2	Q3	Q4	Q1	Q2	Q3	Q4	연간
OECD	0.6	0.9	0.8	-0.1	0.5	0.9	0.1	0.2	0.5	1.8
G7	0.3	1.0	0.5	0.0	0.4	1.0	0.2	0.2	0.2	1.7
캐나다	0.8	-1.9	0.4	0.5	-0.6	0.1	1.3	1.4	0.0	1.7
프랑스	1.2	-1.0	-0.3	0.2	0.9	0.5	0.5	0.9	0.0	2.1
독일	-1.0	-1.1	1.5	-0.1	-0.4	1.0	-0.1	0.7	-0.5	1.2
이탈리아	-2.8	1.8	0.1	0.4	-0.1	0.7	0.4	0.1	-0.6	1.1
일본	0.4	-1.7	0.0	0.4	-0.2	0.8	..	..	..	..
영국	1.7	-0.9	1.0	-0.3	0.6	0.9	0.9	0.5	1.5	2.9
미국	0.4	2.2	0.4	-0.1	0.5	1.1	0.0	-0.1	0.3	1.6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출처 데이터베이스는 발표 시점에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회원국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줌. 일본은 2024년 2분기부터의 데이터가 아직 제공되지 않음.

3. 가계(및 가계를 위한 비영리 기관)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명목 자료는 INSEE의 분기별 국가 계정을 근거로 함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4," 2025. 5. 13., Table1, p. 3.

**표 2-III-14 분기별 1인당 실질GDP 증가율**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2	2023				2024				
	Q4	Q1	Q2	Q3	Q4	Q1	Q2	Q3	Q4	연간
OECD	0.2	0.3	0.4	0.3	0.2	0.3	0.3	0.4	0.4	1.1
G7	0.3	0.4	0.3	0.3	0.2	0.1	0.4	0.4	0.3	1.1
캐나다	-0.1	0.3	-0.4	-1.0	-0.9	-0.2	0.1	-0.1	0.2	-1.4
프랑스	0.1	-0.2	0.7	0.0	0.3	0.0	0.2	0.3	-0.2	0.8
독일	-0.6	-0.1	-0.2	0.1	-0.5	0.2	-0.4	0.1	-0.2	-0.4
이탈리아	-0.1	0.5	-0.2	0.1	0.2	0.2	0.2	0.0	0.1	0.5
일본	0.4	1.3	0.7	-0.8	0.2	-0.4	0.8	0.5	0.7	0.5
영국	0.0	-0.3	-0.3	-0.3	-0.5	0.6	0.2	-0.2	-0.1	0.0
미국	0.6	0.5	0.4	0.8	0.5	0.2	0.5	0.6	0.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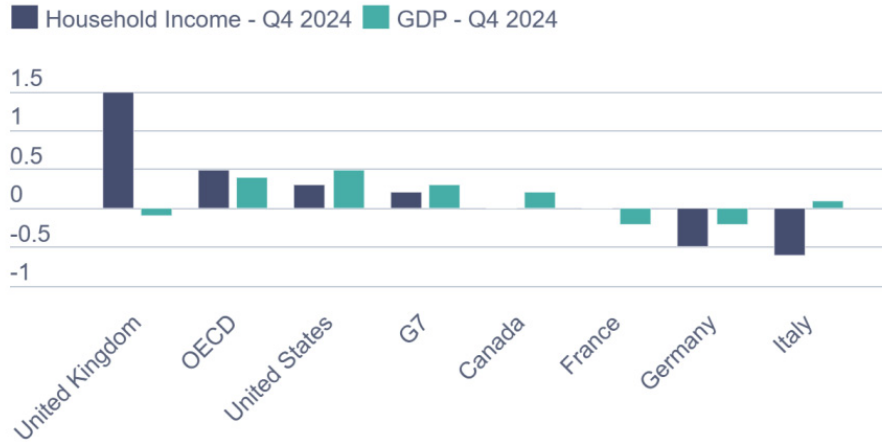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출처 데이터베이스는 발표 시점에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회원국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줌.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4," 2025. 5. 13., Table2, p. 3.

그림 2-III-5 2024년 4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 및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 분기 대비)



-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 2. 일본은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
- 3. 2024년 4분기 캐나다와 프랑스의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각각 0.0%의 성장을 기록하며 변동이 없었음.
- 4. 출처 데이터베이스는 발표 시점에 데이터가 제공되는 모든 OECD 회원국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줌.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4th quarter 2024," 2025. 5. 13., Figure 1,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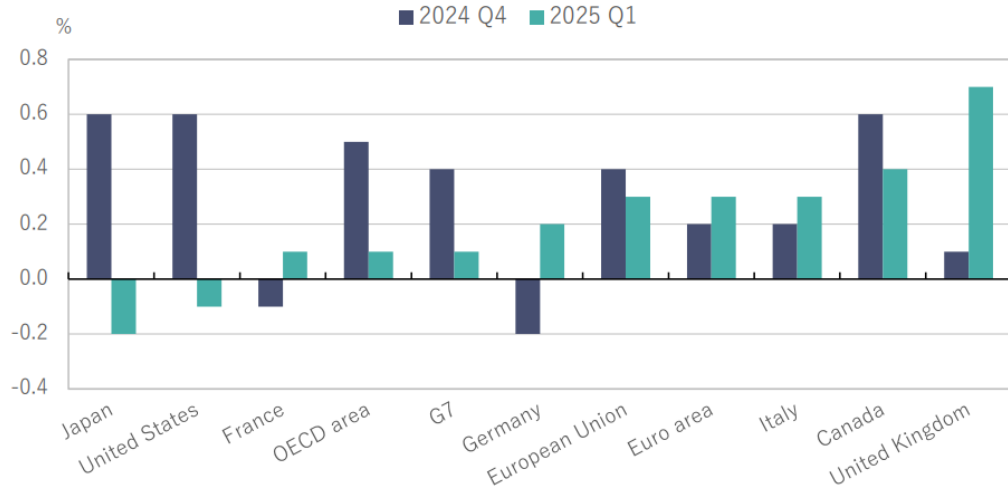
■ OECD,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5. 22.)<sup>135)</sup>

- 2025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1%에 그쳤으며, 이는 이전 분기의 0.5%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임
  - 2025년 1분기 G7 국가에서는 전 분기(0.4%) 대비 0.1%로 둔화되었으며, G7 국가들 간에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일본과 미국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각각 0.6%에서 -0.2% 및 -0.1%로 하락
  - 캐나다에서도 실질 GDP 성장률이 0.6%에서 0.4%로 둔화
  - 영국에서는 성장률이 0.1%에서 0.7%로 크게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주로 투자 증가와 상품 수출 증가에 기인
  - 데이터가 있는 다른 OECD 경제국들 중 17개국이 2024년 4분기와 비교하여 2025년 1분기에는 성장이 둔화됨

135) OECD, "OECD GDP growth," 2025. 5. 22.,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5/GDP-Growth-Q1-2025.pdf>, 검색일자: 2025. 5. 17.

그림 2-III-6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 분기 대비)



주: 1. 전 분기 대비 변화율, 계절조정 데이터  
 자료: OECD, "OECD GDP growth," 2025. 5. 22. p. 1, Figure 1

표 2-III-15 분기별(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3				2024				2025
	Q1	Q2	Q3	Q4	Q1	Q2	Q3	Q4	Q1
OECD	0.5	0.5	0.4	0.3	0.4	0.5	0.5	0.5	0.1
G20	1.0	0.9	0.8	0.6	0.8	0.7	0.9	0.9	...
유럽연합	0.1	0.1	0.1	0.0	0.3	0.3	0.4	0.4	0.3
유로존	0.0	0.1	0.0	0.0	0.3	0.2	0.4	0.2	0.3
G7	0.6	0.4	0.5	0.4	0.3	0.6	0.5	0.4	0.1
캐나다	1.0	0.2	-0.1	0.2	0.5	0.7	0.5	0.6	0.4
프랑스	-0.1	0.7	0.1	0.4	0.1	0.3	0.4	-0.1	0.1
독일	0.1	-0.2	0.2	-0.4	0.2	-0.3	0.1	-0.2	0.2
이탈리아	0.5	-0.2	0.1	0.2	0.2	0.2	0.0	0.2	0.3
일본	1.2	0.6	-1.0	-0.1	-0.4	0.9	0.2	0.6	-0.2
영국	0.1	0.0	-0.1	-0.2	0.9	0.5	0.0	0.1	0.7
미국	0.7	0.6	1.1	0.8	0.4	0.7	0.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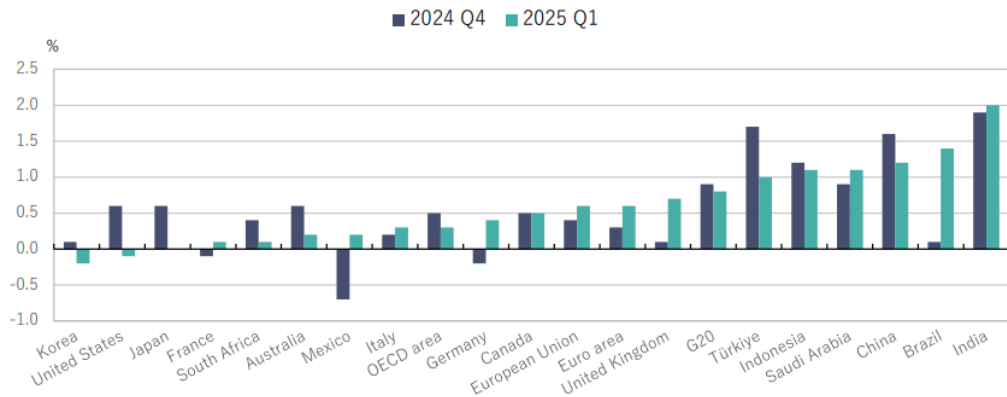
주: 1. 전 분기 대비 변화율  
 2. 계절조정 데이터  
 3. '...'는 데이터 없음을 나타냄  
 자료: OECD, "OECD GDP growth," 2025. 5. 22. p. 2, Table 1

■ OECD, 2025년 1분기 G20 국가의 GDP 성장률 발표(2025. 6. 11.)<sup>136)</sup>

- 2025년 1분기 G20 국가의 GDP 성장률(잠정치)은 0.8%로, 전 분기 0.9%에서 소폭 둔화됨
  - 한국과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 분기의 0.1%, 0.6%에서 2025년 1분기 각각 -0.2%, -0.1%로 둔화됨
  - 전 분기 대비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된 국가는 일본(0.6%→0.0%), 튀르키예(1.7→1.0%)이며, 중국(1.6→1.2%), 호주(0.6→0.2%), 남아프리카(0.4→0.1%), 인도네시아(1.2→1.1%)의 경우는 전 분기 대비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된 모습을 보임
  - 반면 브라질은 0.1%에서 1.4%로, 영국은 0.1%에서 0.7%로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독일(-0.2→0.4%), 프랑스(-0.1→0.1%), 멕시코(-0.7→0.2%)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함
  - 사우디아라비아(0.9→1.1%), 인도(1.9→2.0%), 이탈리아(0.2→0.3%)는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됨

그림 2-III-7 G20 국가의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 분기 대비)



주: 1. 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데이터

2. 2025년 1분기 일본의 성장률은 0.0%

자료: OECD, "G20 GDP growth slows to 0.8%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2025. 6. 11., Figure 1, p. 1.

136) OECD, "G20 GDP Growth – First quarter of 2025," 2025. 6. 11.,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6/g20-gdp-growth-first-quarter-2025.html>, 검색일자: 2025. 6. 20.

표 2-III-16 분기별(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3				2024				2025
	Q1	Q2	Q3	Q4	Q1	Q2	Q3	Q4	Q1
G20	1.0	1.0	0.8	0.6	0.8	0.7	0.9	0.9	0.8
아르헨티나	1.8	-2.9	2.0	-2.3	-1.4	-1.7	4.3	1.4	..
호주	0.5	0.4	0.5	0.1	0.1	0.2	0.4	0.6	0.2
브라질	1.4	0.8	0.1	0.3	1.0	1.5	0.8	0.1	1.4
캐나다	1.4	0.1	-0.2	0.0	0.2	0.6	0.6	0.5	0.5
중국	1.6	1.3	1.5	0.9	1.3	1.0	1.4	1.6	1.2
프랑스	0.1	0.9	0.2	0.4	0.1	0.2	0.4	-0.1	0.1
독일	0.1	-0.2	0.2	-0.4	0.2	-0.3	0.1	-0.2	0.4
인도	2.6	2.9	2.1	1.8	1.4	1.3	1.5	1.9	2.0
인도네시아	1.2	1.3	1.3	1.2	1.3	1.2	1.2	1.2	1.1
이탈리아	0.5	-0.2	0.1	0.2	0.2	0.2	0.0	0.2	0.3
일본	1.2	0.6	-1.0	-0.1	-0.3	1.0	0.2	0.6	0.0
한국	0.4	0.7	0.8	0.5	1.2	-0.2	0.1	0.1	-0.2
멕시코	0.8	0.8	0.5	0.4	0.0	0.2	0.8	-0.7	0.2
러시아	..	..	..	..	..	..	..	..	..
사우디아라비아	0.4	-0.6	-2.8	0.3	2.2	1.0	0.3	0.9	1.1
남아프리카	0.7	0.8	-0.4	0.4	0.1	0.3	-0.3	0.4	0.1
튀르키예	0.1	4.0	0.2	1.2	1.0	-0.2	-0.1	1.7	1.0
영국	0.1	0.0	-0.1	-0.2	0.9	0.5	0.0	0.1	0.7
미국	0.7	0.6	1.1	0.8	0.4	0.7	0.8	0.6	-0.1
유럽연합	0.1	0.1	0.2	0.1	0.3	0.3	0.4	0.4	0.6
유로지역	0.0	0.2	0.0	0.1	0.3	0.2	0.4	0.3	0.6
OECD	0.5	0.5	0.4	0.3	0.4	0.5	0.5	0.5	0.3

주: G20 추정치에는 러시아 연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음.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가 없기 때문에 2021년 4분기 부터는 러시아의 GDP 수치가 포함되지 않으며, G20 총계도 그에 맞게 재조정됨.

자료: OECD, "G20 GDP growth slows to 0.8%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2025. 6. 11., Table 1, p. 2.



## 제3부

# 주요국 재정동향

I. 미국

II. 일본

III. 독일

IV. 프랑스

V. 영국

VI. 호주

VII. 중국

VIII. 스웨덴

# I 미국<sup>137)</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 2025회계연도: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표 3-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5. 1. 16.	미국 재무부 재정관리국, 2024회계연도 발생주의 결산보고서 발표
2025. 1. 17.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35 예산-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2025. 1. 23.	미국 감사원(GAO), 정부 기관에 대한 부적절 지급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 발표
2025. 1. 29.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현 기준금리(4.25~4.50%) 동결 결정
2025. 1. 30.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4 페이고(PAYGO) 최종 보고서(annual report) 발표
2025. 2. 5.	미국 감사원(GAO), 국가 재정 건전성(The Nation's Fiscal Health) 보고서 발표
2025. 2. 25.	미국 의회 하원, 2026회계연도 예산결의안(H.Con.Res.14) 가결
2025. 3. 11.	미국 감사원(GAO), 부적절 지급(Improper Payments) 연례보고서 발표
2025. 3. 14.	미국 의회, 2025회계연도 3차 임시 세출예산법안(Continuing Resolution) 통과 의결
2025. 3. 19.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현 기준금리(4.25~4.50%) 동결 결정
2025. 3. 27.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55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25. 4. 10.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회계연도 상반기(2024. 10. 1.~2025. 3. 31.)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5. 4. 10.	미국 의회, 2025회계연도 예산결의안(H.Con.Res. 14) 최종 합의(resolving differences) 및 의결 완료
2025. 3. 26.	미국 의회예산처(CBO), 연방 채무한도 보고서 발표
2025. 5. 2.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6회계연도(2025. 10. 1.~2026. 9. 30.) 대통령 예산안 간략본 발표
2025. 5. 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현 기준금리(4.25~4.50%) 3회 연속 동결 결정

1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ymgoo@kipf.re.kr) 작성

표 3-I-1 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25. 5. 13.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5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5. 5. 16.	무디스(Moody's), 미국 신용등급 하향(Aaa→Aa1) 조정
2025. 5. 22.	미국 의회 하원, 2025회계연도 예산결의안(H.Con.Res.14) 조정지침에 따른 트럼프 감세 법안(H.R. 1; reconciliation bill; OBBBA) 가결
2025. 6. 4.	미국 의회예산처(CBO), 의회 하원에서 가결(5. 22.)된 트럼프 감세 법안(OBBBA)에 대한 비용추계 보고서 발표
2025. 6. 4.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 1. 6.~2025. 5. 13. 기간 동안의 관세 인상애 따른 예산 경제 영향 보고서 발표
2025. 6. 5.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및 한국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지정
2025. 6. 18.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4.25~4.50%) 4회 연속 동결 결정

## 01 예산 및 결산

### 가. 예산

#### 1) 2026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 관리예산처(OMB), 2026회계연도(2025. 10. 1.~2026. 9. 30.) 대통령 예산안 간략본(skinny budget) 발표(2025. 5. 2.)<sup>138)</sup>
  - (배경) 미국 대통령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매해 2월경에 발표되나, 올해는 정권 교체기이기에 발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
    -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OMB가 재량지출 예산 중에서 주요 항목(top line)들에 대한 개요 수준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자료임
  - (국방 및 비국방 분야 정책 방향) FY2025 확정예산 대비 비국방 예산은 23%(약 1,630억달러) 감소로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며, 국방예산은 13% 증가하는 등 역대

138) 백악관,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eases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26 Skinny Budget," 2025. 5. 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5/the-white-house-office-of-management-and-budget-releases-the-presidents-fiscal-year-2026-skinny-budget/>, 검색일자: 2025. 5. 26.

### 최대 규모의 증액

- (비국방 분야) 다양·형평·포용(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관련 급진적인 프로그램과 인종 중심 프로그램, 그린 뉴딜 사기(Green New Scam)로 불리는 환경 관련 예산 폐지, 주 및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연방 프로그램들의 이관 등을 통해 비국방 분야 예산 감축 예정
- (국방 분야) 국토안보부 예산의 경우, 국경 침입을 담당하는 군과 기타 기관들의 임무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5% 증액
- (주요 정책)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비공식 권력 집단(weaponized deep state) 해체 등과 함께 국경 예산 확대, 항공 및 철도 안전, 핵심 인프라, 법집행 기관 지원 등 총 16개의 정책 항목들을 주요하게 언급
- (정부의 과도한 권력 개입 종식 및 법치 회복) 정부기관의 정치적 편향성 제거, 검열 기능 축소 및 법치 회복
  - 총기 소유자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 처벌 정책을 중단하고, 불법 총기 밀매자와 폭력 조직 대응에 집중, 법질서 회복 및 FBI 자원 실제 강력범죄 현장 등에 집중
  - 40개 이상의 법무부 보조금 프로그램(인종차별 및 특정 비영리 단체 등 지원)<sup>139)</sup> 폐지
- (급진적 이념 정책 제거) DEI 및 급진적이고 유해한 인종·성별 중심 정책 등 진보적 이념 기반 예산 폐지
  - 연방정부 전반에서 관련 보조금과 사업(예: 유아 대상 LGBTQIA+ 등) 전면 중단
- (국경 안보 강화) 이민관세청(ICE<sup>140)</sup> 및 국경순찰 예산 증액,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추진
  - NGO를 통한 불법 이민자 지원금 중단 및 국경 보안 기술 강화
- (대의 원조 재조정) 국제개발처(USAID)<sup>141)</sup>를 국무부에 통합하고 DEI 등의 채용 관행에 따라 고용된 비핵심(non-essential) 인력 구조조정
  - 국제개발금융공사(DFC<sup>142)</sup>의 역할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원조 방식보다는 수익

139) 구조적 인종차별(structural racism), 여성주의적인(feminist) 문화 특화된 비영리 단체, 남성 스스로를 “제3의 성”으로 지칭하는 남성들의 조직 등에 대한 보조금

140)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141)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42) DFC: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 기반의 투자 방식 지향

- (군 재건) 국방예산 13% 증액 및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억지 강화
  - 국방산업 기반 회복과 군대 정신(warrior ethos) 회복
- (미국 에너지 주도권 확보) 친환경 강제 정책 철회
  - 신재생에너지 지원 중단, 화석연료·원자력 기술 R&D에 집중, 인프라 법(IIJA)<sup>143</sup>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예산 57억달러 삭감
-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MAHA)<sup>144</sup>영양·식품 안전 강화
  - 약물·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영양, 신체 활동,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에 중점, 국내산 식재료로 구성된 건강식품 박스(MAHA food boxes) 지원 신설
- (미국 기술 역량 강화, MASA)<sup>145</sup> 연방 예산을 이념적 비영리 단체가 아닌 지역 노동자와 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
  - MASA 보조금 전체 예산 중 최소 10%를 도제 훈련에 의무 배정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사회보장제도 보호) 연금제도 안정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을 통한 고객 서비스 향상
  - 수급자 혜택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 강화, 인공지능 도입으로 업무 자동화
- (초·중·등 교육 보조금 체계 간소화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 연방 교육 축소(교육부 폐지 절차 진행) 및 학부모 중심 학교 선택권 보장
  -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장애인교육법(IDEA)<sup>146</sup>에 따른 특수교육 예산은 전액 유지, 연방 교육보조금 통합·간소화
  - 학업 성취 향상 효과가 입증된 고품질 차터 스쿨(charter school)<sup>147</sup> 확대를 위해 5억달러를 투자하며,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증대
- (달·화성 유인 탐사 가속화) 화성(인류 최초 유인 착륙 실현) 및 달 탐사에 각각 10억달러,

143) 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144) MAHA: Make America Healthy Again

145) MASA: Make America Skilled Again

146)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47) charter school: 미국의 공립학교의 한 형태이나,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음(자료: U.S. News, "Magnet vs. Charter Schools: Differences Explained," 2023. 2. 22., <https://www.usnews.com/education/high-schools/articles/magnet-schools-vs-charter-schools-differences-explained>, 검색일자: 2025. 5. 26.).

70억달러 이상 배정

-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NASA 조직 슬림화와 비효율 사업 정리, 그린 항공(green aviation) 등 기후 관련 실패한 우주 추진 프로젝트는 폐지
- (원주민 부족 지원 유지) 부족 공동체 지원 지속
  - 보건, 교육 등 핵심 분야 예산은 유지하되, 급진적 의제 포함 사업은 폐지하고 효과 중심으로 개편
- (약물 남용 대응) 펜타닐 밀매 차단 및 주요 해외 활동 조정
  - 마약단속국(DEA) 예산을 펜타닐 유통 차단에 집중, 멕시코·중남미·중국 등 주요 공급지 중심으로 해외 활동 지출 재조정
-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 연구 지원) 미래 기술 투자, 첨단 과학 경쟁력 확보
  - AI와 양자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기관 연구자금 대폭 확대
- (산불 진압 역량 개선) 연방 산불 대응 체계 통합
  - 5개 기관에 흩어진 산불 대응 기능을 내무부 산하 단일 조직으로 통합, 연방·비연방 협력 구조 강화로 산불 위기 대응력 제고

표 3-I-2 FY2026 대통령 예산안 주요 정책 항목 리스트

분야	정책	분야	정책
안전	약물 남용 대응 산불 진압 역량 개선 MAHA	복지	사회보장제도 보호
과학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 연구 지원 달·화성 유인 탐사 가속화 MASA	국방·안보	국경안보 강화 군 재건
교육	교육부 폐지 초중등 교육 보조금 체계 간소화 학부모 선택권 확대	법무	정부의 과도한 권력 개입 종식 법치 회복
국무	대외 원조 재조정	에너지	에너지 주도권 확보(친환경 강제 정책 철회)
내무	원주민 공동체 지원 지속	기타	급진적 이념 정책 제거

자료: 백악관,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eases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26 Skinny Budget," 2025. 5. 2.

## 2) 2025회계연도 임시 예산

- 미 의회, 2025회계연도 3차 임시 세출예산법안(Continuing Resolution; H.R. 1968; P.L. 119-4) 통과 의결(2025. 3. 14.)<sup>148)</sup><sup>149)</sup>
  - (배경) 3차 임시 세출예산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025회계연도(2024. 10.~ 2025. 9.)에 대한 정부 운영은 2회에 걸친 임시 세출예산으로 운영되었음
    - (1차) 2025회계연도 1차 임시예산(P.L. 118-83): 효력 기한(~2024. 12. 20.)
    - (2차) 2025회계연도 2차 임시예산(P.L. 118-158): 효력 기한(~2025. 3. 14.)
  - (주요 내용 및 예산 규모) 동 임시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 규모로 운영되며, 총 추정 비용은 1조 8,459억달러<sup>150)</sup>
  - (만료 시한) 2025회계연도의 잔여 기간(약 5개월) 전체에 대해 규정하였기에 동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2025. 9. 30.)까지 효력 지속

## 3) 정규 예산

※ 2025회계연도 정규예산은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 세출예산(P.L. 119-4)으로 처리한 한편,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의안도 최종 합의하여 의결 완료함

- 미국 의회, 2025회계연도<sup>151)</sup> 예산결의안(H.Con.Res. 14)\* 최종 합의(resolving differences) 및 의결 완료(2025. 4. 10.)<sup>152)</sup>
  - \* (예산결의안) 의회의 예산 심의 방향을 정차하는 청사진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대통령 예산안이 발표되면 미 의회 양원이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예산결의안 심의에 착수하나, 이번에는 정부 교체기 등의 이유로 의회가 직접 예산결의안을 제출(2025. 2. 18.)하여 217:215로 통과

148)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mmittee Releases Bill to Keep Government Open, Working for the American People," 2025. 3. 8.,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committee-releases-bill-keep-government-open-working-american-people>, 검색일자: 2025. 3. 14.

149)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le Floor Remarks on H.R. 1968, the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2025. 3. 11.,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remarks/cole-floor-remarks-hr-1968-full-year-continuing-appropriations-and-extensions-act-2025>, 검색일자: 2025. 3. 21.

150) CBO, "H.R. 1968,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2025. 3. 11., <https://www.cbo.gov/publication/61248>, 검색일자: 2025. 3. 21.

151) 2025회계연도를 중심으로 2026~2034회계연도에 대한 방향도 설정

152)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https://www.cbo.gov/system/files/2025-04/61300-MBR.pdf>, 검색일자: 2025. 4. 14.

- (주요 내용) 상·하원의 분야별 상임위원회에 예산 증감에 대한 조정지침(reconciliation instruction) 제시, 조정지침에 따른 관련 법안 완료 시한(~2025. 5. 9.) 등
  - (하원 지침) 채무한도 최대 4조달러까지 가능, 세입위원회에 최대 4.5조달러 적자 확대 등 세제개혁법 연장 조치 규모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상원 지침) 채무한도 최대 5조달러까지 가능
  - 동 예산결의안의 조정지침은 적자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향후 10년 동안 총 2조달러 이상의 순 적자 감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도를 감축하도록 함(반면 2조달러를 기준으로 초과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한도를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전망) 예산 결의안의 통과로 의회 심의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상원의 필리버스터 제한)\*가 가능<sup>153)</sup>
  - \* 일반 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나, 예산결의안이 통과되면 재정에 관한 내용<sup>154)</sup>은 단순 과반(51표)만으로도 처리 가능

#### 4) 예산·경제전망

※ 의회는 2025년 1월 17일에 예산·경제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개월 뒤인 2025년 3월 27일에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35 예산·경제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보고서<sup>155)</sup> 발표(2025. 1. 17.)<sup>156)</sup><sup>157)</sup><sup>158)</sup>

- (경제성장) 2025년<sup>159)</sup> 실질성장률은 정부 및 소비자 지출의 증가세 감소에 기인하여 2024년 2.3%에서 0.4%p 하락한 1.9%로 둔화(moderate) 전망
  - 2026년에는 추가적인 소비자 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민간 비주거용 건물(private

153) Economic Policy Institute, "Congress passes budget resolution (H. Con. Res. 14)," 2025. 4. 10., <https://www.epi.org/policywatch/house-passes-budget-resolution-h-con-res-14/>, 검색일자: 2025. 4. 29.

154) byrd rule에 따라 비예산 항목은 포함 못함.

155) 동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예산안 발표 시점인 2월 전인 매해 1월경에 발표

156) 미국 의회예산처(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 1. 17., <https://www.cbo.gov/publication/60870>, 검색일자: 2025. 1. 20.

157) 동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5년 1월 6일까지 입법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 경제전망은 2024년 12월 4일까지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작성

158) 모든 연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를 의미

159) 직전연도 4분기 대비 증가율(Change from fourth quarter to fourth quarter)

- nonresidential structures)에 대한 투자 감소에 따라 더 완만해질 전망
- (정책 금리) 2025년 4분기에 3.7% → 2026년 4분기에 3.5%로 하락 전망
  - 정책 금리는 장기적으로 3.2% 수준 전망
- (주거용 투자, residential investment) 주택 건설, 개조, 중개인 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주거용 투자의 경우, 2024년 2.5% 증가율에 이어 2025~2026년에 각각 6.3%, 6.6%의 증가세가 확대되나, 이후 증가세 둔화 전망
  - 주거용 투자는 전년도인 2024년에 약 2.5% 증가하여 GDP 성장에 0.1%p 기여 하였으며, 이후 2025~2026년에는 GDP 성장에 각각 0.3%p 기여 전망
- (실업률) 경제성장 둔화(slowdown)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2024년 4분기 4.1% → 2025년 4분기에 4.3%로 증가하며, 2026년에도 4.4%로 소폭 상승
  - 이후 실업률은 2032년 이후에 점진적 감소 추세로 장기적으로는 4.3% 전망
- (임금, wages) 노동 수요 감소와 함께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명목 임금 증가 속도 둔화 전망
  - 임금 성장률은 2025년 이후 점차 둔화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5~2019년 사이의 평균 임금 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3-I-3 미국 경제전망

(단위: %)

전망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30~2035)
	실적	전망			
실질 GDP 상승률 <sup>1)</sup>	2.3	1.9	1.8	1.8	1.8
인플레이션(CPI) <sup>1), 2)</sup>	2.7	2.3	2.4	2.3	2.2
실업률 <sup>3)</sup>	4.0	4.3	4.4	4.4	4.4

주: 1) 직전 연도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change from 4th quarter to 4th quarter)

2) Urban

3) 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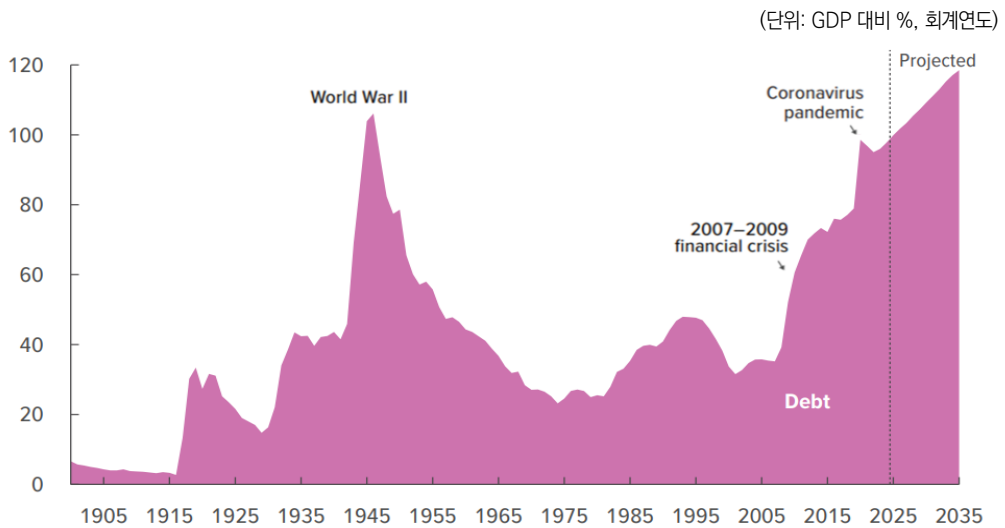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 1. 17. Table C-1, p. 27.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실적치 대비 1.8% 증가한 1조 8,650억달러 (GDP 대비 6.2%) 추정
  - 재정적자는 2035회계연도에 2.7조달러\*로 증가하면서 GDP 대비 6.1%로, 지난 50년 (1975~2024)의 평균치인 3.8%를 초과할 전망

\* 회계연도 첫 일이 주말일 시 일어나는 지출 시기 변경의 영향을 조정한 결과(adjusted for timing shift)에 한함 →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35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수치는 2조 5,310억달러(GDP 대비 5.8%)로 집계

- (연방채무) 2025회계연도 말 기준, GDP 대비 연방채무는 전년 실적치(97.8%) 대비 2.1%p 증가한 99.9%로 추정되며, 2035회계연도에는 역대 최고점인 GDP의 106.1%<sup>160)</sup>를 넘어 118.5%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3-I-1 미국 연방채무 전망(1905~2035년)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 1. 17., p. 10.

- (수입) 2025회계연도 연방수입은 전년 실적치 대비 5.0%(2,450억달러) 증가한 5조 1,630억달러(GDP대비 17.1%)로 전망되며, 이후 향후 3년 동안 GDP 대비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장기적으로는 18.1%에서 안착 전망
  - GDP 대비 세입은 향후 3년 동안 증가하며, 이는 대다수 계획되어 있는 세계 변화 (2025년 말 세금 감면 제도<sup>161)</sup> 만료)에 의한 GDP 대비 개인소득세 수입의 증가에 기인
  - 한편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은 2025회계연도(1.7%) 이후 감소. 이는 기업의 세액공제 청구 증가, 경제성장 대비 기업의 낮은 수입 증가율에 기인하며, 2030회계연도부터 2035회계연도까지 1.2%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

160) 연방 채무는 1945회계연도에 103.9%를 기록한 후, 1946회계연도에 역대 최고 수치인 106.1%를 기록

161) Tax Cuts and Jobs Act(P.L. 115-97)

- (지출) 2025회계연도 연방지출은 전년 실적치 대비 4.1%(2,780억달러) 증가한 7조 280억달러(GDP 대비 23.3%) 전망(장기적으로는 23.9% 전망)
  - 사회보장 지출 및 메디케어 등의 의무지출의 증가로 인한 의무지출이 GDP 대비 확대되고, 재량지출은 규모는 지속 증가하나 GDP 대비 수치는 감소세 전망
  - 순이자지출의 경우, 2027회계연도를 기점으로 1940년 이래 역대급 규모인 3.2% (1991회계연도)를 넘어선 후 2035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증가세 지속 전망

표 3-I-4 미국 예산전망

재정전망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5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3,462	3,421	4,047	4,896	4,439	4,918	5,163	5,580	5,935	...	8,031
지출	4,447	6,550	6,822	6,272	6,135	6,750	7,028	7,294	7,622	...	10,563
재정적자	984	3,129	2,775	1,375	1,695	1,832	1,865	1,713	1,687	...	2,531
연방 채무 <sup>1)</sup>	16,803	21,017	22,284	24,257	26,240	28,199	30,103	31,883	33,636	...	52,056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6.3	16.3	18.1	19.6	16.5	17.1	17.1	17.8	18.2	...	18.3
지출	21.0	31.2	30.5	25.1	22.7	23.4	23.3	23.3	23.4	...	24.0
재정적자	4.6	14.9	12.4	5.5	6.3	6.4	6.2	5.5	5.2	...	5.8
연방 채무 <sup>1)</sup>	79.2	100.1	99.6	97.0	97.3	97.8	99.9	101.7	103.4	...	118.5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Table B-1, 각 연도.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55 장기재정전망(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보고서 발표(2025. 3. 27.)<sup>162)163)164)</sup>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6.2%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의 최근 30년(1995~2024년) 평균은 3.9%

- 재정적자의 증가는 이자 비용의 증가 및 지속적인(sustained) 기초재정수지적자에

162) 미국 의회예산처(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https://www.cbo.gov/publication/61187>, 검색일자: 2025.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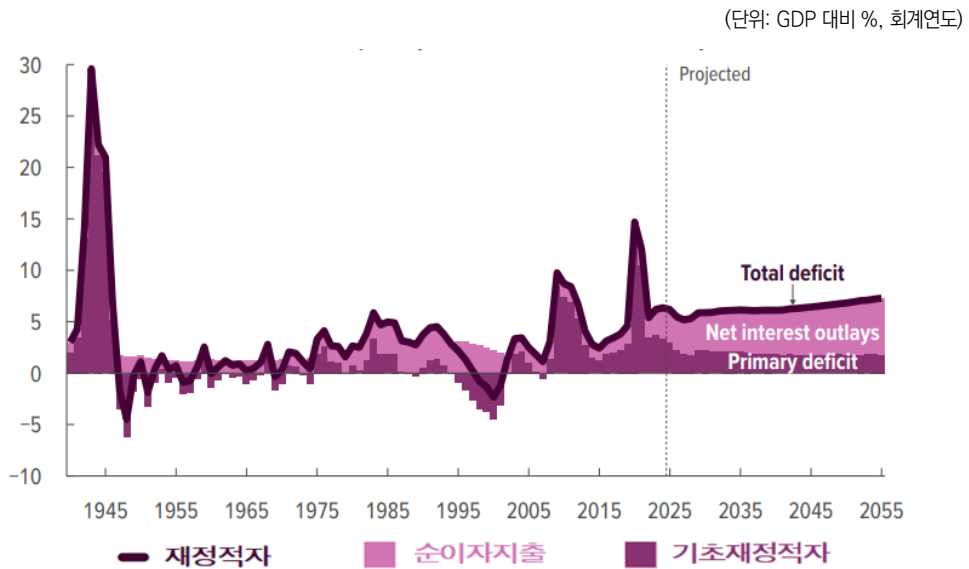
163) 해당 보고서의 장기재정전망은 CBO의 경제전망(2024년 12월 4일 기준), 예산전망(2025년 1월 6일까지 제정된 법률 기준) 및 2025년 1월에 발표한 인구추계 보고서(2024년 11월 15일 기준)를 기준으로 분석

164) 모든 연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를 의미

기인하며,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적자의 향후 30년 평균 수치는 과거 50년 평균 대비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최근 30년(1995~2024년) 평균은 2.0%, 50년 평균은 1.7%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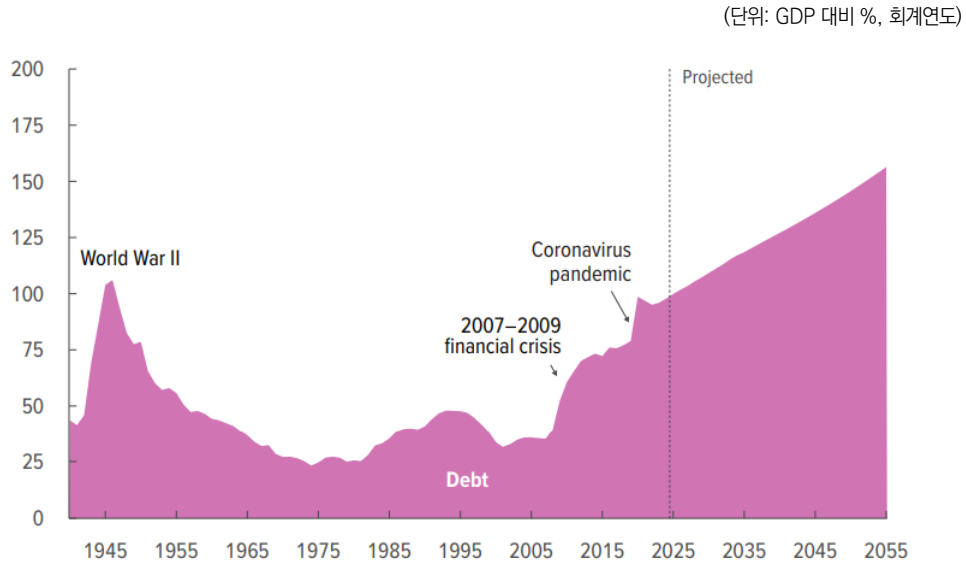
그림 3-I-2 미국 장기 재정전망(2025~2055년)



자료: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Figure1-1, p. 10.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primary deficit) 2025회계연도에 GDP 대비 3.0%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1.9%로 감소하나 이자비용과 의무지출의 증가로 인해 총 재정적자는 증가
- o (연방채무) 2024회계연도 말 연방채무\*는 GDP 대비 98%로 추정되며, 2029회계연도에 역대 최고점(FY1946: 106.7%)을 넘는 GDP의 107%를 기록한 후, 2055년에는 GDP 대비 15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GDP 대비 연방채무의 최근 30년(1995~2024년) 평균은 60%

그림 3-I-3 미국 연방채무 장기전망(2025-20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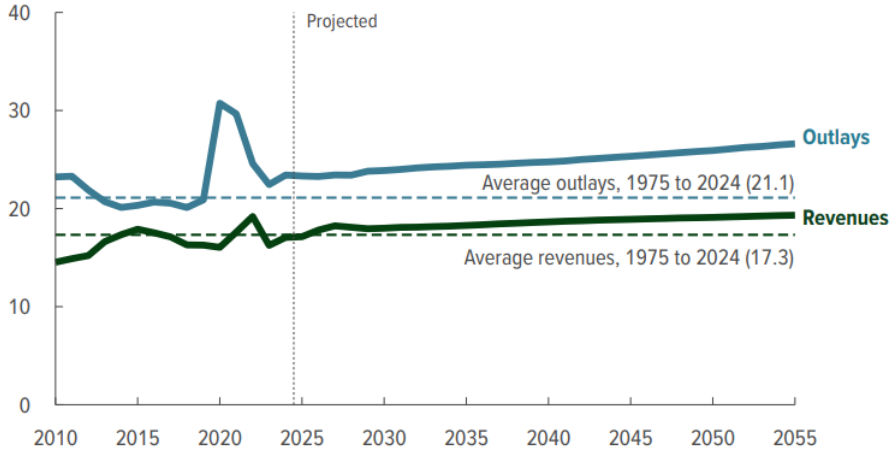


자료: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Figure 1-1, p. 10.

- (재정지출) 2025회계연도 지출\*은 GDP 대비 23.3%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6.6% 전망
  - \* GDP 대비 재정지출의 최근 30년(1995~2024년) 평균은 21.1%
    - 재정지출의 증가는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한 보건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지출 및 순이자지출 비용에 주로 기인
    - 2055회계연도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에 대한 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 규모는 비이자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2025회계연도 수입\*은 GDP 대비 17.1%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9.3% 전망
  - \* GDP 대비 재정수입의 최근 30년(1995~2024년) 평균은 17.2%
    - 연방 재정수입의 증가는 「2017 세계개혁법」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증가하며, 이후에도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한 개인소득세 증가에 주로 기인

그림 3-I-4 미국 지출·수입 장기전망(2025~2055년)

(단위: GDP 대비 %, 회계연도)



자료: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Figure 2-1, p. 18.

- (2024년 전망과의 비교) 2025년도 보고서의 전망 수치를 2024년도 전망과 비교할 경우, 2054년의 재정적자(1.3%p ↓) 및 채무(12%p ↓) 규모가 GDP 대비 감소
  - 전년도 전망(GDP 대비 기준) 대비 순이자지출\*과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고, 세입 수치는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정적자와 채무 비율 감소
- \* 10년 국채 이자율: 작년 전망 대비 하향 조정

표 3-I-5 미국 장기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FY2024 (실적)		FY2025		FY2036		...	FY2054		FY2055	
	2024 전망	2025 전망	2024 전망	2025 전망	2024 전망	2025 전망		2024 전망	2025 전망	2024 전망	2025 전망
수입	17.5	17.1	17.1	17.1	18.0	18.4	...	18.8	18.9	N/A	19.3
지출	23.1	23.4	23.1	23.3	24.4	24.5	...	27.3	26.5		26.6
재정수지	-5.6	-6.4	-6.1	-6.2	-6.3	-6.1	...	-8.5	-7.2		-7.2
기초재정수지	-2.5	-3.3	-2.8	-3.0	-2.2	-2.0	...	-2.2	-1.9		-1.9
연방채무	99	98	102	100	120	120	...	166	154		156

주: 각 회계연도의 지출 및 재정수지 규모는 timing shifts\* 조정(exclude)을 반영한 경우

\* timing shifts: 지급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의 이동이 직전 회계연도로 잡히는 경우

자료: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Table 1-1, p. 12.

### 〈참고〉 인구 추계

- 올해(2025년) 초, 3억 5,000만명에서 시작한 인구는 연평균 0.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55년에 3억 7,200만명에 도달할 전망
  - \* 최근 3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0.8%)의 1/4 수준으로 감소
- 2033년에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밑돌게 되면서 이민자를 제외할 경우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15년 14.4% → 2025년 18.3%로 증가하며, 2054년에 23.4% 전망

자료: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Figure 3-1, p. 30. 참고

- CBO는 대규모 대규모의 연방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
  - 차입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 미국 국채를 소유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민 소득(national income) 감소
  - 채무의 규모가 클수록 이자비용도 증가하는바, 미국의 재정 여건(fiscal position)이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음
  - 미국 정부의 국채 가치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른 재정위기 위험성 증가로 인해 이자율의 급격한(abrupt) 증가 및 기타 혼란(disruptions) 발생 우려
  -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미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신뢰도 하락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기타 상황에 대응(예: 경제 촉진, 국방 강화 등)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실행에 대한 제약 증가

## 나. 추경

- 해당 사항 없음

## 다. 결산

- 미국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2024회계연도<sup>165)</sup> 발생주의 결산보고서<sup>166)</sup> 발표(2025. 1. 16.)<sup>167)</sup>
  - (발생주의 기준 연방 비용)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총비용(gross cost, 총원가 개념)은 7조 7,722억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
    - 2024회계연도 순 비용<sup>168)</sup>(total net cost, 총 순원가 개념)은 전년 대비 6.1% (4,799억달러) 감소한 7조 4,029억달러
      - \* 순 비용을 구성하는 지출 비중은 보건복지부(23%), 사회보장국(21%), 국방부(17%), 순이자 지출(12%), 보훈부(6%), 재무부(3%), 농무부(3%) 순으로 나타남
    - 2024회계연도 순 운영비용<sup>169)</sup>(net operating cost, 순 운영 원가 개념)은 전년 대비 29.0%(9,922억달러) 감소한 2조 4,250억달러
      - 2023회계연도 대비 2024회계연도의 순 비용의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혜택 관련 비용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변화로 인한 추정 손실이며, 가장 큰 증가 요인은 연방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
      - 2024회계연도 정부 세금 및 기타 수입은 전년(4조 4,656억달러) 대비 11.5% 증가한 4조 9,779억달러
  - (현금주의 기준 재정수지와 비교)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현금주의)는 1조 8,328억달러로 순 운영비용(발생주의)과 재정적자(현금주의) 차이는 2024회계연도 기준 약 5,922억달러에 이룸
    -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8.1%(1,376억달러) 증가한 1조 8,328억달러
    - 재정적자와 순 운영비용의 차이는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혜택 프로그램 같은 순 운영비용에 포함되지만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sup>170)</sup> 규모에서 주로 기인

165) 2023년 10월~2024년 9월

166) FY2024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67) 미 재무부, "FY2024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5. 1. 16., [https://fiscal.treasury.gov/files/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2024/01-16-2025-FR-\(Final\).pdf](https://fiscal.treasury.gov/files/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2024/01-16-2025-FR-(Final).pdf), 검색일자: 2025. 1. 21.

168) 총 비용(gross cost)에서 재화와 용역으로 인한 수입(earned revenues)(예: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premiums), 국립공원 입장료(national park entry fees), 우정국 서비스 비용(postal service fees) 등)을 차감하고, 부채에 대한 손실 또는 이득(gains or losses)(예: 이자율, 물가인상 등)을 조정(adjust)한 결과 값을 순 비용(net cost)으로 정의함(미 재무부, FY2023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5., pp. 18~19).

169) 순 운영비용은 순 비용에서 정부 세금 및 기타 수입(other unearned revenues) 등을 차감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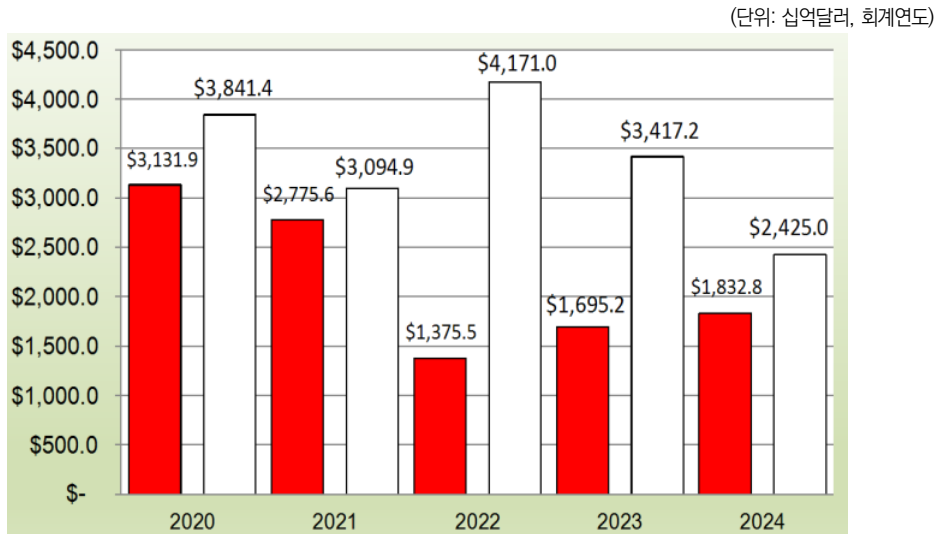
표 3-I-6 순 운영비용(발생주의)과 재정적자(현금주의) 비교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순 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발생주의) ①	3,417.2	2,425.0
변동 금액(changes in):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미지급연금급여 ②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1,535.7	685.8
선급금 및 선지급금 ③ (Advances and Pre-payments)	45.4	106.3
정부 지원 기업 ④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16.7)	(65.4)
시차 - 신용개혁비용 ⑤ (Timing Differences - Credit Reform Costs)	24.5	(145.6)
기타, 순액 (Other, Net) ⑥	133.1	11.1
소계, 차이(순액) ⑦=②+...+⑥ (Subtotal - Net difference)	1,722.0	592.2
재정적자(budget deficit)(현금주의) ⑧=①-⑦	1,695.2	1,832.8

자료: 미 재무부, "FY2024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5. 1. 16. Table 2, p. 18.

그림 3-I-5 미국 재정적자(현금주의)와 순 운영비용(발생주의) 추이



주: 빨간색 막대그래프는 현금주의 재정적자, 하얀색 막대그래프는 발생주의 순 운영비용을 의미  
 자료: 미 재무부, "FY2024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5. 1. 16. Chart 1, p. 3.

170) 연방 비용 추계가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발생했지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 성격의 비용

- (자산)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소유 자산(2024. 9. 30. 기준)은 전년 대비 4.5% (2,430억달러) 증가한 5조 6,621억달러
  - 자산은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 약 1.78조달러, 연방 학자금 직접 대출(171) (FDSL)<sup>172)</sup>이 59.5% 비중을 차지하는 순 대출채권 약 1.75조달러, 순 유형자산 약 1.3조달러, 순 재고자산 및 관련 자산 4,473억달러 등으로 구성
- (부채) 2024회계연도 부채는 전년 대비 5.2%(2조 6,470억달러) 증가한 45조 5,459억달러
  - 부채는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sup>173)</sup> 및 미지급 이자를 합한 약 28.3조달러,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등 약 15.0조달러, 기타 약 2.2조달러로 구성

**표 3-I-7 미국 연방정부 자산·부채**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증감율
<b>자산</b>	<b>5,419.1</b>	<b>5,662.1</b>	<b>243.0</b>	<b>4.5</b>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Cash & Other Monetary Assets)	922.2	1,177.7	255.5	27.7
순 재고자산 및 관련 자산(Inventory & Related Property, Net)	423.0	447.3	24.3	5.7
순 대출채권(Loans Receivable, Net)	1,695.1	1,751.0	55.9	3.3
순 유형자산(PP&E, Net)	1,235.0	1,313.0	78.0	6.3
기타 자산(Other)	1,143.8	973.1	(170.7)	(14.9)
<b>부채</b>	<b>42,898.3</b>	<b>45,545.9</b>	<b>2,647.0</b>	<b>6.2</b>
연방채무 및 미지급 이자(Federal Debt and Interest Payable)	26,347.7	28,338.9	1,991.2	7.6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미지급연금급여 (Federal Employee & Veteran Benefits Payable)	14,347.6	15,033.4	685.8	4.8
기타 부채(Other)	2,203.0	2,173.6	(29.4)	(1.3)
<b>순자산</b>	<b>(37,479.2)</b>	<b>(39,883.8)</b>	<b>2,404.6</b>	<b>6.4</b>

자료: U.S. Treasury, "FY2024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5. 1. 16. Table 4, p. 22.

171) 연방 학자금 직접 대출 외에도 연방 가족 교육 대출채권(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 FFEL)도 순 대출채권을 구성하고 있음.

172) FDSL: Federal Direct Student Loans

173)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치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회계연도 상반기(2024. 10. 1.~2025. 3. 31.)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2025. 4. 10.)<sup>174)</sup>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상반기에 집계된 총 누적 재정적자는 1조 3,100억달러로, 전년 동기(1조 650억달러) 대비 23.0%(2,450억달러) 증가

표 3-I-8 미국 FY2024 & FY2025 상반기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24 상반기 <sup>1)</sup> (A)	FY2025 상반기 <sup>1)</sup> (B)	증감 (B-A)	증감율 (B-A)/A	지출 시점 이동 제거 <sup>2)</sup>	
					증감	증감율
재정수입	2,188	2,259	71	3.2	71	3.2
재정지출	3,253	3,569	317	9.7	244	7.3
재정적자	1,065	1,310	245	23.0	173	15.2

주: 1)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 시점 이동(timing shifts) 제거(exclude)하지 않은 경우

2)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 시점 이동(timing shifts) 제거한 경우(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공휴일))에 발생했어야 할 지출이 2023회계연도에 지출됨)의 FY2024 상반기 대비 FY2025 상반기의 증감 및 증감율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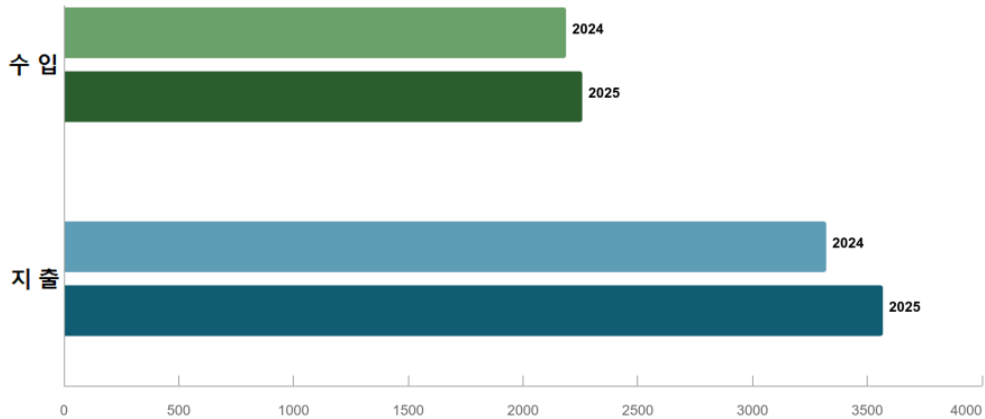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Table 1-1, p. 1.

- (세입) 전년 동기(2조 1,880억달러) 대비 3.2%(710억달러) 증가한 총 2조 2,590억달러
  - ※ IRS는 일부 재난 지역의 2025년 납세 기한을 2025년 5월 또는 2026회계연도 초까지 유예하였기에, 실제 납세자들이 신고 및 납부를 연기할 경우 2025년 4월의 세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세입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급여세(payroll taxes)를 합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2%(870억달러) 증가한 약 2조 2,590억달러
  -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9%(310억달러) 감소한 1,590억달러
    - 법인세 감소는 캘리포니아 등의 재난 지역 기업들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금 납부를 2024회계연도로 유예 조치(유예된 세금 징수는 2024회계연도 초에 대부분 발생)한 것에 기인
  - 기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0%(150억달러) 증가한 1,220억달러
    - 관세수입은 약 17%(6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산 수입품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특정 품목 및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3월에 부과된 추가 관세에 기인

174)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https://www.cbo.gov/system/files/2025-04/61300-MBR.pdf>, 검색일자: 2025. 4. 14.

그림 3-I-6 미국 FY2024 &amp; FY2025 상반기 결산 추이 비교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주: 기간(주말 등) 일정으로 인한 지출 시점 이동(timing shifts) 제거(exclude) 조정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 (세출) 전년 동기(약 3조 2,530억달러) 대비 약 7%(3,170억달러) 증가한 총 3조 5,690억달러이며, 주요 지출<sup>175)</sup>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지출(8%), 메디케어(7%), 메디케이드(5%) 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며, 3개 분야를 모두 합한 증가율은 7%로 집계
  - 사회보장지출은 수혜자와 생계비(cost of living) 조정에 따른 평균지급금액(average benefit payment)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8%(600억달러) 증가한 7,720억달러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20억달러), 5%(160억달러) 증가한 4,210억달러, 3,200억달러 집계
    - \* 메디케어 지출 증가는 가입자 수 증가 및 지급률 인상(수가 인상)에 따른 결과이며, 메디케이드의 경우 가입자의 비용 증가에 기인<sup>176)</sup>
- (순이자 지출) 전년 동기 대비 13%(570억달러) 증가한 4,970억달러
- (환급형 세액공제<sup>177)</sup>)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430억달러

175) 지출의 시점 이동(timing shifts)을 제거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176) 서비스 단가 상승이나 이용률 증가 등이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음.

177) refundable tax credits: Refundable Tax Credits는 recovery rebates(재난지원금)를 포함하여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Premium Tax Credits(의료보험 관련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교육세액 공제) 등을 포함

- 「건강보험개혁법(ACA.)」<sup>178)</sup>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험 시장<sup>179)</sup>을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기인
  - \*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 소득(연방 빈곤선 기준)을 기준으로 설정된 본인 부담률(최대 8.5%)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s)를 받게 됨
- (국토안보부) 전년 동기 대비 약 32%(140억달러) 증가한 570억달러로, 허리케인 헬렌(Helene)과 밀턴(Milton)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에 주로 기인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sup>180)</sup>) 전년 동기 대비 약 127%(700억달러) 감소한 -150억달러 집계
- 2024회계연도 상반기에 은행 파산 처리에 따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특히 높았으며, 계속 진행 중인 파산 은행의 자산 청산(liquidation)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 지출 상쇄 수입(offsetting collections, 지출 감소)으로 집계
- (채무) 채무한도의 경우 현재 재무부의 특별 조치(extra ordinary measures)로 인해 유예 상태에 있으나, 2025년 8월 또는 9월에 가용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관세, 에너지, 정부 효율화 등 다수의 정책을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감세 및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결의안(H.Con.Res. 14)을 기반으로 의회(H.R. 1; OBBBA<sup>181)</sup>)를 통해 추진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sup>182)</sup> 이행 후 공식 임기 시작과 함께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2025. 1. 20.)<sup>183)</sup>

178) Affordable Care Act

179) Health Insurance marketplaces(Affordable Insurance Exchange로 불리기도 함)

180)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mpany

181)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182) 백악관, "The Inaugural Addres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remarks/2025/01/the-inaugural-address/>, 검색일자: 2025. 1. 22.

- (배경)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수정 헌법」<sup>184)</sup> 제20조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 당일 정오부터 미합중국 대통령의 신분으로 공식 임기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공식 첫 업무로 내각 장관 후보자를 지명<sup>185)</sup>하였으며, 장관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 전까지의 부처 연속성을 위해 정부 부처별 임시 대행을 임명<sup>186)</sup>
    - \* 연방 직위 공석 임명은 Federal Vacancies Reform Act of 1998(5 U.S.C. 3345)에 근거
- (취임식 연설 주요 언급 정책) 과도한 대규모 지출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대응(석유 시추), 정부 효율위원회(DOGE) 설치, 그린 뉴딜 정책 종식(전기차 의무화 비율 철회,<sup>187)</sup> 자동차 산업 보호), 국내 세수를 담당하는 국세청(IRS)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해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담당할 ERS(External Revenue Services) 출범 계획 등
  - (기타 언급 정책) 남부 국경 지역 군인 배치, 해외 테러 단체 카르텔 지목, 해외 범죄 조직 및 범죄 네트워크 대응,<sup>188)</sup> 제조업 부활, 전략적 비축유 회복 및 에너지 수출(석유와 천연가스를 활용한 경제적 부흥 회복), 정부 검열 중단(위헌적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 종식),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 및 여성 두 성별만 존재함을 기준으로 집행 등
- (주요 행정명령) 정부 효율위원회(DOGE) 출범, 국경 안전 확보, WHO 및 파리 협정 탈퇴 등
  - (정부 효율위원회(DOGE\*) 출범<sup>189)</sup>) 연방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주요 업무로 규정

183) 백악관, "Presidential Action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age/5/>, 검색일자: 2025. 1. 22.

184) 「미국 수정 헌법」 제20조(20th Amendment, Section 1)

185) 백악관, "President Trump Announces Cabinet and Cabinet-Level Appointment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cabinet-and-cabinet-level-appointments/>, 검색일자: 2025. 1. 22.

186) 백악관, "President Trump Announces Acting Cabinet and Cabinet-Level Position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signation-of-acting-leaders/>, 검색일자: 2025. 1. 22.

187) The Guardian, "Trump revokes Biden order that had set 50% electric vehicles target for 2030," 2025. 1. 21.,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20/trump-executive-order-electric-vehicles>, 검색일자: 2025. 1. 24.

188) Alien Enemies Act of 1798에 근거

189) 백악관,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stablishing-and-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 검색일자: 2025. 1. 23.

- \*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본 조직은 연방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실 직속(USDS)<sup>190</sup> 소관의 임시 조직으로 하며,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 의제 추진 후 종료
  - (국경 안전 확보<sup>191</sup>) 불법 이민자 체포 후 구금하지 않고 석방(catch and release)한 관행을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정책 지침 제안 제시
  - 이와 함께 CBP<sup>192</sup> ONE APP(이민 예약 시스템, 간소화된 망명 절차 등의 기능이 포함된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단 제시
  - (WHO 탈퇴<sup>193</sup>) 미국 정부의 자금 및 자원 지원 등 중단, WHO를 대신할 국제 협력 파트너 파악
  - (파리 협정 탈퇴<sup>194</sup>) 미국 유엔 대사의 유엔 사무총장(파리협정의 수탁자)에게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공식적인 서면 통보 제출 제시
  - 미국 유엔 대사는 국무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서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재정적 약속을 즉각 중단(cease)하거나 철회(revoke)
- (주요 메모랜덤) 글로벌 세제 협정 취소, 긴급 물가 대응, 미국 우선주의 무역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OECD 글로벌 조세 협정 취소<sup>195</sup>) 의회의 관련 조항 채택이 없는 한 OECD 회원국들의 글로벌 조세 협정(Global Tax Deal)이 미국 내에서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을 것임을 명시

190) USDS: United States DOGE Services → 기존 조직인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s를 개명

191) 백악관, "SECURING OUR BORDERS – Executive Ord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ecuring-our-borders/>, 검색일자: 2025. 1. 23.

192)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93) 백악관,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Executive Ord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the-worldhealth-organization/>, 검색일자: 2025. 1. 23.

194) 백악관,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utting-america-first-in-international-environmental-agreements/>, 검색일자: 2025. 1. 23.

195) 백악관,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Deal (Global Tax Deal),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the-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oecd-global-tax-deal-global-tax-deal/>, 검색일자: 2025. 1. 22.

- 재무부 장관 등을 주체로 하여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 규정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조사 지시(60일 안에 보고)
  - (긴급 물가 대응<sup>196</sup>) 주택 공급 확대, 식료품 및 연료(fuel) 비용을 증가시키는 기후 정책 제거
  - (미국 우선주의 무역<sup>197</sup>)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 해결(관련 사항 보고 시한은 2025년 4월 1일 또는 4월 30일까지)
-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상무부·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ERS(External Revenue Service)에 대한 설계 및 구축. 이를 통해 관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 조사 및 권고
-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검토 및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
-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정 검토, 중국의 부당(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인(discriminatory) 정책 조사 후 대응 조치 권고 등
- (비상사태 선포) 남부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sup>198</sup>함으로써 남부 국경 지역 군대 배치 및 물리적인 장벽(physical wall) 건설 조치 제시
-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 철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이 행정명령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서명된 78개의 행정명령(66개)과 메모랜덤(12개)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원문 표현: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 (철회 행정명령 주요 예시) 제14002호<sup>199</sup>(팬데믹 관련 경제적 구제 조치), 제14008호<sup>200</sup>(국내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등
  - (팬데믹 관련 경제적 구제 조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96) 백악관, “Delivering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Defeating the Cost-of-Living Crisi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livering-emergency-price-relief-for-american-families-and-defeating-the-cost-of-living-crisis/>, 검색일자: 2025. 1. 22.

197) 백악관, “America First Trade Policy,”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자: 2025. 1. 22.

198) 백악관,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claring-a-national-emergency-at-the-southern-border-of-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1. 22.

199) Executive Order 14002 of January 22, 2021 (Economic Relief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200) Executive Order 14008 of January 27, 2021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 (국내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행동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예: 2030년까지 해상 풍력(offshore wind) 생산 두 배로 확대)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상호 관세 및 별도 관세)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세 외에도 미국 투자 촉진기구 설립, 에너지 개선 관련 정책 및 국가 재정 관리 통합 등 다양한 정책들에 서명
  - 자세한 내용은 <표 3-I-9>를 참고

**표 3-I-9** 트럼프 대통령 주요 정책 조치(2025. 4. 28. 기준)

구분	정책 방향	주요 내용
행정 명령	정부 인력 최적화	정부 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준비
	연방 관료제 축소	연방 기관 축소(4개) 및 자문위원회 해체(6개)
	주요 관세	모든 무역 상대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2025. 4. 5.~) 상호 관세 예외(2025. 4. 5.부터 소급 적용) 품목(반도체로 분류되는 품목) 발표(2025. 4. 11.) 별도로 지정된 국가는 개별적인 관세를 적용(2025. 4. 9.~) 발표(2025. 4. 2.) → 이후 90일간(2025. 4. 10.~2025. 7. 9.) 유예 결정(2025. 4. 9.)
	불법 이민 지원 종식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지원 혜택 금지
	구리 수입 안보 위협 대응	구리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평가 후 관련 조치 계획
	디지털 산업 혁신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추진단 출범 →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 유지 전략 담당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공통적인 물품·서비스 조달 방식을 변경하여, GSA(일반조달청)가 총괄 통합
	기관 간 정보 장벽 제거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
	연방관료제 추가 축소	불필요한 정부 기관 최대한 폐지 또는 최소한의 기능과 인력만 유지(소수민족기업개발청, <sup>1)</sup> 연방노숙자해결협의회 <sup>2)</sup> 등 총 7개 기관)
	미국 투자 촉진기구 설립	10억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외 미국 투자 신속히 유치 및 촉진
	에너지 규제 개선	불법·위험적이라고 판단되는 규제 신속히 중단
	국가 재정 관리 통합	시스템 표준화 및 통합(재무부 통합 관리), 지급 시스템 검증 강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관련 규제에 일몰 규칙 제정(~2025. 9. 30.)
메모 랜덤	불법 이민자 구금	관타나모만 해군기지에서의 불법 이민자 추가 구금 공간 확보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10억달러 초과 투자 자금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 신속 처리
	낭비 지출 검토	폐지·취소·종료된 연방 프로그램의 자금 집행 내역 공개
선언문	규제 완화	신규 규제 도입 시 최소 10건을 폐지하는 원칙 도입
	자동차 부품 관세	모든 국가 자동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2025. 4. 3.~)

주: 1)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MBDA)

2) 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USICH)

자료: 백악관(<https://www.whitehouse.gov/news/>)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구성

■ 의회예산처(CBO), 의회 하원에서 가결(5. 22.)된 트럼프 감세 법안(H.R. 1; OBBBA<sup>201)</sup>)에 대한 비용추계 보고서 발표(2025. 6. 4.)<sup>202)</sup>

- \* OBBBA 법안은 2025회계연도 예산결의안(H.Con.Res.14) 조정지침<sup>203)</sup>에 근거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개요) 의회의 예산 심의 방향을 정하는 청사진의 역할을 하는 예산결의안<sup>204)</sup>이 지난 2025년 2월 25일에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회 하원은 OBBBA 법안을 가결
- (주요 내용) 2017 세계개혁법(TCJA,<sup>205)</sup> 2025년 말 만료) 연장 및 확대를 중심으로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 관련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 포함(〈표 3-I-10〉)
- (예산 영향) 동 법안으로 인한 지출 감축은 1.3조달러, 수입 감소는 3.7조달러로 추정되며, 따라서 동 법안의 여러 분야(위원회별 총 11개 title) 간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재정적자 순 영향(net effect)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2.4조달러로 추정
  - 한편 CRFB는 이자 비용(5,500억달러)을 반영할 경우 재정적자 총 규모는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표 3-I-10 위원회별로 구분한 OBBBA 주요 정책 항목 리스트

(단위: 십억달러)

정책 구분	예산
• 위원회별 총 비용 규모: ①	-2,241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3,754
· 2017 세계개혁법(TCJA) 연장 및 확대 등	-4,143
· 신규 세금 감면(tax cuts) 등	-663
· 세수 확보(Offsets) -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생산 제조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소액 품목 무관세(De Minimis) 폐지,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excise tax) 부과(미국 시민권자 제외) 등	1,054
국방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	-144
· 함정 건조, 미사일 방어, 핵 억지력 등	

201)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 CBO, "Estimated Budgetary Effects of H.R. 1,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 6. 4., <https://www.cbo.gov/publication/61461>, 검색일자: 2025. 6. 19.

203) CBO, "An Update on CBO's Support of the Congress Throughout the Reconciliation Process," 2025. 6. 17., <https://www.cbo.gov/publication/61474>, 검색일자: 2025. 6. 19.

204) 예산결의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3월호 재정동향」, 2025. 4."를 참고 바람.

205) TCJA: Tax Cuts and Jobs Act

표 3-I-10 의 계속

정책 구분	예산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Committee) · 국경 장벽 건설, 국경보호국(CBP) 인력·차량, 2026 월드컵 대비 보안 등	-79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 · 이민자 구금 등, 이송 및 추방 작업, 이민세관국(ICE) 인력 증원 등	-83
· 비자/망명 허가/기-94 양식/이민 수수료 등	75
에너지통상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1,086
· (보건 관련) 가입 및 자격 규정 변경, 건강보험(ACA) 부정 수급 방지, PFS <sup>1)</sup> 변환율 조정(메디케어 의사 수가 인하), 정책별 상호작용 <sup>2)</sup> 영향 등	890
· (에너지·환경 관련) 바이든 정부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 및 연비기준(CAFE <sup>3)</sup> ) 폐지, 주파수 경매 (spectrum auctions) 연장 및 확대 등	196
교육노동위원회(Education and Workforce Committee) · 학자금 소득 기반 상환(SAVE <sup>4)</sup> ) 시스템 개편, 대학 대출 시스템 개혁 등	349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 · 푸드스탬프 자격(eligibility)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서류미비 이민자 배제, 주정부의 푸드스탬프 <sup>5)</sup> 자금 일정부분 부담 등	238
교통인프라위원회(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 · 전기차 도로세 도입, IRA <sup>6)</sup> 예산 환수 및 선박세 <sup>7)</sup> (Vessel Tonnage Duties) 확대 등	37
천연자원위원회(Natural Resources Committee) · 육상/해상/알래스카 석유·가스 임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관련 지출 등	18
감독위원회(Oversight Committee) · 특정 공무원 일부를 대상으로 FERS <sup>8)</sup> 연금 보조금(annuity supplement) 폐지, 신규 공무원 임의(At-Will) 고용 제도 도입 등	12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sup>9)</sup> )의 자금 인출 권한 한도 조정 및 벌금(civil penalties) 국고 환수, 기타 회계관련 수익 환수	5
· 상호작용 <sup>2)</sup> 영향 규모: ② · 수입 지출별 상호작용 영향: 수입(-94억달러), 지출(81억달러)	-175
· 재정적자 순 영향 규모: ③ = ① + ②	-2,416
· 이자 지출: ④	-551
· 재정적자 총(이자 포함) 영향 규모: ⑤ = ③ + ④	-2,967

주: 1) PFS: Physician Fee Schedule  
 2) 상호작용(interactions): 정책 전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 효과  
 3)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4) SAV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5) 공식명칭: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  
 6) IRA: Inflation Reduction Act  
 7) 선박세: 선박의 수용 능력(톤수 또는 부피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sup>206)</sup>  
 8) 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연금 보조금: 만 62세 이전에 퇴직하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연방 공무원에게 사회보장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공백을 메워주는 보조금<sup>207)</sup>  
 9)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도드프랭크(Dodd-Frank)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준 운영비 총액의 12%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자금 인출 가능

자료: CRFB, "Breaking Down the One Big Beautiful Bill," 2025. 6. 4.

206) The Law Dictionary, "Tonnage Duty," <https://thelawdictionary.org/tonnage-duty/>, 검색일자: 2025. 6. 20.

## 나. 재정 정책

### 1) 페이고(PAYGO)

#### ■ OMB(관리에산처), 2024 페이고(PAYGO) 최종 보고서(annual report) 발표(2025. 1. 30)<sup>208)</sup>

- (배경) OMB는 2010년에 영구법으로 전환된 ‘2010 페이고법(PAYGO Act of 2010)<sup>209)</sup>’에 근거하여 의회 회기 종료일 이후 14일 안에 페이고 연례 보고서 발표
  -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118대(2023~2024년) 의회 2회기(2nd session)에서 발생한 페이고 원칙에 적용되는 법을 대상으로 함
- (페이고법 적용 여부) 118대 의회 2회기에 페이고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PAYGO legislation)은 총 46개이며, 이 중 50만달러 이상 규모의 비용이 수반되는 법률은 14개\*로 집계
  - \* 나머지 32개의 법률은 50만달러 미만의 미미한 영향(negligible budgetary effects)의 법률들로 구성
  - (주요 페이고 법률) 재난지원관련법(P.L. 118-44),<sup>210)</sup> 6개 분야에 대한 정규 세출 예산법(P.L. 118-47),<sup>211)</sup> 긴급추경세출예산법(P.L. 118-50)<sup>212)</sup> 등 총 14개
- (최종 결과) 미국 구호법(American Relief Act, 2025<sup>213)</sup>)의 Sec. 21306에 따라 2025 회계연도와 이후 회계연도(2026~2034) 대한 강제삭감 규모(PAYGO Scorecards)를 ‘0’으로 설정
  - 즉 페이고법에 따라 118대 의회 2회기의 페이고 비용을 분석<sup>214)</sup>한 결과, 페이고법에 적용되는 2025회계연도의 강제삭감(Potential PAYGO sequestration)<sup>215)</sup> 규모는

207) OPM(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Types of Retirement,” <https://www.opm.gov/retirement-center/fers-information/types-of-retirement/#url=Annuity-Supplement>, 검색일자: 2025. 6. 20.

208) OMB, “2024 Statutory Pay-As-You-Go Act Annual Report,” 2025. 1. 3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30/2025-01937/notice-2024-statutory-pay-as-you-go-act-annual-report>, 검색일자: 2025. 2. 17.

209) Public Law 111-139, 124 Stat. 8, 2 U.S.C. § 934

210) Disaster Assistance Deadlines Alignment Act

211)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

212) Making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2024, and for other purposes

213) P.L. 118-158

214) 비용의 총 합계는 5년 주기와 10년 주기로 나누어 계산되고 있음.

215) (강제삭감) 페이고법은 페이고 원칙에 적용되는 법안들의 재정상의 효과가 재정적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대통령의 강제삭감 명령을 통해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윤성주·구윤모, 「미국 재정건전화 이행수단(강제삭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 2.) → 즉, 의회가 회기를 마칠 때까지 제정한 법안들 중 PAYGO 원칙에 적용을 받는

약 1.7조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으나, 미국 구호법에 의해 '0'으로 설정된 것임

\* 2025회계연도 자체 금액(-230백만달러)과 이월된 금액(1,697,668백만달러)을 합산한 수치

- 또한 2025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연도(2026~2034년)까지 '0'으로 설정되면서 그동안의 PAYGO 강제삭감 규모 누적액이 반영되는 후속 연도에서도 삭제\*(reset) 조치됨

\* 일반적으로 PAYGO Scorecards의 점수표(삭감 규모)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 반영되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제118대 의회 두 번째 회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잔액을 '0'으로 설정

[참고 1] 미국 구호법(American Relief Act) Sec. 21306 내용

Balances on the paygo scorecards.--Effective on the date of the adjournment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118th Congress, and for the purposes of the annual report issued pursuant to section 5 of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2 U.S.C. 934) after such adjournment and for determining whether a sequestration order is necessary under such section, the balances on the PAYGO scorecards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s (4) and (5) of section 4(d) of such Act shall be zero.

\* paragraph (4) = 5-year scorecard, paragraph (5) = 10-year scorecard

... 2010년 법정 PAYGO 법 제4조(d)항 (4) 및 (5)절에 따라 설정된 PAYGO 스코어카드의 잔액은 0으로 설정된다

[참고 2] 2023 페이고 보고서 주요 내용(원문 예시)

<2024년 페이고 적자 규모가 "0"이라는 보고서 원문 내용>

The budget year balance on each of the **PAYGO scorecards is zero** because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Public Law 117-328) shifted the debits on both scorecards from fiscal year 2024 to fiscal year 2025

<강제삭감 규모가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을 설명하는 보고서 원문 내용>

Section 1001(d)(2) of division O of Public Law 117-328, the Consolidated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23, states, ... **중략** ... the debit for the budget year on the 5-year scorecard, if any, and the 10-year scorecard, if any, **shall be deducted from such scorecards in 2024 and added to such scorecards in 2025.** Accordingly, both the 5- and 10-year scorecards deduct the debit from 2024 and add that debit to 2025

[참고 3] 2024 페이고 보고서 주요 내용(원문 예시)

<2025년 및 이후 연도의 페이고 적자 규모가 "0"임을 설명한 보고서 원문 내용>

The budget year balance on each of the PAYGO scorecards is zero because the American Relief Act, 2025 (Public Law 118-158) **set the balances on both scorecards to zero for all years.** The change directed by Public Law 118-158 is discussed in more detail in section IV of this report.

법안들의 재정상의 효과가 재정적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대통령이 의무지출들에 대해 일률 삭감(sequestration)을 함으로써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명시

## 2) 재정 건전성

- 감사원(GAO), 국가 재정 건전성(The Nation’s Fiscal Health) 보고서 발표(2025. 2. 5.)<sup>216)</sup>
  - (배경) GAO는 매해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회 정책 권고안 제시
    - 동 보고서의 전망은 CBO의 데이터와 현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sup>217)</sup>
  - (채무 현황 및 전망) 2024회계연도 말(2024. 9. 30.) 기준, 연방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28.2조달러(GDP 대비 98%)로 집계
    - GDP 대비 연방 채무는 2027회계연도에 역대 최고 수치인 106%, 2047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0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림 3-I-7 미국 연방 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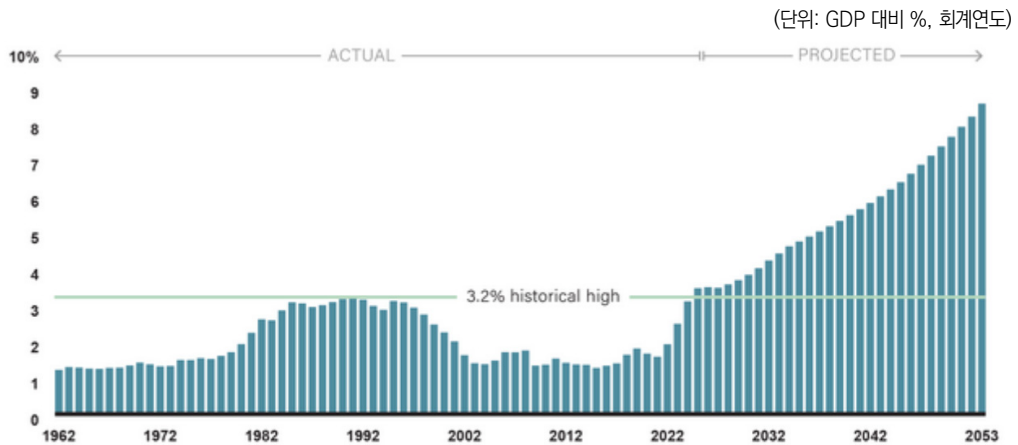
자료: GAO, “The Nation’s Fiscal Health: Strategy Needed as Debt Levels Accelerate,” 2025. 2. 5.

216) GAO, “The Nation’s Fiscal Health: Strategy Needed as Debt Levels Accelerate,” 2025. 2. 5., <https://www.gao.gov/products/gao-25-107714>, 검색일자: 2025. 2. 21.

217) 동 보고서는 2024년 6월에 발표한 의회예산처(CBO)의 예산 및 경제전망 보고서(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2024. 6. 18.)의 수치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전망 분석 실시 → 첫 11년의 전망은 CBO의 2024~2034 전망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12년 전망부터는 주요 항목에 따라 다른 수치들을 적용(주요 기금 위원회의 장기 전망 수치(사회보장 지출, 메디케어 등), 과거 최근 30년 실적치 평균(수입 수치 및 재량지출 등) 또는 CBO의 30년 전망치(연방 보건 지출 등) 일부 등을 적용하여 분석함.

-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강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8조달러로 집계(5년 연속 1조달러 초과)
  - 2024회계연도의 적자는 9,500억달러의 프로그램 지출과 8,820억달러의 순이자 지출로 구성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장기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 대비 큰 메디케어, 기타 보건 지출, 사회보장지출 등에 크게 기인
- (순이자지출 현황 및 전망) 순이자지출 규모는 2017회계연도(2,630억달러) 이래 3배 이상 증가
  - 2024회계연도의 순이자지출 규모는 메디케어, 국방예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3-I-8 순이자지출 추이 및 전망



자료: GAO, "The Nation's Fiscal Health: Strategy Needed as Debt Levels Accelerate," 2025. 2. 5.

- (GAO 권고) 채무 목표 도입, 기초 재정수지 평가, 주요 기금 고갈 대응, 재정 책임성 강화, 채무한도 대응 등 제시
  - (채무 목표 도입) 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과 목표(예: GDP 대비 채무 비율 목표) 도입
  - (기초 재정수지 평가) 기초 재정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의무지출, 재량지출, 수입 등) 평가

- (주요 기금 고갈 대응) 사회보장연금 및 메디케어 기금이 각각 8년 및 11년 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고갈 대응책 마련
- (재정 책임성 강화) ① 부정(fraud), 낭비, 남용 및 부적절(improper) 지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 ② 심각한(yawning) 조세 격차(tax gap) 문제 해결 ③ 비효율적인 조세 지출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을 통한 재정 책임성 강화
- (채무 한도 대응) 현 채무 한도를 대체할 방안 마련

### 3) 재정 절감

#### ■ 감사원(GAO), 정부 기관에 대한 부적절 지급(Improper Payments)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 발표(2025. 1. 23.)<sup>218)</sup>

- (배경) 감사원은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PIIA)<sup>219)</sup> of 2019에 근거하여 부적절 지급 관리, 위험 식별, 시정 조치 등을 하며,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 지급에 대한 추정 규모 및 관련 내용 등을 발표하며, 동 보고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개별보고서로서 발표

\* 감사원은 동 보고서에서 PIIA에 따른 부적절 지급의 개념을 ① 지급되지 않았어야 했거나 ② 틀린 금액(incorrect amount) ③ 중복 지급 등으로 언급

- (주요 내용)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부적절 지급은 1,615억달러이며, 2003회계연도 이래 누적된 부적절 지급 규모는 2.8조달러
- (GAO의 권고 조치) PIIA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해당 기관의 준수 계획이 PaymentAccuracy.gov에서 확인 가능함을 연례 재무제표에서 명시하거나 또는 해당 계획을 직접 적절한(appropriate) 의회 위원회에 전달해야 할 것임을 요청

218) GAO, "Improper Payments: Agency Reporting of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2025. 1. 23., <https://www.gao.gov/products/gao-25-107552>, 검색일자: 2025. 2. 21.

219) P.L. 116-117

## [참고] PIIA법과 기존의 부적절 지급 관련 법률 현황

- ◇ PIIA of 2019는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법률을 폐지·통합하여 업데이트한 법
- ◇ PIIA of 2019에 근거하여 폐지된 주요 법률
  - ①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 (IPIA, P.L.107-300)
    - 부적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법
  - ②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of 2010 (IPERA, P.L.111-204)
    - IPIA를 강화하여, 부적절 지급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규정
  - ③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Improvement Act of 2012 (IPERIA, P.L.112-248)
    - IPERA를 보완하여, 연방기관이 Do Not Pay 시스템을 활용(부적절 지급 방지)하도록 규정

자료: USAID(미국 국제개발처), "USAID Complied With the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 of 2019 for Fiscal Year 2023," 2024. 5. 28.

### ■ 미 감사원(GAO), Improper Payments 연례보고서 발표(2025. 3. 11.)<sup>220)</sup>

- (배경) 감사원은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sup>221)222)</sup>(PIIA) of 2019에 근거하여 부적절 지급 관리, 위험 식별, 시정 조치 등을 하며,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 지급에 대한 추정 규모 및 관련 내용 등을 공개
- (주요 내용)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부적절 지급 규모<sup>223)</sup>는 1,620억달러(전년 대비 31.5% 감소\*)로 추정되며, 2003~2024회계연도까지의 부적절 지급 누적 규모는 약 2.8조달러 추정
  - \* 부적절 지급의 감소는 특정 코로나19 프로그램의 축소(wind-down) 및 종료(termination)에 주로 기인

220) GAO,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on Agencies' Fiscal Year 2024 Estimates," 2025. 3. 11., <https://www.gao.gov/assets/gao-25-107753.pdf>, 검색일자: 2025.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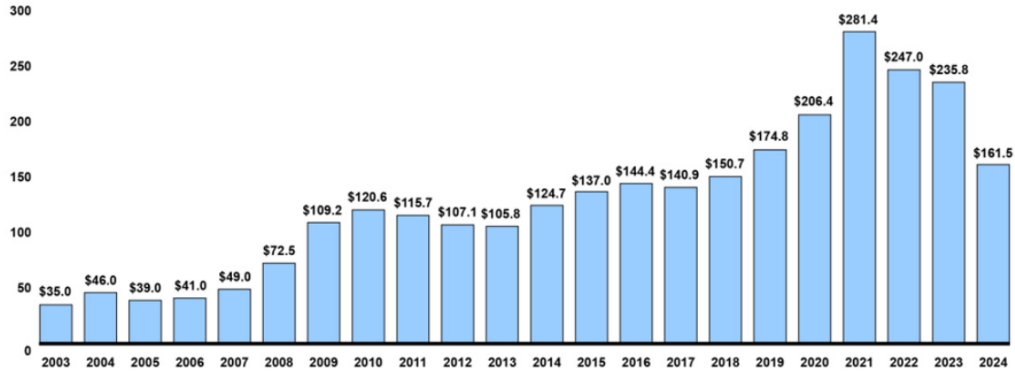
221) P.L. 116-117

222) 기존에는 부적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법인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P.L.107-300)에 근거하여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동 법은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 of 2019(P.L. 116-117)에 흡수 통합됨.

223) 본 보고서는 부적절한 지출 추정치는 정부 전체(government-wide)의 부적절한 지출 규모를 완전히(full extent)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의 부적절한 지출 총 추정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규모 하위 집합(small subset)에 불과함을 명시하고 있음(예: 일부 기관이 상당한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건복지부(HHS)의 저소득가족 일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지출을 추정하지 않고 있음).

그림 3-I-9 FY2003~FY2024 행정부 부적절 지급 추정 규모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자료: GAO,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on Agencies' Fiscal Year 2024 Estimates," 2025. 3. 11.

- (부적절 지급 주요 분야) 전체 부적절 지급 규모 중 5개 프로그램이 75%(약 1,210억달러)를 차지
  - (부적절 지급 주요 분야별 규모) ①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540억달러) ②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이드(310억달러) ③ 재무부의 근로장려세제(EITC)(160억달러) ④ 농무부(USDA)의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sup>224</sup>(110억달러) ⑤ 중소기업청(SBA)의 레스토랑 회복 기금(90억달러)<sup>225</sup>
- (부적절 지급 유형) 초과 지급(84%), 불명확(unknown)<sup>226</sup>(8%), 과소 지급(5%), 기술적 결함 지급<sup>227</sup>(4%) 등으로 구성

224)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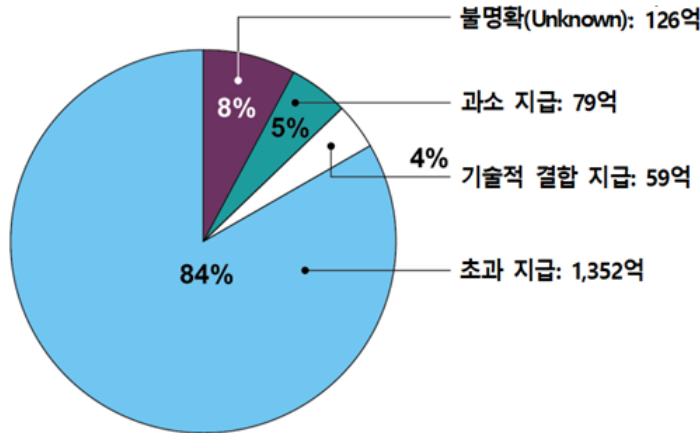
225)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식당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 지원 기금으로, 총 기금 규모는 286억달러(자료: GAO,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Opportunities Exist to Improve Oversight," 2022. 7. 14.)

226) "unknown" 개념 원문 표현: "Unknown payments" are those that a program cannot determine were either proper or improper

227) technically improper payments: 자격 대상이 아닌 자가 수혜를 얻었거나, 법적 절차 및 규칙 등을 어긴 지급 등을 의미

그림 3-I-10 FY2024 연방기관의 부적절 지급의 유형별 구분 및 규모

(단위: 달러)



자료: GAO,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on Agencies' Fiscal Year 2024 Estimates," 2025. 3. 11.

- (향후 조치 전망) 부적절 지급 지적을 받은 기관들은 부적절 지급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향후 이행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4) 채무 한도

##### ■ 미국 의회예산처(CBO), 연방 채무한도(Federal Debt and the Statutory Limit) 보고서 발표(2025. 3. 26.)<sup>228)</sup>

- (배경) 2023년 6월 3일에 「재정책임법」<sup>229)</sup>에 근거하여 채무한도\*의 적용이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됨

\* 채무한도는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채무 금액을 의미하며, 이 한도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추가 차입 등을 위해 인상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재정책임법」을 통해 채무한도의 적용이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유예 전과 유예된 기간 동안 누적되었던 총 채무 규모인 36.1조달러가 새로운 채무 한도로 설정(reinstated)됨

- (현황) 현재 채무한도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 현재 보유한 현금과 재무부의

228) CBO, "Federal Debt and the Statutory Limit, March 2025," 2025. 3. 26., <https://www.cbo.gov/publication/60887>, 검색일자: 2025. 4. 4.

229)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 (P.L. 118-5)

특별조치를 통해 정부 운영에 필요한 현 가용 금액이 소진되기 전에 현 채무한도(36.1조달러)를 인상하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

- CBO는 현금 및 재무부 특별조치<sup>230)</sup>를 통한 가용 금액은 약 8,200억달러\*로 약 5개월(3. 1.~7. 31.) 정도 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

\* 재무부의 보유 현금(5,600억달러), 메디케어 기금에 대한 투자금 일부 상환으로 인한 여유 자금(현금) 등 약 620억달러, 특별조치를 통한 가용 금액 2,000억달러를 합한 금액

- (향후 전망) 올해(2025)의 차입이 과거 추이와 크게 달라진다면 CBO가 추정하는 자금 고갈일(X-date, 채무 불이행)은 조기 도달하거나 예상 시점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

- 올해 3~7월까지 차입 수요가 연간 차입의 36%\*를 넘게 되면, 현금 및 특별조치 가용 총 금액인 8,200억달러를 초과하게 되어 8월 1일 이전에 자금 고갈 가능

\* 최근 3년간 연간 총 차입 금액의 해당 기간(3~7월) 평균 차입 비중은 30%(최저: 24%, 최고 36%)

- 같은 기간 동안 예상 차입이 약 5,000억달러(최근 3년간 연간 차입의 25% 수준)에 그친다면 특별조치는 9월 말까지도 지속 가능

## 5) 기타

### ■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및 한국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지정(2025. 6. 5.)<sup>231)</sup>

- (개요)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미국의 주요 무역 교역국의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sup>232)</sup>

- 미국 전체 교역 규모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들의 2024년 12월까지 최근 1년(4개 분기)간 동향 평가

- (주요 내용)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총 9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230) 특정 기금(공무원퇴직 기금, 환율안정기금 등)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채투자 중단을 의미

231) 미국 재무부, "Treasury Releases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157>, 검색 일자: 2025. 6. 18.

232) 의회 보고는 법률(Section 3005 of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22 U.S.C. § 5305, and Section 701 of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19 U.S.C. § 4421)에 근거

- 다만 2024년 4분기까지의 1년간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균형 조정을 방해하거나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한 국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
  -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무역촉진 및 집행법<sup>233</sup>)을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두 개를 충족할 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상당한(significant) 대미무역 흑자 규모: 대미무역 흑자규모 150억달러 이상
    - 주목할 만한(material) 경상수지 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규모 GDP 대비 3% 이상
    - 지속적이며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최소 GDP의 2% 이상
  - (한국 관련 내용)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약 7년간 지정되었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2023년 11월에 제외되었으나, 2024년 11월<sup>\*234</sup>)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재지정
    - \* 2024년 11월 발표에서는 GDP 대비 경상수지 3.7%, 대미무역 흑자 규모 500억달러로 인해 지정
    -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사유는 ① 경상수지 규모 ②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해당
      - (대미 무역 흑자규모)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상품 무역에 기인하여 550억달러 (150억달러 초과)로 집계되어 해당
      - (경상수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품 무역에 기인하여 GDP 대비 5.3%(3.0% 초과)에 상응 - 소득 및 서비스 수지는 큰 변화 없었음
- 의회예산처(CBO), 2025. 1. 6. ~ 2025. 5. 13. 기간 동안의 관세 인상에 따른 예산 경제 영향 보고서 발표(2025. 6. 4.)<sup>235</sup>)
- (개요) 의회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CBO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 분석을 실시
    - (분석 대상 적용 기간) CBO는 2025년 1월 17일에 발표한 예산 및 경제 기준선 전망

233)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234) Treasury, "Treasury Releases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24. 11. 1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14>, 검색일자: 2025. 6. 20.

235) CBO, "Budgetary and Economic Effects of Increases in Tariffs Implemented Between January 6 and May 13, 2025," 2025. 6. 4., <https://www.cbo.gov/publication/61389>, 검색일자: 2025. 6. 18.

보고서<sup>236)</sup>는 1월 6일까지의 정책 상황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번 분석은 그 기준선 시점(1. 6.) 이후부터 5월 13일까지 발생한 관세 인상 효과를 평가

- (분석 대상 정책) 5월 13일까지 시행된 관세 인상 조치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된 관세 변경 사항이 영구적으로 유지됨을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관세 인상 정책) ① 중국 및 홍콩산 수입품 관세 30% ②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2025. 5. 3.~) ③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관세 10%(2025. 4. 5.~) ④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2025. 3. 12.~) ⑤ 캐나다 및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25% 관세(2025. 3. 7.~)
  - 추가적으로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 면세 적용을 폐지한 사항도 반영
  - 한편 2025년 5월 8일에 발표된 미국과 영국의 무역 정책 협상 내용은 원칙적인 합의로 간주하여 이번 분석에는 미반영
- (주요 내용) 경제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재정 효과와 경제 영향을 반영한 경우의 재정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 제시
  - (경제 영향 미반영 재정 효과) 순 관세 수입 증가로 인해 2025~2035년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소 효과는 3.0조달러<sup>237)</sup> 전망
  - 이자 지출 감소분(0.5조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총 재정적자 감소 효과는 3.0조달러 까지 확대
  - (경제 영향 반영 재정 효과) 고 관세에 따른 무역 보복, 투자 감소, 생산성 저하 및 불확실성 증가 등을 반영한 경우, 세수 감소와 일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는 2.8조달러 감축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25~2035년까지 매년 0.06%p 감소하며, 누적 효과로 인해 2035년의 실질 GDP 수준은 기준선 대비 0.6%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전망)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2025~2026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약 0.4%p 증가함에 따라 2026년 말에는 PCE 가격 수준이 0.9% 높아질 것으로 전망

236)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 1. 17.

237) 이자 지출 감소분 5,000억달러 포함

- 2026년 이후에는 관세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 (소비자-기업의 행동 변화) 대규모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의 행동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의 관세 수입은 CBO 전망 대비 낮아질 수 있는 한편, 과거 대부분의 관세 인상이 가격 변화에 민감한 품목이었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less targeted) 관세의 경우에는 행동 변화가 낮아지면서(less in response) 더 많은 세수가 걷힐 수 있음
- (보복 관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수입품 가치 대비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상 가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
- (기타) 이 분석은 자산 가치 변화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다른 재정 정책 변화 및 경제 상황 전개를 반영하여 변화들의 관세 인상 및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포함시킬 예정

## 다. 경제동향

### 1) 통화정책

- ※ 미국 연준(Fed.)은 2025년 상반기에 총 4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회의(12. 18.)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최근까지 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4.25~4.50%) 동결 결정(2025. 1. 29.)<sup>238)</sup>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미국 경제는 견고하나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동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을 보고<sup>239)</sup>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지속 확장, 전망은 불확실(uncertain)
    - 자구 변화 없음

238)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1. 2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0129a1.pdf>, 검색일자: 2025. 2. 17.

239) Federal Reserve Reform Act of 1977은 Federal Reserve act of 1913을 개정한 법으로 1977년 법에서 연준의 dual mandate(최대 고용, 물가 안정)를 규정

- (물가)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 유지
  - (자구 변화)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진전이 있었지만’ 문구 삭제
- (노동시장)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안정적
  - (2014. 12. 표현) 노동시장 올해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 → (2025. 1. 표현) 노동시장 견고
  - (2014. 12. 표현)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상태 → (2025. 1. 표현) 최근 몇 개월 안정적
- (유동성 정책) 연준이 보유한 국채, 정부기관 채무,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 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지속 축소(양적 긴축)할 것으로 결정
  - 자구 변화 없음
- (정책 결정)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시 신규 입수 자료와 전망 변화 및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 자구 변화 없음

**표 3-I-11 미국 2025년 1월 FOMC 회의록 주요 항목 변화**

항목	FOMC: 2024년(12. 17.~18.)	변화 →	FOMC: 2025년(1. 28.~29.)
경제성장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지속 확장, 전망은 불확실		자구 변화 없음
물가	다소 높은 수준		“다소 높은 수준” 동일 “2% 목표 진전” 문구는 삭제
노동시장	2024년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		견고
- 실업률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 유지		최근 몇 개월 안정적
기타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자구 변화 없음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1. 29.

- 회의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2월)된 FOMC 회의 의사록(Minutes)<sup>240</sup>에서는 경제 전망의 예측 어려움과 금리 동결 결정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언급됨
  - (경제전망)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정책 변화의 범위, 시기,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에 따라 기준선 전망 예측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강조됨

240) 미국 연방준비제도,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5. 1. 28.~2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minutes20250129.pdf>, 검색일자: 2025. 2. 21.

- 경제활동과 소비 지출은 기대보다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몇몇 참가자들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에 소비 지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인플레이션) 2025년 인플레이션은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2025년) 인플레이션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정책에 기인
  - 2024년 근원(core)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수준만큼 하락하지 않았음을 강조
  - 또한 연준의 장기 목표치(2%)에 대한 진전(progress)이 지난 1년 동안 둔화(slowed) 된 것으로 평가

표 3-I-12 미국 2024년 4분기 주요 경제지표-물가, 노동시장

(단위: %, 천명)

주요 경제지표		2024년 10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물가 <sup>1)</sup>	PCE 물가 상승률	2.3	2.4	2.6
	PCE 물가 상승률(식품 및 에너지 제외)	2.8	2.8	2.8
노동 시장 <sup>2)</sup>	생산가능인구	269,289	269,463	269,638
	경제활동인구	168,428	168,304	168,547
	경제활동참가율	62.5	62.5	62.5
	취업자수	161,456	161,183	161,661
	인구 대비 취업률	60.0	59.8	60.0
	실업자 수	6,972	7,121	6,866
	실업률	4.1	4.2	4.1

주: 1)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의미  
 2) 해당 지표는 계절 조정된 수치

자료: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2025. 1.24<sup>1)</sup>242)  
 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Databases, Tables & Calculators by Subject," Table A-1, 2025. 2. 7.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4.25~4.50%) 동결 결정(2025. 3. 19.)<sup>243)</sup>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미국 경제는 견고하나 불확실성 증가 등의 이유로

241) BEA,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https://www.bea.gov/data/personal-consumption-expenditures-price-index>, 검색일자: 2025. 2. 26.  
 242) BEA,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https://www.bea.gov/data/personal-consumption-expenditures-price-index-excluding-food-and-energy>, 검색일자: 2025. 2. 26.  
 243)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3. 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0319a1.pdf>, 검색일자: 2025. 3. 21.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동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 보고<sup>244)</sup>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지속 확장, 전망의 불확실(uncertain)은 증가는 증가
  - (2025. 1. 표현) 경제전망 불확실 → (2025. 3. 표현) 경제전망 불확실성 증가는 증가
- (물가)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 유지
  - 자구 변화 없음(“2% 목표 진전” 표현은 이번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음)
- (노동시장)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 자구 변화 없음
- (유동성 정책) 연준이 보유한 국채, 정부기관 채무,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지속 축소(양적 긴축)할 것으로 결정하되, 4월부터는 국채 보유액 축소 속도는 완화\* 예정
  - \* 4월부터는 국채의 월간 자산 축소 한도(monthly redemption cap)를 250억달러 → 50억달러로 감축
  - (자구 변화) 국채 보유액 축소 속도 완화 표현 신규 추가
- (정책 결정)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extent)를 고려 시 신규 입수 자료와 전망 변화 및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 자구 변화 없음

**표 3-I-13 미국 2025년 1월 FOMC 회의록 주요 항목 변화**

항목	FOMC: 2025년(1. 28.~29.)	변화	FOMC: 2025년(3. 18.~19.)
경제성장	전망 불확실	→	전망의 불확실성 증가
물가	“다소 높은 수준” 동일		자구 변화 없음
노동시장	견고		자구 변화 없음
- 실업률	최근 몇 개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자구 변화 없음
기타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자구 변화 없음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1. 29.

244) Federal Reserve Reform Act of 1977은 Federal Reserve act of 1913을 개정된 법으로 1977년 법에서 연준의 dual mandate(최대 고용, 물가 안정)를 규정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sup>245</sup>에 따르면,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1.7%, PCE물가 상승률은 2.7%, 올해(2025) 말 적정 기준금리는 3.9%로 전망
  - 직전 경제전망(2024년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장률(2.1→1.7%)은 하향, 실업률(4.3→4.4%)과 PCE 물가상승률(2.5→2.7%)로 상향 조정됨
  - 정책 금리의 경우 직전 전망과 동일하게 3.9%로 전망

**표 3-I-14 미국 2025년 3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Median)	2025년	2026년	2027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1.7	1.8	1.8	1.8
- 12월 전망치	2.1	2.0	1.9	1.8
실업률	4.4	4.3	4.3	4.2
- 12월 전망치	4.3	4.3	4.3	4.2
PCE 물가상승률	2.7	2.2	2.0	2.0
- 12월 전망치	2.5	2.1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2.8	2.2	2.0	-
- 12월 전망치	2.5	2.2	2.0	-
정책 금리	3.9	3.4	3.1	3.0
- 12월 전망치	3.9	3.4	3.1	3.0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 실업률은 해당 연도 4분기 수치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5. 3. 19., p. 2, Table 1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5월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4.25~4.50%) 3회 연속 동결 결정(2025. 5. 7.)<sup>246</sup>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미국 경제는 견고하나 불확실성 증가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동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 보고<sup>247</sup>

245)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5. 3. 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ptabl20250319.pdf>, 검색일자: 2025. 3. 21.

246)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1. 2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0129a1.pdf>, 검색일자: 2025. 2. 17.

247) Federal Reserve Reform Act of 1977은 Federal Reserve act of 1913을 개정한 법으로 1977년 법에서 연준의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지속 확장, 전망의 불확실(uncertain)은 더 증가
  - (2025. 1. 표현) 경제전망 불확실성 증가 → (2025. 3. 표현) 경제전망 불확실성 더(further) 증가
- (물가)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 유지
  - 자구 변화 없음(“2% 목표 진전” 표현은 12월 회의 이후 3회 연속 이번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음)
- (노동시장)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 자구 변화 없음
- (유동성 정책) 연준이 보유한 국채, 정부기관 채무,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지속 축소(양적 긴축)
  - (자구 변화) 국채 보유액 축소 속도 완화 표현은 삭제
- (정책 결정)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 시기(timing)와 정도(extent)를 고려 시 신규 입수 자료와 전망 변화 및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 자구 변화 없음

**표 3-I-15 미국 2025년 5월 FOMC 회의록 주요 항목 변화**

항목	FOMC: 2025년(3. 18.~19.)		FOMC: 2025년(5. 6.~7.)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 증가	변화 →	전망의 불확실성 더 증가
물가	“다소 높은 수준” 동일		자구 변화 없음
노동시장	견고		자구 변화 없음
- 실업률	최근 몇 개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자구 변화 없음
기타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자구 변화 없음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5. 7.

dual mandate(최대 고용, 물가 안정)를 규정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4.25~4.50%) 4회 연속 동결 결정(2025. 6. 18.)<sup>248)</sup>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미국 경제는 견고하나 전망의 불확실성 및 높은 수준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동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 보고<sup>249)</sup>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지속 확장, 전망의 불확실성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은 유지
      - (2025. 5. 표현) 경제전망 불확실성 더(further) 증가 → (2025. 6. 표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은 감소(diminished)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물가)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 유지
      - 자구 변화 없음(“2% 목표 진전<sup>250)</sup>” 표현은 2024년 12월 회의 이후 4회 연속 이번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음)
    - (노동시장)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
      - (2025. 5. 표현) 최근 몇 개월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 (2025. 6. 표현) 낮은 수준 유지
    - (유동성 정책) 연준이 보유한 국채, 정부기관 채무,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지속 축소(양적 긴축)
      - 자구 변화 없음
    - (정책 결정)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 시기(timing)와 정도(extent)를 고려 시 신규 입수 자료와 전망 변화 및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 자구 변화 없음

248)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1. 2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0618a1.pdf>, 검색일자: 2025. 6. 19.

249) Federal Reserve Reform Act of 1977은 Federal Reserve act of 1913을 개정된 법으로 1977년 법에서 연준의 dual mandate(최대 고용, 물가 안정)를 규정

250) 원문 표현: Members concurred that inflation had made progress toward the Committee’s 2 percent objective

표 3-I-16 미국 2025년 6월 FOMC 회의록 주요 항목 변화

항목	FOMC: 2025년(5. 6.~7.)	변화	FOMC: 2025년(6. 18.~19.)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 더 증가	→	전망의 불확실성 감소
물가	“다소 높은 수준” 동일		자구 변화 없음
노동시장	견고		자구 변화 없음
- 실업률	최근 몇 개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낮은 수준
기타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자구 변화 없음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6. 17.~18.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sup>251)</sup>에 따르면,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1.4%, PCE 물가 상승률은 3.0%, 올해(2025) 말 적정 기준금리는 3.9%로 전망
  - 직전 경제전망(2025년 3월)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장률(1.7→1.4%)은 하향 조정, 실업률(4.4→4.5%)과 PCE 물가상승률(2.7→3.0%)은 상향 조정됨
  - 정책 금리의 경우 직전 전망과 동일하게 3.9%로 전망

표 3-I-17 미국 2025년 6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Median)	2025년	2026년	2027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1.4	1.6	1.8	1.8
- 3월 전망치	1.7	1.8	1.8	1.8
실업률	4.5	4.5	4.4	4.2
- 3월 전망치	4.4	4.3	4.3	4.2
PCE 물가상승률	3.0	2.4	2.1	2.0
- 3월 전망치	2.7	2.2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3.1	2.4	2.1	-
- 3월 전망치	2.8	2.2	2.0	-
정책 금리	3.9	3.6	3.4	3.0
- 3월 전망치	3.9	3.4	3.1	3.0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 실업률은 해당 연도 4분기 수치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5. 6. 18., p. 2, Table 1

251)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5. 6.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ptabl20250618.pdf>, 검색일자: 2025. 6. 18.

## 2) 경제동향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5. 1. 15.)<sup>252)253)</sup>

○ (경제활동) 지난해 11월 말과 12월의 연준의 12개 지역별 경제활동\*은 소폭(slight) 내지 보통(moderate)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

\* 아래에 언급한 산업 분야별 설명은 특정 거래량 등이 아닌 전반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함

- (소비) 소비자 지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홀리데이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보통 속도로 증가

• 자동차 판매는 완만한(modest)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설 활동(construction activity)\*은 전반적으로 감소

\* 건설 활동은 몇몇 지역에서 높은 원자재 및 자금조달 비용이 성장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

- (제조업) 소폭 하락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관세 상승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하고 있음

-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높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소폭 증가

- (비금융 서비스) 여러 지역에서 레저, 접객업(hospitality) 및 운송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항공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짐(반면 화물 운송량은 감소)

- (금융 서비스) 대출은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다만 대출 기관과 지역사회 단체들은 소기업과 저소득 가구의 연체율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농업)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기후 관련 어려움(weather-related struggles)을 겪는 등 일부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부진

• 조류 독감의 확산으로 계란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을 상승시킴

- (에너지) 혼조세를 보였으며, 2025년 경제전망에 대해 비관적 시각보다 낙관적인

252)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전 발표, 이번 보고서는 2025. 1. 6.까지 수집된 정보에 기반,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및 기업, 지역사회,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지를 받아 정보를 수집

253)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5. 1. 15.,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50115.pdf](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50115.pdf), 검색일자: 2025. 1. 21.

### 응답이 더 많았음

- 다만 이민 및 관세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노동시장)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6개 지역은 소폭 증가, 나머지 6개 지역은 변동 없음)
  - (고용) 여러 서비스 산업(특히 의료 분야)에서 고용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건설 분야 고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변화가 없었음
  - 한편 모든 지역에서 숙련된 노동력 확보에 지속적 어려움 보고
  - (임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 수준의 속도로 임금이 증가하였으며,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eased)되었다는 일부 보고도 존재
- (물가) 전반적으로 포함 내지 보통 수준의 속도로 완만히 상승하였으며, 2025년에는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였고, 이 중 일부는 관세 인상이 가격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 언급
  - (판매 가격)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 가격이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보험세나 하락세가 보고되기도 함
  - (투입 원가) 건강보험료를 위시한 보험료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판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연료를 중심으로 일부 투입 비용이 포함 내지 하락했다는 몇몇 보고도 존재

**표 3-I-18 연준 베이지북 2024년 중반 대비 2025년 연초의 주요 지구 변화**

대상 기간	2024년 5월~2024년 7월 (2024년 7월 발표)	2024년 12월~2025년 1월 (2025년 1월 발표)
경제활동	근소 내지 완만한 성장	근소 내지 보통 수준 성장
제조업	혼조세	소폭 하락
소비지출	보합 및 미미한 변화	보통 속도로 증가
부동산	미미한 변화	고금리 제약적
고용	전반적인 소폭 증가	전반적인 증가
임금	완만 내지 보통 정도의 상승	완만 상승
물가	근소 혹은 완만하게 상승	보합 혹은 보통 수준 상승

주: 완만함(modest) 표현은 보통(moderate) 수준보다 더 낮은 강도를 의미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4년 7월,<sup>254)</sup> 2025년 1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54)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4. 7.,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40717.pdf](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40717.pdf), 검색일자: 2025. 1. 21.

### ■ 무디스(Moody's), 미국 신용등급 하향(Aaa → Aa1) 조정(2025. 5. 16.)<sup>255)</sup>

-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그 이유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 ① 정부 채무 ② 높은 이자 비용 반영. 이는 유사한 등급(similarly rated)을 가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을 언급
- \* 무디스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장기 발행자 및 선순위 무담보 채권 신용 등급(Long-Term Issuer and Senior Unsecured Rating)을 주요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
  - (대응 조치 미흡)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의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증가하는 이자비용의 흐름을 제어할 조치를 마련하지 못함
  - 현 재정 지출 계획하에서는 실질적인(material) 의무지출 감축이 기대되지 않으며, 향후 10년 동안 의무 지출(entitlement spending)은 증가하는 반면, 정부 수입은 전반적으로 정체(flat)되면서 재정적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등급 전망 변경)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 자체는 하향 조정하였으나, 경제적 강점 요소 및 제도적 안정성 등을 반영하여 등급 전망은 부정적 → 안정적으로 변경
  -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경제, 경제의 회복력(resilience)과 역동성(dynamism)을 비롯하여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 등에서 우수한(exceptional) 신용 강점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등급 전망에 반영하였음을 언급
  - 또한 미국은 최근 몇 개월간 정책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통한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비롯하여 3권 분립 등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features)는 여전히 견고(insensitive)하며,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3) 경제지표

#### ■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5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2025. 5. 13.)<sup>256)</sup>

- 미국의 2025년 4월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계절조정) 0.2%이며, 전년 동월 대비 2.3%를 기록
  - 2025년 4월의 전년 동월 대비 CPI의 경우, 2021년 2월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집계

255) Moody's, "Moody's Ratings downgrades United States ratings to Aa1 from Aaa; changes outlook to stable," 2025. 5. 16., <https://ratings.moodys.com/ratings-news/443154>, 검색일자: 2025. 5. 23.

256)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Consumer Price Index - April 2025," 2025. 5. 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5. 5. 22.

표 3-I-19 연도별 전년 동월 대비 CP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 4.	2021. 4.	2022. 4.	2023. 4.	2024. 4.	2025. 4.
전체 항목(all items)	0.3	4.2	8.3	4.9	3.4	2.3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BLS), "Consumer Price Index," 각 해당 연도별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식료품·에너지를 제외(근원)한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계절조정) 0.2%이며, 전년 동월 대비 2.8% 기록
- CPI 상승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주거 부문이며, 전월 대비 0.3% 증가

표 3-I-20 미국 2025년 4월 CPI 상승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월	3월	4월	3월	4월
전체 항목(all items)	100.0	0.2	-0.1	0.2	2.4	2.3
<b>식료품</b>	13.7	0.2	0.4	0.1	3.0	2.8
가정식	8.0	0.0	0.5	-0.4	2.4	2.0
외식	5.6	0.4	0.4	0.4	3.8	3.9
<b>에너지</b>	6.2	0.2	-2.4	0.7	-3.3	-3.7
에너지 상품	3.1	-0.9	-6.1	-0.2	-9.5	-11.5
자동차 연료(gaoline)	3.0	-1.0	-6.3	-0.1	-9.8	-11.8
연료유(fuel oil)	0.07	0.8	-4.2	-1.3	-7.6	-9.6
에너지 서비스	3.1	1.4	1.6	1.5	4.2	6.2
<b>근원(식료품·에너지 제외)</b>	80.0	0.2	0.1	0.2	2.8	2.8
상품(신차·중고차·의류·의료 등)	19.4	0.2	-0.1	0.1	-0.1	0.1
서비스	60.7	0.3	0.1	0.3	3.7	3.6
주거	35.5	0.3	0.2	0.3	4.0	4.0
교통	6.3	-0.8	-1.4	0.1	3.1	2.5
의료	6.7	0.3	0.5	0.5	3.0	3.1

주: 1.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계절조정된 변화율이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계절조정되지 않음.

2. 가중치는(relative importance) 2025년 1월(최신 업데이트) 기준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April 2025," Table A, 2025. 5. 13.; "Consumer Price Index - January 2025," Table 1, 2025. 2. 12.

## II 일본<sup>257)</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5회계연도: 2025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표 3-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25. 1. 17.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
2025. 1. 24.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 발표
2025. 1. 27.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5. 2. 12.	일본 내각부, 「2024회계연도 일본 경제 보고서」 발표
2025. 3. 5.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
2025. 3. 7.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3분기 예산사용 현황 발표
2025. 3. 31.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발표
2025. 4. 18.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4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5. 5. 1.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5. 5. 16.	일본 내각부, 2025년 1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25. 6. 13.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 각의 결정

자료: 저자 작성

2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은 선임연구원(jeunlee@kipf.re.kr), 박창우 선임연구원(cwpark@kipf.re.kr)

## 01 예산 및 결산

### 가. 예산

####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발표(2025. 3. 31.)<sup>258)</sup>

- 일본 재무성이 지난 1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115조 5,415억엔(일반회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6%) 규모의 정부안이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심의를 거친 후 3,437억엔이 감소한 115조 1,978억엔 규모의 국회 수정된 예산안이 성립
  - 일본 국회에서 정부의 당초 예산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1996년 이후 29년만이며, 참의원에서 예산을 수정한 것은 현행 「헌법」하에서 최초<sup>259)</sup>
  - 중의원에서의 예산 수정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sup>260)</sup> 등의 반영에 기인하였으며, 참의원에서의 예산 수정은 고액 요양비 제도의 자기부담액 한도액 인상 유예 등을 반영한 것에 기인

표 3-II-2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정부안 수정 절차

날짜	절차	주요 일정
2024. 12. 27.	정부안	정부안 각의 결정
2025. 1. 24.		정부안 국회 제출, 심의 개시 - 제217회 국회에서의 재무장관의 재정 연설
2025. 2. 14.		각 부처의 정책별 예산 공표
2025. 3. 4.	국회수정	중의원(하원)에서의 예산 수정(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 등 반영) - 중의원 가결, 참의원 송부
2025. 3. 31.		참의원(상원)에서의 예산 수정(고액 요양비 제도의 자기부담액 상한액 인상 유예 등 반영) - 참의원 가결, 중의원 회부·동의
2025. 3. 31.	예산성립 (확정)	국회 수정 후 예산 성립 - 2025년도 예산 및 재정 투융자 계획의 설명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fy2025.html](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fy2025.html), 검색일자: 2025. 4. 11.

258)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yosan2025.html](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yosan2025.html), 검색일자: 2025. 4. 22.

259) 일본 총리 관저, 『令和7年度予算成立等についての会見』, <https://www.kantei.go.jp/jp/103/statement/2025/0331kaiken.html>, 검색일자: 2025. 4. 22.

260)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교육 기회 평등을 확보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며 2010년부터 시행됨(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高校生等への修学支援』,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index.htm](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index.htm), 검색일자: 2025. 4. 22.)

- (세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고교 무상화 관련, 고액 요양비 관련, 지방교부세·교부금, 예비비에서 수정되었으며, 정부안 대비 총 3,437억엔 감소
  - (고교 무상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소득 요건의 철폐에 따른 경비로 정부안 대비 1,064억엔 증가
  - (고액 요양비)<sup>261)</sup> 중의원, 참의원에서 심의 후 정부안 대비 160억엔 증액
    - (중의원) 고액 요양비 지원이 연 4회 이상(다수회) 해당하는 경우 자기부담한도액을 재조정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55억엔 증가
    - (참의원) 올해 8월에 예정되어 있던 정률 개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정 사항(자기부담한도액 단계적 인상 등)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05억엔 증가
  - (지방교부세·교부금) 소득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분이 감소하여 정부안 대비 2,056억엔 감소
  - (예비비)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605억엔 감소<sup>262)</sup>
- (세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수, 세외 수입, 공채금에서 수정되었으며, 정부안 대비 총 3,437억엔 감소
  - (세수) 소득세 기초 공제 인상 및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210억엔 감소
  - (세외 수입) 독립행정법인 납부금·기금 반환금 등으로 2,793억엔 증가
- (참고) 기초 공제 등의 인상과 기초 공제 상향 특례<sup>263)</sup>의 창설
  - (기초 공제 등 인상) 물가 상승 국면에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소득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이로 인해 과세 최저한도가 103만엔에서 최대 123만엔으로 인상
    - 기초 공제는 48만엔에서 58만엔으로 10만엔 인상

261) 고액 요양비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입원 시 식비, 차액침대비 등은 미포함)이 한 달 동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령과 소득에 따라 상이함(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高額療養費制度を利用される皆さまへ」, <https://www.mhlw.go.jp/content/000333279.pdf>, 검색일자: 2025. 4. 23.).

262) 블룸버그, 「政府当初予算案が異例の国会修正, 29年ぶりに予備費削減で総額は減少」, 2025. 2. 28.,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5-02-28/SRZ6EET1UM0W00>, 검색일자: 2025. 4. 30

263) 기초 공제 상향 특례 기준은 급여소득 ~200만엔 미만은 37만엔, 200만~475만엔은 30만엔, 475만~665만엔은 10만엔, 665만~850만엔은 5만엔으로, 급여 소득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상이(자료: 일본 재무성, 「基礎控除等の引上げと基礎控除の上乗せ特例の創設」,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5/20250417syotoku.pd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5/20250417syotoku.pdf), 검색일자: 2025. 4. 22.)

- 급여 소득 공제의 최저보장액을 55만엔에서 65만엔으로 10만엔 인상(단, 급여 소득 190만엔 미만 한정)
- (기초 공제 상향 특례) 저소득층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 최저한도를 160만엔<sup>264)</sup>으로 인상하고, 중소득층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조치는 2025~2026년까지 시행
-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2만~4만엔의 세금 부담 감소 예상(2025년 12월 기준)

표 3-II-3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정부안에 대한 국회 수정 내역

(단위: 억엔)

세출		세입	
고교 무상화 관련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소득 요건의 사실상 철폐)	1,064	세수 (소득세 기초 공제 특례 창설)	-6,210
고액 요양비 관련 (전면적인 시행 연기)	160	세외 수입 (독립행정법인 납부금·기금 반환금 등) <sup>1)</sup>	2,793
지방교부세·교부금 (소득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분 감소)	-2,056	공채금	-19
예비비	-2,605		
계	-3,437	계	-3,437

주: 1) 예금보험기구나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의 납부금, 백신 생산 체계 등 긴급 정비 기금에서의 반환금 등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修正フレーム (衆議院修正+参議院修正)」, 2025. 3. 31.

264) 과세 최저한도 160만엔은 급여소득 ~190만엔 미만인 경우, 기초 공제 58만엔, 급여 소득 공제 65만엔, 기초 공제 상향 특례에 따른 추가 공제액 37만엔의 총합으로 계산

표 3-II-4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개요(중의원·참의원 수정 후)

(단위: 억엔, %)

구분		2024 회계연도 당초	2025 회계연도 정부안(A)	2025 회계연도 국회 수정(B)	증감액 (B-A)	증감률
세출	일반세출 <sup>1)</sup>	677,764	682,452	681,071	-1,381	-0.2
	사회보장관계비	377,193	382,778	382,938	160	0.0
	사회보장관계비 외	290,571	299,674	298,133	-1,541	-0.5
	방위력정비계획 <sup>2)</sup> 대상 경비	77,249	84,748	84,748	-	-
	일반 예비비	10,000	10,000	7,395	-2,605	-26.1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 <sup>3)</sup>	10,000	-	-	-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77,863	190,784	188,728	-2,056	-1.1
국채비	270,090	282,179	282,179	-	-	
<b>합계</b>	<b>1,125,717</b>	<b>1,155,415</b>	<b>1,151,978</b>	<b>-3,437</b>	<b>-0.3</b>	
세입	세수	696,080	784,400	778,190	-6,210	-0.8
	기타 수입	75,147	84,525	87,318	2,793	3.3
	방위력강화분	21,261	26,659	26,659	-	-
	공채금	354,490	286,490	286,471	-19	-0.0
	건설공채	65,790	67,910	67,910	-	-
	특례공채	288,700	218,580	218,561	-19	-0.0
	<b>합계</b>	<b>1,125,717</b>	<b>1,155,415</b>	<b>1,151,978</b>	<b>-3,437</b>	<b>-0.3</b>

주: 1)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2)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자료: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 12. 16.)

3)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는 '원유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의 약칭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修正フレーム (衆議院修正+参議院修正)」, 2025. 3. 31.

## 나. 결산

###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3분기<sup>265)</sup> 예산사용 현황 발표(2025. 3. 7.)<sup>266)</sup>

- 2024회계연도 3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34조 9,847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4조 853억엔으로 세입액이 세출액을 10조 8,994억엔 초과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3분기 수입비율은 27.6%로 전년 동기 대비 15.0%p 감소
  - 전년도 3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 54조 3,594억엔 대비 19조 3,747억엔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채금에서 11조 1,584억엔, 전년도 잉여금 수입에서 8조

265)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 4. 1.~2025. 3. 31.로, 2024회계연도 3분기는 2024. 10. 1.~2024. 12. 31.을 의미

266)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4/06\\_3gai.html](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4/06_3gai.html), 검색일자: 2025. 3. 17.

7,211억엔 감소에 기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은 17.5%로,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
- 2024회계연도 3분기 특별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88조 1,212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92조 2,598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4조 1,386억엔 초과
  - 전년도 3분기 특별회계 국가 수납금액 89조 1,761억엔 대비 1조 549억엔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정투자·용자 특별회계의 재정용자자금계정 및 교부세·양여세 배분 특별회계에서 8조 8,139억엔 증가하였으나,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 및 연금 특별회계의 후생연금계정 및 외환자금 특별회계에서 9조 8,362억엔 감소에 기인
  - 전년도 3분기 특별회계 국가 지출금액 83조 9,083억엔 대비 8조 3,515억엔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투자·용자 특별회계의 재정용자자금계정에서 7조 2608억엔 증가에 기인

**표 3-II-5 일본의 2024회계연도 3분기 예산사용 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 (A)	1,265,149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sup>1)</sup> (D)	1,375,782	세입예산액 (A)	4,367,942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sup>1)</sup> (D)	4,365,674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349,847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40,853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881,212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922,598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7.6% (42.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7.5% (17.6%)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0.1% (20.4%)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1.1% (19.1%)
3분기 누계(C)	633,730	3분기 누계(F)	853,795	3분기 누계(C)	3,341,934	3분기 누계(F)	3,313,569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50.0% (60.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62% (60.4%)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76.5% (77.3%)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75.9% (76.7%)

주: 1. (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억엔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5. 3. 7.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경제 및 재정전망

####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25. 1. 17.)<sup>267)</sup>

※ (목적) 본 전망은 향후 10년간 경제·재정전망을 제시하며,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 상황 평가, 중장기적인 경제·재정 정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전망은 1년에 2회(1월, 7월) 발표되고 있음

○ (시나리오별 가정) 본 전망은 2025년도까지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의 실적치와 정부 경제전망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202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의 전망을 제시

- (기준선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최근 경기 순환<sup>268)</sup>의 평균 수준인 약 0.5%(2023년도 0.5%)로 유지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상승(2023년도 62.9% → 2034년도 65.1%)한다고 가정
- (성장이행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과거 40년<sup>269)</sup>의 평균인 1.1%까지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기준선 시나리오보다 상승(2034년도 66.3%)한다고 가정
- (고성장실현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기 전 기간의 평균인 1.4%<sup>270)</sup>까지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기준선 시나리오보다 상승(2034년도 66.3%)한다고 가정

○ (경제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2026~2027년도 0.6%, 2034년도에는 0.4%로 중장기적으로 0%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며, 명목 GDP 성장률은 2026년도 1.4%, 2027년도 0.9%, 2034년도에는 0.7%를 나타낼 전망

-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는 임금 인상 및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가 실현되어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도 1.2%, 2027년도 1.5%, 2034년도에는 1.4%를 나타낼

267)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5. 1. 17.,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r7chuuchouki2.pdf>, 검색일자: 2025. 1. 21.

268) 제16순환(2012년 10~12월부터 2020년 4~6월까지)

269) 과거부터 제16순환까지(1980년 4~6월부터 2020년 4~6월까지)의 평균

270) 과거부터 제12순환까지(1980년 4~6월부터 1999년 1~3월까지)의 평균

것이며, 명목 GDP 성장률은 2026년도 2.7%, 2027년도 2.9%, 2034년도에는 2.8%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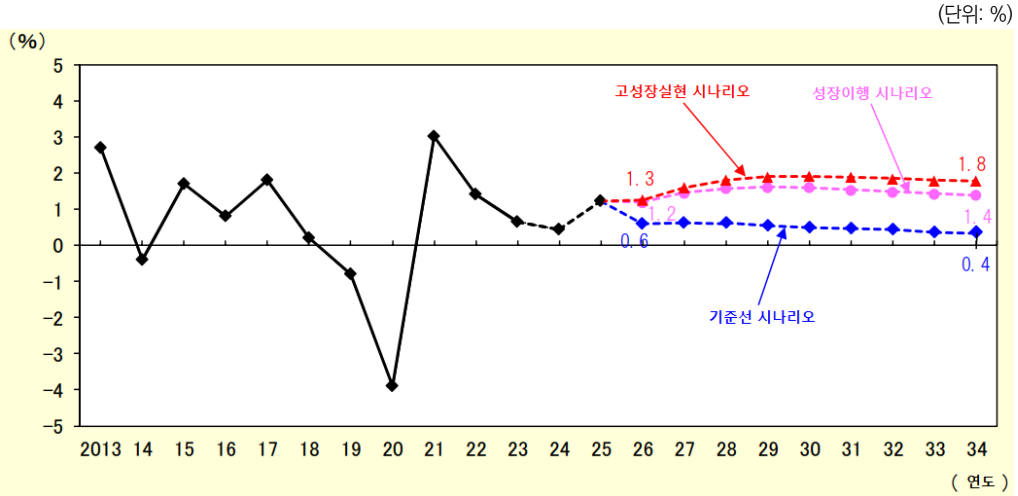
- 고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도 1.3%, 2027년도 1.6%, 2034년도에는 1.8%를 나타낼 것이며, 명목 GDP 성장률은 2026년도 2.7%, 2027년도 3.1%, 2034년도에는 3.2%를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sup>271)</sup>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1%로 흑자로 전환된 후 점차 흑자폭이 축소하여 2034년도에는 -0.2%로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2029년도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3%로 흑자로 전환된 후 점차 흑자폭이 확대되어 2034년도에는 1.8%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 작년 7월 전망에서는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현재 재정건전화 목표<sup>272)</sup>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작년 7월 전망<sup>273)</sup>에서는 202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가 0.1%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임금·소득 증가 및 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출이 증가하여 202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0.7%로 전망

271) 재정전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관점에서 기준선 시나리오와 성장이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기술함. 재정 전반적으로는 2025년도 예산 등을 반영함. 세출에 대해서는 다년도 계획에 의해 구체적인 규모가 예상되는 방위력 강화, 국토강인화 계획을 포함하며, 사회보장지출은 고령화 요인 및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가하고, 그 외 일반세출은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함. 세수 등은 거시 경제와 같은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함.

272) 2024년 6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서는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현재 재정건전화 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언급(자료: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4 について」, 2024. 6. 21.,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4/2024\\_basicpolicies\\_ja.pdf](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4/2024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5. 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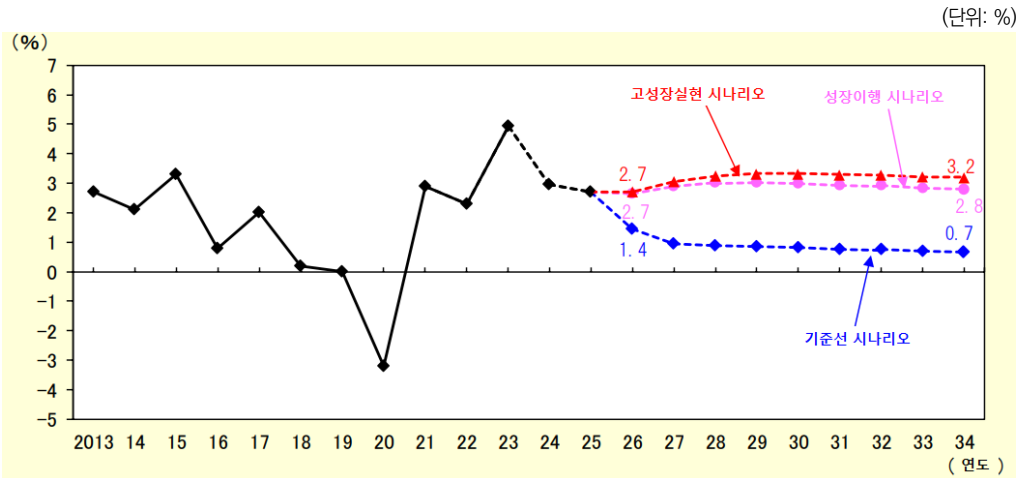
273)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r7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5. 1. 23.

그림 3-II-1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5. 1. 17., p. 4, 그림 2.

그림 3-II-2 일본의 중장기 명목 GDP 성장률 전망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5. 1. 17., p. 4, 그림 3.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5. 1. 27.)<sup>274)</sup>

- (경제)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 완화적인 금융환경 등에 기인하여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sup>275)</sup>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0.5%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1.1%, 1.0%를 나타낼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2.7%를 나타낼 것이며, 2025회계연도에는 2.4%, 2026회계연도에는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4년 10월 전망과 비교)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변화가 없으며, 미국 물가 상승, 최근의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에 기인하여 2024~2025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상향 조정

274)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5年 1月)」, 2025. 1. 27.,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501b.pdf>, 검색일자: 2025. 2. 3.

275) 일본은행에서 추계한 2024년 상반기 전년 대비 잠재성장률은 0.58%(자료: 일본은행, 「需給ギャップと潜在成長率」, 2025. 1. 8., [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검색일자: 2025. 2. 14.)

**표 3-II-6 2024~2026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4 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4~0.6 (0.5)	2.6~2.8 (2.7)
	2024년 10월 전망	0.5~0.7 (0.6)	2.4~2.5 (2.5)
2025 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9~1.1 (1.1)	2.2~2.6 (2.4)
	2024년 10월 전망	1.0~1.2 (1.1)	1.7~2.1 (1.9)
2026 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8~1.0 (1.0)	1.8~2.1 (2.0)
	2024년 10월 전망	0.8~1.1 (1.0)	1.8~2.0 (1.9)

-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5年 1月)」, 2025. 1. 27., p. 9, 일부 발췌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2025. 3. 5.)<sup>276)</sup>

$$* \text{ 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text{국민소득}(NI)} \text{ } ^{277)}$$

$$* \text{ 잠재 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 + \text{재정적자}}{\text{국민소득}(NI)}$$

- 2025회계연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4년 45.8%(실적 전망치)보다 0.4%p 증가한 46.2%로 전망
- 국민부담률에 재정적자<sup>278)</sup>를 고려한 ‘잠재 국민부담률’은 2024년 50.9%(실적 전망치)보다 2.1%p 감소한 48.8%로 전망

276)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20250305.html>, 검색일자: 2025. 3. 19.

277) 국민소득 NI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용자 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에 해외로부터의 고용자 보수, 재산소득의 순수취분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자료: 내각부, 『国民經濟計算の見方・使い方』,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h16/pdf/usage.pdf](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h16/pdf/usage.pdf), 검색일자: 2025. 3. 27.)

278)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를 의미하며,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자료: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対国民所得比)の推移』, 2025. 3. 7.,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503a.pdf>, 검색일자: 2025. 3. 19.)

표 3-II-7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추이

(단위: %)

구분	국세 <sup>1)</sup> ①	지방세 ②	조세부담 <sup>2)</sup> ③=①+②	사회보장부담 ④	국민부담률 ⑤=③+④	재정적자 <sup>3)</sup> ⑥	잠재 국민부담률 ⑦=⑤+⑥
2020	17.3	10.9	28.1	19.6	47.7	14.9	62.7
2021	18.2	10.7	28.9	19.2	48.1	9.2	57.4
2022	18.6	10.8	29.4	19.0	48.4	6.3	54.6
2023	17.7	10.2	27.9	18.2	46.1	4.0	50.0
2024	17.5	10.1	27.5	18.3	45.8	5.0	50.9
2025	18.1	10.1	28.2	18.0	46.2	2.6	48.8

주: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2. 2023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4회계연도는 실적 전망치, 2025회계연도는 전망치

1) 국세에는 특별회계 및 일본전매공사 납부금을 포함. 지방법인 특별세 및 특별법인 사업세는 국세에 포함함.

2) 조세부담률의 항목은 개인소득 과세, 법인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자료: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対国民所得比)の推移」, 2025. 3. 5., 표 일부 발췌

- 다른 국가와 비교한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2년 기준 일본은 48.4%, 미국은 36.4%, 영국은 49.7%이며, 독일은 55.9%, 스웨덴은 55.5%, 프랑스는 68.1%로 나타남

표 3-II-8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일본 (2025년)	일본 (2022년)	미국 (2022년)	영국 (2022년)	독일 (2022년)	스웨덴 (2022년)	프랑스 (2022년)	한국 (2022년)
사회보장부담률	18.0	19.0	8.6	12.0	22.8	5.0	23.8	13.1
조세부담률	28.2	29.4	27.8	37.8	33.1	50.5	44.3	31.7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2.6	6.3	4.7	6.2	2.9	0.0	6.8	- <sup>1)</sup>
국민부담률	46.2	48.4	36.4	49.7	55.9	55.5	68.1	44.8
(GDP 대비)	(34.0)	(34.9)	(27.9)	(37.0)	(41.4)	(37.0)	(47.7)	(31.3)
잠재 국민부담률	48.8	54.6	41.1	55.9	58.8	55.5	74.8	- <sup>1)</sup>
(GDP 대비)	(35.9)	(39.5)	(31.5)	(41.6)	(43.6)	(37.0)	(52.4)	- <sup>1)</sup>

주: 1. 일본(2025년)은 전망치, 2022년은 모든 국가가 실적치

2.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기준. 단 일본은 사회보장기금, 미국은 사회보장연금신탁기금을 제외

1) 일본 공식자료에 없음 의미

원자료: 동 수치는 일본의 경우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자료 등, 미국은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 그 외 국가들은 National Account(OECD), Revenue Statistics(OECD), Economic Outlook 116(OECD) 2024년 12월 자료를 사용

자료: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の国際比較」, 2025. 3. 5.,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503b.pdf>, 검색일자: 2025. 3. 19.; 「国民負担率の国際比較 (OECD加盟36カ国)」,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503c.pdf>, 검색일자: 2025. 3. 21.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전망 발표(2025. 5. 1.)<sup>279)</sup>

※ 본 전망보고서는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향후 경제·물가 전망과 상방·하방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금융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발표하고 있음

- (경제) 해외 각국의 통상 정책 등의 영향 등에 기인하여 기업 수익이 약화되고 해외 경제가 둔화되면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며, 이후 해외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져 성장률이 다시 상승할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0.7%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7회계연도에는 각 0.5%, 0.7%, 1.0%를 나타낼 전망
  - 잠재성장률은 디지털화 및 인적 자본 투자 진전에 의한 생산성 상승, 설비 투자 증가로 인한 자본 스톡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2025회계연도에는 2.2%를 나타낼 것이며, 2026회계연도에는 1.7%, 2027회계연도에는 1.9%를 나타낼 전망
  -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수입물가와 쌀 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은 점차 약화될 전망
- (위험) 각국의 관세를 포함한 통상 정책, 우크라이나, 중동 정세 등의 향후 전개와 그 영향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 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5년 1월 전망과 비교) 2025회계연도~2026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각국의 통상 정책 등에 기인하여 하향 조정되었으며,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도 원유 가격 하락 및 성장 속도 둔화 전망에 따라 하향 조정

279)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5年 4月)」, 2025. 5. 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504a.pdf>, 검색일자: 2025. 5. 22.

표 3-II-9 2024~2027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4 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4~0.6 (0.5)	2.6~2.8 (2.7)
	2025년 4월 전망	0.7~0.7 (0.7)	2.71)
2025 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9~1.1 (1.1)	2.2~2.6 (2.4)
	2025년 4월 전망	0.4~0.6 (0.5)	2.0~2.3 (2.2)
2026 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8~1.0 (1.0)	1.8~2.1 (2.0)
	2025년 4월 전망	0.6~0.8 (0.7)	1.6~1.8 (1.7)
2027 회계연도	2025년 4월 전망	0.8~1.0 (1.0)	1.8~2.0 (1.9)

주: 1) 2024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적치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각각 1개를 제외한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향후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5년 4월), 2025. 5. 1., p. 9, 일부 발췌

## 나. 경제 및 재정정책

### ■ 일본 내각부, 「2024회계연도 일본 경제 보고서」 발표(2025. 2. 12.)<sup>280)</sup>

- (개요) 일본 내각부에서는 매년 ‘일본 경제’ 시리즈를 공표하여 일본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4년 일본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개인소비 회복,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과제와 기업의 도산 및 창업 관련 현황 및 과제를 분석
- (일본 경제 동향) 2024 일본경제는 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계 부문의 실질 소득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미국 등 해외 동향에 유의할 필요
  - 최근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플레이션 탈피를

280) 일본 내각부, 「2024年度 日本經濟レポート—賃金と価格をシグナルとした經濟のダイナミズムの復活へ—」, 2025. 2. 12., [https://www5.cao.go.jp/keizai3/2024/0212nk/pdf/n24\\_5.pdf](https://www5.cao.go.jp/keizai3/2024/0212nk/pdf/n24_5.pdf), 검색일자: 2025. 2. 18.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거시적인 물가변동 요인과 미시적인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개인소비의 회복) 일본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과 이를 상회하는 임금 상승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
  - 일본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맞벌이 가구 증가 영향 등으로 2010년대 초반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금 및 소득 증가가 일시적이라는 인식, 식료품 등의 물가 상승, 노후에 대한 불안 등이 소비성향 저하를 유발
  - 현 세대의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약 2%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과 이를 상회하는 임금 상승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
  -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비슷하게 노동력이 부족했던 2010년대 후반에 비해 잠재적인 노동공급 감소, 이직 시장의 발전 등으로 기업의 임금설정 행동이 변화함에 따라 임금 상승의 지속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도산 및 창업 동향) 수입 물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업종 간의 자금조달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격전가의 원활화, 노동력 절감 및 디지털 투자 촉진 등 지원이 중요
  - 코로나19 이후 정책 지원 및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배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차이는 과거 30년 중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 물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업종 간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경제로 이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가격전가<sup>281)</sup>의 원활화, 노동력 절감 및 디지털 투자 촉진, 경영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 승계·M&A에 대한 지원이 중요
  - 일본의 창업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창업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창업 후 경영상황이 양호한 기업은 설비투자나 인적 투자 등에도 적극 적인 것으로 나타남

281) 일본 정부는 에너지 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이 임금 인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무비,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적절히 전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자료: 일본 내각관방, 「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る価値創造のための転嫁円滑化施策パッケージ」, 2021. 12. 27.,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partnership\\_package\\_set.pdf](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partnership_package_set.pdf), 검색일자: 2025. 2. 13.).

### ■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 각의 결정(2025. 6. 13.)<sup>282)</sup>

※ 본 기본방침은 총리가 의장인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매년 6월경 각의 결정되며,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함께 경제·재정·행정·사회 등 분야의 개혁의 중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 본 방침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제도 개혁을 진행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은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및 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한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에서는 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한 성장형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재정 재생 계획’, 2026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제시
- 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한 경제성장 실현 -임금 인상 지원 정책의 총동원-
  -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임금 상승 추진 5개년 계획<sup>283)</sup> 실행, 노동시장 개혁 추진, 근로조건 개선, 개별 업종(건설업, 경비업 등)에 대한 임금 인상 추진
  - (지방 창생 2.0<sup>284)</sup> 및 지역사회 과제 대응) 디지털을 활용한 지방 창생 가속화, 교통 및 생활인프라 등 재정비, 관광 지원, 농림수산업의 생산기반 강화 및 식량 안보<sup>285)</sup> 확보,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추진
  - (투자입국 및 자산운용입국<sup>286)</sup>에 따른 장래 임금·소득 증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

282)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5 について」, 2025. 6. 13.,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5/2025\\_basicpolicies\\_ja.pdf](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5/2025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5. 6. 23.

283)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임금 향상 추진 5개년 계획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지원, 가격전가와 거래의 적정화, 경영 기반 강화, 인재 육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2029년도까지 향후 5년간 일본 경제 전체에서 연 1%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을 실현하고, 지속적·안정적인 물가 상승하에 물가 상승률을 약 1%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표준으로 정치를 목표로 함(자료: 일본 내각관방,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賃金向上推進5か年計画」の施策パッケージ案, 2025. 5.,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34/shiryu1.pdf](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34/shiryu1.pdf), 검색일자: 2025. 6. 24.)

284) ‘지방이아말로 성장의 주역’이라는 생각이 근거하여, 지방이 각각의 특성에 따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본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대규모 지방창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내각에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본부」를 설치 함. 이를 통해 도시 및 지방이 모두 안심·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모든 관계자가 희망·열량·일체감을 되찾는 형태로 새로운 지방창생 정책인 ‘지방창생 2.0’을 시행(자료: 일본 내각관방, 「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4. 10. 11., 검색일자: 2025. 6. 23.)

285) 식량 안보 확보는 양질의 식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함.

286) 자산운용입국(資産運用立国)이란 일본 가계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 및 예금이 투자로 향하고, 기업 가치 향상의 혜택이 가계에 환원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자료: 금융청, <https://www.fsa.go.jp/policy/pjlamc/20231214.html>, 검색일자: 2025. 6. 24.)

확대와 자산운용을 추진해 가계 자금이 투자로 유입되고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장래 임금과 자산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 대규모 재해 대응체제와 국토 강인화,<sup>287)</sup>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재생, 노토반도지진의 부흥 및 복구 추진, 외교·안보·경제안보 강화,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실현, 포용사회 조성, 여성·고령자·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재정 재생 계획’ 추진
  - (배경) 일본의 제로금리가 해체된 가운데 대규모 재해나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의 관점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경제·재정에 대해 전망하면서 경제·재정·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기본방침) 경제·재정 재생 계획을 통해 경제 재생과 재정 건전화의 균형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재정 건전화 목표와 세출 개혁을 지속
    - 중요 정책에 대해 복수 연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증거기반정책수립(EBPM<sup>288)</sup>에 기반한 현명한 지출(와이즈스펜딩)<sup>289)</sup>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대하며 세출 구조의 평시화를 추진
    - 국채 수급 불안으로 인한 장기 금리 급등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국채 보유를 촉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
    - 재정 건전화 목표가 물가대응, 미국 관세 등 대외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정책 시행에 저해 되지 않도록 노력
  - (재정건전화 목표)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조속히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GDP 대비 채무잔고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여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

287) 국토강인화란, 지진 및 해일, 태풍 등 자연 재해에 강한 나라 만들기·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의미(자료: 일본 내각관방, 「すすめよう災害に強い国づくり」, 2022. 1., [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ujinka/pdf/susumeyou\\_pamphlet\\_r401.pdf](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ujinka/pdf/susumeyou_pamphlet_r401.pdf), 검색일자: 2025. 6. 24.)

288) 증거기반정책수립(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 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289) 세출 재검토를 통해 정책 효과가 낮은 세출을 철저히 삭감하고 정책 효과가 높은 세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자료: 일본 내각부, 「ワイスペンディングの徹底に向けたEBPMの強化~政策効果を高め、予算の質を向上させる取組~」, 2020. 7. 8.,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0/0708/shiryu\\_03-2.pdf](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0/0708/shiryu_03-2.pdf), 검색일자: 2025. 6. 23.)

- 단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은 불투명하며, 그 경제·재정에의 영향을 검증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목표 연도의 재확인을 실시
- (예산편성과 연계) 2027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하며, 일본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경제·물가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각 연도의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
- 특히 사회보장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개호 등 현장의 엄격한 실정이나 세수 등을 포함한 재정 상황을 고려
- (세계 개혁)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의 구체화를 위해 포괄적인 검토를 추진
- 각종 공제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소득세의 근본적 개혁, 납세 환경의 정비와 적정·공평한 과세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 및 집행 체제 강화, 새로운 국제과세 규칙에 대한 대응 진행
- (경제·재정 재생계획 추진을 위한 노력 강화) 경제·재정 일체 개혁의 점검·평가 실시, 정부 전체의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강화
- (경제·재정 일체 개혁의 점검·평가)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EBPM 기반으로 경제·재정 개혁의 진척과 효과를 점검·관리하고 정책 기획에 반영
- (정부 전체의 증거기반정책수립 강화)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BPM을 정부 전반에 도입,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연계 및 AI·빅데이터 분석을 추진
- (물가 상승에 따른 공적 제도의 점검·재검토)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공적 제도의 기준액<sup>290)</sup>과 기준선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점검·재검토하고 정기 개정 규칙과 함께 공정가격 인상 및 공공조달에서의 가격 전가를 철저히 추진
- (주요 분야별 과제)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 저출산 대책 및 아동·청소년 정책, 공교육 재생·연구 활동 활성화, 전략적인 사회자본 정비, 지속가능한 지방·행정기관 강화
-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 의료·개호의 디지털 전환(DX), 정보통신기술(ICT), 지역

290) 공적 제도의 기준액, 기준선 검토 대상은 교통사고 유자녀 육성급여금, 아동의 학습·생활지원사업(생활빈곤자 자립지원제도), 급식 제공에 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액, 자가용 출퇴근에 관한 통근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액 등이 있음.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과 인재 확보기반 마련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적의 의료·개호 제공, '전 세대형 사회보장' 구축을 목표로 의료·개호 등 분야에서 개혁 추진 등

- (저출산대책 및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 대강<sup>291)</sup> 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 지원 및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 지원, 「어린이 미래 전략」<sup>292)</sup>에서 제시한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에 따라 다방면의 지원과 함께 효과 검증 철저
- (공교육 재생·연구 활동 활성화) 교육과정 개편, 교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공교육 재생,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계 구축
- (전략적인 사회자본 정비)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리 및 마을 조성의 고도화, 공공투자의 효율화·중점화, 민관협력사업(PPP)·민간투자사업(PFI) 추진, 지속 가능한 토지 및 수자원 이용·관리 등
- (지속 가능한 지방·행정기반 강화) 디지털 전환기술 활용,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인재 확보, 세제 개선 등에 의한 행·재정 효율화

◦ (2026년도 예산 편성 방침)

-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의 영향, 물가 상승 지속이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경제 구조 강화를 추진하여 일본 경제를 성장형 경제 구조로 전환
- 2026년도 예산은 본 방침과 骨太方針(골태방침)<sup>293)</sup>을 기반으로 편성하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함
- 지역창생 2.0 추진, 지속적·구조적 임금인상 실현, 민관(官民) 제휴 투자 확대, 방위력 강화를 비롯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의 꾸준한 이행 등 주요 정책 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 실시

291) 아동 대강(こども大綱)은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작성·추진되어 온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아동빈곤대책추진법」에 근거한 세 가지 아동 관련 대강(大綱)을 하나로 통합하여, 아동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및 중요 사항 등을 일원적으로 정하는 것

292) 「어린이 미래 전략」은 2023년 12월 각의 결정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없던 규모로 모든 어린이·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공동육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동 전략에서는 향후 3년간(2024~2026년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함(자료: 일본 아동가정청, 「こども未来戦略」, 2023. 12. 22.,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검색일자: 2025. 6. 23.).

293) 골태방침(骨太方針)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의 약칭

-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재정 재생계획」에 따른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 등 중장기적 시점에서 경제·재정·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

표 3-II-10 일본의 2025년도, 2026년도 예산 편성 방침 비교

2025년도 예산 편성 방침	2026년도 예산 편성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경제를 성장형 경제 구조로 전환</li> <li>•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함</li> <li>• 지역창생 추진, 지속적·구조적 임금인상 실현, 민관(官民) 제휴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를 포함한 성장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가속, 방위력 강화를 비롯한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주요 정책 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탄력 있는 예산을 편성</li> <li>•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단년도 예산주의 폐해 시정에 힘쓰고 중장기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재정 운영 및 사회 보장 제도 구축 등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의 영향, 물가 상승 지속이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일본 경제를 성장형 경제 구조로 전환</li> <li>•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함</li> <li>• 지역창생 2.0 추진, 지속적·구조적 임금인상 실현, 민관(官民) 제휴 투자 확대, 방위력 강화를 비롯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의 꾸준한 이행 등 주요 정책 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예산 편성 실시</li> <li>•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재정 재생계획」에 따른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 등 중장기적 시점에서 경제·재정·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li> </ul>

자료: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5について」, 2025. 6.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 2024 상반기』, 2024. 7., p. 181.

## 다. 금융정책

### ■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 발표(2025. 1. 24.)<sup>294)</sup>

- 일본은행은 1월 23~24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금융시장 조절방침을 변경

294) 일본은행,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について」, 2025. 1. 24.,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5/k250124a.pdf](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5/k250124a.pdf), 검색일자: 2025. 2. 3.

- (금융시장 조절방침)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sup>295</sup>)를 약 0.5%로 유지되도록 운용
  - 이번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작년 7월 31일에 변경된 방침에 따라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0.25%로 유지되도록 운용 해왔으며, 1월 23일 기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는 평균 0.227%<sup>296</sup>)
- (기타 제도 적용 이율 변경) 상기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보완 당좌예금제도, 기준 대출이자율을 변경
  - (보완 당좌예금제도<sup>297</sup>) 적용 이율) 보완 당좌예금제도의 적용 이율을 기존 0.25%에서 0.5%로 인상 결정
  - (기준 대출 이율<sup>298</sup>) 보완 대출제도<sup>299</sup>)의 적용 금리인 기준 대출 이율을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
- (대출 증가 지원 자금 공급<sup>300</sup>) 예정대로 2025년 6월 말로 신규 대출을 종료하며,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종료하는 관점에서의 경과조치로서 7월 이후 2025년 내에는 만기 도래액의 절반을 상한으로 하여 대출 기간 1년의 차환을 인정하기로 함

295)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無担保コールレート (オーバーナイト物))는 콜시장에서 계약일에 자금을 수령 및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담보자금 대출 및 차입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자료: 일본은행,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seisaku/b32.htm>, 검색일자: 2025. 2. 4.)

296) 일본은행, 「コール市場関連統計 (毎営業日)」, [https://www3.boj.or.jp/market/jp/menu\\_m.htm](https://www3.boj.or.jp/market/jp/menu_m.htm), 검색일자: 2025. 2. 4.

297) 일본은행이 받아들이는 당좌 예금 중 소요준비를 초과하는 '초과준비'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제도(자료: 일본은행,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th\\_a/index.htm](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th_a/index.htm), 검색일자: 2025. 2. 5.)

298) 「일본은행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관한 기준이 되는 대출 이율'(자료: 일본 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laws.e-gov.go.jp/law/409AC0000000089#Mp-Ch\\_2](https://laws.e-gov.go.jp/law/409AC0000000089#Mp-Ch_2), 검색일자: 2025. 2. 5.)

299) 일본은행이 금융기관 등의 차입 신청을 받아 이미 차입된 담보 범위 내에서 기준 대출 이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대출.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한으로 함(자료: 일본은행,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len\\_a/index.htm](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len_a/index.htm), 검색일자: 2025. 2. 6.)

300)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행동과 기업 및 가계의 긍정적인 자금수요 증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대출 잔액을 늘린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가액의 2배 상당액까지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 12월에 도입이 결정(자료: 일본은행, [https://www.boj.or.jp/mopo/measures/term\\_cond/yoryo81.htm](https://www.boj.or.jp/mopo/measures/term_cond/yoryo81.htm), 검색일자: 2025. 2. 6.)

##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가. 경제성장률 동향

- 일본 내각부, 2025년 1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5. 5. 16.)<sup>301)</sup>
  -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0.2%(연율 -0.7%)로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0.8%(연율 3.1%)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7%p로 2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재화 및 서비스의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8%p로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 증가율(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0.9% 증가
      -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외식 등의 증가에 의해 0.0%로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 증가율은 1.2% 증가하여 2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출 증가에 의해 1.4% 증가로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3%p로, 실질 재고 잔고가 2024년 10~12월 감소(-0.3조엔)에서 2025년 1~3월 증가(1.4조엔)로 전환되었으며, 증가폭이 1.7조엔으로 확대됨에 따라 GDP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 증가율(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0.0%
      - 정부최종소비지출은 -0.0%로 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공적고정 자본형성은 -0.4%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 (재화 서비스 수출입) 재화 서비스 수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연구개발 서비스 등의 수출 감소에 기인하여 4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재화 서비스 수입은 항공기, 광고 서비스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2.9% 증가

301) 일본 내각부, 「2025년1~3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5. 5. 16.,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5. 5. 22.

**표 3-II-11 일본의 분기별 GDP 및 각 구성요소 증가율(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추이**

(단위: %, %p)

구분	2024				2025	2025 <sup>1)</sup>
	Q1	Q2	Q3	Q4	Q1	
실질 GDP	-0.4	0.9	0.2	0.6	-0.2	-0.7
국내수요	-0.5	1.2	0.5	-0.1	0.6	2.6
민간수요	-0.6	1.0	0.7	-0.2	0.9	3.5
민간최종소비지출	-0.6	0.8	0.7	0.1	0.0	0.2
민간주택	-3.2	1.2	0.7	-0.2	1.2	5.0
민간기업설비	-1.1	1.4	0.1	0.8	1.4	5.8
민간재고변동	(0.2)	(0.1)	(0.1)	(-0.3)	(0.3)	-
공적수요	-0.2	1.8	-0.1	0.0	0.0	0.0
정부최종소비지출	0.3	0.9	0.1	0.3	-0.0	-0.1
공적고정자본형성	-2.2	5.7	-1.1	-0.7	-0.4	-1.8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sup>2)</sup>	(0.1)	(-0.3)	(-0.3)	(0.7)	(-0.8)	-
재화·서비스 수출	-3.6	1.5	1.2	1.7	-0.6	-2.3
재화·서비스 수입	-3.7	2.7	2.2	-1.4	2.9	12.1
명목 GDP	0.0	2.4	0.5	1.2	0.8	3.1
GDP 디플레이터	0.4	1.4	0.3	0.6	0.9	-

주: 1. (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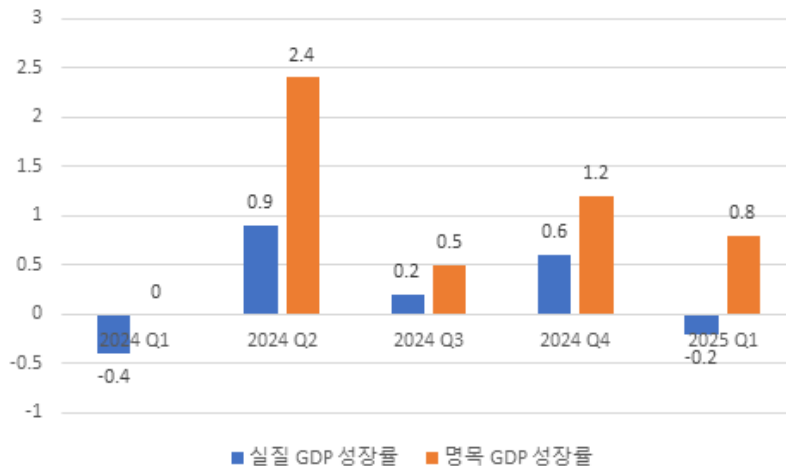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자료: 일본 내각부, 「2025년1~3月期四半期別 GDP 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 재구성

**그림 3-II-5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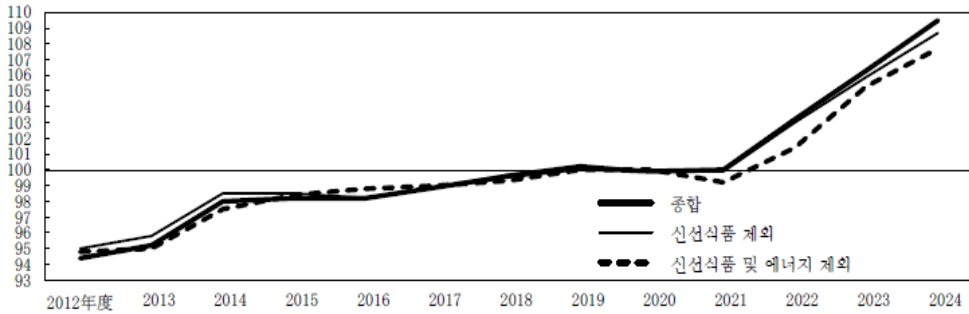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2025년1~3月期四半期別 GDP 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을 참고하여 작성

## 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4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5. 4. 18.)<sup>302)</sup>
  - 2024회계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0% 상승한 109.5를 기록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로 전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로 전년 대비 2.3% 상승

그림 3-II-6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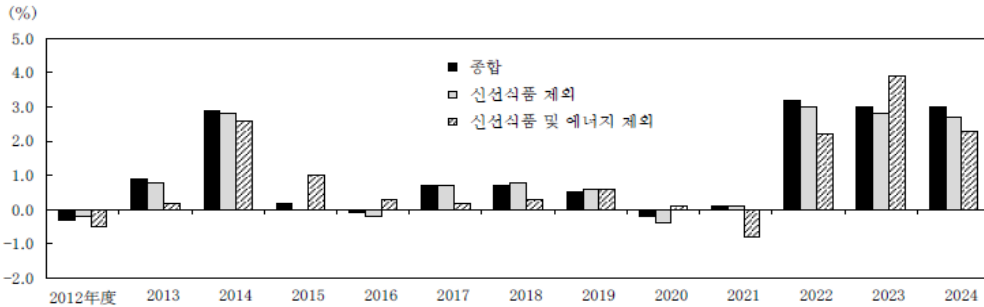
(단위: 2020년=100)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년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 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p. 4, 그림 7, 2025. 4. 18.

그림 3-II-7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대비)

(단위: %)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년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 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p. 4, 그림 8, 2025. 4. 18.

302)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년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 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https://www.stat.go.jp/data/cpi/sokuhou/tsuki/pdf/zenkoku.pdf>, 검색일자: 2025. 4. 25.

표 3-II-12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100, %)

회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종합	지수	94.4	95.2	98.0	98.2	98.2	98.9	99.6	100.1	99.9	100.0	103.2	106.3	109.5
	전년 대비 상승률 (%)	-0.3	0.9	2.9	0.2	-0.1	0.7	0.7	0.5	-0.2	0.1	3.2	3.0	3.0
신선식품 제외	지수	95.0	95.8	98.5	98.5	98.2	98.9	99.7	100.3	99.9	99.9	103.0	105.9	108.7
	전년 대비 상승률 (%)	-0.2	0.8	2.8	0.0	-0.2	0.7	0.8	0.6	-0.4	0.1	3.0	2.8	2.7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94.8	95.0	97.5	98.4	98.8	99.0	99.3	100.0	100.0	99.2	101.4	105.3	107.7
	전년 대비 상승률 (%)	-0.5	0.2	2.6	1.0	0.3	0.2	0.3	0.6	0.1	-0.8	2.2	3.9	2.3

주: 통계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지수의 기준 연도인 2020년은 역년 기준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p. 4, 표 7, 2025. 4. 8.

# III 독일<sup>303)</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5회계연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표 3-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5.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경제성장률 발표
2025. 1. 20.	독일 연방재무부, FY2024 잠정결산 발표
2025. 1. 29.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025년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5)' 발표
2025. 3. 4.	독일 연방은행, 부채제동장치(Debt brake) 개혁 제안
2025. 4. 4.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잠정치) 발표
2025. 4. 10.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5년 봄 공동 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5) 발표
2025. 4. 24.	독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U 중기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APR) 2025 발표
2025. 4. 24.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5년 봄 경제전망' 발표
2025. 4. 25.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정부지출 비율 발표
2025. 5. 14.	독일 연방정부, 새 연립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주요 정책 방향 발표
2025. 5. 15.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8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
2025. 6. 4.	독일 연방 내각,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법 초안 승인
2025. 6. 6.	독일 연방정부,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 인상 확정 발표
2025. 6. 12.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제31차 회의 개최
2025. 6. 24.	독일 연방내각, 2025 예산안 및 2026~2029 중기재정계획안 승인

자료: 저자 작성

3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염보라 연구원(ybr119@kipf.re.kr)

## 01 예산 및 결산

### 가. 예산

- 독일 연방내각, 2025 예산안 및 2026~2029 중기재정계획안 승인(2025. 6. 24.)<sup>304)</sup>
  - 독일 연방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 2026~2029년 중기재정 계획안, 그리고 5,000억유로 규모의 기후 및 인프라 특별기금 설치에 대해 승인
    - (재정전망) 2025년 연방예산 재정지출은 약 5,030억유로, 조세수입은 3,868억유로, 신규 차입은 818억유로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
      - 2025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41억유로, 2026년은 165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305)</sup>
      - 국가 경제에 투자하기 위해 새로운 부채는 필수적이고 적절하며, 독일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63%로 신규 차입을 감당할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 2025년 총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한 1,150억유로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29년까지 연간 1,200억유로 수준을 유지할 계획
    - (재정기조 및 주요정책)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은 경제 성장 및 독일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 확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더욱 강화되고 통합된 예산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
      - (투자) 2025년은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연구개발, 기후보호 등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철도 220억유로, 사회주택 및 도시재생 40억유로, 디지털화 40억유로, 기후 및 에너지 100억유로 등을 배정
      - (국방 및 안보) 2025년 국방비는 약 624억유로로 증액되었으며, 독일연방군 특별기금 및 기타 지출을 합치면 NATO 협약 기준인 GDP 대비 2% 이상을 충족
      - (구조개혁) 투자 효과의 조기 창출과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 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해 2026년부터 가스 저장부담금 폐지, 산업·농업용 전기세

304)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regierung stellt finanzielle Weichen für die nächsten Jahre: Bundeshaushalt 2025, Eckwerte bis 2029 und Umsetzung des 500-Milliarden-Euro-Investitionspakets beschlossen," 보도자료, 2025. 6.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zpolitik/2025/06/2025-06-24-2-entwurf-bhh-2025-eckwerte-bis-2029.html>, 검색일자: 2025. 6. 25.

305)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023년 5.9%, 2024년 2.2%이며, 인구 증가율은 2023년 0.4%, 2024년 0.2%

인하 등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할 예정

- (예산 통합) 연립정부 협정에서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2029년까지 인력 8% 감축 및 행정 지출 감축, 미신고 노동 및 탈세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 마련
- (향후 일정) 2025년 예산안은 독일 연방의회에 제출되고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연방의회에서 9월경 최종 채택할 것으로 예상
  - 임시예산은 2025년 예산법 공포와 함께 종료될 예정

표 3-III-2 독일의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24 잠정결산	기존 2025 예산안	신규 2025 예산안	2026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7	2028	2029
<b>재정지출</b>	4,748	4,806	5,030	5,195	5,127	5,504	5,738
전년 대비 변화율	3.7	1.2	6.1	3.3	-1.3	7.4	4.3
<b>재정수입</b>	4,748	4,806	4,212	4,302	4,253	4,347	4,478
조세수입	3,750	3,882	3,868	3,838	4,006	4,123	4,239
<b>신규 차입</b>	333	438	818	893	875	1,157	1,261
<b>특별기금</b>	-	-	613	834	844	580	594
기후 및 인프라	-	-	372	579	570	580	594
독일연방군	-	-	241	255	275	-	-

주: 기존 및 신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잠정결산 대비 변화율이며, 2026예산안은 신규 2025년 예산안 대비 변화율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regierung stellt finanzielle Weichen für die nächsten Jahre: Bundeshaushalt 2025, Eckwerte bis 2029 und Umsetzung des 500-Milliarden-Euro-Investitionspakets beschlossen," 보도자료, 20 25. 6.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6/2025-06-24-2-entwurf-bhh-2025-eckwerte-bis-2029.html>, 검색일자: 2025. 6.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5년 1월호」, 「2024년 7월호」 내용을 토대로 일부 저자 작성

## 나. 결산

### ■ 독일 연방재무부, FY2024 잠정결산 발표(2025. 1. 20.)<sup>306)</sup>

- (수입) 신규 차입과 예비비를 제외한 연방정부 수입은 목표 대비 138억유로 높은 4,414억유로를 기록

306)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Jahresabschluss des Bundeshaushalts 2024," 2025. 1.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1/2025-01-20-vorlaeufiger-jahresabschluss-bhh-2024.html>, 검색일자: 2025. 1. 21.

- FY2024 조세수입은 목표 대비 26억유로 적은 3,750억유로를 기록하였으나, 세외 수입(행정수입과 화폐주조세입)의 증가로 상쇄
- (지출) FY2024의 총지출은 목표 대비 21억유로 낮은 4,748억유로를 기록
- (신규 차입) FY2024의 신규 차입은 계획보다 57억유로 감소한 333억유로를 기록 하였으며, FY2023년(272억유로) 대비 약 62억유로 증가
- (자본지출) FY2024의 자본지출(투자)은 567억유로로 목표치인 705억유로보다 139억유로 낮은 수준
  - 전년 대비 FY2024 자본지출은 3.1%(17억유로) 증가
- (평가) FY2024 결산은 예상보다 낮은 차입과 예비비 보존으로 안정적 재정관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
  - 2025~2026년 사이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추가 지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전망
  - FY2028부터는 NATO의 GDP 대비 2% 국방예산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재정여력이 필요

**표 3-III-3 독일의 FY2024 잠정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	2024(목표) (A)	2024(잠정결산) (B)	차이 (B)-(A)
총지출	4,577	4,768	4,748	-21
총수입	4,577	4,768	4,748	-21
조세수입	3,561	3,776	3,750	-26
세외수입	369	500	664	164
신규차입	272	390	333	-57
비고: 투자	550	705	567	-139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Jahresabschluss des Bundeshaushalts 2024," 2025. 1. 20.

■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8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2025. 5. 15.)<sup>307)</sup>

\* 독일은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 중앙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세수추계를 담당하며, 연 2회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

○ 제168차 세수추계는 연방 정부의 2025년 봄 전망의 거시경제적 주요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전체 세입은 지난 10월 세수추계의 추정치보다 전반적으로 감소

-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0.0%, 2026년에는 1.0%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존의 경제적·구조적 문제 외에도 국제 무역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2026년부터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고용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

- 최근 시행된 세제감면 조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총세입은 다소 낮아질 전망

• 정부는 최근 기본 공제액 인상, 자녀수당 및 가족 관련 세제 혜택 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감면 조치를 시행

○ 2025년 총세입 규모는 약 9,797억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가을 전망(9,824억유로)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

- 2025~2029년 연평균 세입 규모는 약 160억유로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Die kalte Progression<sup>308)</sup> 영향을 완화하려는 물가연동제 시행에 기인

•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

○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연방 재무부 장관은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307)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8. Steuerschätzung," 보도자료, 2025. 5. 1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5/2025-05-15-ergebnisse-der-168-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5. 5. 16.; 독일 연방 정부, "Höheres Wirtschaftswachstum notwendig," 2025. 5. 1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aktuelle-steuerschaetzung-2347744>, 검색일자: 2025. 5. 16.

308)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명목상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현상

세수 감소는 이미 예상된 수준이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대규모 투자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

표 3-III-4 독일의 제168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연방 정부	금액	374.9	389.0	387.1	403.7	418.6	431.3
	전년 대비 증감률	5.3	3.8	-0.5	4.3	3.7	3.0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6	-10.2	-6.6	-7.3	-8.6
주 정부	금액	394.8	407.3	415.5	430.9	447.1	462.6
	전년 대비 증감률	3.2	3.2	2.0	3.7	3.8	3.5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1.1	-6.9	-7.3	-6.3	-7.0
지방 자치 단체	금액	145.9	148.1	153.9	159.7	165.2	170.5
	전년 대비 증감률	3.0	1.5	3.9	3.7	3.5	3.2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3.5	-5.4	-5.8	-5.9	-6.6
EU	금액	32.0	35.3	49.3	48.6	48.0	48.6
	전년 대비 증감률	-9.7	10.1	39.9	-1.5	-1.2	1.4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3	3.3	-0.6	1.2	1.4
총 세수	금액	947.7	979.7	1,005.8	1,042.9	1,078.8	1,113.0
	전년 대비 증감률	3.5	3.4	2.7	3.7	3.4	3.2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7	-19.1	-20.3	-18.3	-20.8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8.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1, 2025. 5. 1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8-steuerschaezt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8-steuerschaezt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5. 5. 16.; Ergebnis der 168.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2, 2025. 5. 1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8-steuerschaezt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8-steuerschaezt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5. 5. 16.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주요 경제·재정전망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5년 봄 공동 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5) 발표(2025. 4. 10.)<sup>309)</sup>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전망에 지침을 제공

- (경제성장률)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그룹의 2025년 봄 공동 경제전망에서는 독일의 GDP 성장률을 2025년 0.1%, 2026년 1.3%로 전망
  -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가을 전망 대비 0.7%p 하향 조정,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p 하향 조정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부정적 영향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
    - 미국의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는 2025~2026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연간 0.1%p씩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월에 발표한 추가 관세 반영 시 0.2%p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sup>310)</sup>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5년 2.2%에서 2026년 2.1%로 하락할 전망
  - 물가는 완만하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관세 정책과 독일의 재정확대는 중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노동시장)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높은

309) Die Projektgruppe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5," 2025. 4. 10.,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5/04/IfW\\_Kiel\\_GD\\_1\\_2025\\_RZ4\\_korrigiert\\_web.pdf](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5/04/IfW_Kiel_GD_1_2025_RZ4_korrigiert_web.pdf);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5: Geopolitischer Umbruch verschärft Krise – Strukturreformen noch dringlicher," 보도자료, 2025. 4. 10.,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5/04/10/gemeinschaftsdiagnose-fruehjahr-2025-geopolitischer-umbruch-verschaerft-krise-strukturreformen-noch-dringlicher/>, 검색일자: 2025. 4. 16.

310) 4월 5일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를 적용하고, 4월 9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약 60개국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 부과(EU는 20% 관세 부과)를 시행하였으나 90일간의 유예 조치로 현재 10%를 적용

실업률 유지

- 실업률은 2024년 6.0%에서 2025년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경제회복 시까지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5년 2.6%, 2026년 3.2%로 확대될 전망
  - 2025년부터 국방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적 재정적자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독일의 경상수지는 2025년 3.6%, 2026년 3.0%로 다소 낮은 수준에서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및 기계류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가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위험요인)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독일의 정권 교체와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장기적인 물가 상승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
  - 에너지 위기 이후 에너지집약 산업의 구조적 쇠퇴, 노동력의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을 구조적 문제로 언급
- (정책 제언) 구조개혁, 노동력 공급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혁,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화, 유럽 차원의 국방 및 투자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표 3-III-5 2025년 봄 공동 경제전망(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sup>1)</sup>	2026 <sup>1)</sup>
실질 GDP 성장률	1.4	-0.3	-0.2	0.1	1.3
취업자수(천명)	45,675	46,011	46,082	46,019	46,046
실업률	5.3	5.7	6.0	6.3	6.2
소비자물가상승률	6.9	5.9	2.2	2.2	2.1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84.9	-103.8	-118.8	-113.5	-144.2
(GDP 대비 %)	-2.12	-2.5	-2.8	-2.6	-3.2
경상수지(십억유로)	152.0	232.8	246.7	157.8	133.7
(GDP 대비 %)	3.8	5.6	5.8	3.6	3.0

주: 1) 2025년, 2026년 전망치

자료: Gemeinschaftsdiagnose, "PRESSEMITTEILUNG DER GEMEINSCHAFTSDIAGNOSE 1/2025," 보도자료, 2025. 4. 10.,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5/04/iwh-press-release\\_2025-13\\_Gemeinschaftsdiagnose\\_1-25\\_de.pdf](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5/04/iwh-press-release_2025-13_Gemeinschaftsdiagnose_1-25_de.pdf)

■ 독일 연방은행, 제5차 가계재정패널조사(The German Panel on Household Finances, PHF)<sup>311)</sup> 결과 발표(2025. 4. 10.)<sup>312)</sup>

- 2023년 실시된 제5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증가하였으나 실질 기준으로는 감소하였고, 부의 불평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독일 가계 평균 순자산은 2021년보다 약 3%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자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자산 분포의 중앙값인 중위 순자산 역시 실질 기준으로 감소
    - 명목 평균 순자산은 2021년 316,500유로 → 2023년 324,800유로
    - 실질 평균 순자산은 2021년 268,700유로 → 239,200유로
    - 순자산 중위값 2021년 90,500유로 → 2023년 76,000유로
  - 단기적으로는 실질 순자산이 줄어들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7년(3차) 조사와 비교하면 평균 순자산이 명목 기준 40%, 실질 기준 13% 증가
  - 2023년 지니계수<sup>313)</sup>는 0.724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에서의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
    -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각각 0.69, 0.66으로 독일보다 낮은 수준
  - 자본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은 2021년 29%에서 2023년 26%로 다소 감소
    -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율의 변화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 가구들의 저축이 증가하고,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
- 최근 고금리 환경이 자산 분포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은 다음 조사 이후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6차 가계재정패널조사는 2026년에 실시될 예정

311) 독일 연방은행 연구센터에서 2010/2011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독일 가계 금융 및 자산에 대한 패널조사로 독일에 거주하는 가구의 연금, 소득, 직장 생활, 기타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

312) 독일 연방은행, "Bundesbank study: Wealth in Germany grows in nominal terms but declines in real terms, with no change in inequality," 2025. 4. 10., <https://www.bundesbank.de/en/tasks/topics/bundesbank-study-wealth-in-germany-grows-in-nominal-terms-but-declines-in-real-terms-with-no-change-in-inequality-955716>, 검색일자: 2025. 4. 23.

313) 소득 또는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평등,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불평등으로 해석

■ 독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U 중기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APR) 2025<sup>314)</sup> 발표(2025. 4. 24.)<sup>315)</sup>

- \* 유럽연합(EU)은 유럽재정프레임워크를 준수하기 위해 수립하는 3~5년 기간의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에 따라 회원국에 재정계획(Fiscal Structural Plan, FSP)과 FSP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연례추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매년 4~5월에 제출
- \* 독일은 2025년 2월 조기 총선 실시로 2024년 FSP 제출이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례추진 보고서에서 순지출 경로가 미설정

○ (경제전망) 독일 경제는 고령화와 노동력 및 생산성 감소, 지나친 규제 및 행정절차 등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2025년에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GDP 성장률) 독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4년 -0.2%에서 2025년 0.3%로 전망

- 경제성장의 정체는 단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 과도한 규제 및 행정절차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노동시장) 독일의 실업률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고용시장의 강세는 대부분 이민정책의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기인

- 특히 2023년 이후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전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의해 뒷받침됨

- (소비 및 투자) 물가상승률 완화에도 소비회복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투자 역시 약화

○ (재정전망) 독일은 공공투자 및 국방비 확대를 통해 경제를 지원하면서 EU의 규정을 준수하고 재정적자 및 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

- (재정적자) 2024년 GDP 대비 -2.8%에서 2025년 -2.5% 소폭 개선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4년 -1.9%에서 2025년 -1.5%로 개선될 전망

314) 2024년 7월 발표한 「2025년 연방예산안」과 2025년 1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3월 새로운 「헌법」개정에 따른 재정의 영향은 미반영

315) 독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Deutscher Fortschrittsbericht 2025," 2025. 4.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r-fortschrittsbericht-2025.pdf?\\_\\_blob=publicationFile&v=9](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r-fortschrittsbericht-2025.pdf?__blob=publicationFile&v=9)

- (채무) 2024년 62.5%에서 62.75%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연방예산)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4년 4,742억유로에서 2025년 4,886억유로로 예상되며, 공공투자 및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
  - (투자) 연방정부 지출 대비 투자 비율은 2024년 12%에서 2025년 16.6%까지 증가할 전망
  - (순차입금) 2024년 333억유로에서 2025년 535억유로로 증가할 전망
  - (특별회계 및 기금) 국방 및 인프라 추가 투자를 위해 12년간 집행하는 약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
  - (순지출 증가율<sup>316)</sup>) 2024년 3.8%에서 2025년 2.5%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EU 재정규율에서 독일에 요구하는 순지출 증가율 2~3% 기준에 부합
- (권고사항) 유럽연합 이사회는 독일에 2024~2025년 동안 재정 건전성 강화, 투자 촉진, 연금 개혁, 조세체계 개선,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권고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순지출 증가율 제한, 공공·민간투자 확대, 연금 재정구조 개편, 노동 인센티브 강화, 행정의 디지털화 및 인프라 현대화 등을 추진할 계획

표 3-III-6 독일 주요 경제 및 재정지표

(단위: %, GDP 대비 %, 십억유로)

구분	2023	2024	2025
실질 경제성장률	-0.3	-0.2	0.3
물가상승률(HVPI)	6.0	2.5	-
실업률	2.8	3.2	3.3
연방지출	457.1	474.2	488.6
순차입금	27.2	33.3	51.3
투자	56.5	58.0	81.1
재정수지	-2.5	-2.8	-2.5
구조적 재정수지	-2.0	-1.9	-1.5
국가 채무	62.9	62.5	62.75

주: 1. 국가채무는 마스트리히트 기준

2. HVPI(Harmonisierter Verbraucherpreisindex)는 유럽연합기준의 통일된 소비자 물가지수

3. ILO 기준 실업률(적극적 구직자 기준)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및 연방경제기후보호부, "Deutscher Fortschrittsbericht 2025," 2025. 4., Tabelle1, Tabelle3, Tabelle5, p. 12, p. 14, pp. 32~33.

316) 순지출은 일회성 수입,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정부지출로 채무의 지속가능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을 통해 각 회원국에 요구되는 최대 허용 순지출 증가율을 설정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5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5. 4. 24.)<sup>317)</sup>

- (개요) 독일의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4월 24일, ‘2025년 봄 경제전망’을 발표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세수 추계, 예산 편성 관련 거시경제 지표 기준, EU 제출 보고서 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전망을 발표
- (경제전망) 2025년 독일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적 제약 요인과 에너지 가격 상승, 투자 부진, 노동력 공급 제약 등 대내적 구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
  - (GDP)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0.0%로 1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 1.0%로 점차 개선될 전망
  - 2025년 1분기에 GDP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수출 부진 및 글로벌 교역 둔화로 연간 성장세는 악화될 전망
  - 2026년부터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EU 중심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실질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용 및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소비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공공 인프라와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2.0%에서 2026년에 1.9%까지 소폭 하락할 전망
  - 물가안정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소비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5년 말 정점을 찍은 후 2026년 경제회복 및 공공투자의 효과와 함께 서서히 개선될 전망

317)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Binnenwirtschaftliche Stabilisierung, außen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 Frühjahrsprojektion der Bundesregierung,” 2025. 4. 24.,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20250424-fruehjahrsprojektion.html>, 검색일자: 2025. 5. 2.

표 3-III-7 독일의 2025년 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4	2025	2026
실질 GDP 성장률	-0.2	0.0	1.0
가계최종소비	0.3	0.2	0.8
정부최종소비	3.5	2.1	1.4
총고정자본형성	-2.7	0.4	3.2
설비	-5.5	0.7	3.8
건설	-3.3	-0.4	2.4
기타	3.9	2.4	4.3
내수	0.3	1.6	1.4
수출 증가율	-1.1	-2.2	1.3
수입 증가율	0.2	1.8	2.1
실업률(연방 고용청 기준)	6.0	6.3	6.2
고용	0.2	-0.2	0.1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0	1.9

주: 모든 수치는 실질 기준이며, 2025~2026년은 전망치

자료: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Frühjahrsprojektion 2025," 2025. 4. 24.,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E/eckwerte-fruejahrsprojektion-2025.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E/eckwerte-fruejahrsprojektion-2025.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5. 5. 2.

## 나. 경제 및 재정정책

### ■ 독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정부, 2025년 변경되는 경제·조세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2024. 12. 27., 2025. 1. 6.)<sup>318)319)</sup>

- 연방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변경되는 주요 경제 및 조세정책의 내용을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법정 최저임금은 2024년 12.41유로에서 2025년 12.82유로로 41센트 인상
  - (기본공제 인상) 개인소득 기본공제를 2024년 1만 1,784유로에서 2025년에는 1만 2,096유로로 인상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보장

318) 독일 연방 재무부, "Die wichtigsten steuerlichen Änderungen 2025," 2024. 12.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das-aendert-sich-2025.html>, 검색일자: 2025. 1. 6.

319) 독일 연방 정부, "Was ändert sich im Januar 2025?," 2025. 1. 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gesetzliche-neuregleungen-januar-2025-2324594>, 검색일자: 2025. 1. 9.

- (연대세<sup>320</sup>) 부과기준 금액 인상) 2025년 연대세 부과 기준 금액은 기존 3만 6,260유로에서 3만 9,900유로로 상향 조정되며, 2026년에는 4만 700유로로 추가 조정
- (아동보육비 소득공제 및 아동수당 확대) 2025년부터 아동 보육비 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4,000유로에서 4,800유로로 확대되며, 아동수당은 월 250유로에서 255유로로 인상
-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조정) 상속 시 공제금액 기준을 1만 300유로에서 1만 5,000유로로 상향 조정
- (개정된 재산세 적용) 2025년부터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을 따르게 되며, 연방정부 모델 또는 독자적 모델에 따라 산정
  - 새로운 재산세는 2022년 1월 1일자로 평가된 재산가치와 토지 면적,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미개발 부지에 대한 추가 세율(Grundsteuer C)이 도입
  - 기존 재산세 산정 방식은 1935년(구동독 지역)과 1964년(서독 지역)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점의 부동산 시장가치와 심각한 괴리가 있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기존 재산세 산정방식이 위헌으로 결정
- (농업·임업 소득세 경감조치 연장)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의 소득세 경감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
  - 독일 정부는 농업 및 임업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EStG)」 제32c조에 따라 농업 및 임업 소득을 3년간의 평균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소득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 (담배세 인상) 2025년 기준 담배 1개비당 11.15센트에서 11.71센트, 물담배 1kg당 19유로에서 21유로, 전자담배 1ml당 0.20유로에서 0.26유로로 인상
- (천연가스 에너지세 인상) 기존에 18.38유로/MWh였던 천연가스 에너지세를 22.85유로/MWh로 인상하나, 대중교통용 천연가스는 세금감면 확대
- (미술품 거래세율 인하) 독일의 미술시장 강화를 위해 예술 작품의 전달 및 공동체 내 취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19%에서 7%로 인하

320)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는 독일의 동서독 통일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2021년부터 일부 계층에 대해서 조세부담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고소득자에게는 부과되고 있음.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025년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5)’<sup>321)</sup> 발표(2025. 1. 29.)<sup>322)</sup>

- (경제전망) 2025년 독일의 가격조정 GDP는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실질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물가)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 2026년에는 1.9%로 감소할 전망
  - (고용) 취업자수는 2024년 4,610만명을 기록한 후,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6.3%로 전망
  - (투자) 독일 연방군의 특수자금 투자의 영향으로 2025년 설비투자는 1.1%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0.6% 감소할 전망

표 3-III-8 2023~2025년 독일 주요 경제수치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3	2024	2025
GDP(가격조정)	-0.3	-0.2	0.3
취업자수(Erwerbstätige)	0.7	0.2	0.0
실업률(Arbeitslosenquote)	5.7	6.0	6.3
소비자물가지수(Inflationsrate)	5.9	2.2	2.2

자료: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5 der Bundesregierung,” 2025. 1. 30., p. 21, Übersicht 1

- (재정전망) 2024년 연방예산은 부채규정 기준 한도<sup>323)</sup> 내에서 운영되었으며 새로운 2025년 예산안은 현재 임시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연방총선<sup>324)</sup> 이후 재무부에서 최종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할 예정
  -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 만료로 2024년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5%까지

321) 연간경제보고서는 매년 1월에 발표되며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 우선순위와 경제전망을 제시함.  
 322)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5:Für eine neue wirtschaftliche Dynamik,” 2025. 1. 2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20250129-jahreswirtschaftsbericht-2025.html>, 검색일자: 2025. 2. 10.; 독일 연방정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5:Leichter Zuwachs der Wirtschaftsleistung,” 2025. 1. 2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jahreswirtschaftsbericht-2025-2332708>, 검색일자: 2025. 2. 10.  
 323)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  
 324) 관련 내용은 본문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연방총선 결과 발표」(2025. 2. 24.)를 참고

감소하였으나, 2024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63.25%로 전년(2023년 62.9%) 대비 소폭 상승

- 투자지출은 2023년 총지출의 12%에서 2025년 16.6%까지 증가할 전망
- 순차입은 2024년 390억유로에서 2025년 513억유로로 증가
- (주요 정책) 2024년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sup>325)</sup>에서 2025년 새로운 경제적 역동성을 목표로 전환하고 다음 열 가지 주요 정책을 언급
  - (더 나은 여건 조성 및 공공투자 강화) 독일의 경제 및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는 인프라(철도 노선 개보수)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 (규제 완화 및 경쟁 완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줄이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과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
  - (노동인센티브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 인구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는 미래 노동시장에 큰 도전 과제이므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시간제 근무의 개선을 위해 부모의 취업 기회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조치 시행
  - (디지털화 기회의 효과적 활용) 정부는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과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규제를 개선해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지원 확대) 독일은 WIN-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시장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EU 자본시장 통합을 추진
  -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비용 절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탈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중립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디지털화 법률을 통한 전력 생산과 소비 효율화를 추진
  - (산업 경쟁력 및 현대화 추진) 수소, 배터리 셀 생산, 마이크로전자 및 통신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태계, 클라우드 기술, 양자 기술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에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투자

325)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2월 재정동향」, 2024.를 참고

- (무역 다변화 및 회복력 강화) EU 단일 시장의 심화와 국경 간 투자 및 혁신 촉진을 위해 법적 집행력 강화 및 규제 간소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sup>326)</sup>을 통해 탄소 배출의 해외 이전 방지 등 글로벌 기후 보호 추진
- (주택공급 및 저소득 가구 지원) 대도시에서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주택 및 사회 주택 건설 지원,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건물 건설 지원금 제공, 주거수당 인상 등을 시행
-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이동성 강화) 철도, 도로, 수로 등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대중교통의 법적지원 강화, 전기차 및 충전소, 재생 가능한 연료 개발 및 혁신 등을 지원

■ 독일 노동사회부, 2025년 연금<sup>327)</sup> 가치 조정안 발표(2025. 3. 6.)<sup>328)</sup>

- 독일 노동사회부는 2025년 7월 1일자로 독일의 연금을 3.74% 인상하기로 발표
  - 독일 사회법전 제6권(SGB VI) 제255조e(연금수준 보호조항)에 따라 최소 보장 수준(평균 소득의 48%)을 유지하기 위해 상향 조정
  - 2025년 연금 가치(Aktueller Rentenwert)는 기존 39.32유로에서 40.72유로로 인상\*
    - \* 연금 가치는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1포인트의 가치를 유로화로 표시한 금액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 수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1포인트 획득
  - 45년간 평균 소득으로 근로한 연금 수급자 기준 연금액은 45포인트×40.72유로= 약 1,832유로/월

326)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과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관세의 일종

327) 기본법상 헌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정치적·법적 관행상 배정되는 구조로 독일의 사회법전 제6권 제213조에서 연방정부의 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의 의무적 지출. 일반회계에서 연금보험기금으로의 지출은 일반회계이며, 실제 수급자에게 연금지급은 기금에서 이루어짐.

328) 독일 노동사회부, "Renten steigen zum 1. Juli um 3,74 Prozent," 2025. 3. 6.,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5/renten-steigen-zum-ersten-juli.html?cms\\_showNoGesetzessatus=true&cms\\_showNoStatus=true](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5/renten-steigen-zum-ersten-juli.html?cms_showNoGesetzessatus=true&cms_showNoStatus=true), 검색일자: 2025. 3. 25.; 독일 연방내각, "Die Renten steigen," 2023. 3. 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ntenerhoehung-ost-west-angleichung-2172482>, 검색일자: 2023. 3. 27.

- 독일 연방의회, 부채제동장치(Debt Brake) 관련 기본법 개정안 채택(2025. 3. 18.)<sup>329)</sup> 및 연방참의원, 기본법 개정안 승인(2025. 3. 21.)<sup>330)</sup>
  - SPD 및 CDU/CSU 연합에서 발의한 기본법(제109조, 제115조 및 제143조h) 개정안 초안이 의회 투표 결과 733표 중 512표 찬성으로 채택
  - 기본법 개정안 내용은 구조적 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부채제동장치에서 국방비 지출을 면제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설립
    -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법 제109조와 제115조에 명목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방위비 지출과 특정 안보정책 지출은 부채제동장치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할 예정
    - 제143조h<sup>331)</sup>에 2045년까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등 특별자금을 규정
      - \*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부채제동장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가적 비상사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확한 목적 규정, 일정 기간 내 상환계획 수립 등과 같은 경우에서 구조적 적자 한도 예외 허용
  - 기후변화기금(KTF)에 1,000억유로가 투입될 예정
  - 또한 연방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신규 차입이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용되면서 명목 GDP의 최대 0.35%까지 차입 가능(기존에는 신규 채무 금지)
  - 기본법 개정안은 3월 21일 연방참의원(상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며 승인되었으며, 법률 공포 즉시 발효 예정

329) 독일 연방의회, "Haushaltsausschuss beschließt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2025. 3. 16.,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5/kw11-pa-haushalt-sonntag-1056790>, 검색일자: 2025. 3. 19.; 독일 연방의회, "Mehrheit für Reform der Schuldenbremse: 512 Abgeordnete stimmen mit Ja," 2025. 3. 18.,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5/kw12-de-sondersitzung-1056916>, 검색일자: 2025. 3. 19.

330) 독일 연방참의원, "BundesratKOMPAKT: Schuldenbremse und Sondervermögen - Bundesrat stimmt Grundgesetzänderungen zu," 2025. 3. 21., <https://www.bundesrat.de/DE/plenum/bundesrat-kompakt/25/1052/1052-pk.html?nn=4732016#top-34>, 검색일자: 2025. 3. 26.

331) 2020년 9월 발효된 제143조h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역 세수입에 대해 지급한 일회성 보상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021년 1월부터 폐지

■ 독일 연방정부, 새 연립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주요 정책 방향 발표(2025. 5. 14.)<sup>332)</sup>

- 새롭게 출범한 연방정부는 현재 위기 극복과 국가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포괄적인 정책 어젠다를 발표
  - (세제 개편 및 재정건전화) 기후전환 및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투자 유인 확대, 행정 지출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
    -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신설, 중저소득층 세금인하, 초과근무·정년 이후 근로 소득 비과세 적용 등을 포함
  -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안정) 독일을 AI·스타트업 강국으로 육성하고,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디지털·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노후보장, 인재 확보도 추진
    - 시민수당<sup>333)</sup>을 기본 보장제도로 전환, 연금 48% 수준을 2031년 까지 보장, 2026년 법정 최저임금 15유로로 인상, 에너지비용 절감 등을 포함
  - (안전한 사회 및 이민정책 개편) 보안역량 강화, 망명 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송환 강화, 통합교육 언어교육 확대를 통해 질서 있는 이민과 사회 통합을 실현
    - 극단주의 대응 및 유대인 보호 조치 확대,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한 유아언어교육기관(Sprach-Kitas)의 재도입, Startchancen 프로그램<sup>334)</sup> 확대 등을 포함
  - (사회적 결속 및 주거안정) 가족·청소년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교육·의료 서비스 개선, 등 모두가 안정적인 포용 사회 구축
    - 부모수당 인상, 사회주택 건설 및 임대료 규제 등 주거정책 개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미래협약을 추진, 10억유로 이상을 투입해 스포츠 시설의 현대화와 보수 지원 등을 포함
  - (책임 있는 외교 및 유럽통합) 국방예산 확대, 안보체계 개혁, 유럽 및 NATO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

332) 독일 연방정부, “Koalitionsvertrag setzt Kurs für einen Politikwechsel,” 2025. 5. 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wirksam-regieren/schwerpunkt-des-koalitionsvertrags-2344224>, 검색일자: 2025. 5. 20.

333) 주거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334) 학생들의 기본 학습 능력 향상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동추진 대규모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4년부터 10년간 총 200억유로를 투자하여 학교 인프라 개선, 교육과정 개발 등

-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군사, 민간, 인도적, 정치적), 국가 안보 전략 수립 및 분석을 위한 국가안보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

표 3-III-9 독일 연방정부 정책 우선순위 및 세부 과제

연방정부 우선순위	정책과제	주요 내용
세제 개편 및 재정건전화	1. 감세 및 투자	장비 투자에 대해 첫 해 30% 감가상각 비용처리 도입, 2028년부터 법인세 5단계 인하(총 5%)
	2. 시민을 위한 감세	중저소득층 소득세 인하, 출퇴근 거리 보조금 2026년 1월부터 1km당 38센트, 외식 부가세 7%로 인하
	3. 에너지 비용 절감	전기요금 1kWh당 최소 5센트 인하, 전기세 EU 평균 수준으로 인하, 가스저장세 폐지 등
	4. 은퇴 후 근로	월 최대 2,000유로까지 비과세 수입 허용
	5. 재정건전성	2025년부터 정부지출 점검, 행정비용 9% 절감, 연방 공무원 수 2029년까지 8% 감축
	6. 기후 및 인프라 특별기금	철도·도로·디지털 인프라 등 12년 계획에 5,000억유로 규모 특별기금 조성(1차로 임기 내 1,500억유로 투자)
	7. 지방 및 지자체 투자	지방 및 지자체 투자에 1,000억유로 배정, 기후전환기금에 1,000억유로 단계적 투입
	8. 행정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 행정 간소화 프로그램 시행, 경제 전반의 행정 비용 약 160억유로 감축 목표
	9. 디지털화	모든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시민 계정 및 디지털 ID 의무화, 창업 24시간 내 완료, 독일 티켓 유지
	10. 혁신 및 연구	2030년까지 GDP의 최소 3.5% R&D 투자, AI 집중 육성, 우주산업 지원 국가 우주프로그램 확대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 감세 및 투자	중복
	2. 에너지 비용 절감	중복
	3. 자동차 산업 강화	전기차 인센티브, 업무용 차량 세제 혜택, 저소득층 E-모빌리티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 Kfz세 2035년까지 면제
	4. 무역확대	EU 내부시장 강화, 미국과 FTA 추진, 'EU 전용(EU-only)' 계약 지지, 글로벌 공급망 확보
	5. 기후중립	수소경제 확대, CCS/CCU 기술 도입, 새로운 가스발전소 유도, 송전망 신재생 확대 및 조율
	6. 기후변화 적응·환경보호	기후변화 적응 전략 실행, 수자원 및 해양 보호, 기후 회복력 있는 숲 지원
	7. 전문인력 확보	디지털 재교육,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 촉진, 최저임금 2026년 15유로 목표, 주당 최대 근로시간제 도입
	8. 사회보장 개혁	연금 수준 48% 유지, 활동연금 도입, 기본소득제 개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표 3-III-9 의 계속

연방정부 우선순위	정책과제	주요 내용
안전한 사회 및 이민정책 개편	1. 안전 강화	재난 및 사이버 대응 강화, IP주소 저장 허용, 여성 폭력 가해자 전자 발찌, 조직범죄 자산 몰수 강화
	2. 민주주의 수호	극단주의 대응 전략 강화, 혐오표현 범죄 처벌 강화, 공직자 및 구조대 보호 강화, 급진화 알고리즘 규제
	3. 이민질서 확립	불법이민 감소 및 불법체류자 송환 강화, 가족초청 제한, 발칸 이민 연 2만 5,000명 제한
	4. 사회통합 촉진	언어 및 직업교육 연계, 외국 학위 인정 가속화, 유아기 언어교육 확대, 사회통합을 위한 조기 교육 강화
	5. 유럽연대 및 국경관리	유럽 공통 망명 시스템 국내법화, EU 국경통제 강화, 국경 보호 및 귀환을 위한 유럽 국경 보호 기관 Frontex 강화 등
사회적 결속 및 주거안정	1. 가족지원	부모수당 인상, 아동수당 자동 지급, 가족 포털 구축, 보육·방과 후 돌봄 투자 지속
	2. 청소년 및 정신건강	디지털 환경 아동 보호, 정신건강 조기진단 및 예방 전략 수립
	3. 교육기회 확대	이동 언어진단 의무화, 무상급식 확대, 디지털 인프라 및 보조금 확대 등
	4. 고등교육 지원	「연방교육지원법」 개편: 주거보조비 인상, 기본수당 상향 도입 등
	5. 의료 및 돌봄	간호개혁 추진, 지역 병원 협력 강화, 전문의 예약 시스템 개편
	6. 스포츠 및 봉사활동	스포츠시설 현대화에 10억유로 지원, 여성·장애인 참여 확대, 자원 봉사자 세제 혜택 강화 등
	7. 주거안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료 규제 연장, 사회주택 투자 확대, 지방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 활용
	8. 허위정보 및 혐오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 가짜 계정·봇 금지, 디지털 서비스법 강화, 허위정보 연구 확대 등
책임있는 외교 및 유럽통합	1. 안보 강화	국가안보위원회 및 국가위기대응팀 설치,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안보 전략 수립 등
	2. 다자간 협력	이스라엘 지지, 중국과 디리스킹,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EU·G7·NATO·OSCE 등 파트너십 강화
	3. 국방력 확대	NATO 내 핵공유 유지, 국방비 증액,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 개발, 자발적 참여 군복무 모델 도입 등
	4. EU통합	국방 연합 추진, EU 산업정책 및 규제 간소화 추진 등
	5. 경쟁력 강화	에너지·디지털·운송 중심 단일시장 강화, EU 확장과 내부 개혁 병행, 다중속도유럽(Europa der verschiedenen Geschwindigkeiten) <sup>1)</sup> 지지

주: 각 개별 국가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맞게 다른 수준과 속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브렉시트 이후 등장하였으며, 협력과 범위의 강도를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  
 자료: 독일 연방정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 독일 연방 내각,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법 초안을 승인(2025. 6. 4.)<sup>335)</sup>

- 독일 연방 내각은 경기 회복과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즉각적인 세제개편 중심의 「투자 프로그램법」 초안을 승인
  - 「투자 프로그램법」은 세금 감면, 투자 인센티브 제공,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법안
  - 재정 규모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sup>336)</sup> 보다 감세와 투자 혜택의 폭을 확대
-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 프로그램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가상각 정률법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도입되는 자산(설비투자)에 대해 연간 30%의 정률 감가상각<sup>337)</sup>을 적용
    -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를 유도
  - (법인세율 인하)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법인세율을 1%p씩 낮춰 기존 15 → 10%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
    - 현재 약 30% 수준의 기업 실효세율(법인세 15%, 지방 영업세 14%, 연대부담세 0.825%)이 향후 25% 수준까지 감소하고, 기업 유치 및 국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E-모빌리티 장려) 기업의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구입하는 전기차에 대해 첫 해 75%의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대상 전기차 가격 기준을 7만유로에서 10만유로로 상향
  - (R&D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sup>338)</sup> 비용의 상한을 상향 조정, 회계 간소화 등

335) 독일 연방 재무부, “Wachstumsbooster vom Kabinett beschlossen: Planungssicherheit und Anreize für private Investitionen,” 보도자료, 2025. 6. 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teilungen/Finanzpolitik/2025/06/2025-06-04-kabinett-beschliesst-wachstumsbooster.html>, 검색일자: 2025. 6. 18.; 독일 연방 정부, “Wachstumsbooster zur Stärkung des Standorts Deutschland,” 2025. 6. 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kanzleramt/kabinett-beschliesst-wachstumsbooster-2351752>, 검색일자: 2025. 6. 18.

336) 2023년 독일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연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되어 2024년 2월 최종적으로 약 32억유로로 통과된 경제 활성화 법률(당초 63억유로)

337) 기존에는 연도별 감가상각 정액법을 적용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새로운 감가상각률은 정액법 감가율의 최대 3배,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338) R&D 세제혜택의 대상자는 법인,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독일 내에서 과세의무가 있는 기업 또는 자영업자로 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확대

- 연구비용의 세액공제 상한 한도를 기존 1,000만유로에서 1,200만유로로 상향 조정하고, 회계상 간접비(운영비 등)를 총 연구비의 20%로 자동 적용하여 별도의 계산이나 증명 없이도 세금 공제 가능

■ 독일 연방정부,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 인상 확정 발표(2025. 6. 6.)<sup>339)</sup>

-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연방 노동사회부에서 발표한 2025년 연금 가치 조정안<sup>340)</sup>에 따라 7월 1일부터 독일 전역의 연금 지급액을 3.74% 인상한다고 발표
  - 연방 내각은 소득대체율 48%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가치결정조례(Rentenwert bestimmungsverordnung)에 따라 연금수준을 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조정하였으며, 연방상원이 최종 승인
  - 2025년 연금가치는 1포인트당 39.32유로에서 40.79유로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연금 수급자들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5년간 평균소득으로 근무한 경우 월 연금 수급액은 약 1,835.55유로 (45포인트× 40.79유로)로 전년 대비 66.15유로 증가

다. 기타

■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연방총선 결과 발표(2025. 2. 24.)<sup>341)</sup>

-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결과를 발표
  - 연방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82.5%였으며, 득표율은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 28.6%, 독일대안당(AfD) 20.8%, 사회민주당(SPD) 16.8% 순으로 높음

부인력 또는 외부위탁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이며, 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 감면의 대상이 아니거나 기업의 외부 위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기업의 세액공제 비용에 포함

339) 독일 연방정부, "Renten steigen zum 1. Juli," 2025. 6.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kanzleramt/rentenanpassung-2025-2337000>, 검색일자: 2025. 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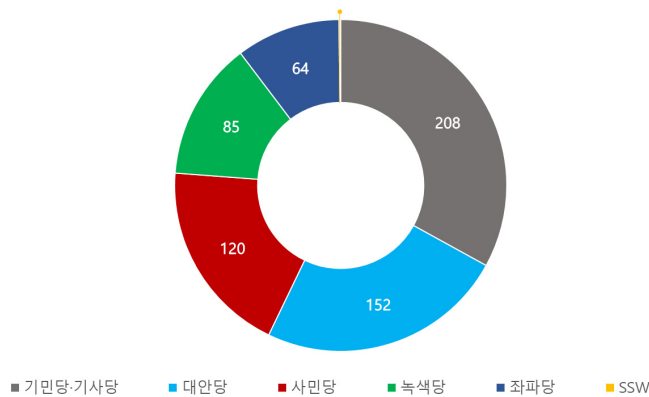
340) 연금 가치 조정안 발표에 관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5년 3월호」 참조

341)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Vorläufiges Ergebnis der Bundestagswahl 2025 steht fest," 2025. 2. 24., [https://www.bundeswahlleiterin.de/info/presse/mitteilungen/bundestagswahl-2025/27\\_25\\_vorlaeufiges-ergebnis.html](https://www.bundeswahlleiterin.de/info/presse/mitteilungen/bundestagswahl-2025/27_25_vorlaeufiges-ergebnis.html), 검색일자: 2025. 2. 24.

- 이에 따라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사민당과의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기민당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
- 연방선거위원회는 2025년 3월 14일 베를린의 독일 연방의회에서 공개 회의를 열어 2025년 연방선거의 최종 공식 결과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

그림 3-III-1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

(단위: 개)



자료: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Ergebnisse," <https://www.bundeswahlleiterin.de/bundestagswahlen/2025/ergebnisse/bund-99.html>, 검색일자: 2025. 2. 25.

■ 독일 연방은행, 부채제동장치(Debt brake) 개혁 제안(2025. 3. 4.)<sup>342)</sup>

- 독일 연방은행은 인프라 및 국방 등 정부투자를 지원하면서도 EU 규정에 부합하는 안정적 재정확대를 위한 부채제동장치 개혁을 제안
  - 개혁의 핵심 제안은 EU 규정에 명시된 부채비율 60%를 핵심지표로 하여, 연방정부의 차입한도를 GDP의 0.35%<sup>343)</sup>에서 최대 1.4%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부채비율이 60% 미만일 때, 저부채기반(low-debt-base)으로 분류되는 GDP의 0.5%까지는 특정 용도 없이 차입할 수 있고 GDP의 0.9%는 추가 투자 목적으로만

342) 독일 연방은행, "Bundesbank proposes debt brake reform for sound public finances and increased investment," 2025. 3. 4., <https://www.bundesbank.de/en/tasks/topics/bundesbank-proposes-debt-brake-reform-for-sound-public-finances-and-increased-investment-952716>, 검색일자: 2025. 3. 12.

343) 독일 기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연방과 주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구조적 적자의 상한선은 명목 GDP의 0.35%로 규정되어 있음. 명목 GDP의 0.35%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영비, 복지비 등 일반 지출에 사용될 수 있으나, 자연재해, 비상적 긴급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명목 GDP의 0.35% 이상 차입을 허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도록 차입한도를 설정

- 부채비율이 60%를 초과하면 투자 목적의 차입은 유지되지만, 특정 용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부채 기반 차입(GDP의 0.5%)은 미적용
- 이번 제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60% 미만일 경우 2026~2030년 추가적으로 총 2,200억유로를 투자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차입은 1,000억유로로 제한
-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제동 장치의 개혁이 바람직하나, 규모와 운용 방식이 유사한 특별기금도 대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언급

표 3-III-11 부채제동장치 개혁 시 차입 금액

구분	(단위: 십억유로)					누적
	2026	2027	2028	2029	2030	
부채비율 < 60 %	24	25	47	61	62	219
부채비율 > 60 %	1	2	23	36	37	99

자료: 독일 연방은행, "Monthly Report - March 2025," TabI.2.1, 2025. 3. 4., <https://publikationen.bundesbank.de/publikationen-en/reports-studies/monthly-reports/monthly-report-march-2025-952320?article=sound-public-finances-stronger-investment-a-proposal-to-reform-the-debt-brake-952322#par-u7397o>, 검색일자: 2025. 3. 4.

■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추가자금(Weitere Mittel)<sup>344)</sup> 승인(2025. 3. 21.)<sup>345)</sup>

- \* 3월 15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한 2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에 대한 휴전압박과 유럽 및 국제 동맹국들과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약속
-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지원을 위한 추가자금 약 25억 유로와 2029년까지 83억유로 규모의 지출부담승인(Verpflichtungsermächtigung)<sup>346)</sup> 예산을 편성

344) 추가예산(Nachtragshaushalt)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추가예산은 공식적인 예산의 수정 절차를 의미하나 추가자금은 특정 부문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로 할당되는 제한적 범위의 자금으로 공식적인 수정 절차 또는 기존 예산 내에서의 조정이나 예비비로 충당될 수 있음.

345)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Haushaltsausschuss stimmt weiteren Ukraine-Hilfen zu," 2025. 3. 21.,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1058066>, 검색일자: 2025. 3. 24.

346) 독일 예산법 제38조에 따른 단일 회계연도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년간에 걸친 미래 회계연도에 필요한 지출을 해당 회계연도 전에 승인하여 향후 지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기능을 하며, 국회의 사전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

- 국방부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 제공,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독일군의 장비 보충을 위한 재조달, 몰도바의 시민 및 군사보안 역량 강화 지원에 쓰일 예정
- 연방정부는 휴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하며,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

■ 독일 연방의회, 제21대 의회 구성 및 의장 선출(2025. 3. 25.)<sup>347)</sup>

- 독일 연방의회는 기본법 규정에 따라 3월 25일 제21대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연방의회 의장으로 CDU/CSU 연합의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가 선출
- 연립정부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며 연립정부 협정에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총리 및 장관직 등 세부 사항들이 규정
  - 기본법에서 연립정부 구성 기간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부재
-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전 정부 구성원들이 임시정부를 운영하게 되며,<sup>348)</sup> 임시정부에는 일반정부와 동등한 권한이 부여
  -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정이나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새 정부에 지나치게 구속력 있거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은 자제하는 것이 관행

347) 독일 연방의회, "Bundestag wählt Julia Klöckner zur neuen Parlamentspräsidentin," 2025. 3. 25.,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5/kw13-de-konstituierung-bericht-1058004>, 검색일자: 2025. 3. 26.; "Nach der Wahl: Deutscher Bundestag sortiert sich neu," 2025. 3. 25.,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5/kw09-bundestagswahl-etappen-1053438>, 검색일자: 2025. 3. 26.; 독일 연방정부, "Was bedeutet „geschäftsführend im Amt?," 2025. 3. 2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q-geschaeftsfuehrende-bundesregierung-2339020>, 검색일자: 2025. 3. 26.

348) 기본법 제69조 제3항: 연방총리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연방장관은 연방총리 또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sup>349)</sup> 제31차 회의 개최(2025. 6. 12.)<sup>350)</sup>

- (주요 논의)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중기재정계획과 EU 재정규범의 이행, 국가 재정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
  - 독일은 조기 총선으로 인해 개정된 안정성장협약 따른 중기재정구조계획(FSP)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안정화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할 예정
  - 2025년 EU 중기계획 연례추진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APR)에 따르면 2025년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2.5%, 채무비율은 62.75%로 예상되나,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한 5,000억유로 규모의 국방·기후·인프라 특별기금은 미반영된 상태
  - 안정화 위원회는 특별기금의 예외조항 적용을 지지하면서 안보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EU 재정규범과의 충돌 여지가 있으므로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
  - 경기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구조개혁의 병행이 필요하며, 특별기금이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평가
  - 연방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투자촉진 등을 약속
- (자문위원회<sup>351)</sup>의 평가) 정부가 구조적 재정적자의 한도(GDP의 0.5%)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안정화 위원회가 관련 모니터링을 재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 현재 독일은 개정전 EU 재정규범에 기준을 두고 있어 새로운 규범에 맞춘 정비가 시급하며, 순지출 경로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

349) 독일의 재정 안정화 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 재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부장관, 주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되어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정기 모니터링해 예산 비상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EU 안정성장협약의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해 필요시 건전화 방안을 권고

350)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31. Sitzung 06/2025 Pressemitteilung," 2025. 6. 12., [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Sitzungen/20250612\\_31.Sitzung/Pressemitteilung/20250612\\_Pressemitteilung.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Sitzungen/20250612_31.Sitzung/Pressemitteilung/20250612_Pressemitteilung.pdf?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5. 6. 18.; "23. Stellungnahme des Beirats 06/2025," 2025. 6. 12., [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Beirat/2025/Stellungnahme/20250612\\_Stellungnahme\\_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Beirat/2025/Stellungnahme/20250612_Stellungnahme_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5. 6. 18.

351) 자문위원회는 구조적 재정적자 한도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해 재정 안정화 위원회를 지원하여 의견 및 권고를 제시

- 재정통계 예측 및 감시와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 외 재정활동(특별기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
- 안정화 위원회는 법에 따라 연 2회 재정전망과 재정적자 한도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하나, 2023년 이후 재정전망이나 재정적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안정화 위원회의 재정 감시 역할 명확화, 독립성 및 투명성 향상, 예측 자료, 특히 예산 외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가. 경제 통계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경제성장률 발표(2025. 1. 15.)<sup>352)</sup>
  - (GDP) 독일의 2024년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하였으며, 독일의 경제적·구조적 부담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
    - 수출 산업에 대한 경쟁 증가,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이자율 수준,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이 경제적,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
  - (총부가가치) 2024년 가격조정 거시경제 총 부가가치는 0.4%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하나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증가
    - 제조업 부문은 기계 및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총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부문은 높은 가격과 이자율로 인해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8% 감소
    - 서비스업 부문은 전반적으로 생산량 0.8% 증가하였지만, 무역, 운송, 숙박업의 총부가가치는 정체된 반면, 정보통신(+2.5%), 공공행정·교육·의료분야(+1.6%)는 성장세를 보임
  - (총고정자본형성) 2024년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기계·장치·차량을 포함한 장비투자가 건설투자보다 2024년 더 급격히 감소

352)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4 um 0,2 % gesunken," 2025. 1. 1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1/PD25\\_019\\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1/PD25_019_811.html), 검색일자: 2025. 1. 16.

- (소비지출) 가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0.3%, 2.6% 증가
    - 국가가 현물로 지급하는 사회적 혜택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 지출과 사회법 개정으로 인한 청소년지원과 통합지원이 증가
  - (노동시장) 2024년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4,61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고용증가는 정체된 것으로 평가
  - (일반정부 재정)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55억유로 증가한 1,130억유로이며,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금전적 사회혜택에 대한 지출 증가에 기인
    - 연방정부의 에너지 위기 완화 조치가 만료되었으나, 연금·돌봄수당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증가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4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2025. 2. 18.)<sup>353)</sup>
- 독일의 2024년 4분기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약 4,61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0.0% 증가
    - 계절조정 없는 2024년 4분기 취업자수는 약 4,63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0.3% (15만 6,000명) 증가하였으며, 매년 4분기 취업자수 증가는 반복적 현상이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증가율을 하회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4분기 취업자수는 8,000명(0.0%) 감소하면서 사실상 정체된 수준
      -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4분기 유럽연합(EU) 27개국과 유로지역의 고용률은 각각 0.5%, 0.6% 증가

353) 독일 연방 통계청, "Erwerbstätigkeit im 4. Quartal 2024 stagniert," 2025. 2. 1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2\\_1332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2_13321.html), 검색일자: 2025. 2. 20.

표 3-III-12 독일 고용 증가율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취업자수 <sup>1)</sup>	4,551	4,564	4,572	4,583	4,594	4,601	4,603	4,607	4,610	4,611	4,606	4,606
직전 분기 대비 <sup>1)</sup>	0.4	0.63	2.2	0.2	0.2	0.2	0.0	0.1	0.1	0.0	-0.1	0.0
전년 동기 대비	1.6	1.6	1.2	1.1	0.9	0.8	0.7	0.5	0.4	0.2	0.1	0.0

주: 1) 계절조정값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Erwerbstätige: Deutschland, Quartale, Inlands-/Inländerkonzept, Original- und bereinigte Daten,"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13321/table/13321-0002>, 검색일자: 2025. 2. 20.

####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2. 25.)<sup>354)</sup>

- 2024년 4분기 독일의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러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
  - 전 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정부 소비 및 민간 소비는 증가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
    - 이전 분기 대비 정부 및 민간 소비는 각각 0.4%, 0.1% 증가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서, 특히 서비스 수입은 4.2% 급증하고 상품 수출은 전 분기 대비 3.4% 급감하였는데, 이는 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 장비의 수출 감소에 기인
    - 장비(기계, 장치 및 차량) 투자는 전 분기보다 0.3% 감소하였으나, 온화한 날씨 덕분에 건설투자는 전 분기보다 1.0%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
  - 전 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총부가가치(가격, 계절변동 및 달러효과 조정)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마이너스(-)를 기록
    -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경제생산량은 각각 0.6%, 0.9% 감소하였으며, 금융·보험 서비스업 역시 이전 분기보다 2.1% 감소

354)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4. Quartal 2024,"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9\\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9_811.html), 검색일자: 2025. 2. 26.

- 2024년 4분기에는 EU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 들었으나, 독일의 성장률은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0.1%), 이탈리아(0.0%), 스페인(+0.8%)보다 더 낮은 수준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4분기 독일의 가격조정 GDP 성장률은 -0.4%,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sup>355)</sup> 성장률은 -0.2%를 기록
  - 투자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정부 소비는 증가
    -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특히 장비 투자는 6.4% 급감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반면, 수입은 2.8% 증가
    - 현물 지원과 사회보장의 증가로 정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 2024년 4분기 독일의 취업자수는 4,630만명으로 전년 동기 수준으로 거의 유지 되었으나, 노동생산성(노동 시간당 가격 조정 GDP)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표 3-III-13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십억유로, %, 지수)

구분	원계열				가격 조정(X-13 활용)		
	경상가격 기준		가격 조정, 연쇄가격 기준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달력효과 조정
	10억유로	% <sup>1)</sup>	2020=100	% <sup>1)</sup>	2020=100	% <sup>2)</sup>	% <sup>1)3)</sup>
2023(연간)	4,185.55	5.9	104.81	-0.3	104.84	-0.1	-0.1
2024(연간)	4,305.26	2.9	104.56	-0.2	104.63	-0.2	-0.2
2023 1분기	1,034.14	7.3	105.72	0.6	104.96	0.1	0.2
2023 2분기	1,024.06	5.9	102.98	-0.4	104.80	-0.2	0.0
2023 3분기	1,048.71	5.4	104.96	-0.7	105.00	0.2	-0.3
2023 4분기	1,078.64	5.0	105.57	-0.4	104.61	-0.4	-0.2
2024 1분기	1,064.83	3.0	104.90	-0.8	104.86	0.2	-0.1
2024 2분기	1,060.79	3.6	103.12	0.1	104.55	-0.3	-0.3
2024 3분기	1,078.22	2.8	105.10	0.1	104.66	0.1	-0.3
2024 4분기	1,101.42	2.1	105.14	-0.4	104.45	-0.2	-0.2

주: 1) 전년도 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변화  
 2) 전년도 또는 직전 분기 대비 변화  
 3) 연도별 GDP 성장률은 달력효과 조정값과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값이 동일(반올림으로 인한 차이 제외)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4. Quartal 2024,"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9\\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9_811.html), 검색일자: 2025. 2. 26.

355) 해당 자료는 계절조정을 계절변동(달력효과 미반영) 조정과 달력효과(공휴일, 조업일수 변화 등을 반영) 조정으로 구분

■ 독일 연방 통계청, 2025년 1분기 독일 고용 증가율 발표(2025. 5. 16.)<sup>356)</sup>

- 독일의 2025년 1분기 계절조정 고용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0%(7,000명) 감소
  - 계절조정 없는 전 분기 대비 1분기 고용 증가율은 -0.9%로 고용감소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2022~2024년의 1분기 평균 감소폭(-0.7%)보다 높은 수준
- 2025년 1분기 계절조정 없는 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6만명) 감소
  -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1.6%)
- 유럽 통계청에 따른 EU 및 유로지역의 2025년 1분기 계절조정 없는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0.8% 증가하였으며, 이는 독일(-0.1%)보다 매우 높은 수치<sup>357)</sup>

표 3-III-14 독일 고용 증가율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직전 분기 대비	-0.7	0.5	0.2	0.5	-0.8	0.4	0.0	0.4	-0.9
전년 동기 대비	0.9	0.8	0.7	0.5	0.4	0.3	0.1	0.0	-0.1

주: 계절조정 없는 고용 증가율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Persons in employment: Germany, quarters, domestic concept / national concept, original and adjusted data,"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table/13321-0002>, 검색일자: 2025. 5. 22.

■ 독일 연방통계청,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5. 23.)<sup>358)</sup>

- 2025년 1분기 독일의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러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
  - 2025년 1분기는 전 분기 대비 정부지출이 0.3% 감소했으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등 대외무역이 3.2%, 민간소비가 0.5%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

356) 독일 연방 통계청, "Erwerbstätigkeit im 1. Quartal 2025 weiterhin leicht rückläufig," 2025. 5. 1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5/PD25\\_174\\_1332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5/PD25_174_13321.html), 검색일자: 2025. 5. 22.

357) Eurostat, "Employment by NACE Rev.2 - percentage change Q/Q-4, NSA,"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eina305/default/table?lang=en>, 검색일자: 2025. 5. 22.

358)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1. Quartal 2025," Press Release, 2025. 5. 23.,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5/PD25\\_182\\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5/PD25_182_811.html), 검색일자: 2025. 5. 26

- 2025년 1분기는 2024년 4분기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건설 투자와 장비 투자는 각각 전 분기 대비 0.5%, 0.7% 증가
- 가격, 계절 및 달력조정 총 부가가치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건설업(0.9%), 제조업(1.0%), 정보·통신부문(1.7%)과 무역·운송 및 호텔업(1.1%)에서 특히 크게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독일의 가격조정 GDP 성장률은 -0.2%,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sup>359)</sup> 성장률은 0.0%를 기록
  - 2025년 1분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2.6%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가계소비 증가율(3.2%)은 소득 증가율(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 저축률은 13.6%에서 13.0%로 하락
  - 2025년 1분기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수출은 약간 증가(0.2%)한 반면 상품 수출은 감소(-1.4%)
  - 취업자수는 4,5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수치이며, 노동생산성(노동 시간당 가격 조정 GDP)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 독일의 전 분기 대비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0.4%)은 EU 및 유로존(0.3%), 이탈리아(0.3%), 프랑스(0.1%)보다 약간 높은 수준
  - 독일의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0.0%로, 주요 EU 회원국 및 유로지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

359) 해당 자료는 계절조정을 계절변동(달력효과 미반영) 조정과 달력효과(공휴일, 조업일수 변화 등을 반영) 조정으로 구분

표 3-III-15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십억유로, %, 지수)

구분	원계열				가격 조정(X-13 활용)		
	경상가격 기준		가격 조정, 연쇄가격 기준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달력효과 조정
	10억유로	% <sup>1)</sup>	2020=100	% <sup>1)</sup>	2020=100	% <sup>2)</sup>	% <sup>1)3)</sup>
2024(연간)	4,305.26	2.9	104.56	-0.2	104.63	-0.2	-0.2
2024 1분기	1,064.83	3.0	104.90	-0.8	104.86	0.2	-0.1
2024 2분기	1,060.79	3.6	103.12	0.1	104.55	-0.3	-0.3
2024 3분기	1,078.22	2.8	105.10	0.1	104.66	0.1	-0.3
2024 4분기	1,101.42	2.1	105.14	-0.4	104.45	-0.2	-0.2
2025 1분기	1,089.96	2.4	104.65	-0.2	104.88	0.4	0.0

주: 1) 전년도 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변화

2) 전년도 또는 직전 분기 대비 변화

3) 연도별 GDP 성장률은 달력효과 조정값과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값이 동일(반올림으로 인한 차이 제외)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1. Quartal 2025," Press Release, 2025. 5. 23.,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5/PD25\\_18\\_2\\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5/PD25_18_2_811.html), 검색일자: 2025. 5. 26

## 나. 재정 통계

###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1~3분기 공공재정 적자 발표(2025. 1. 10.)<sup>360)</sup>

- (GDP) 독일의 2024년 1~3분기 지출은 2023년 동 분기보다 5.9% 증가한 1조 5,133억유로, 수입은 5.1% 증가한 1조 4,058억유로로 1,075억유로 재정적자를 기록
  - 2024년 1~3분기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억유로 증가한 1,075억유로였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 공공예산 전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
    - 연방정부: 지출 4,429억유로, 수입 3,846억유로, 재정적자 582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177억유로 감소)
    - 주정부: 지출 3,976억유로, 수입 4,049억유로, 재정흑자 73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31억유로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추가예산으로 인해 적자 발생
    - 지방자치단체: 지출 2,866억유로, 수입 2,606억유로, 재정적자 259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145억유로 증가)

360)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bis 3. Quartal 2024 auf 108 Milliarden Euro," 2025. 1. 1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1/PD25\\_012\\_7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1/PD25_012_711.html), 검색 일자: 2025. 1. 14.

- 사회보험: 지출 6,491억유로, 수입 6,330억유로, 재정적자 161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89억유로 증가)
- 2024년 1~3분기 세입은 약 1조 2,004억유로이며, 사회보장기여금 및 원천징수세가 증가
- 연방정부의 Deutsche Post AG(독일우정 주식회사) 등의 투자 매각으로 인한 수입 증가 47억유로, Deutsche Bahn AG(독일철도 주식회사)의 자기자본 증가로 인한 투자 인수 비용 35억유로 증가

표 3-III-16 2021~2024년 1~3분기 독일 공공예산 주요수치(가격조정)

(단위: 십억유로)

구분	일반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b>지출(가격조정)</b>					
2024	1,513.3	442.9	404.9	286.6	649.1
2023	1,429.3	450.5	379.5	259.2	607.7
2022	1,326.9	403.5	371.4	231.3	598.7
2021	1,306.6	408.0	365.5	216.3	587.7
<b>수입(가격조정)</b>					
2024	1,405.8	384.6	397.6	260.6	633.0
2023	1,337.9	374.6	382.6	247.8	600.5
2022	1,261.2	324.0	393.9	230.4	590.9
2021	1,156.4	296.4	362.3	210.3	558.3
<b>재정수지</b>					
2024	-107.5	-58.2	-7.3	-25.9	-16.1
2023	-91.4	-75.9	3.1	-11.4	-7.2
2022	-65.7	-79.4	22.4	-0.8	-7.8
2021	-150.2	-111.6	-3.3	-6.0	-29.4

주: 2024년은 잠정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지출 및 수입은 각 정부 수준의 거래액이 중복된 수치(예: 연방정부 → 주정부 지출,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분배)

재정통계 범위 내에서의 공공예산과 국민회계상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bis 3. Quartal 2024 auf 108 Milliarden Euro," 2025. 1. 14.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잠정치) 발표(2025. 2. 25.)<sup>361)</sup>
- (재정수지) 독일의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50억유로 증가한 1,188억유로(잠정치)로 GDP의 약 2.8% 수준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305억유로 축소되었음에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각 부문에서 동시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은 2009년 이래로 처음
    - 주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273억유로이며, 지자체 적자는 전년 대비 76억유로 증가한 186억유로를 기록
    - 사회보장 역시 2023년 90억유로 재정흑자에서 2024년 106억유로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지출 증가가 수입 증가보다 높게 나타남
  - (수입) 2024년 일반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 129억유로이며, 처음으로 2조유로를 경신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은 2.4%, 소득세 수입은 3.6% 증가
      - 탄소세 확대 적용으로 인한 트럭 통행료<sup>362)</sup> 수입이 정부 수입 증가에 기여
  - (지출) 2024년 일반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조 1,316억유로를 기록
    - 2024년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24.2% 증가하고, 사회적 현물지원도 7.0% 증가
    - 돌봄수당, 시민수당(Bürgergeld),<sup>363)</sup> 연금지출 등의 사회보장이 증가
    -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지원조치가 2023년 말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은 35.6% 감소

361) 독일 연방통계청, "Staatsdefizit erhöht sich im Jahr 2024 auf 118,8 Milliarden Euro,"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70\\_813.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70_813.html), 검색일자: 2025. 2. 26.

362) 2023년 12월부터 연방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인프라 비용, 대기오염, 소음공해, 그리고 새로운 탄소배출 이상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통행료를 3.5톤 초과 모든 화물차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화물차 통행료 차등화를 시행

363)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실업급여 II (Arbeitslosengeld II)'를 대체하여 도입된 기초보장제도

표 3-III-17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잠정치)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2022	2023	2024
일반정부 순융자(+)-순차입(-)	-116.4	-84.9	-103.8	-118.8
일반정부 수입	1,747.9	1,852.6	1,921.2	2,012.9
일반정부 지출	1,864.3	1,937.5	2,025.0	2,131.6

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지출 및 수입은 각 정부 수준의 거래액이 중복된 수치(예: 연방정부 → 주정부 지출,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분배)

재정통계 범위 내에서의 공공예산과 국민회계상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National accounts - Revenue, expenditure, net lending/net borrowing of general government: Germany, years,"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81000/table/81000-0031>, 검색일자: 2025. 2. 26.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 발표(2025. 4. 4.)<sup>364</sup>

- (재정수지) 독일의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대비 127억유로 증가한 1,044억유로
  - 각 부문별 재정적자는 연방정부 509억유로, 주정부 182억유로, 지방자치단체 248억유로, 사회보장 105억유로를 기록
  - 연방정부의 적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부문의 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에서 적자를 기록
- (수입) 2024년 일반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9,776억유로를 기록
  - 2024년 조세수입은 1조 6,567억유로로 2023년 대비 4.6% 증가
- (지출) 2024년 일반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조 821억유로이며, 사상 처음으로 2조유로 이상을 기록
  - 에너지 보조금의 종료로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지원금은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 및 군사 부문의 지출이 증가
    - 전년 대비 시민수당(Bürgergeld)<sup>365</sup> 33억유로 증가, 군사특별기금 113억유로 증가

364)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Jahr 2024 bei 104,4 Milliarden Euro," press release, 2025. 4. 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131\\_7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131_711.html), 검색일자: 2025. 4. 14.

365) 독일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복지 제도로,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자율적 직업훈련을 지원

표 3-III-18 독일의 일반정부 및 부문별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일반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b>일반정부 순융자(+)/순차입(-)</b>					
2024	-104.4	-50.9	-18.2	-24.8	-10.5
2023	-91.7	-87.6	-0.1	-6.6	2.7
2022	-127.3	-145.1	10.5	2.6	4.7
2021	-133.2	-135.8	3.5	4.6	-5.5
<b>수입</b>					
2024	1,977.60	569.0	544.1	376.1	864.1
2023	1,852.50	526.2	529.2	349.4	820.7
2022	1,748.30	463.8	532.9	328.4	809.0
2021	1,629.30	424.7	510.8	308.0	774.2
<b>지출</b>					
2024	2,082.10	620.0	562.4	400.9	874.6
2023	1,944.20	613.9	529.3	356.0	878.0
2022	1,875.40	608.9	522.3	325.8	804.4
2021	1,762.40	560.5	507.2	303.4	779.7

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지출 및 수입은 각 정부 수준의 거래액이 중복된 수치(예: 연방정부 → 주정부 지출,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분배)

재정통계 범위 내에서의 공공예산과 국민회계상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은 잠정치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Jahr 2024 bei 104,4 Milliarden Euro," press release, 2025. 4. 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131\\_7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131_711.html), 검색일자: 2025. 4. 14.

####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정부지출 비율 발표(2025. 4. 25.)<sup>366)</sup>

- 독일의 2024년 GDP 대비 정부지출은 49.5%이며, 전년 대비 1.1%p 증가
  - 공공지출의 증가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복지(SGB XII)<sup>367)</sup> 및 시민수당(Bürgergeld)의 요율 인상, 병원치료 및 간병과 같은 현물적 사회혜택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1991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공공지출 평균은 47.3%
  - 2020년과 2021년 공공지출 비율은 각각 51.1%, 50.7%

366) 독일 연방통계청, "Staatsquote 2024 auf 49,5 % angestiegen," 2025. 4.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N021\\_8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N021_81.html), 검색일자: 2025. 4. 28.

367) 독일 「사회복지법」의 「사회법전」 제12권에는 주거비, 장애인, 장애보조기기, 한부모가정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

- EU 회원국의 2024년 정부지출 평균은 49.2%이며, 다른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
  - 가장 높은 정부지출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핀란드 57.6%, 프랑스 57.1%, 오스트리아 56.3% 순이었으며, 아일랜드는 주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임에도 2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

**표 3-III-19 독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부지출 비율	44.5	44.7	44.6	44.7	45.6	51.1	50.7	49.0	48.4	49.5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Staatsquote 2024 auf 49,5 % angestiegen," 2025. 4.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N021\\_8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N021_81.html), 검색일자: 2025. 4. 28.

# IV 프랑스<sup>368)</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5회계연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표 3-I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4.	프랑스수아 바이루 신임 총리, 주요 개혁 및 정책 방향 발표
2025. 2. 5.	프랑스 의회, 2025년도 예산법안을 「헌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채택
2025. 2. 12.	프랑스 의회, 2025년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을 「헌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채택
2025. 2. 14.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예산법 최종 승인 및 공포
2025. 2. 28.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최종 승인 및 공포
2025. 3. 3.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 및 공공회계 담당 특임 장관, 공공재정 운영 개선 계획 발표
2025. 4. 15.	프랑스 총리, 예산안 집행 및 편성 관련 제1회 비상사태 대책 위원회 소집
2025. 4. 16.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재무총국, EU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이행 보고서 발표
2025. 4. 25.	프랑스 재무부, 2025회계연도 예산법에 대한 31억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 시행
2025. 6. 12.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주권·디지털 장관 등 지방 당국 및 공공기관에 단일 금융 계정(CFU) 보급을 위한 법률 명령 발의

자료: 저자 작성

3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윤서 연구원(ysoh112@kipf.re.kr)

## 01 예산 및 결산

## 가. 예산

- 프랑스 의회, 2025년도 예산법안(PLF 2025)(2025. 2. 5.)<sup>369</sup>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2025)(2025. 2. 12)<sup>370</sup>을 「헌법」 제49조 제3항<sup>371</sup>에 따라 채택
  - (배경) 2025년도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 대해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는 「헌법」 제49조 제3항을 발동하여 하원 의결을 생략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어 상원으로 이송 및 통과<sup>372</sup><sup>373</sup>)
    - 2024년 12월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전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sup>374</sup>되어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신규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2025년 1월 국회에서 심사가 재개
    -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2월 3일에 예산법안, 2월 10일에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 대해 「헌법」 제49조 제3항을 발동한 이후, 법안별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이틀 뒤 부결
  - (주요 내용) 채택된 예산안은 양원 공동협의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합의한 공동결의안에 기준하여, 2025년에 500억유로의 예산 절감 및 GDP 대비

369)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adoption du texte CMP après le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art. 49.3 C),” 2025. 2. 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projet-de-loi-de-finances-pour-2025-adoption-du-texte-cmp-apres-le-rejet-d-une-motion-de-censure-art.-49.3-c>, 검색일자: 2024. 2. 11.

370)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3e partie & ensemble):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art. 49.3 C),” 2025. 2. 1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5-3e-partie-ensemble-rejet-d-une-motion-de-censure-art.-49.3-c>, 검색일자: 2025. 2. 25.

371)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명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이후 24시간 이내에 하원 재적 1/10 이상의 동의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

372) 프랑스 상원,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2025. 2. 17., <https://www.senat.fr/dossier-legislatif/pljf2025.html>, 검색일자: 2025. 2. 25.

373) 프랑스 상원,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17., <https://www.senat.fr/dossier-legislatif/plfss2025.html>, 검색일자: 2025. 2. 25.

374)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의 내각 불신임안과 사퇴 관련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12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12. 31., p. 37,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50>.

5.4%의 재정적자를 목표하고 사회보장 지출은 6,660억유로에 상응할 예정

- (예산법안) 정부안 편성 시 600억유로의 예산 절감을 지출 부문 400억유로 및 세입 부문 200억유로로 나누어 목표하였으나, 최종 채택된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절감은 500억유로 규모로 축소하고, 지출 부문 300유로 감축 및 세입 부문 200억유로 유지하여 시행 예정<sup>375)</sup>
- (사회보장법안) 2025년 사회보장 지출은 6,660억유로이며,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적자는 221억유로로 정부안에서 예상한 160억유로 대비 상승<sup>376)</sup>
-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의견)<sup>377)</sup>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이나, 2025년 재정적자 목표는 합리적인 추정치로 평가
  - 재정적자 목표는 낙관적인 거시경제 가정, 지방정부 지출의 현저한 둔화, 건강보험 지출의 엄격한 통제를 가정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엄격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함

■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예산법(Loi de finances pour 2025)<sup>378)</sup>(2025. 2. 14.)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sup>379)</sup>(2025. 2. 28.) 최종 승인 및 공포

- (배경) 의회가 정부안을 받아 양원 공동협의회(commission mixte paritaire)에서 수정 및 합의한 공동 결의안을 기준으로 프랑스 정부가 「헌법」 제49조 제3항을 발동(예산법안 2025년 2월 5일, 사회보장부문 법안 2025년 2월 12일)하여, 의회가 두 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됨<sup>380)</sup>

375)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Déclaration de M. Éric Lombard,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sur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au Sénat le 6 février 2025.," 2025. 2. 6.,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97239-eric-lombard-06022025>, 검색일자: 2025. 2. 20.

376)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21., <https://www.vie-publique.fr/loi/295695-plfss-2025-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5. 2. 25.

377)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à l'amendement des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5," 2025. 1. 29., [https://www.hcfc.fr/sites/default/files/2025-02/Aviss%20PLF\\_PFSS\\_2025\\_amend%C3%A9s.pdf](https://www.hcfc.fr/sites/default/files/2025-02/Aviss%20PLF_PFSS_2025_amend%C3%A9s.pdf), 검색일자: 2025. 2. 14.

378)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5-127 du 14 février 2025 de finances pour 2025," 2025. 2. 14.,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51168007/?isSuggest=true>, 검색일자: 2025. 3. 10.

379)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5-199 du 28 février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28.,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1269481>, 검색일자: 2025. 3. 10.

380) 내각의 「헌법」 제49조 제3항 발동 및 의회의 예산법안 채택 간주는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2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5. 3. 10., p. 44,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

- (주요 내용)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2025년 예산법과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 자체에 대해 불신임하지 않았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사유로 헌법 위배 판정

**표 3-IV-2 2025년 예산법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실적)	2024 (실적 전망)	2025 (예측)	2023~2027 중기재정법안 2025년 전망
재정수지(Solde effectif)	-5.5	-6.0	-5.4	-3.7
재정지출 증가율(Evolution de la dépense publique hors crédits d'impôt en volume(%))	-1.0	1.9	1.2	0.8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3.2	42.8	43.5	44.4
재정지출(Dépense publique (hors crédits d'impôt))	56.4	56.6	56.8	55.0
공공채무(Dette au sens de Maastricht)	110.0	112.7	115.5	109.6

자료: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예산법(LOI n° 2025-127 du 14 février 2025 de finances pour 2025)," 2025. 2. 14.

**표 3-IV-3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4년 실적 전망	2025년 예측
건강보험(Maladie)	-15.3	-15.4
산재보험(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0.6	0.2
노령보험기금(Vieillesse)	-6.0	-7.5
가족수당기금(Famille)	0.5	0.4
자율연대기금(Autonomie)	1.1	-0.7
전체 사회보장부문(Toutes branches)	-19.0	-23.0
노령연대 포함 사회보장부문(Toutes branches y compris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18.2	-22.1

자료: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n° 2025-199 du 28 février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28.

■ 프랑스 총리, 예산안 집행 및 편성 관련 제1회 비상사태 대책 위원회(premier comité d'alerte) 소집(2025. 4. 15.)<sup>381)</sup>

- (배경)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신임 당시 2025년 예산 채택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행위로 간주 및 우선 정책 과제로 밝힌 바 있으며,<sup>382)</sup> 해당 기조의 일환으로 비상사태 대책 위원회를 소집
- (주요 내용) 공공 재정 현황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 2025년 예산 운용 및 2026년 예산 편성 네 가지 원칙을 제시
  - (공공 재정 현황) 지난 20년간 GDP 대비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가적 위기마다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세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여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
    - 프랑스 국민 1인당 공공 채무(Dette publique)는 5만유로에 상응하며,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는 2025년에 620억유로에 상응할 것으로 추정
    - 생산과 소비 측면을 볼 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음을 언급하며 생산력 강화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
  - (정책 방향) 총리가 제시한 프랑스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혁신 투자, 재산업화(réindustrialisation) 강화 등 국가 생산력 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 GDP의 3% 이하로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현 재정 목표를 유지하여 공공 재정의 통제력 회복
    - 사회보장 재정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대 간 소통으로 개혁 추진
    - 고용 유연화, 근로 조건 개선, 기술력 강화 등을 추진하여 “모두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회” 수립
  - (예산 운용 및 편성) 프랑스 2025년 예산 운용 및 2026년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총리는

381) 프랑스 정부 포털, “Finances publiques: la vérité pour agir,” 2025. 4. 16. <https://www.info.gouv.fr/actualite/finances-publiques-la-verite-pour-agir>, 검색일자: 2025. 4. 17.

382) 바이루 총리 신임 당시 개혁 및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1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5. 2. 10., p. 39,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67>.

다음 네 가지를 제시

- 운영 지출(dépenses de fonctionnement)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음
- 단발성 지출이 아닌 효과적인 재정 계획 수립 및 목표 실천
-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함
- 공공 재정 긴축에 돌입하여 감당 불가능한 규모의 재정지출 종식

■ 프랑스 재무부, 2025회계연도 예산법에 대한 31억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 시행(2025. 4. 25.)<sup>383)384)</sup>

- (배경) 프랑스 재무부는 「재정조직법」 제14조<sup>385)</sup>에 의거하여 2024년 2월에 2024년 예산에 대해 100억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를 시행한 바 있으며,<sup>386)</sup> 2025년 예산에도 동일 조항을 근거로 지출 취소 법령 발표
- (주요내용) 환경, 경제, R&D 부문 위주로 삭감되어 총 31억유로 규모의 지출이 취소되었으며, 주요 삭감 미션은 다음과 같음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미션에서 약 5억 4,960만유로 삭감
    - 에너지, 기후, 광산업 사후 관리(Énergie, climat et après-mines) 프로그램에서 1억 500만유로 삭감
    -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Infrastructures et services de transports) 프로그램에서 2억 6,300만유로 삭감
  - 디지털 보급화, 정부 자산거래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경제 미션에서 약 5억 1,770유로 삭감

383) 프랑스 법률사이트, “Décret n° 2025-374 du 25 avril 2025 portant annulation de crédits,” 2025. 4. 2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1520782>, 검색일자: 2025. 5. 20.

384)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Budget 2025: 3,1 milliards d'euros de dépenses de l'État annulées par décret,” 2025. 4. 30.,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8360-budget-2025-annulation-de-31-milliards-deuros-de-depenses-de-letat>, 검색일자: 2025. 5. 20.

385) 프랑스 「재정조직법」 제14조는 최신 예산법에서 정의된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이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 (자료: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2021. 12. 28.,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44611953](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44611953), 검색일자: 2025. 5. 20.)

386) 「재정조직법」 제정 이래 10억유로 이상의 지출 취소는 2024년 2월, 2025년 4월에 단행된 지출 취소 법령이 유일

- R&D 및 고등교육 미션에서 약 4억 9,330만유로 삭감
  - 다학제적 과학 및 기술 연구(Recherches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pluridisciplinaires) 프로그램에서 3억 700만유로 삭감
  - ◆ 우주 연구(Recherche spatiale) 프로그램에서 9,400만유로 삭감

## 나. 추경

- 해당 사항 없음

## 다. 결산

- 프랑스 경제재정부, 2024년 회계 결산 및 관리 결과에 관한 법안(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PLRG 2024)\* 발표(2025. 4. 16.)<sup>387)388)</sup>

\* 프랑스는 재무 결과를 정리하는 법안을 발표하여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준수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며, 2021년 공공재정 현대화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에 따라 결산법안(projet de loi de règlement, PLR)의 명칭이 회계 결산 및 관리 결과에 관한 법안(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PLRG)으로 변경된 바 있음<sup>389)</sup>

- 프랑스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3년 0.9%에서 2024년 1.1%로 증가
  - 2024년 잠재성장률 1.2% 및 「중기재정법(LFPF)」 전망치 1.35%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 및 국제 경제 여건 악화가 초래한 수출 부진에 기인

387)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2025. 4. 1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dossiers/Projetdeloirelatifauxresultatsdelagestionetportantapprobationdescomptesdelannee2024>, 검색일자: 2025. 4. 28.

388)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2025. 4. 17., <https://www.vie-publique.fr/loi/298217-projet-de-loi-resultats-gestion-et-approbation-des-comptes-de-2024-plrg>, 검색일자: 2025. 4. 28.

389)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relative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 2024. 7. 31., <https://www.vie-publique.fr/fiches/21866-quest-ce-quune-loi-de-reglement>, 검색일자: 2025. 5. 7.

- 2024년 중앙정부 총 재정수지 적자는 1,560억유로로 2023년 결산법 대비 170억유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예산법 초기 전망 대비 90억유로 증가
  - 순조세수입<sup>390)</sup>은 3,257억유로로 예산법 전망 대비 228억유로 감소하여 세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재정적자 발생에 크게 기여
    - 법인세(146억유로), 소득세(54억유로), 부가가치세(40억유로) 영역에서 예산법 전망 대비 세수 감소
  - 2024년 재정지출은 4,847억유로로, 2023년 결산법 대비 44억유로 및 예산법 전망 대비 72억유로 감소
    - 2월에 정부가 100억유로의 세출을 취소한 데 이어, 7월에는 세출 동결과 함께 각 부처에 대한 지출 상한선이 발표
    - 예산 말기 지출 관리의 강화와 재정준비금(reserve de précaution)<sup>391)</sup>의 신중한 사용이 지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여 일반 예산(budget général) 지출은 예산법 전망 대비 34억유로 감소
  - 2024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당초 전망치(2023~2027 중기계획)보다 1.4%p 높은 5.8%를 기록
    -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113.0%로 2023년 109.8% 대비 증가<sup>392)</sup>
-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의견)<sup>393)</sup> 기존 예측(2024년 예산법) 대비 재정적자 악화는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관련 세수 오차에 기인하며, 지출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출 통제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나 지방 정부 및 사회보장기구에서 지출이 예산을 초과
  - 세수 오차는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낙관적 가정을 채택한 사유에 크게 기인

390) 순조세수입은 총세입에서 세금 환급 및 감면 등을 차감한 나머지로 정의됨(자료: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les-recettes-fiscales>).

391) 재정준비금(reserve de précaution)은 예산 집행 초기에 예산의 일정 비율을 동결하여, 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제도(자료: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les-principaux-outils-pilotage>)

392) 프랑스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다음과 같음. 2020년 114.9%, 2021년 113.1%, 2022년 111.4, 2023년 109.8%(자료: 프랑스 통계청,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542247>)

393)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2025. 4. 16., <https://www.hcfc.fr/liste-avis/avis-ndeg2025-2-projet-de-loi-relatif-aux-resultats-de-la-gestion-2024>, 검색일자: 2025. 4. 21.

표 3-IV-4 프랑스 2024년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항목	2023	2024
일반정부(Ensemble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5.4	-5.3
중앙정부(État)	-5.4	-5.2
중앙행정기관(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0.1	-0.1
지방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0.3	-0.6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0.4	0.0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p. 11, 2025. 4. 16.

표 3-IV-5 프랑스 중앙정부 2024년 결산

(단위: 십억유로)

항목	2023 결산법 (A)	2024 예산법 (B)	2024 예산 종료법(C)	2024 결산(D)	D-A	D-B	D-C
재정지출(Dépenses BG + PSR)	516.2	512.5	505.7	502.8	-13.4	-9.7	-2.9
순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322.9	348.5	323.3	325.7	2.8	-22.8	2.4
기타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65.5	66.9	65.8	67.5	2.0	0.7	1.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1	22.7	23.7	23.2	-1.9	0.5	-0.5
특별회계(Solde comptes spéciaux)	-5.1	-5.7	-3.9	-2.3	2.8	3.4	1.6
부속예산(Solde budget annexes)	0.3	0.2	0.2	0.4	0.1	0.2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3.0	-146.9	-162.4	-155.9	17.0	-9.0	6.5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p. 13, 2025. 4. 16.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재정 정책 및 조치

-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 및 공공회계 담당 특임 장관, 공공재정 운영 개선 계획 발표(2025. 3. 3.)<sup>394)</sup>
  -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과 공공회계 담당 특임 장관은 공공재정전망의 관리감독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중점으로 세부 개선 계획을 발표
  - 불확실성 및 위험 관리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 강화
    - 실적치가 예산법의 전망치를 벗어나게 하는 위험 원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제안하고 예산 집행 자료를 공유하는 공공 재정 감시 위원회(comité d'alerte des finances publiques)를 발대하고 의회 의원 참여
    - 예산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는 경제, 사회 및 재정 보고서(RESF)에서 주요 수치 전망 제시 시 전망의 불확실성도 정량화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
    - 거시경제 및 재정 지표의 전망과 실현치의 차이를 사후 규명하는 신규 보고서 연례 발간
  - 투명성 및 책임 강화 추구
    - EU에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PSMT)의 모니터링 결과인 연례 이행 보고서(rapport d'avancement annuel)에 최고재정자문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sup>395)</sup>의 체계적인 자문 수록
    - 정책에 의한 변동이 없는 재정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세입과 지출의 추세적 변화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론 보고서를 경제재정부에서 출간할 계획이며, 동 보고서를 최고재정자문위원회에 전달하여 정량화된 평가를 받을 예정
    - 통계청 산하에 거시경제 예측 모형 관련 협회(cercle)를 발대하고, 동 위원회는 춘계에 모형을 검토하며 하계에 가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
    - 2050년까지 포괄한 장기전망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원과 프랑스 전략연구기관 France Stratégie 간 협의회(mission associant) 구성

394) 프랑스 경제재정부, "Plan d'action pour améliorer le pilotage des finances publiques," <https://presse.economie.gouv.fr/plan-daction-pour-ameliorer-le-pilotage-des-finances-publiques/>, 검색일자: 2025. 3. 18.

395)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프랑스 정부 기관에 속하는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원의 관할에 속하며, 정부가 제시한 거시경제전망과 공공 재정 목표의 현실성을 파악 및 프랑스 정부 및 유럽연합의 재정준칙 준수 여부 판단 등을 담당

- 공공재정 장기 전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거 월별 예산 지출 및 세입 결산도 엑셀(excel) 형식으로 공개 계획
- 전망 방법론의 강화와 지속적인 개선 추구
  - 법인세 세수 예측 시 9월 및 12월 분납분의 납부금액 편중에 기인한 법인세 세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하여 대기업과 협의 착수
  - 의료 기관의 예산 및 회계 자료 관리감독 개선으로 의료비 지출 추적 강화
  - 지방 당국의 운영 및 투자(자본지출)의 결산 활용을 활성화하여 세수 및 세출 추계 불일치 사전 탐지 및 예측 적시 수정 추진
  - 과거 2년간의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감사 수행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주권·디지털 장관 등, 지방 당국 및 공공기관에 단일 금융 계정(CFU) 보급을 위한 법률 명령(ordonnance)<sup>396</sup> 발의(2025. 6. 12.)<sup>397</sup><sup>398</sup>
  - (배경) 프랑스 지방 당국 및 공공기관은 각기 상이한 회계 기준을 채택 및 이원화된 금융계정을 운용
    - (회계기준 채택) 프랑스 정부는 기관 유형에 따라 편성된 개별 회계 기준을 통합한 M573<sup>399</sup>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
    - (금융계정 이원화) 각 기관의 금융 계정은 회계 승인권자 주관의 행정 계정과 공공재정총국(DGFIP)에서 파견하는 공공 회계사 주관의 관리 계정으로 이원화됨
  - (주요 내용) 법률 명령으로 2026년부터 모든 지방 당국 및 공공기관이 단일 금융 계정(CFU)을 사용할 것을 규정

396) 법률 명령(ordonnance)은 프랑스 「헌법」 제38조에 따라 행정부는 국정 수행을 위한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발의되어 공포 가능한 법률을 의미하며, 이를 의회가 승인하면 최종 해당 법령 발효

397) 프랑스 엘리제 궁,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12 juin 2025,”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5/06/12/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du-12-juin-2025>, 검색일자: 2025. 6. 19.

398) 프랑스 정부 포털 사이트, “Conseil des ministres du 12 juin 2025. Généralisation du compte financier unique,” 2025. 6. 12.,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99026-conseil-12062025-generalisation-du-compte-financier-unique>, 검색일자: 2025. 6. 19.

399) 공공 단체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개별 회계 기준 중 다유형의 지방 당국과 기관(Commune, Département, Métropole 등)을 포괄하기 위해 범용을 목적으로 두고 개발된 공공 회계 및 예산 체계(자료: 프랑스 내무부 지방자치국, “「M57 지침」 1권 - 회계 체계,” [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files/finances-locales/M57/IBC%202025/M57\\_Tome\\_1\\_01012025\\_vdef.pdf](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files/finances-locales/M57/IBC%202025/M57_Tome_1_01012025_vdef.pdf))

- 2019년 예산안 법령 제242조에 근거하여 지방 당국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단일 금융 계정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도입
- 2024년 예산안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재정·산업주권·디지털 장관, 영토 관리·지방분권 장관, 공공회계 담당 특임 장관이 6월 12일 각료 회의에서 발의

## 나. 정책 방향 및 계획

### ■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신임 총리, 주요 개혁 및 정책 방향\* 발표(2025. 1. 14.)<sup>400)</sup>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12월 13일 프랑수아 바이루를 신임 총리로 선임,<sup>401)</sup> 신임 총리는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개혁 및 조치를 의회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이 있음<sup>402)</sup>

- 프랑스 총리는 공교육 회복, 해외 소재 영토 관련 문제 해결, 법치주의 강화 등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 통합을 중점으로 내각을 구성했음을 언급
- 비상사태 대응, 사회적 통합을 위한 조정, 주요 부문 개혁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
  - (비상사태 대응) 연금개혁 재검토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달, 기존의 다년간 재정 목표를 준수하는 2025년 예산 채택<sup>403)</sup>
  - (사회적 통합을 위한 조정) 정당 자금 위탁 공공 기관(민주주의 은행) 설립, 비례대표제 도입, 공영방송 개혁, 관료주의 타파, 지방 당국 자치 강화, 기업가 정신 보호를 위해 기하급수적인 증세 지양 등
  - (개혁 조치) 불법채류자 귀환 추진, 기존 친환경 정책 추진 및 확대, 교육 경쟁력 강화, 마요트 디바우트(Mayotte debout) 계획<sup>404)</sup> 이행, 의약품 환급 축소 철회 등
- 바이루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연금 개혁 지속 추진 등의 사유로 정당 세 곳<sup>405)</sup>을

400) 프랑스 정부, “Ce qu’il faut retenir d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 François Bayrou,” 2025. 1. 14., <https://www.info.gouv.fr/actualite/ce-quil-faut-retenir-d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e-francois-bayrou>, 검색일자: 2025. 1. 16.

401) 프랑스 법률 사이트, “Décret du 13 décembre 2024 portant nomination du Premier ministre,” 2024. 12. 14.,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0774288>, 검색일자: 2025. 1. 16.

402) 프랑스 정부, “Qu’est-ce qu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 2022. 7. 5., <https://www.info.gouv.fr/actualit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 검색일자: 2025. 1. 16.

403) 프랑스 2025년 예산 채택 일정 지연에 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12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12. 31., pp. 37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50>)

404) 사이클론 치도(chido)가 상륙하여 피해를 받은 프랑스 해외령 마요트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바이루 총리가 추진하는 복원 계획

주체로 1월 14일에 제출되어 1월 16일 의회 표결에 돌입했으나 부결<sup>406)</sup>

-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재무총국, EU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이행 보고서<sup>407)</sup> 발표(2025. 4. 16.)<sup>408)</sup>
  - (경제) 프랑스 경제는 2024년에 1.1% 성장했으며, 2025년은 0.7% 성장할 전망
    - (성장률) 2024년의 성장에 민간 부문의 내수 진작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국제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2025년 경제 성장률을 당해 예산법 초기 전망 대비 하향 조정(0.2%p)
    - (물가)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물가상승률은 2.0%로 크게 둔화되었고, 2025년의 경우 추가 하락한 1.4%로 전망
    - (고용) 중기재정계획 대비 2024년 총고용은 연평균 22.5만명 증가하여 전망 수준(20만명)을 상회하였으나 평균임금 증가율은 2.6%로 전망 수준인 2.8%를 하회
  - (재정)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5.8%로 악화되었으며, 2025년은 당해 예산법의 500억유로 규모의 긴축 조치가 기여하여 전년 대비 개선된 5.4%로 전망
    - (세입) 자연 세수 증가율의 경우 2024년은 0.1%로 저조하였고 2025년은 명목 GDP 성장률(2.2%)보다 낮은 2.1%로 전망되어 지속적으로 재정적자의 원인으로서 작용
    - (지출) 2024년 순기초지출(dépense primaire nette)<sup>409)</sup> 증가율은 3.3%, 2025년 전망은 0.9%로 유럽연합 권고 기준을 준수
  - (투자 및 개혁 방향) 프랑스 정부는 중기 계획에 따라 투자 계획과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와 개혁은 EU로부터 중기재정계획의 조정 기간 연장을 허용받기 위한

405)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녹색당, 공산당

406) 프랑스 하원,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dépos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9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rejet-d-une-motion-de-censure-deposee-en-application-de-l-article-49-alinea-2-de-la-constitution>, 검색일자: 2025. 1. 21.

407) 2024년 4월에 승인된 유럽연합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안에 따라 회원국들은 4년 중기재정계획(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PSMT)을 수립하고, 매년 4월 30일 전에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이행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408) 프랑스 재무경제부 산하 재무총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Publication du Rapport d'avancement annuel 2025," 2025. 4. 16.,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5/04/16/publication-du-rapport-d-avancement-annuel-2025>, 검색일자: 2025. 4. 28.

409) 순기초지출이란 재량적 세입 조치, 이자 지출, 경기 순환적 실업 지출, EU 자금으로 일부 및 전액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출을 고려하여 정부의 직접 통제 범위에 벗어난 세입 및 지출 변동을 제거한 재정지출을 의미하며 유럽연합에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지표임(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conomic-governance-framework>)

## 필수 조건임을 강조

-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다음 다섯 가지 우선순위에 바탕을 두고 있음
  -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지출의 효율성 보장
  - 기술 향상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 지원 및 일자리 가치 향상
  -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단순화(simplifier) 및 강화
  - 재산업화, 혁신 및 생산 촉진 정책의 지속
  - 생태 및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 프랑스 하원, 연금개혁안 폐지 결의안 가결(2025. 6. 5.)<sup>410)</sup>

- (배경) 2023년 4월에 연금개혁안이 가결된 이래로 프랑스의 연금 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당대 내각과 야당은 지속적인 입장 차이를 보임
  - 2023년 4월 14일, 퇴직 연령 상향 및 연금 전액 수령 조건 강화<sup>411)</sup> 등을 담은 연금개혁안이 사회보장부문 수정예산법안의 형식으로 「헌법」 제49조 제3항<sup>412)</sup>에 의거하여 하원 표결 없이 통과된 후 상원을 거쳐 법률로 공포됨
  - 2024년 12월경 2025회계연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2025) 초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연금 지급액 인상에 관한 당시 내각과 야당의 합의 불발이 내각 불신임 가결을 야기
  - 불신임 이후 구성된 내각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연금 개혁 재검토 협상 진행을 해당 내각 정책 방향 중 하나로 발표
- (주요 내용) 개혁 이전으로 연금 제도의 원복을 요구하는 하원의 결의안은 투표에서 198표 찬성, 35표 반대를 받아 가결됨

410) 프랑스 하원, “Abroger la loi n°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dite réforme des retraites,” 2025. 6. 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dossiers/abroger\\_reforme\\_retraites17](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dossiers/abroger_reforme_retraites17), 검색일자: 2025. 6. 18.

411)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연금 전액 수령을 위한 보험료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포괄

412)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명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선언 이후 24시간 이내에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2022. 10. 8., HYPERLINK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8123&AST\\_SEQ=105&nationReadYn=Y&ETC=1&searchNtnl=FR](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8123&AST_SEQ=105&nationReadYn=Y&ETC=1&searchNtnl=FR)"[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8123&AST\\_SEQ=105&nationReadYn=Y&ETC=1&searchNtnl=FR](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8123&AST_SEQ=105&nationReadYn=Y&ETC=1&searchNtnl=FR), 검색일자: 2025. 8. 12.

- 프랑스 하원은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하원의 논의가 「헌법」 제49조 제3항 발동에 의한 투표 생략 등을 통해 방해받았음을 주장
- (영향) 결의안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의 폐지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부재하나, 향후 연금 개혁 존속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
  -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한 실무 협상이 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으나, 2025년 6월 23일 최종 협상 결렬
  - 최종 협상 불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당(PS)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2025년 6월 24일에 제출

## 다. 국가 신용등급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 S&P(Standard & Poor's),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sup>413)</sup>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2025. 2. 28.)<sup>414)415)</sup>
  - S&P는 국가채무 증가, 국가 재정 관련 정치적 교착 상태, 불확실한 경제성장 전망을 반영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AA-’로 유지
    - S&P는 프랑스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대규모 재정적자를 추가 감축하지 못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장기간 전망을 하회하면 등급 강등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

413) S&P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총 4단계로서 긍정적(Positive), 안정적(Stable), 부정적(Negative), 전망 불확실(Developing)로 구성

414) Le Monde, “S&P gives France an early warning,” 2025. 3. 1., [https://www.lemonde.fr/en/politics/article/2025/03/01/s-p-gives-france-an-early-warning\\_6738709\\_5.html](https://www.lemonde.fr/en/politics/article/2025/03/01/s-p-gives-france-an-early-warning_6738709_5.html), 검색일자: 2025. 3. 11.

415) 프랑스 국고청(Agence France Trésor, AFT), “FRANCE’S CREDIT RATINGS,” <https://www.aft.gouv.fr/en/frances-credit-ratings>, 검색일자: 2025. 3. 11.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1) 경제성장률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5. 1. 30.)<sup>416)</sup>

- 2024년 4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로, 다소 둔화
  - 경제 성장률 감소세는 파리 올림픽 개최로 성장한 3분기의 기저효과에 기인
  - 가계소비는 반등 이후 주춤하여 소폭 상승(+0.4%)하였고,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다소 안정(-0.3 → -0.1%)
  - 수출(-0.2%)은 감소한 반면 수입(0.4%)은 반등하여, 대외 무역의 실질 GDP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0.2%를 기록

표 3-IV-6 프랑스 2024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항목	2024Q1	2024Q2	2024Q3	2024Q4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0.1	0.3	0.4	-0.1	1.1	1.1	
가계소비	0.1	0.0	0.6	0.4	0.9	0.9	
정부소비	0.7	0.4	0.5	0.4	0.8	2.1	
총고정자본형성 <sup>1)</sup>	-0.9	-0.1	-0.3	-0.1	0.7	-1.5	
수출	0.7	0.8	-0.8	-0.2	2.5	1.6	
수입	0.2	0.2	-0.4	0.4	0.7	-1.1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sup>2)</sup>	0.0	0.1	0.4	0.3	0.9	0.7
	재고투자	-0.1	0.0	0.2	-0.1	-0.4	-0.5
	대외무역	0.1	0.2	-0.1	-0.2	0.6	0.9

주: 1. 계절조정 데이터에 기준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2)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fell back slight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4 (-0.1% after +0.4%)," 2025. 1. 30.

416) 프랑스 통계청, "GDP fell back slight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4 (-0.1% after +0.4%)," 2024. 1. 3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347585>, 검색일자: 2025. 2. 13.

■ 프랑스 통계청,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5. 4. 30.)<sup>417)</sup>

- 2025년 1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총생산은 제조업 위주 성장과 서비스 부문의 반등으로 전 분기 대비 0.2% 상승
  - 가계소비는 전 분기 소폭 상승 이후 안정세를 보였고(+0.0%),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전 분기에 이어 감소(-0.1→ -0.2%)
  - 수출(-0.7%)은 감소한 반면 수입(0.5%)은 증가하여, 대외 무역의 실질 GDP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0.4%를 기록

표 3-IV-7 프랑스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항목		2024Q2	2024Q3	2024Q4	2025Q1	2024	2025
실질 GDP 성장률		0.3	0.4	-0.1	0.1	1.1	0.4
가계소비		0.0	0.6	0.2	0.0	0.9	0.5
정부소비		0.4	0.5	0.4	0.1	1.7	0.7
총고정자본형성 <sup>1)</sup>		0.0	-0.7	-0.1	-0.2	-1.4	-0.6
수출		1.2	-0.3	0.2	-0.7	1.6	-0.4
수입		0.4	-0.0	0.5	0.4	-1.2	0.9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sup>2)</sup>	0.1	0.3	0.2	0.0	0.6	0.3
	재고투자	0.0	0.2	-0.2	0.5	-0.4	0.5
	대외무역	0.3	-0.1	-0.1	0.4	1.0	-0.4

주: 1. 계절조정 데이터에 기준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2)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rebounded moderately in Q1 2025 (+0.1% after -0.1%)," 2025. 4. 30.

417) 프랑스 통계청, "GDP rebounded moderately in Q1 2025 (+0.1% after -0.1%)," 2025. 4. 3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566666>, 검색일자: 2025. 5. 19.

2) 실업률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4분기 실업률 발표(2025. 2. 11.)<sup>418)</sup>

- 프랑스의 2024년 4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7.5%) 및 전 분기(7.4%) 대비 소폭 감소하여 7.3%를 기록
  - 15~24세 실업률은 19.0%로 전 분기 대비 0.8%p 감소
  - 25~49세 실업률과 50세 이상 실업률은 모두 전 분기 대비 소폭(0.1%p) 상승하여 각 6.5%와 4.8%를 기록
  - 고용률은 전 분기보다 0.2%p 감소한 68.9%를 기록

표 3-IV-8 프랑스 2024년 4분기 실업률

(단위: %)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증감(%p)		2024년 4분기 실업자수(천명)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b>실업률 전체</b>	7.5	7.5	7.3	7.4	7.3	-0.1	-0.2	2,272
15~24세	17.6	18.3	17.9	19.8	19.0	-0.8	1.4	625
25~49세	7.0	6.8	6.7	6.6	6.5	-0.1	-0.5	1,169
50세 이상	5.0	5.0	5.0	4.7	4.8	0.1	-0.3	478
<b>남자</b>	7.7	7.6	7.3	7.7	7.5	-0.2	-0.1	1,195
15~24세	18.3	19.3	17.7	19.6	19.5	-0.1	1.2	348
25~49세	6.9	6.6	6.5	6.9	6.6	-0.3	-0.3	603
50세 이상	5.1	5.2	5.1	4.7	4.8	0.1	-0.4	243
<b>여자</b>	7.4	7.3	7.4	7.2	7.1	-0.1	-0.3	1,077
15~24세	16.7	17.0	18.2	20.0	18.3	-1.7	1.4	277
25~49세	7.1	7.0	6.8	6.3	6.5	0.2	-0.6	566
50세 이상	4.9	4.9	5.0	4.8	4.7	-0.1	-0.3	235
<b>장기실업률</b>	1.8	1.8	1.7	1.7	1.7	0.0	-0.1	542
<b>고용률</b>	68.5	68.8	69.0	69.1	68.9	-0.2	0.4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4,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7.3%) and the employment rate declined by 0.2 points (68.9%)." 2025. 2. 11.

418)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4,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7.3%) and the employment rate declined by 0.2 points (68.9%)." 2025. 2. 1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353088>, 검색 일자: 2025. 2. 14.

■ 프랑스 통계청, 2025년 1분기 실업률 발표(2025. 5. 16.)<sup>419)</sup>

- 프랑스의 2025년 1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0.1%p) 및 전 분기 대비 증가(0.1%p)하였으며, 7.4% 기록
  - 고용률은 전 분기보다 0.4%p 증가한 69.1%를 기록
  - 완전고용법(Loi pour le plein emploi)<sup>420)</sup>에서 규정하는 실업자(최저생계수당(RSA) 수급자 포함)의 국가 공공고용서비스(France Travail) 의무 등록 절차가 1분기에 최초 시행되었으나, 관련하여 고용 지표에 미친 변화는 모두 신뢰구간 내 변동하여 다소 미미

표 3-IV-9 프랑스 2024년 4분기 실업률

(단위: %)

구분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증감(%p)		2024년 4분기 실업자수(천명)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b>실업률 전체</b>	7.5	7.3	7.4	7.3	7.4	0.1	-0.1	2,355
15~24세	18.3	17.9	19.8	19.1	19.2	0.1	1.1	653
25~49세	6.8	6.7	6.6	6.6	6.7	0.1	-0.1	1,221
50세 이상	5.0	5.0	4.7	4.7	4.7	0.0	-0.3	480
<b>남자</b>	7.6	7.3	7.7	7.5	7.4	-0.1	-0.2	1,207
15~24세	19.3	17.7	19.6	19.5	19.4	-0.1	0.4	364
25~49세	6.6	6.5	6.9	6.6	6.5	-0.1	-0.2	602
50세 이상	5.2	5.1	4.7	4.8	4.7	-0.1	-0.5	241
<b>여자</b>	7.3	7.4	7.2	7.1	7.4	0.3	0.1	1,148
15~24세	17.0	18.2	20.0	18.5	18.8	0.3	1.8	289
25~49세	7.0	6.8	6.3	6.5	7.0	0.5	0.1	619
50세 이상	4.9	5.0	4.8	4.7	4.8	0.1	-0.1	239
<b>장기실업률</b>	1.8	1.7	1.7	1.7	1.7	0.0	-0.1	527
<b>고용률</b>	68.8	69.0	69.1	69.1	69.5	0.4	0.6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1 2025,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4%," 2025. 5. 16.

419) 프랑스 통계청, "In Q1 2025,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4%," 2025. 5. 16.,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571298>, 검색일자: 2025. 5. 19.

420) 완전 고용법은 2023년 12월 18일에 제정되어, 고용 분야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여, 모든 사람이 일자리에 접근하거나 다시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5개의 정책 목표를 추진(자료: 프랑스 고용·보건·연대·가족부, <https://travail-emploi.gouv.fr/la-loi-pour-le-plein-emploi>)

## 나. 재정 통계

### ■ 프랑스 예산국, 2024년 예산집행결과 발표(2025. 2. 4.)<sup>421)</sup>

- (재정수지) 2024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563억유로로, 2023년 1,733억유로 대비 170억유로 감소
- (재정지출) 2024년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4,434억유로로, 2023년 4,546억유로 대비 112억유로 감소
  - 지출 감소세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철폐 및 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한 물가 연동 채권<sup>422)</sup> 상환 비용 감소 등에 기인
- (재정수입) 2024년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3,489억유로로, 2023년 3,480억유로에 비해 소폭 증가
  - 기타 국내 세금(autres taxes intérieures) 부문에서 전년 대비 약 20억유로 규모로 증가

표 3-IV-10 프랑스 2024년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율 (%)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158,195	-168,159	-153,946	-
재정지출(Dépenses)	512,935	522,693	511,146	-2.2%
재정수입(Recettes)	354,740	345,534	357,200	0.8%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6,726	-5,101	-2,350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151,469	-173,260	-156,296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1 décembre 2024," 2025. 2. 4.

421)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4," 2025. 2. 4., [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directions\\_services/dgfip/SME/sme\\_2024-12\\_provisoire.pdf?v=1738676608](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directions_services/dgfip/SME/sme_2024-12_provisoire.pdf?v=1738676608), 검색일자: 2025. 2. 12.

422) 프랑스 정부 물가 연동 국채(OATi)와 유로존 물가 연동 채권(OAT€i) 등

표 3-Ⅳ-11 프랑스 2024년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3	2024	증가율(%)
<b>총재정지출(Dépenses (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b>	<b>522,693</b>	<b>511,146</b>	<b>-2.2</b>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54,565	443,413	-2.5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077	1,157	7.5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144,807	152,819	5.5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74,179	76,803	3.5
채무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54,780	50,085	-8.6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18,696	19,712	5.4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158,315	141,727	-10.5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2,712	1,110	-59.1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8,127	67,733	-0.6
지방자치단체 이전(Prélè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4,254	45,457	2.7
EU 부담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3,873	22,276	-6.7
<b>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avec fonds de concours))</b>	<b>354,534</b>	<b>357,200</b>	<b>0.8</b>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322,903	325,679	0.9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88,589	87,987	-0.7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56,825	57,420	1.0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16,804	15,969	-5.0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95,188	96,759	1.7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65,497	67,544	3.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139	23,212	-7.7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sup>1)</sup>	6,492	8,309	28.0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1 décembre 2024," 2025. 2. 4.

그림 3-IV-2 프랑스 2024년 월별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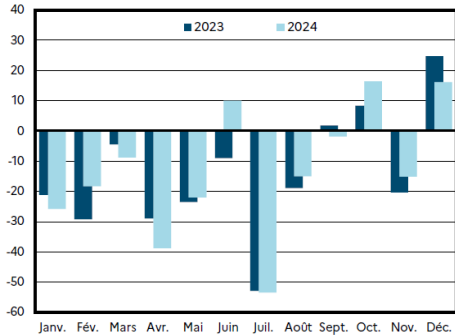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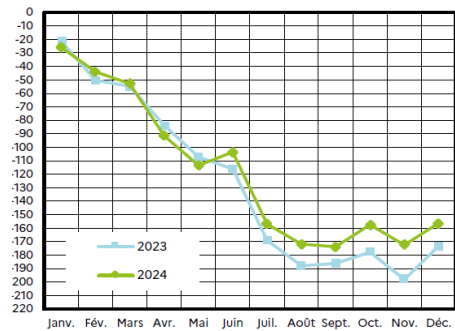


그림 3-IV-3 프랑스 2024년 월별 누적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1 décembre 2024," 2025. 2. 4.

■ 프랑스 회계감사원, 공공재정의 현황 보고서 발표(2025. 2. 13.)<sup>423)</sup>

- (개요) 재정 부문별로 분석하여 2024년 재정적자의 원인 파악 및 2025년 이후 재정 목표 달성의 위험요소를 명시
- (주요 내용) 보고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전망 대비 2024년의 재정적자 악화와 2025년 재정목표 완하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그 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4년 재정적자) 세입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증가세 둔화, 지출의 경우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 부문에서 전망을 초과한 지출 발생으로 2024년 재정수지 악화
    - (적자 상쇄 항목) 에너지소비세(TICFE) 인하 혜택 종료로 세입 상승에 기여하였고, 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한 물가 연동 채권 상환 비용 감소가 재정수지 악화를 상쇄
  - (2025년 재정 목표) 2025년 목표가 이미 완화되었고, 정부의 거시경제전망 낙관과 세수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
    - (재정 목표 완화) 2025년 예산 정부안과 중기재정계획(MTSP)<sup>424)</sup>에서 재정적자를 5.0%로 전년 대비 1.1%p 개선을 목표하였으나, 2025년 2월 채택된 예산법에서는

423)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La situ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ébut 2025," 2025. 2. 13.,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a-situation-des-finances-publiques-debut-2025>, 검색일자: 2025. 2. 17.

424) 중기재정계획은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적합한 재정 개혁·투자 목표를 4개년 단위로 통합하여 작성된 재정 계획을 일컫음.

5.4%로 재정

- (경제전망) 2023년 12월 재정된 중기재정법안(LFPF)에서 잠재성장률을 연 1.35%로 전망하였으나, 2024년 들어 프랑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
- 하향 조정은 외부(지정학적 긴장,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및 내부(예산안 제정 관련 정치 교착상태, 세금 인상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활동 여건의 악화에 기인
- (세수의 불확실성) 2025년 재정법 채택의 지연으로 과세 중 일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세법의 소급 금지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등

표 3-Ⅳ-12 프랑스 2024년 재정수지의 전망치 편차 분석

(단위: GDP 대비 비율)

발생 요인	전망 간 편차	
	2023 예산법	2024 예산법
<b>기존 전망치</b>	<b>-4.5</b>	<b>-4.4</b>
2023년 재정적자 영향	-	-0.7
경제 상황	-0.1	-0.3
증세	+0.2	+0.2
재정지출(예외조치 <sup>1)</sup> 제외)	-0.9	-0.1
부채비용	-0.1	+0.1
중앙정부	0.0	+0.1
지방정부	-0.3	-0.2
사회보장제도	-0.5	-0.1
예외조치 <sup>1)</sup> 종료	+0.7	-0.1
낮은 수준의 GDP에 대한 조세의 탄력성	-0.4	-0.5
<b>최신 전망치</b>	<b>-6.0</b>	<b>-6.0</b>

주: 1) 예외조치란 팬데믹과 고물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경기 부양성 지출

자료: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La situ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ébut 2025," 2025. 2. 13., p. 16.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프랑스 일반정부 국민계정 발표(2025. 3. 27.)<sup>425)</sup>
  - 2024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조 6,702억유로이고,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3년 56.9%에서 2024년 57.1%로 증가
    - 사회보장수당 및 의료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수당의 지출 증가분은 전체 공공지출 증가의 60%에 상응
    -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74억유로가 증가하여 GDP 대비 2.0% 기록
    -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0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 반등하였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55.2%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2024년 재정수입은 1조 5,006억유로로 전년 대비 3.1% 증가
    - 경제활동 둔화로 인해 2023년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다시 가속화되어 2024년 재정수입 반등
    -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3년 51.5%에서 2024년 51.3%으로 감소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1,696억유로에 상응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 4.7%, 2023년 5.4%에 이어 2024년 5.8%로 지속적으로 상승
  - 2024년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는 113.0%로 전년 대비 3.2%p 증가

표 3-IV-13 프랑스 2024년 일반정부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수지(Déficit public)	-8.9	-6.6	-4.7	-5.4	-5.8
재정지출(Dépenses publiques)	61.7	59.5	58.4	56.9	57.1
재정수입(Recettes publiques)	52.8	53.0	53.7	51.5	51.3
일반정부 총채무(Dette publique(brute))	114.9	113.0	111.4	109.8	113.0
일반정부 순채무(Dette publique nette) <sup>1)</sup>	101.6	100.8	101.1	101.6	104.7
조세부담률(Prélèvements obligatoires) <sup>2)</sup>	44.3	44.2	45.0	43.2	42.8

주: 1)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

2)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괄하는 과세 부담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2024, the public deficit reached 5.8 % of GDP, the public debt 113.0 % of GDP," 2025. 3. 27.

425) 프랑스 통계청, "In 2024, the public deficit reached 5.8 % of GDP, the public debt 113.0 % of GDP," 2025.

3. 27.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542247>, 검색일자: 2025. 4. 1.

표 3-IV-14 프랑스 2024년 일반정부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항목별 내용

(단위: 십억유로)

	2023	2024	증감률(%)
<b>재정지출(Total des dépenses)</b>	1,607.4	1,670.2	3.9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519.5	539.3	3.8
-중간 소비(dont conso. intermédiaires)	159.9	163.4	2.2
-인건비(dont rémunérations)	346.3	362.1	4.6
채무비용(Intérêts)	50.5	58.0	14.6
사회보장수당(Prestations sociales)	708.5	747.3	2.2
이전지출과 보조금(Autres transferts et subventions)	206.0	194.1	-5.8
비금융 자산 취득(Acquisition nette d'actifs non financiers)	122.7	131.2	6.9
<b>재정수입(Total des recettes)</b>	1,455.7	1,500.6	3.1
판매 및 기타 수입(Ventes et autres recettes)	120.8	126.2	4.5
부동산수입(Revenus de la propriété)	19.5	21.4	9.6
조세수입(Impôts)	825.1	841.2	2.0
-재산세(dont impôts courants sur le revenu et le patrimoine)	357.1	366.0	2.5
-제품생산세(dont impôts sur les produits et la production)	446.6	453.7	1.6
사회보장부담금(Cotisations sociales effectives)	413.5	431.1	4.3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미회수예상액(Impôts et cotisations sociales susceptibles de ne pas être recouverts)	-4.4	-4.6	4.5
기타 수입(Autres recettes)	81.2	85.4	5.1
<b>총재정수지(Besoin de financement)</b>	-151.7	-169.6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2024, the public deficit reached 5.8 % of GDP, the public debt 113.0 % of GDP," 2025. 3. 27.

#### ■ 프랑스 예산국, 2025년 1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결과 발표(2025. 5. 2.)<sup>426)</sup>

- (재정수지) 2025년 1분기 프랑스의 총재정수지 적자규모는 470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7억유로 감소
- (재정지출) 2025년 1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980억 유로로 전년 수준 유지
  - 지출 안정세는 차량 구매 지원, 에너지 보호 조치 등 재량 지출 감소에 기인하였으나, 국방부 및 고용·보건·연대·가족부 등 일부 부처 지출 증가로 상쇄됨
- (재정수입) 2025년 1분기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76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에너지 보호 조치 종료에 따른 기타 조세수입 및 법인세 증가 등에 기인

426)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mars 2025," 2025. 5. 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30239>, 검색일자: 2025. 5. 20.

표 3-IV-15 프랑스 2025년 1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42,477	-40,186	-35,262	-
재정지출(Dépenses)	115,944	112,784	112,835	0.0%
재정수입(Recettes)	73,467	72,598	77,753	6.9%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12,247	-12,596	-11,766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54,724	-52,782	-47,027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Etat au 31 mars 2025," 2025. 5. 2.

표 3-IV-16 프랑스 2025년 1분기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4	2025	증감률(%)
<b>총재정지출(Dépenses (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b>	<b>112,784</b>	<b>112,835</b>	<b>0.0</b>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98,048	97,999	0.0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138	1,138	0.0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38,618	39,662	2.7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18,163	17,165	-5.5
부채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4,754	4,392	-7.6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5,234	6,377	21.8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29,876	29,140	-2.5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265	125	-52.8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14,736	14,835	0.7
지방자치단체 이전(Prélè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9,340	9,718	4.0
EU 부담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5,397	5,118	-5.2
<b>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avec fonds de concours))</b>	<b>72,598</b>	<b>77,573</b>	<b>6.9</b>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71,457	76,764	7.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69,613	74,885	7.6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17,742	17,974	1.3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12,820	14,539	13.4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3,653	3,601	-1.4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24,749	24,623	-0.5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10,649	14,148	32.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844	1,879	1.9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sup>1)</sup>	1,141	809	-29.1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Etat au 31 mars 2025," 2025. 5. 2.

## 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보고서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역대 중기재정법안(LPFP)<sup>427)</sup> 평가 보고서 발표(2025. 1. 22.)<sup>428)</sup>
  - (개요) 역대 5개의 중기재정법안 중 특이점이 있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2개의 법안<sup>429)</sup>을 제외하고 공공채무 목표수준 이탈 원인에 대해 거시경제요인을 중심으로 분석
    -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중기재정 법안은 총 3개로, ① 2012~2017 중기재정법안 ② 2014~2019 중기재정법안 ③ 2023~2027 중기재정법안 등이 해당
  - (주요내용) 계획과 달리 공공채무 목표 비율은 빈번히 초과되어 달성 실패하였으며, 주요 이탈 원인으로 과거 전망 대비 경제성장률 저조 및 이자지출 제외 재정지출 (dépense publique primaire)<sup>430)</sup> 부문에서 계획 대비 초과 지출이 제시됨
    - (경제성장률) 평균적으로 명목 GDP 규모의 경우 2014-2019 중기재정법안 기간은 과거 전망에 부합하였으나, 실질 GDP 성장률은 전 기간에 대해 과대평가됨
    - (재정지출) GDP 대비 재정지출의 목표 비율은 중기재정계획 제정 시 과소하게 설정되었으며, 이는 낮은 경제성장률에 주로 기인하나 물가 상승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정부지출의 구매력을 유지했기에 정책적 노력 또한 부재하다고 평가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EU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에 대한 의견 발표(2025. 4. 16.)<sup>431)</sup>
  - \* 연례 추진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과거 및 현재 연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는 향후 기간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이 의견서 서두에 적시됨
  - (경제전망 평가) 2025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기존 전망(2025 예산법) 0.9%

427)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428) 최고재정자문위원회, "Pourquoi les objectifs de ratio de dette publique fixés dans les lois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n'ont-ils pas été atteints ?," 2025. 1. 22., <https://www.hcfp.fr/sites/default/files/2025-01/Note%20d%27%C3%A9tude%20n%C2%B02025-1.pdf>, 검색일자: 2025. 2. 20.

429) 제정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2009~2012 중기재정법안과 2023년 말 채택되어 현재 시행 중이라 평가 불가능한 2023~2027 중기재정법안을 제외

430) 보고서는 세액공제 지출은 제외하고 재정지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유는 2010년 국가계정 회계기준 변경 중 세액공제 관련한 변동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밝힘.

431)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 rapport d'avancement annuel 2025 du 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2025-2029," 2025. 4. 1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5-3-rapport-davancement-annuel-2025>, 검색일자: 2025. 4. 18.

대비 0.2%p 하향 조정하여 0.7%로 전망하였으며, 경제 학계 예상(0.6%)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물가) 2025년 물가상승률 1.4% 전망은 최근 유가 하락 및 유로화 강제 추이를 고려할 시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
- (고용) 정부는 비농업 민간 부문 임금 지급 총액(*prévision de masse salariale dans les branches marchandes non agricoles*) 증가율을 1.9%,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증가율을 2.4%로 전망하였으나 다소 낙관적인 수치로 보임
- (재정전망 평가) 2025년 재정적자 전망은 2024년보다 개선되어 GDP 대비 5.4%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강력한 지출 통제와 지방 정부 지출 둔화를 전제함을 주의
  - (세입) 자연적 세수 증가율 2.1% 및 세입 증가율 3.8% 전망이 기반하는 경제전망이 낙관적임에 따라 세입 전망도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
  - (재정지출) 2025년 순기초지출 증가율 전망은 0.9%이며, 해당 전망이 중기재정 계획에서 계획한 상한선(0.8%)을 초과한 수치임을 지적하고 연간 증가 한도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
- (향후 중기재정계획 평가) 2025년 이후 프랑스 정부의 재정전략은 구체성과 신뢰성이 부족
  -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시나리오는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고,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 절감 조치와 정책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거나 신뢰성이 부족

## 라. 사회보장부문 보고서

- 프랑스 회계감사원, 2024년 사회보장부문 운영상황 보고서 발표(2025. 5. 26.)<sup>432)433)</sup>
  - 2024년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적자는 전년(108억유로) 대비 증가한 153억유로 기록
    - 202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예산법 전망 대비 48억유로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432)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Sécurité sociale: un financement non assuré" sauf mesures vigoureuses de redressement," 2025. 5. 27.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8737-securite-sociale-un-financement-non-assure-terme>, 검색일자: 2025. 5. 28.

433)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5*, 2025. 5. 26.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securite-sociale-2025>, 검색일자: 2025. 5. 28.

부문이 전체 적자의 90%에 상응

- 예산법 재정 당시 고등재정위원회 등이 지적하였던 낙관적인 가정 채택으로 인한 세수 결손이 적자폭 증가의 주 원인으로 기여
  - 2025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21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보장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8년에 누적적자가 241억유로에 이를 전망
- 2024년부터 사회보장 적자 충당 재원이 사회보장채무 상환기금(CADES)<sup>434</sup>에서 각 부문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구 중앙청(ACOSS)<sup>435</sup>으로 전환됨
  - 사회보장채무 상환기금의 연간 조달 능력<sup>436</sup>을 초과하는 적자가 발생하는 분기점이 2025년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추정됨
  - 사회보장기구 중앙청은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에 의해 차입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 이후 연평균 부채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

**표 3-Ⅳ-17 프랑스 202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2024년 결산	결산 비교: 2023년 대비 2024년	2024년 비교: 예산법 대비 결산
건강보험(Maladie)	-11.1	-8.5	-13.8	-2.7	-5.3
산재보험(AT-MP)	1.4	1.1	0.7	-0.7	-0.4
법정연금기금(Vieillesse)	-2.6	-5.8	-5.6	-3.0	0.2
가족수당국가기금(Famille)	1.0	0.8	1.1	0.1	0.3
자율연대국가기금(Autonomie)	-0.6	1.2	1.3	1.9	0.1
기존사회보장제도(total Robss) 총계	-11.9	-11.3	-16.4	-4.5	-5.1
기존사회보장제도+노령연대기금(RG+FSV)	-10.8	-10.5	-15.3	-4.5	-4.8

주: 모든 수치는 각 부문별 재정수지를 의미

자료: 프랑스 회계감사원,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e 2024-Tableau n° 1*, 2025. 5. 26

434) 사회보장채무 상환기금은 1996년에 사회보장제도의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장기관으로, 사회보장부문 채무 상환 기여금(CRDS) 및 일반사회공헌세(CSG) 등 세입을 통해 원금 상환 및 이자비용을 충당하며 채권 발행등을 통해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자료: 사회보장채무 상환기금, <https://www.cades.fr/fr/ressources/presentation-des-ressources>)

435) 사회보장기구 중앙청은 1967년에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자원과 현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회보장 세입을 중앙 징수 및 배분 등의 업무 수행(자료: 프랑스 정부 공공 정보 플랫폼, <https://annuaire.service-public.fr/gouvernement/2ebb4281-f836-48b6-9b15-4e305d2df145>)

436) 사회보장채무 상환기금은 입법 절차 등에 의해 배정된 사회보장기금의 누적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비용 충당과 원금 상환을 담당하며, 기존까지 인수한 사회보장 채무 청산을 기관 존속 기한인 2033년까지 완수할 예정

## 마. 기타 보고서

### ■ 프랑스 감사원, 예외적 지원(aide exceptionnelles)에 대한 지출 검토 보고서 발표(2025. 1. 9.)<sup>437)</sup>

- \* 해당 보고서는 2024년 3월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이 감사원에 의뢰한 세 가지 주제<sup>438)</sup>의 지출 검토 중 두 번째 보고서에 해당하며, 2024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총리 불신임권 등 정치적 혼란 등을 사유로 발표 일정이 연기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프랑스 정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적 지원 중 2024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관련 지출 절감 방안 12개를 제시
  - 코로나19 팬데믹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지원<sup>439)</sup>은 위기 안정 이후에도 일부만 철회되어 재정 부담을 가중
- 다섯 가지 정책 영역에서 12개의 지출 절감 방안을 발굴하였으며, 해당 방안 수용 시 2025년 예산의 경우 약 15억유로의 예산 지출 삭감, 약 12억유로의 조세 지출 절감, 약 7억유로의 지출 예방(약정 미승인 등) 달성 가능
  - (직업 훈련) ① 견습 채용 대상 선정 시 학위 및 기업 규모 기준 강화 ② 고등 교육 지원금 수준을 학위 취득의 평균 소요 비용으로 제한 ③ 직업 훈련 기여금(Cufpa)<sup>440)</sup> 납부 면제 또는 감면을 폐지 ④ FNE-Formation<sup>441)</sup> 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팬데믹 이전으로 복원 ⑤ 청년 참여 계약(CEJ)<sup>442)</sup> 제도 축소
  - (가계 구매력 재고 세제 혜택) ⑥ 주행거리 실비 공제율<sup>443)</sup> 인하 ⑦ 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하

437)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Les mesures d'aide exceptionnelles: une sortie de crise à achever pour le budget de l'État," 2024. 1. 9.,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es-mesures-daide-exceptionnelles-une-sortie-de-crise-achever-pour-le-budget-de-letat>, 검색일자: 2025. 1. 20.

438) 세 가지 주제는 ① 위기 조치 및 예외적 지원 철회 ② 지방정부의 공공재정 건전성 ③ 건강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

439) 예외적 지원의 경우 2024년 재정 적자에 경기 부양책 43억유로 및 에너지 관련 지원 52억유로의 영향을 미침.

440) 직업 훈련 자금 지원을 위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공평한 경쟁의 보장 및 직업 훈련생 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함.

441) 산업 및 기술 급변 등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직원 재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442)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교육,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소득 보장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

443) 프랑스 행정 정보 제공 포털, "Frais professionnels: les barèmes kilométriques 2024 restent identiques à ceux de l'an dernier," 2024. 4. 9.,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686>, 검색일자: 2025. 1. 21.

- (농업 및 임업의 친환경 전환) ⑧ 농업 관련 예산을 2023~2027년 중기재정법안<sup>444</sup> 수준으로 복원
- (친환경 차량 지원) ⑨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무게 상한의 하향 조정 ⑩ 건설 및 공공 부문의 경우 세금 감면 종료
- (문화 관련 산업 지원) ⑪ ICC/Tech&Touch 펀드<sup>445</sup> 신규 약정 금지 및 추가 예산 조달 금지 ⑫ 문화 및 디지털 유산 투자 프로젝트<sup>446</sup> 관련 예산 취하 및 중단

**표 3-IV-18 예외적 지원 지출 검토 방안**

(단위: 백만유로)

유형	절감 방안	감축 규모	
		2025년	2027년
예산 지출 삭감	건설 대상 기준 강화	745	2,857
	고등 교육 지원금 수준 하향	255	255
	FNE-Formation 지원 규모 축소	86	86
	청년 참여 계약(CEJ) 제도 축소	255	454
	전기차 보조금 대상(무게 기준) 축소	200	200
조세 지출 절감	직업 훈련 기여금 감면 혜택 폐지	373	373
	주행거리 기반 실비 공제율 인하	530	400
	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하	200	200
	건설 및 공공 부문 경우 세금 감면 종료	60	179
지출 예방	농업 관련 예산 축소	537	
	ICC/Tech&Touch 펀드 중단	90	
	문화 및 디지털 유산 투자 프로젝트 중단	104	

자료: 감사원, "LES MESURES D'AIDE EXCEPTIONNELLES: UNE SORTIE DE CRISE À ACHEVER POUR LE BUDGET DE L'ÉTAT-Récapitulatif des propositions d'économies," 2025. 1.

■ 프랑스 공공회계 담당 특임 장관 및 고용·보건·연대·가족 장관, 2024년 공공 재정 사기 (fraudes aux finances publiques) 검토 보고서 발표(2025. 3. 14.)<sup>447</sup>

- (배경) 2023년 6월 보조금, 사회보장, 세입, 세관 분야에서 부정 수급, 탈세 등 공공 재정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발표<sup>448</sup>되었으며 동 보고서는 해당 조치의

444)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2023-2027

445) ICC/Tech&Touch 펀드란 문화 및 창조 산업(CCI) 스타트업 전용 펀드(ICC 펀드)와 새로운 기업 모델 및 신기술과 문화 창조 콘텐츠를 융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시드 및 벤처 캐피탈 펀드(Tech&Touch 펀드)를 의미

446) l'appel à manifestation d'intérêt Culture, Patrimoine numérique

447) 프랑스 경제재정부, "Bilan 2024 et perspectives: lutter contre toutes les fraudes," <https://presse.economie.gouv.fr/bilan-2024-lutter-contre-toutes-les-fraudes/>, 검색일자: 2025. 3. 18.

## 초기 결과 평가 및 계획을 수록

- (2024년 평가) 2024년에 공공 재정 사기로 200억유로가 적발되었으며, 회수한 금액은 130억유로에 상응<sup>449)</sup>
  - (세입) 2024년 세무 감사 결과로 개인과 기업에 추정된 금액은 167억유로로 2023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마이닝 등의 세무 감사의 효율성 증가의 영향을 받음
  - (사회보장) 허위 신고, 신분 도용 등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사기 금액은 2024년 29억유로에 상응
  - (보조금) 부정 수급과 목적 이외 사용 등으로 적발된 보조금 사기는 2024년 4억 8,000만유로에 달함
  - (세관) 보고 의무 위반으로 2024년 압류된 금액은 7,120만유로에 이룸
- (계획) 유형별 공공 재정 사기 퇴치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세입)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 적발 관련 담당자 교육, 전자세금신고서로 전면 전환, 인적 자원 투입 강화 등을 포괄하는 신규 탈세 방지 조치 발표
  - (사회보장) 2023년에 수립한 공공재정 사기 퇴치 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부정 수급 회수 확대 목표
  - (보조금) 2023년 7월부터 사기 방지 부처간 공조 위원회(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Coordination Anti-Fraude)가 출범하여 동원된 바 있으며, 향후 공공회계 담당 특임 장관의 지원으로 사기 방지 합동 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anti-fraude)를 설립하여 조직적 사기와 지하 경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할 예정
  - (세관)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세관 지역 조사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며, 국가 공공 금융 사기 방지 사무국(Office national Anti-fraude aux finances publiques)을 확대할 예정

448) 프랑스 경제재정부, "01/06/2023 - Dossier de presse - Feuille de route du plan "Lutte contre toutes les fraudes aux finances publiques,"" <https://presse.economie.gouv.fr/01062023-dossier-de-presse-feuille-de-route-du-plan-lutte-contre-toutes-les-fraudes-aux-finances-publiques/>, 검색일자: 2025. 3. 18.

449) 비견할 만한 수치로 2023년 프랑스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1조 6,099억유로에 상응함을 참조(자료: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panorama-finances-publiques>)

V

영국<sup>450)</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25회계연도: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2025-26회계연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표 3-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12. 19.	영국 통계청, '2022-23회계연도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2025. 1. 15.	영국 재무부,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에 대한 성과 발표
2025. 1. 27.	영국 노동·연금부, 생활비 보조금(Cost of Living Payment) 평가보고서 발표
2025. 2. 6.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4.75→4.50%) 결정
2025. 2. 11.	영국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5. 2. 11.	영국 재무부,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잠정예산안 발표
2025. 2. 25.	영국 총리, 2027-28회계연도부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로 증액 발표
2025. 2. 27.	영국 재무부, 2023-24회계연도 중앙정부 초과 지출 설명서 발표
2025. 3. 18.	영국 노동·연금부, 고용 촉진을 위한 대규모 복지 개혁 발표
2025. 3. 26.	영국 재무부, '봄 성명서 2025' 발표
2025. 4. 2.	영국 교육부,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확충 사업 1단계 추진 발표
2025. 4. 7.	영국 내각부, 준정부기관(ALBs) 존속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 발표
2025. 5. 8.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4.50→4.25%) 결정
2025. 5. 15.	영국 재무부,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 발표
2025. 5. 19.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특정 R&D에 대한 10년 단위 장기 예산 체계 도입
2025. 5. 22.	영국 노동·연금부,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오지급 차단 현황 발표
2025. 6. 11.	영국 재무부, '지출검토 2025' 발표
2025. 6. 11.	영국 재무부, '부처별 효율화 계획' 발표
2025. 6. 11.	영국 재무부, '2024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정부 대응 발표

자료: 저자 작성

4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은숙 선임연구원(kesdww@kipf.re.kr)

## 01 예산 및 결산

### 가. 본예산

- 영국 재무부,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잠정예산안(Vote on Account) 발표(2025. 2. 11.)<sup>451)</sup>
  - (개요) 영국에서는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5월경 발표됨에 따라 2월경 잠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용
    - 이는 새 회계연도 시작 후 몇 개월 동안 정부가 기존 서비스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지출 권한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현 회계연도 본세출예산과 추경예산을 모두 고려하여 45% 내외로 편성
  - (주요 내용)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잠정예산 총지출은 약 4,941억파운드, 이는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의 47.5%, 추경예산의 44.0%에 해당
    - 부처별지출한도는 2,492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은 2,013억파운드 편성

표 3-V-2 2025-26회계연도 잠정예산

구분	금액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249,163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201,255
<b>총 순예산(Total Net Budget)</b>	<b>450,418</b>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43,659
<b>총 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b>	<b>494,077</b>
<b>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b>	<b>409,372</b>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5-26 - Vote on Account*, 2025. 2. 11., p. 5., Table 1, 저자 재구성

451) HM Treasury, "Vote on Account 2025-26," Corporate report, 2025. 2.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ote-on-account-2025-26>, 검색일자: 2025. 2. 12.

- 영국 재무부, ‘봄 성명서 2025(Spring Statement 2025)’ 발표(2025. 3. 26.)<sup>452)</sup>
  - (배경) 영국은 예산안(Budget) 외에 성명서(Statement)를 통해 경제·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새로운 조세·지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
    -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가을에, 성명서는 다음 해 봄에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Economic and Fiscal Outlook)와 함께 발표
  - (경제전망) 2025년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2026년부터는 통화정책 완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1.0%로, 지난 10월 전망(2.0%)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이후 2030년대까지 평균 1.7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약 3분의 1이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 요인, 나머지 3분의 2는 금리 상승 기대, 에너지 가격 상승,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경기적·일시적 요인으로 분석
      - 2026년 GDP 성장률은 통화정책 완화, 에너지 가격 하락, 경제 유희자원 활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로 반등하고, 이후 1.7~1.8%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10월 전망 대비 0.6%p 높은 수치로 국제 유가 변동성과 가스·전기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
      - 2026년 이후 에너지 가격 하락, 식품 가격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0%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5년 4.5%(158만명)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에는 4.1%(150만명)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sup>453)</sup>
      - 고용률은 2024년 하반기 60.5%에서 2029년 60.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동 참여율 감소에 기인

452)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5,"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pring-statement-2025>, 검색일자: 2025. 4. 14.

453) 실업률과 실업자 수 데이터를 이용해 역산한 결과, 영국의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는 2025년 3,554만명, 2028년 3,608만명으로 산출

표 3-V-3 주요 경제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실질 GDP 성장률	0.9	1.0	1.9	1.8	1.7	1.8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5	3.2	2.1	2.0	2.0	2.0
실업률	4.3	4.5	4.3	4.2	4.1	4.1
고용자수	33.6	34.0	34.2	34.4	34.6	34.8

자료: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5*, 2025. 3., p. 10, Table 1.1

- (재정전망) 지난 10월 가을 예산안 발표 이후 재정전망이 악화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조정을 통해 순차입 증가 규모가 감소하고, 채무 수준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순차입) 순차입은 2025-26회계연도 GDP 대비 3.9%(1,177억파운드)에서 2029-30 회계연도 2.1%(740억파운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121억파운드, 35억파운드 증가한 수치
    -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전, 2029-30회계연도 순차입은 지난 10월 전망 대비 131억 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개혁(48억파운드), 세계 변경(22억파운드) 등의 조치를 통해 증가폭을 97억파운드 축소
  - (순채무) 순채무는 2025-26회계연도 GDP 대비 95.1%(2조 8,972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 96.1%(3조 3,913억파운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을 제외한 순채무는 2029-30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비중이 매년 증가 하여, 2030년 말에는 순채무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간 펀딩 프로그램<sup>454</sup>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APF) 종료에 기인

454) Term Funding Scheme(TFS): 2016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표 3-V-4 주요 재정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b>수입·지출</b>							
공공부문 경상수입 <sup>1)</sup>	1,098.6	1,141.2	1,229.5	1,292.3	1,350.7	1,394.0	1,445.0
(GDP 대비 %)(a)	39.9	39.7	41.1	41.7	41.9	41.7	41.7
총관리지출(TME) <sup>1)</sup>	1,229.9	1,278.6	1,347.2	1,389.5	1,430.8	1,471.4	1,519.0
(GDP 대비 %)(b)	44.7	44.4	45.0	44.8	44.4	44.1	43.9
공공부문 경상지출(c)	39.7	39.4	39.8	39.6	39.3	39.1	39.0
공공부문 순투자(d)	2.6	2.7	2.7	2.7	2.7	2.5	2.4
감가상각(e)	2.4	2.4	2.5	2.5	2.5	2.4	2.4
<b>재정적자</b>							
공공부문 순차입(b-a)	4.8	4.8	3.9	3.1	2.5	2.3	2.1
경기조정 순차입	5.0	4.6	3.6	3.0	2.5	2.3	2.1
경상예산 적자(c+e-a)	2.2	2.1	1.2	0.4	-0.2	-0.2	-0.3
<b>채무</b>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sup>2)</sup>	87.0	89.9	92.0	93.4	94.2	94.8	95.0
공공부문 순채무 <sup>2)</sup>	95.5	95.9	95.1	95.8	96.1	96.3	96.1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3월 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5*, 2025. 3., p. 162; p. 164; p. 166, 재구성

- (주요 정책) 국방 예산 확대, 주요 개혁 추진,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
  - (국방 예산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테러 위협 증가, 급격한 기술 변화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2025-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지난 10월 대비 22억 파운드 증액
    - 이는 2027년 4월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의 국방 지출을 GDP 대비 2.5%로 확대하고, 경제·재정 상황에 따라 다음 의회에서 3%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
    - 2025-26회계연도에 증액된 예산은 NATO 동맹국과의 합동 훈련 강화, 지향성 에너지 무기<sup>455)</sup> 등 첨단 군사 기술 개발 등에 투자되어,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는 군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55) directed energy weapon: 전자기파 또는 입자 빔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출력을 생성하여 이를 표적에 발사함으로써 표적을 파괴 혹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무기체계

- (주요 개혁 추진) 조세 격차 해소, 복지 개혁, 행정 효율화 및 공공부문 개혁 등을 추진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
  - (조세 격차 해소) 지난 가을에 이어 조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2029-30회계연도까지 연간 10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
    - \* 자동화된 세금 채무 회수 시스템 도입, 세금 조사 인력(compliance staff) 500명 추가 채용 등
  - (고용 촉진을 위한 복지 개혁) 복지 시스템을 근로 친화적이면서 재정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여, 2029-30회계연도 복지지출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48억파운드 절감
    - \* 2026-27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고용, 건강 및 기술 지원에 투자, 통합급여 내 급여수준 조정을 통한 근로 유인 강화, 개인자립수당<sup>456</sup>) 평가 방식의 근본적 검토 및 수급 기준 강화 등
  - (공공부문 개혁) 공공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2억 5천만파운드 규모의 전환 기금(Transformation Fund)을 조성
- (경제 활성화 정책)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성 회복, 투자 확대, 경제 개혁을 통해 영국 전역의 번영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
  - (투자 촉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인프라, 주택, 국방 혁신 등의 분야에 지난 10월 대비 130억파운드를 추가로 투자
  - (건설 부문 활성화) 주택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건설 인력 양성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

■ 영국 재무부,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sup>457</sup>) 발표(2025. 5. 15.)<sup>458</sup>

- 2025-26회계연도 총 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약 1조

456)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PIP):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건강 상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①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을 것 ② 해당 건강 상태로 인해 특정한 일상 활동 수행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457) 중앙정부 부처의 연간 지출 계획으로,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세출예산안

458) HM Treasury, "Main Supply Estimates 2025 to 26," 2025. 5.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in-supply-estimates-2025-to-2026>, 검색일자: 2025. 5. 22.

1,023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206억파운드(1.8%) 감소

- 부처별 지출한도(DEL)<sup>459</sup>)는 약 5,628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sup>460</sup>)은 약 4,355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190억파운드(3.5%) 증가, 433억파운드(9.1%) 감소
-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sup>461</sup>)은 약 1,04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억파운드(3.7%) 증가
- 2025-26회계연도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은 약 8,968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424억파운드(5.0%) 증가

표 3-V-5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3-24 실적치	2024-25 잠정치	2025-26 계획
부처별 지출한도(DEL) (a)	488,635	543,773	562,790
자원 DEL	392,577	440,410	445,525
자본 DEL	96,057	103,363	117,265
연간 관리 지출(AME) (b)	300,756	478,882	435,534
자원 AME	228,007	405,310	365,063
자본 AME	72,749	73,573	70,470
<b>총 순예산 (a+b) (Total Net Budget)</b>	<b>789,391</b>	<b>1,022,656</b>	<b>998,323</b>
총 비예산 지출(c) (Total Non-Budget Expenditure)	93,326	100,314	104,017
<b>총 지출 (a+b+c) (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b>	<b>882,717</b>	<b>1,122,970</b>	<b>1,102,340</b>
현금주의 조정 (d) (Resource to cash adjustment)	-102,277	-268,555	-205,566
<b>총 순현금소요액 (a+b+c+d) (Total Net Requirement)</b>	<b>780,440</b>	<b>854,416</b>	<b>896,774</b>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5-26: Main Supply Estimates*, 2025. 5., p. 33, Table 1, 2, 재구성

459) Department Expenditure Limit: 정부 부처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출

460)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461)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 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 영국 재무부, '지출검토 2025(Spending Review 2025)' 발표(2025. 6. 11.)<sup>462)</sup>
  - (개요)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3~4년에 대한 부처별지출한도(DEL)<sup>463)</sup>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번 지출검토는 다음 두 단계로 진행
    - (1단계) '지출검토 2021'에서 설정된 2024-25회계연도 지출 계획을 수정하고, 2025-26회계연도 부처별 예산을 설정하여, 이를 2024년 10월 '가을 예산안(Autumn Budget 2024)'을 통해 1차적으로 발표
    - (2단계) 자인지출의 경우 2028-29회계연도까지, 자본지출의 경우 2029-30회계연도까지 계획을 설정하여, 1단계 결과를 포함한 '지출검토 2025'를 2025년 6월 11일에 발표
  - (우선순위) 이번 '지출검토 2025'는 정부혁신, 국가안보, 보건 및 공공서비스, 경제성장 및 청정 에너지에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부처별 예산을 배분<sup>464)</sup>
    - (정부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낭비 제거 및 효율성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지역 밀착형 고숙련 공무원 조직 구축을 통해 정부의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
      - 32억 5,000만파운드 규모의 변혁기금(Transformation Fund)을 통해 예방적 공공서비스 체계와 행정 현대화를 추진
      - 국가의료서비스(NHS)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전반에 디지털·AI 투자 확대
      - 2025-26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모든 부처의 행정예산(administration budget)<sup>465)</sup>을 실질 기준<sup>466)</sup>으로 16% 이상 감축하여, 중앙정부 운영비를 대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 (국가안보) 국제 정세 불안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정화, 국경 통제 강화,

462) HM Treasury, "Spending Review 2025," 2025. 6. 11.,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pending-review-2025>, 검색일자: 2025. 6. 12.

463) 총지출에 해당하는 총관리지출(TME)은 부처별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로 구분되고, 각각은 자원(Resource) 지출과 자본(Capital) 지출로 구분. DEL은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출을, AME는 사회보장급여, 연금 등과 같이 예측·관리 전망이 어려운 지출을 의미. 자인지출은 정부의 일상 운영 및 행정 비용을 포함하는 경상지출을, 자본지출은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지출을 의미

464) '지출검토 2025'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 및 7월에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인 『영국 지출검토 2025 (Spending Review 2025)』를 참고 바람.

465) 정책 실행이나 서비스 제공 자체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라, 부처나 공공기관이 자체 운영에 필요한 관리·행정비용에 사용하는 예산

466) 실질 기준(real terms)은 예산책임청(OBR)의 2025년 3월 경제·재정전망에서 제시한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되고, GDP 디플레이터 계산에 활용되는 실질 GDP는 기준연도 고정 방식이 아닌 체인 가중(chain=linked) 방식으로 계산

## 국가안보 역량 확충을 중점 추진

- 국방비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6%로 확대하고, 이후 경제·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차기 의회에서 3%까지 확대
  - 정보기관 예산을 증액하여 첨단기술 유지 및 적대국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
  - 불법 이주와 영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물품의 유입을 줄이고, 인신매매 및 밀수 피해자를 보호
- (보건 및 공공서비스) 국가의료서비스(NHS)와 지방정부, 교육, 사법·치안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
- NHS의 자원지출을 2023-24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실질 기준으로 약 290억파운드(명목 기준 530억파운드) 증액하여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을 추진
  - 지방정부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8-29회계연도에 2024-25회계연도 대비 34억파운드의 보조금을 추가 제공
  - 학교 재건 프로그램(School Rebuilding Programme)에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24억파운드를 투자하여 500개 이상 학교의 재건을 추진
  - 2024-25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70억파운드를 투자하여 1만 4,000개 신규 교도소 수용 공간을 확보
- (경제성장 및 청정 에너지) 2025-26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2024년 3월 전망 대비 자본지출을 1,200억파운드 확대
- 잉글랜드를 9개의 광역 대도시권으로 구분하여 장기적인 광역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2027-28회계연도부터 2031-32회계연도까지 총 156억파운드의 예산을 지원
  - 10년간 추진되는 신규 ‘부담가능 주택 공급 프로그램’<sup>467)</sup>에 390억파운드를 투자
  - 1988년 이후 최초 국영 원자력 발전소인 Sizewell C<sup>468)</sup> 건설을 위해 2023-24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총 142억파운드 배정
  - 향후 10년간의 현대적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수립에 따라, R&D 예산을

467) Affordable Homes Programme: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 및 임대되는 모든 형태의 주택을 의미

468) 서퍽 동부(East Suffolk) 해안 600만 가구에 저탄소 전기를 공급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2025-26회계연도 204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 226억파운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예산 배분) 부처별지출한도 총액은 2023-24회계연도와 2028-29회계연도 사이에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2.3% 증가하여, 공공서비스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투자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표 3-V-6〉 참고)

- 부처별지출한도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보건·사회복지부로, 2023-24회계연도 1,885억파운드에서 2028-29회계연도 2,467억파운드까지 증가(연평균 실질 증가율 2.8%)
- 부처별지출한도 규모가 가장 작은 부처는 재무부로, 2023-24회계연도 4억파운드에서 2028-29회계연도 5억파운드로 예상(연평균 실질 증가율 -0.4%)
- 부처별지출한도 실질 증가율이 가장 큰 부처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Sizewell C 제외)로, 연평균 16.0% 예상
- 부처별지출한도 실질 증가율이 가장 작은 부처는 외교·연방·개발부로, 연평균 -5.0% 예상

표 3-V-6 부처별지출한도(DEL) 배분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계획					연평균 실질 증가율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5-26 ~ 2028-29	2023-24 ~ 2028-29
보건·사회복지부	188.5	204.9	215.6	225.0	234.9	246.7	2.7	2.8
교육부	87.9	94.9	100.9	106.6	107.8	109.2	0.8	1.5
내무부	20.3	20.2	22.0	22.6	22.1	22.3	-1.4	-2.2
- 내무부(망명지원 제외)	15.6	16.3	18.4	19.0	19.2	19.8	0.5	0.2
법무부	11.9	12.9	13.9	14.9	15.3	15.6	2.0	3.1
법률 고문부(Law Officers' Departments)	0.9	1.0	1.1	1.1	1.2	1.3	5.3	6.2
국방부	53.9	60.3	62.2	65.5	71.0	73.5	3.8	3.6
단일정보계정(Single Intelligence Account)	4.2	4.5	4.5	5.1	5.1	5.4	3.7	2.7
외교·연방·개발부	11.1	11.1	12.1	9.8	9.2	9.9	-8.3	-5.0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지방정부	9.6	11.4	15.0	15.4	15.6	15.8	1.1	5.2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10.1	12.7	12.9	14.0	13.5	13.5	-0.6	3.0

표 3-V-6 의 계속

구분	실적	계획					연평균 실질 증가율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5-26 ~ 2028-29	2023-24 ~ 2028-29
문화·미디어·스포츠부	2.1	2.4	2.3	2.3	2.4	2.8	-1.4	-0.2
과학·혁신·기술부	12.7	13.9	15.2	15.9	16.4	16.5	0.9	2.8
교통부(High Speed 2 제외)	22.3	22.0	23.0	25.1	24.9	25.9	0.5	-0.4
교통부: High Speed 2	7.8	6.9	7.1	7.1	7.1	5.6	-9.3	-8.6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Sizewell C 제외)	5.3	5.6	11.4	10.0	11.1	12.6	2.7	16.0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Sizewell C	1.1	1.8	2.7	2.9	3.2	2.5	-3.7	15.6
환경·식품·농촌부	6.8	7.3	7.5	7.5	7.5	7.4	-2.3	-0.7
산업·통상부	2.6	3.2	3.3	3.7	3.8	3.8	3.0	5.8
노동·연금부	9.0	9.8	11.0	11.8	11.8	11.5	-0.2	2.1
국세청	6.7	5.9	6.8	7.3	7.1	6.9	-1.5	0.6
재무부	0.4	1.1	1.2	1.3	0.5	0.5	-1.9	-0.4
내각부	1.3	1.1	1.3	1.6	1.6	1.3	0.4	-2.2
스코틀랜드 정부	43.4	45.8	48.1	49.8	50.8	52.1	0.8	1.1
웨일스 정부	19.5	20.4	21.2	21.9	22.3	22.9	0.7	0.6
북아일랜드 행정부	16.9	17.7	18.4	18.8	19.2	19.8	0.5	0.5
소규모 독립기관들	2.7	3.3	3.2	3.6	3.4	3.4	-0.5	2.2
성장 미션 기금(Growth Mission Fund)	-	-	-	0.1	0.1	0.1	-	-
예비비(Reserves)	-	-	4.5	6.7	6.7	7.1	-	-
회계 조정	-	-	-	0.7	1.2	1.2	-	-
<b>부처별지출한도 총액</b>	<b>558.9</b>	<b>602.1</b>	<b>648.4</b>	<b>678.2</b>	<b>696.9</b>	<b>716.9</b>	<b>1.5</b>	<b>2.3</b>

자료: HM Treasury, *Spending Review 2025*, 2025, pp. 44-45.

## 나. 추가경정예산

- 영국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발표(2025. 2. 11.)<sup>469)</sup>
  - (개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세출예산안<sup>470)</sup>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매년 2월에 발표
    - 이는 촉박하고 긴급한 추가 지출이 요구되어 통상적인 세출예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특별 추가경정예산안(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과 구분
  - (주요 내용)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은 현재 계획 대비 약 840억파운드 증가한 1조 1,234억파운드로 수정
    - 부처별 지출한도(DEL)<sup>471)</sup>는 5,438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sup>472)</sup>은 4,789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각각 429억파운드, 374억파운드 증액
    - 총 비예산 지출<sup>473)</sup>은 1,008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38억파운드 증액
    - 총 순현금 소요액<sup>474)</sup>은 8,544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40억파운드 증액
      - 국방부(+90억파운드), 보건·사회복지부(+68억파운드), 스코틀랜드 사무소·법무 장관실<sup>475)</sup> (+25억파운드), 교육부(+21억파운드) 등에서 증액
      - 재무부(-23억파운드), 기업·통상부(-20억파운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14억파운드) 등에서 감액

469) HM Treasury, “Supplementary Estimates 2024-25,” Corporate report, 2025. 2.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24-25>, 검색일자: 2025. 2. 12.

470)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법률로 지출 권한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보통 5월에 발표(2024년에는 7월 4일 조기 총선 이후인 7월 17일에 발표)

471)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472)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주요 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473)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 관리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출

474)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발생주의 기준의 총 지출을 현금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475) Scotland Office and Office of the Advocate General: 스코틀랜드와 영국 정부의 중간 역할을 하며, 정책·법률·재정 측면에서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기관

표 3-V-7 2024-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4-25 현재 계획 (a)	2024-25 조정 규모 (b)	2024-25 수정 계획 (a + b)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500,906	42,867	543,773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441,522	37,360	478,882
<b>총 순예산(Total Net Budget)</b>	<b>942,428</b>	<b>80,227</b>	<b>1,022,656</b>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97,020	3,774	100,794
<b>총 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b>	<b>1,039,448</b>	<b>84,001</b>	<b>1,123,449</b>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89,001	-80,033	-269,034
<b>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b>	<b>850,447</b>	<b>3,969</b>	<b>854,416</b>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4-25 - Supplementary Estimates*, 2025. 2. 11., p. 4, Table 1

## 다. 결산

### ■ 영국 재무부, 2023-24회계연도 중앙정부 초과 지출 설명서(Statement of Excesses) 발표(2025. 2. 27.)<sup>476)</sup>

- (개요) 초과 지출 설명서는 중앙정부 부처들의 직전 회계연도 초과 지출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출권한을 승인받기 위해 매년 2월경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
  - 의회가 승인한 본세출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지출 범위(Ambit)를 벗어났거나, 연간 세출예산법<sup>477)</sup>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제출
- (주요 내용) 2023-24회계연도에는 세 개 기관이 승인된 지출 한도를 초과
  -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는 두 건의 신규 임대 계약 체결로 인해 자본 부처별지출한도 42만 2,000파운드를 초과 지출
  - 자격 및 시험 규제청(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은 자본 부처별지출한도 19만 3,100파운드를, 자본 연간관리지출<sup>478)</sup> 6만 4,000파운드를 초과 지출
    - 이는 신규 임대 계약이 예상보다 조기에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사용권 자산(right

476) HM Treasury, "Statement of Excesses 2023-24," 2025. 2.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ement-of-excesses-2023-24>, 검색일자: 2025. 3. 17.;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Excess votes 2023-24*, House of Commons, 2025. 2. 26.

477) Supply and Appropriation Act: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 부처의 자원 사용을 승인하고, 통합국고자금(Consolidated Fund)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

478) Annually Managed Expenditure(AME):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특징이 있음.

- of use asset) 및 관련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
- 비즈니스·무역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는 자원 부처별지출한도 2억 1,940만파운드를 초과 지출
    - 이는 정부가 2024년 3월 13일, 우체국 금융 전산망 Horizon 시스템 오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해당 발표가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
  - (검토) 공공회계위원회<sup>479)</sup>는 세 개 기관이 승인된 지출 한도를 초과한 이유를 검토하였고, 의회가 초과 지출 승인(Excess Vote)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하원에 제출<sup>480)</sup>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보건·복지·고용 정책

- 영국 노동·연금부, 생활비 보조금(Cost of Living Payment) 평가보고서 발표(2025. 1. 27.)<sup>481)</sup>
  - (배경) 2021년과 2022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생활비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
    -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은 2022년 10월 11.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2023-24회계연도 기준, 보조금 대상자는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sup>482)</sup> 수급자, 장애급여 수급자, 동계 연료 보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로, 각각 900파운드(1차 301파운드, 2차 300파운드, 3차 299파운드), 150파운드, 300파운드를 지급<sup>483)</sup>

479) Public Accounts Committee(PAC): 국가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지출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정부의 지출 책임을 감독하는 의회 위원회

480) 공공회계위원회(PAC)의 검토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 의회는 별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결을 통해 초과 지출을 승인

481)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Cost of Living Payments Evaluation," Research and analysis, 2025. 1.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payments-evaluation>, 검색 일자: 2025. 2. 3.

482) 통합급여, 소득 기반 구직급여, 소득 기반 실업급여, 근로세액공제 등

483) 총 재정규모는 112억파운드로 추계

- (개요) 2023-24회계연도 동안 시행된 생활비 보조금 정책의 운영 효과와 영향을 평가
  - 양적 설문조사(quantitative surveys)와 수급자 대상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를 병행하여 실시
- (주요 결과) ① 생활비 상승 경험 ② 보조금 지급 인식도 ③ 보조금의 사용 ④ 보조금의 체감적인 영향 측면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대다수의 보조금 수급자는 생활비 중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에너지 및 공공요금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응답
    -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급자는 지출을 줄이거나 신용카드 사용 증가, 대출 신규 또는 증액, 지인으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
    -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 건강 관련 지출이 있는 가구, 채무 상황 부담이 있는 가구는 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음
  - ② 대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게 나타남
    - 보조금 대상 중 연금 수급자의 64%는 사전에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복지급여 수급자의 47%, 연금 수급자의 32%만이 본인이 보조금 대상자임을 인지
    - 보조금 지급 후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92%, 연금 수급자의 95%, 장애급여 수급자의 77%가 보조금 수령을 인식
  - ③ 대부분의 보조금 수급자는 에너지 및 공공요금,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등 지출이 더 어려워진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
    - 일부는 보조금을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보다 일상적인 생활비로 소진했다고 응답하였고,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수급자의 상당수는 보조금을 수령한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하였고, 여러 번 나누어 지급받기보다 일괄 지급을 선호
  - ④ 보조금은 수급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필수 지출 항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고 평가
    - 수급자들은 보조금이 에너지 및 공공요금 납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상당수는 보조금 덕분에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응답

- 재정 회복력 및 개인 웰빙 향상, 급여 계좌로의 자동입금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영국 재무부,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에 대한 성과 발표(2025. 1. 15.)<sup>484)</sup>

- (개요) 2024년 7월, 조기총선을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를 신설<sup>485)</sup>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78억파운드(정부자금과 민간투자 유치금 포함)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성장 및 청정 에너지 분야 정책을 지원하고 영국 전역에 혁신적인 투자를 강화
- (성과) 지난 6개월 동안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16억파운드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영국 전역에 성장을 촉진
  - 8,600개의 일자리 창출은 디지털 및 청정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택 개보수(retrofit) 부문에서 6,5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약 16억파운드 규모의 민간 투자금은 청정 에너지 및 성장 부문 프로젝트에 투입
    - 콘월, 요크셔, 링컨셔, 컴브리아 지역 다수의 기업과 가구에 광대역 통신망을 연결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
- (향후 계획) 영국 인프라 은행(UKIB)<sup>486)</sup>의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
  -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그린 수소, 탄소 포집, 항만, 기가 팩토리(gigafactory), 녹색 철강 관련 산업에 투자
  - 지역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성장을 도모

484) HM Treasury,, “Chancellor’s National Wealth Fund fuels 8,600 jobs in six months,” News story, 2025. 1. 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s-national-wealth-fund-fuels-8600-jobs-in-six-months>, 검색일자: 2025. 1. 21.

485) 세부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 6., p. 38. 참고

486) UK Infrastructure Bank: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 설립된 영국 정부 소유의 정책금융 기관으로, 주로 청정에너지, 운송, 디지털, 수자원 폐기물과 관련한 민간과 지역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자본투자, 보증, 자문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 영국 노동·연금부, 고용 촉진을 위한 대규모 복지 개혁 발표(2025. 3. 18.)<sup>487)</sup>

- (현황) 건강 및 장애 관련 복지 예산이 급증하여 2030년까지 연간 700억파운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sup>488)</sup>
  - \* 주당 10억파운드 이상, 국가의료서비스(NHS) 예산의 1/3 이상,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 예산의 3배 이상에 해당
  - 현재 청년 8명 중 1명이 취업, 교육, 훈련 중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280만명이 장기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 개인자립수당(이하 PIP)<sup>489)</sup> 수급자 수가 급증하여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로 연령대 PIP 수급자는 월 1만 5,300명에서 3만 5,1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16~24세 청년의 경우 월 2,967명에서 7,857명으로 급증
    -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 연령대 PIP 수급자 수는 2021년 200만명에서 5년 내 4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비용은 341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개혁 추진 방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되,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근로 참여를 촉진하며,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 (주요 개혁) ① 근로 불가능한 장애인 보호 ② 취업 지원 강화 ③ 비경제활동 방지 ④ 근로능력평가 시스템 개선 ⑤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
  - ① 근로 불가능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
    - (소득 보호) 현재 통합급여<sup>490)</sup>에서 건강 관련 추가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487)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Biggest shake up to welfare system in a generation to get Britain working," Press release, 2025. 3. 18., <https://www.gov.uk/government/news/biggest-shake-up-to-welfare-system-in-a-generation-to-get-britain-working>, 검색일자: 2025. 3. 2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athways to Work: Reforming Benefits and Support to Get Britain Working, 2025. 3.

488) 영국 노동·연금부의 2024년 가을 복지지출 전망(Expenditure and Caseload forecasts) 기준

489)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PIP):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건강 상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①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을 것 ② 해당 건강 상태로 인해 특정한 일상 활동 수행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GOV-UK, <https://www.gov.uk/pip>, 검색일자: 2025. 3. 24.)

490) Universal Credit: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소득기반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로,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도입. 실업자, 근로자(정규직, 자영업, 파트타임), 건강 상태로 인한 근로 불가자 중 저소득층이거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조건은 ① 영국 거주 ② 18세 이상 ③

기본수당 인상 혜택을 받으나, 향후 건강 관련 추가수당 감축 계획의 영향은 받지 않음

- (추가 재정 지원) 평생 지속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개인을 대상으로 통합급여 건강 관련 추가수당을 상향 조정(new premium)
- (근로능력평가<sup>491</sup>) 재심사 폐지) 근로 불가능한 장애 및 평생 장기 질환자의 근로능력평가 재심사를 폐지
- (보호 조치 개선)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 ②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 (취업 지원 패키지) 10억파운드 규모의 취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장애인 및 장기 질환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
- (새로운 지원 상담 도입)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이 조기에 취업 목표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상담을 도입
- (청년층 취업 지원 강화) 통합급여의 건강 관련 추가수당 적용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22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절감 예산은 청년층 취업 지원 및 훈련에 재투자

## ③ 조기 개입을 통한 장기 비경제활동 방지

- (근로 접근성 개선) 보조기구, 가전제품, 보조기술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
- (실업보험 개편) 기여기반 구직자수당<sup>492</sup>과 기여기반 고용·지원수당<sup>493</sup>을 통합

국가연금 수급 연령(State Pension age) 미만 ④ 현금, 저축, 투자를 포함한 자산 1만6,000파운드 이하. 급여는 기본수당(standard allowance)과 추가수당(extra amounts)으로 구성되며, 기본수당은 청구인의 연령과 동거 여부(싱글/커플)에 따라 정해지고, 추가수당은 동거 자녀 유무, 자녀의 장애 여부, 자녀 양육비, 청구인 장애 여부, 청구인 건강 상태, 주거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GOV·UK, "<https://www.gov.uk/universal-credit>", <https://www.gov.uk/universal-credit>, 검색일자: 2025. 3. 24.)

491) Work Capability Assessment(WCA): 복지 혜택 수급자들의 근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됨. ① 근로 가능(capable for work): 정규 구직 활동이 요구됨 ② 근로 제한(limited capability for work, LCW): 일부 근로가 가능하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구직 활동이 요구되지 않으며, 대신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③ 근로 관련 활동 제한(limited capability for work and work related activity, LCWRA):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며, 구직 의무가 면제되고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niversal-credit-if-you-have-a-disability-or-health-condition-quick-guide/universal-credit-if-you-have-a-disability-or-health-condition>, 검색일자: 2025. 3. 21.).

492) Jobseeker's Allowance(JSA): 근로 능력은 있으나 실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로, 소득기반 JSA(통합급여로 대체)와 기여기반 JSA로 구분되며, 최대 6개월(182일) 동안 지급됨((GOV·UK, <https://www.gov.uk/jobs-and-work/allowances/jobseekers-allowance>).

하여 비소득심사(non-means tested) 실업급여로 일원화하고, 지급 기간에 제한을 적용

④ 근로능력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회복

- (근로능력평가 폐지)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하고 PIP 평가<sup>494</sup> 기반의 새로운 단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상 생활 영향 중심으로 근로능력을 평가
- (대면 평가 확대) 대면 평가를 늘려 평가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평가 방식을 적용
- (장기적 PIP 평가 개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바탕으로 PIP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 (시도할 권리(Right to Try) 보장) 일이나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 즉각적인 재심사나 관련 급여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 (장애급여 재심사 재개) 2021년 이후 중단된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에 대한 재심사를 재개(단, 평생 일할 수 없는 경우와 말기 질환자는 면제)

⑤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 (PIP 수급자격 강화) 기존 수급자격 외에도 일상 생활 항목 하나에 최소 4점 충족 필요
- (통합급여 조정(rebalancing)) 2029-30회계연도까지 기본수당을 불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여 연간 775파운드(25세 이상 독신자 기준)를 추가 지원<sup>495</sup>
  - : 이는 현재 건강 관련 추가수당이 기본수당보다 커 근로 불능을 증명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 (효과 및 향후 일정) 2029-30회계연도에 50억파운드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 3월 26일 봄 성명서(Spring Statement)를 통해 개별 조치에 대한 세부 비용을

[www.gov.uk/jobseekers-allowance](http://www.gov.uk/jobseekers-allowance), 검색일자: 2025. 3. 25.)

493)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기반 ESA(통합급여로 대체)와 기여기반 ESA로 구분되며, 근로능력평가(WCA) 결과에 따라 근로 제한(LCW) 그룹의 경우 최대 12개월, 근로 관련 활동 제한(LCWRA) 그룹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지급됨((GOV-UK, <https://www.gov.uk/employment-support-allowance>, 검색일자: 2025. 3. 24.)

494) 현재 PIP의 경우, 일상 생활(daily living) 10개 항목이나 이동성(mobility) 2개 항목에서 최소 8점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각 항목별 점수는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부여되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점수가 결정됨. 예를 들어, 음식 준비 항목에서는 도움 없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할 수 있으면 0점, 반면 음식 준비 및 요리를 전혀 할 수 없으면 8점이 부여됨.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 여부 및 급여 수준이 결정됨(Benefits and Work, <https://www.benefitsandwork.co.uk/personal-independence-payment-pip/pip-points-system>, 검색일자: 2025. 3. 25.)

495) 부부와 25세 미만 독신자의 기본수당도 동일한 비율의 증가 적용

발표하고, 주요 개혁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

- 영국 노동·연금부, 통합급여(Universal Credit)<sup>496</sup> 오지급 차단 현황 발표(2025. 5. 22.)<sup>497</sup>
  - (배경) 정부는 통합급여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오류<sup>498</sup>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기 위해 2022년부터 표적 사례 검토(Targeted Case Review, 이하 TCR)를 도입
    - 2025년 3월까지 노동·연금부와 외부 지원업체 Teleperformance<sup>499</sup> 소속의 검토 인력 5,930명을 확보하여, 2030년 3월까지 연간관리지출(AME) 136억파운드 절감을 목표
  - (추계 방법) 오지급 차단 규모는 과거의 오지급을 적발·회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연금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오지급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지를 추정하여 미래의 오지급을 방지한 효과까지 포함하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하여 활용(Future Overpayment Prevented methodology)
  - (현황) 2022-23회계연도부터 2024-25회계연도까지 TCR 팀은 총 114만 9,940건의 청구를 검토하여, 연간관리지출 11억 6,800만파운드 규모의 오지급을 차단(〈표 3-V-8〉 참고)
    - 2024년 7월 이후, 노동·연금부는 TCR 팀 인력을 약 두 배로 확대하였고, 과거의 오류를 탐지하고 미래의 과지급을 예방함으로써 11억파운드 이상의 연간관리지출을 절감
  - (전망) 약 6,000명의 검토 인력을 확보함에 따라 검토 건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496)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되었고, 6개 급여의 단일화 작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

497)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Targeted Case Review Management Information," Research and analysis, 2025. 5. 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rgeted-case-review-management-information/targeted-case-review-management-information>, 검색일자: 2025. 5. 26., "DWP blocks £1 billion in incorrect payments in drive to protect people from falling into debt," Press release, 2025. 5.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dwp-blocks-1-billion-in-incorrect-payments-in-drive-to-protect-people-from-falling-into-debt>, 검색일자: 2025. 5. 26.

498) 오지급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 ① 청구인 사기(Claimant Fraud): 수급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 ② 청구인 오류(Claimant Error): 수급자가 소득, 자산, 거주지 변경 등 중요 정보를 제때 또는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이 발생한 경우 ③ 공무원 오류(Official Error): 노동·연금부, 지자체, 국세청 등의 실수로 인해 오지급이 발생한 경우

499) 세계적으로 고객 서비스 아웃소싱(콜센터, 고객센터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TCR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

예상되며, 계획대로 2030년까지 총 136억파운드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표 3-V-8 표적 사례 검토(TCR) 현황

(단위: 건, %, 백만파운드)

구분	2022-23	2023+24	2024-25	합계
검토 완료 건 수	24,180	202,130	923,630	1,149,940
오지급 건 수	7,630	48,180	187,800	243,600
오지급 비율(%)	32	24	20	21
오지급 차단 규모(연간관리지출 절감액)	37	230	901	1,168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Targeted Case Review Management Information," Research and analysis, 2025. 5. 22.

## 나. 국방·교육·R&D 정책

- 영국 총리, 2027-28회계연도부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로 증액 발표(2025. 2. 25.)<sup>500)</sup>
  -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 안보 위협, 급격한 기술 변화,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불안정성 심화
    - 영국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 역량 강화가 필요
  - (예산 증액) 2027년 4월부터 국방 예산을 현재 GDP 대비 2.3% 수준에서 2.5%로 확대하고, 경제·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다음 의회에서는 3%까지 확대할 계획
    - 2027년부터 국방비의 범위를 확장하여 안보 및 정보기관 활동도 포함
    - 이에 따라 2027-28회계연도의 실질적인 국방 지출은 GDP 대비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국방 예산 현황: (2023-24) 539억파운드(실적치), (2024-25) 569억파운드, (2025-26) 598억파운드, 3년 동안의 실질 증가율 2.3%
  - (재원 마련) 해외 원조(ODA) 예산을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5%에서 0.3%로

500)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rime Minister sets out biggest sustained increase in defence spending since the Cold War, protecting British people in new era for national security,"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sets-out-biggest-sustained-increase-in-defence-spending-since-the-cold-war-protecting-british-people-in-new-era-for-national-security>, 검색일자: 2025. 3. 12.; UK Parliament, "UK defence spending," Research Briefing, 2024. 12. 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175/>, 검색일자: 2025. 3. 12.

### 감축하여 국방비로 전환

- 단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ODA 비율을 다시 0.7% 수준으로 복구할 계획
- (효과) 국방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
  - 국방비의 68%가 런던 및 남동부 외 지역에 투자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방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AI, 자율 시스템, 전투 항공기, 사이버 보안, 미사일, 핵 잠수함, 양자 기술, 조선, 우주 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 영국 교육부,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확충 사업 1단계 추진 발표(2025. 4. 2.)<sup>501)</sup>

- (배경) 2024년 9월, 정부는 초등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School-based nursery) 3,000개 확충 계획을 발표
  - 이는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제공과 접근성 향상, 보육 수준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장기 계획의 일환
- (주요 내용) 1단계로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 300개를 추가 운영하여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비를 절감하는 등 부모의 근로를 지원
  - (운영 규모) 유치원 1개소당 20명(5세 미만) 정원으로, 총 6,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최대 4,000개의 자리가 제공될 예정
  - (예산 규모) 2025-26회계연도에 총 3,700만파운드의 자본 보조금(capital grant)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당초 계획(1,500만파운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
    - 자본 보조금은 유휴 공간 리모델링, 화장실 및 위생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사용되며, 급여, 유지 관리, 훈련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용
  - (예상 효과) 부모들의 양육 부담 감소, 보육비 절감, 조기 교육 기회 확대 등의 효과 기대

501) Department for Education, "Parents to save thousands through school-based nursery places," Press release, 2025. 4.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parents-to-save-thousands-through-school-based-nursery-places>, 검색일자: 2025. 4. 28.; "School-based nurseries funding round to launch next month," Press release, 2024. 9. 25.,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hool-based-nurseries-funding-round-to-launch-next-month>, 검색일자: 2025. 4. 28.; "Establishing school-based nursery provision," Guidance, 2025. 4. 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stablishing-school-based-nursery-provision/establishing-school-based-nursery-provision?utm\\_source=chatgpt.com](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stablishing-school-based-nursery-provision/establishing-school-based-nursery-provision?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4. 28.; The Education Hub, "School-based nurseri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Blog of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 4. 2.,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5/04/nurseries-in-schools-everything-you-need-to-know/>, 검색일자: 2025. 4. 28.

- 맞벌이 부모(working parents)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 30시간 무상보육(free childcare)<sup>502</sup>과 연계 시 연평균 7,500만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고, 초등학교 무료 조식(free Breakfast Club)<sup>503</sup> 이용 시 연간 450파운드를 추가 절약
- 이번 1단계에서 선정된 유치원 대부분은 보육 접근성이 부족한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위치하여,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특정 R&D에 대한 10년 단위 장기 예산(ten-year R&D budget) 체계 도입(2025. 5. 19.)<sup>504</sup>

- (배경·효과) 정부는 보건, 첨단 컴퓨팅 등 핵심 분야의 R&D 활동에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장기 예산 체계를 도입
  - 현재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3~4년 단위의 부처별 지출 계획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번 체계 도입을 통해 특정 R&D 활동에 대해 10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
  - 장기 자금 지원 체계의 도입을 통해 특정 유형의 연구기관에 확실성을 제공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분야에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영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선정 기준) 정부 부처는 다음 네 가지 기준에 따라 10년 장기 예산이 필요한 R&D 사업 또는 기관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 (인프라 및 핵심 역량) 단기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10년의 장기 지원을 통해 핵심 국가 인프라를 개발·유지하거나,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
  - (인재 유치 및 유지) 특정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이 영국 성장 의제에 부합하며, 장기 자금 지원이 없으면 숙련 연구자, 과학자, 엔지니어 등의 인재 육성 체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 협력) 장기 자금 지원을 통해 영국이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이익을

502) 지원 대상: 생후 9개월 ~ 4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일부 예외)로,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다음 금액 이상의 소득(세전, 향후 3개월 급여 총액 기준)이 있어야 함. (21세 이상) 2,539파운드, (18~20세) 2,080파운드, (18세 미만 또는 견습생) 1,570파운드((GOV-UK, <https://www.gov.uk/free-childcare-if-working/check-youre-eligible>, 검색일자: 2025. 4. 28.)

503) 현재 9개 지역 75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으로, 해당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30분 일찍 등교하여 무료로 아침 식사를 이용

504)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Government to set new ten-year budgets for R&D funding," Press release, 2025. 5. 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o-set-new-ten-year-budgets-for-rd-funding>, 검색일자: 2025. 5. 22.; "Awarding ten-year R&D funding," Guidance, 2025. 5. 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warding-ten-year-rd-funding-guidance-for-departments-and-albs/awarding-ten-year-rd-funding>, 검색일자: 2025. 5. 22.

언을 수 있는 국제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파트너십 및 사업 협력) 경제 성장과 관련된 중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자선단체 포함)와의 장기 협력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자금 지원 주기로는 협력이 어려운 경우
- (선정 방법) 부처의 자체 평가를 통해 장기 예산 편성이 필요한 R&D 사업이나 기관을 선정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 모든 선정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장기 예산 투입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과학적 효과의 수준, 정성적·정량적 근거, 국제 사례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부처의 수석 과학 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er)<sup>505</sup>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예: 국가 기술 자문관(National Technology Adviser))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적용·추진) 10년 장기 예산이 적용될 프로그램 및 기관은 6월에 발표될 지출검토 2단계(Spending Review Phase 2)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R&D 예산 배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개
  - 부처는 10년 장기 예산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한을 설정하여 중·단기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우선순위에 유연하게 대응

## 다. 효율화 및 재정위험 대응

- 영국 내각부, 준정부기관(ALBs) 존속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 발표(2025. 4. 7.)<sup>506</sup>
  - (현황) 준정부기관은 내각부(Cabinet Office)에 의해 행정적으로 분류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22-23회계연도 기준 총

505) 영국의 수석 과학 자문관(CSA)은 각 정부 부처 내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고위 과학 자문직으로, 대부분의 부처에 설치되어 있음. 부처별 CSA는 정부 수석 과학 자문관(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의 리더십하에 CSA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부처 간 과학·기술 관련 현안을 조율

506) Cabinet Office, "Public bodies," Guidance, 2025. 1. 7., <https://www.gov.uk/guidance/public-bodies-reform>, 검색일자: 2025. 4. 15.; "Guidance on the undertaking of Reviews of Public Bodies," Guidance, 2024. 4. 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bodies-review-programme/guidance-on-the-undertaking-of-reviews-of-public-bodies>, 검색일자: 2025. 4. 30.; "Hundreds of quangos to be examined for potential closure as Government takes back control," Press release, 2025. 4.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hundreds-of-quangos-to-be-examined-for-potential-closure-as-government-takes-back-control>, 검색일자: 2025. 4. 15.;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World's largest quango scrapped under reforms to put patients first," Press release, 2025. 3.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s-largest-quango-scrapped-under-reforms-to-put-patients-first?utm\\_source=chatgpt.com](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s-largest-quango-scrapped-under-reforms-to-put-patients-first?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4. 16.

## 304개가 존재

- 기관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중앙정부 부처 소속이지만, 특정 기능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실행 중심 조직(예: 운전면허청, 교정·보호관찰청, 기상청 등)
  - 비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정부의 전략적 틀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자문·집행·규제 등의 기능을 수행(예: 영국문화원, 환경청, 보건·안전청 등)
  - 비장관 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 장관 없이 운영되는 독립적 정부 부처로,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며 고유 예산과 회계를 가짐(예: 식품기준청, 국세청, 전력·가스규제청 등)
- (주요 내용) 준정부기관의 존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부 조직 내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복과 관료주의를 줄여 납세자 부담 및 정부 운영 비용을 절감할 계획
-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NHS England의 보건·사회복지부로의 환원 결정\*에 이은 조치로, 근로자 중심의 안정적인 국가 운영과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부의 ‘변화 계획’(Plan for Change)의 일환
- \* NHS England의 기능을 보건·사회복지부로 환원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여 최선 서비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
- : 정부는 2012년 NHS 조직을 상향식으로 개편하고, 2013년 4월부터 독립적인 비부처 공공기관으로 운영하였으나, 명확한 책임 체계 없이 관료적 절차만 늘어났고, 이로 인해 비효율이 커졌다는 비판에 직면
- 모든 준정부기관은 존속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별도의 존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개편(통폐합 또는 해당 부처로의 기능 이관·환원)의 대상이 되어 재검토를 받게 됨
    - 다만 정부를 감시하거나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등 장관급 결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인 경우, 해당 기관은 개편 대상에서 제외
  - 재검토 이후에도 존속하는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내각부 차관(Cabinet Secretary), 각 부처 차관(Secretary of State)과 사무 차관(Permanent Secretary)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
    - 현재 부처 차관은 이사회 임명, 사업계획 승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준정부기관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 차관은 회계 책임자(Principal Accounting Officer)로서 해당 기관의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

■ 영국 재무부, ‘부처별 효율화 계획(Departmental Efficiency Delivery Plans)’ 발표(2025. 6. 11.)<sup>507)</sup>

- (개요) ‘부처별 효율화 계획’은 각 부처가 지출검토(Spending Review) 기간 동안 달성할 효율화 목표와 실행 전략을 담은 것으로, 지출검토 2025 보고서와 함께 발표
  - 이번 계획은 지출검토 보고서와 함께 처음으로 공식 발표된 부처별 구체적 효율화 계획으로, OVfM<sup>508)</sup>과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목표와 실행 계획을 합의해 마련
  - 효율화에는 단순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성과 개선도 포함되며, 실행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 (주요 내용) 2028-29회계연도의 총 순효율화(투자비용 제외) 규모는 약 140억파운드로, 이는 2025-26회계연도 자원 부처별지출한도(RDEL) 대비 4.0% 수준에 해당(〈표 3-V-9〉 참고)
  - 대부분의 부처가 2028-29회계연도까지 2025-26회계연도 계획 대비 최소 3% 이상의 효율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
    - 일부 부처(교통부, 에너지·탄소중립부, 국세청)는 8% 이상의 효율화 목표를 제시
  - 여러 부처에서 다음의 공통된 영역을 중심으로 효율화 전략을 수립
    - (디지털·AI 활용)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을 통해 행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민원 처리 효율화 등 전 부문에 걸쳐 구조적 개선을 추진
- 보건·사회복지부: 환자기록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가 의료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와 병력을 쉽게 확인하여 행정 부담과 중복 검사를 줄이며 의사결정을 개선
- 과학·혁신·기술부: 요약, 초안 작성 및 반복 업무 자동화에 특화된 AI 도구를 개발·도입 하여 공무원의 시간과 노동 투입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을 효율화

507) HM Treasury, “Departmental Efficiency Delivery Plans,” Policy paper, 2025. 6.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partmental-efficiency-delivery-plans>, 검색일자: 2025. 5. 22.;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May 2025*, 2025. 5. 8.

508) Office for Value for Money: 2024년에 신설된 재무부 산하의 한시적 조직(time-limited HM Treasury unit)으로, 정부 전반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과제를 총괄 점검. 이번 지출검토 기간 동안에는 정부 전반의 낭비 및 비효율을 점검하고, 부처별 효율화 목표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

- (인력 운영 개선) 파견인력 감축, 인력 구조조정 등의 인건비 효율화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정부인사조직(Government People Group)이 각 부처의 인력 개혁을 지원)
-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인력을 통합·재구조화하고, 이직률을 낮추며, 임시직 또는 계약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직급·급여 체계 및 근무지를 재검토
-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AI 기반 자동화를 통해 반복 업무 처리, 단순 오류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50만 시간의 인력 소요를 절감
  - (정부 부동산 관리) 청사 축소, 공간 통합, 유휴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부동산의 운영비를 절감(국유재산관리청(Office of Government Property)이 부처별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
- 국세청: 런던 도심 내 부동산 자산을 25% 줄이고, 사무소 수를 감축하여 지역 거점을 신설하는 Locations Programme<sup>509)</sup>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방부: 향후 발표 예정인 새로운 국방주거전략(Defence Housing Strategy)을 통해 군 가족 주택의 전면적 재정비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부동산 및 에너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

**표 3-V-9 2025-26회계연도 RDEL vs. 순효율화 계획(감가상각 및 ODA 제외)**

(단위: 백만파운드, %)

구분	2025-26 RDEL (A)	2026-27	2027-28	2028-29 (B)	2028-29(%) (B/A)
보건·사회복지부	201,855	2,841	5,786	9,071	4.5
교육부(학교 지원 제외)	29,277	76	166	248	0.8
내무부	18,201	166	335	533	2.9
법무부	11,865	119	238	356	3.0
국방부	38,934	563	826	905	2.3
외교·연방·개발부	1,992	25	71	85	4.3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4,093	42	44	50	1.2
문화·미디어·스포츠부	1,538	29	43	52	3.4
과학·혁신·기술부	560	9	17	32	5.6

509) 2015년 기준, 약 170곳에 달하던 사무소를 13개 지역센터(Regional Centres), 7개 과도기 사무소(Transitional Sites), 5개 전문 사무소(Specialist Sites), 1개의 런던 본부(London Headquarter)로 사무실 수를 대폭 축소하여 현대적 지역센터를 구축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 임대 및 계약 효율화로 추가 수익도 창출하는 영국 국세청의 프로그램

표 3-V-9 의 계속

구분	2025-26 RDEL (A)	2026-27	2027-28	2028-29 (B)	2028-29% (B/A)
교통부	8,281	313	491	663	8.0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1,813	30	82	157	8.7
환경·식품·농촌부	4,622	51	100	144	3.1
산업·통상부	1,789	25	54	75	4.2
노동·연금부	10,223	161	207	312	3.0
국세청	5,906	139	403	773	13.1
재무부	413	5	8	13	3.0
내각부	834	20	29	40	4.7
소규모 독립기관들	5,688	144	222	296	5.2
<b>부처별지출한도 총액</b>	<b>347,886</b>	<b>4,758</b>	<b>9,123</b>	<b>13,804</b>	<b>4.0</b>

자료: HM Treasury, Spending Review 2025: *Departmental Efficiency Plans*, 2025., p. 6.

■ 영국 재무부, '2024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 - September 2024*)'에 대한 정부 대응 발표(2025. 6. 11.)<sup>510)</sup>

- (배경) 예산책임청(OBR)은 2024년 FRS 보고서에서 재정위험 요인으로 기후변화 피해와 인구보건 문제를 지적하였고,<sup>511)</sup> 정부는 이들 재정위험 완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 (기후변화) 2030년까지 청정전력(clean power) 전환과 경제 전반의 탄소중립(net zero)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회복력(resilience) 제고에도 주력
  - (홍수 대응 강화) 2024-25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홍수 방어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에 26억 5,000만파운드를 투자하고, 2026-27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42억파운드를 추가 투입
  - (농업·토지 관리) 2024-25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농업 및 토지 관리에 50억파운드를 지원하고, 2026-27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자연 복원에 연간 27억파운드를 투자

510) HM Treasury, "Government Response to the 2024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 Policy paper, 2025. 6.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response-to-the-2024-fiscal-risks-and-sustainability-report>, 검색일자: 2025. 6. 12.

511)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9., pp. 41~45를 참고 바람.

-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산업) 2023-24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Sizewell C 원전에 142억파운드,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에 94억파운드, 청정에너지 부문에 83억파운드를 투자
- (탄소예산<sup>512</sup> 이행) 2025년 10월까지 제6차 탄소예산(2037년까지) 이행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2026년 6월까지 제7차 탄소예산을 설정
- (녹색 금융) 2024년 10월 기준, 녹색 금융 프로그램<sup>513</sup>을 통해 434억파운드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5-26회계연도에는 시장 여건에 따라 녹색국채<sup>514</sup> 발행으로 100억파운드를 추가 조달
- (인구보건) 국민 건강 개선과 NHS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 (NHS 투자 확대) 2023-24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보건·사회복지부의 자본 예산을 실질 기준 23억파운드(명목 기준 40억파운드) 증액하여, 신기술 도입, 병원 확충, 중요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
  - (보건서비스 개혁)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 기반 의료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 (비경제활동 대응) 건강 문제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고용률 80% 달성을 목표로, NHS의 건강 회복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건강·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복지제도 개편) 개인자립수당<sup>515</sup> 수급자격 강화 등 장애급여 구조를 개편해 2029-30년에 48억파운드를 절감하고, 건강 제약이 있으나 노동 가능한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용·건강·기술 지원을 확대

512) Carbon Budget: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따라 5년 단위로 설정되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

513) Green Financing Programme: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514) green gilt: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 관련 지출에만 사용되는 영국 정부 발행 국채

515)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PIP):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건강 상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①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을 것 ② 해당 건강 상태로 인해 특정한 일상 활동 수행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 마. 통화정책

###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4.75→4.50%) 결정(2025. 2. 6.)<sup>516)</sup>

○ (경제 현황 논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투표에 앞서 국제 경제 및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 경제)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0.5%로 추정되며, 2025년 상반기에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6%에서 2025년 1분기 0.5%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재정·이민 정책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
  -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에서 2025년 1분기 0.2%로 증가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 완화로 인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9~10월에 발표된 통화·재정 부양책의 영향으로 인해 2024년 4분기 1.6%로 증가하였고, 2025년 1분기에는 1.1%로 전망
  -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도입과 중국의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s)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영국 경제) 영국 GDP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1%, 2025년 1분기 0.1%로 전망
  - (수요·공급) 최근 수요가 둔화되었으나 공급 능력이 이미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휴 경제력<sup>517)</sup>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은 2024년 12월에 2.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5년 3분기에는 3.7%까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4년 대부분 기간 동안 전 분기 대비 고용 증가율은 약 0.2%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나, 연말부터 최근까지는 0.1%로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2024년 초반 이후 4.1%에서 4.4% 범위에서 유지

516) Bank of England, "Bank Rate reduced to 4.5% - February 2025," News & Events, 2025. 2. 6.,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5/february-2025>, 검색일자: 2025. 2. 13.;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February 2025*, 2025. 2. 6.

517) 산업생산능력이나 주택, 고용 등이 얼마나 사용되지 않고 유휴(slack)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표현하는 개념

- (통화정책위원회 결정)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7명이 4.50%로, 2명이 4.25%로 금리 인하를 지지

표 3-V-10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4년								2025년
	2.1	3.21	5.9	6.20	8.1	9.19	11.7	12.19	2.6
금리	5.25	5.25	5.25	5.25	5.00	5.00	4.75	4.75	4.5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5. 2. 17.

####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4.50→4.25%) 결정(2025. 5. 8.)<sup>518)</sup>

- (경제 현황 논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투표에 앞서 국제 경제 및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 경제)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세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
    - 세계 GDP 성장률은 2025년 1.5%, 2026년 1.5%, 2027년 2.25%로 전망되며, 이는 2월 전망 대비 각각 0.25%p, 0.5%p 감소, 0.25%p 증가한 수치
    -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이 가장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지역 성장률은 전망 기간 대부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 2025년 1.25%, 2026년 1.25%, 2027년 1.75%로 2월 전망 대비 각각 1%p, 0.5%p, 0%p 감소
      - 중국: 2025년 4%, 2026년 4%, 2027년 4.25%로 2월 전망 대비 각각 0.75%p, 0.25%p 감소, 0.25%p 증가
      - 유로지역: 2025년 0.75%, 2026년 1%, 2027년 1.75%로 2월 전망 대비 각각 0%p, 0.5%p 감소, 0.25%p 증가
    -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인상의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인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518) Bank of England, "Bank Rate reduced to 4.25% - May 2025," News and publications, 2025. 5. 8.,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5/may-2025>, 검색일자: 2025. 5. 22.;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May 2025*, 2025. 5. 8.

- 미국과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몇 년간 완화되었으며, 최근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 상승으로 인해 중앙은행 목표치를 소폭 상회한 2.3%와 2.2%를 기록
- (영국 경제) 불확실성 증가, 생산성 증가율 둔화,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GDP 성장률은 2024년 중반 이후 둔화
  - (경제활동)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GDP 성장률은 2025년 1분기 0.6%로, 2월 전망 대비 0.5%p 높게 추정되나, 관세 관련 부정적 영향으로 2분기 0.1%로 둔화될 전망
  - (노동시장) 실업률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2025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4.4%를 기록하였고, 2분기에 4.6%로 소폭 상승한 후 2026년 말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은 2025년 3월 2.6%를 기록하였고, 가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 상승하여 3분기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모두 2월 전망 대비 0.2%p씩 낮은 수치
- (기준금리 결정)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5명이 4.25%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였고, 2명이 4%로 더 큰 폭의 인하를 지지하였으며, 2명은 4.5% 동결을 지지

표 3-V-11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4년								2025년		
	2.1	3.21	5.9	6.20	8.1	9.19	11.7	12.19	2.6	3.20	5.8
금리	5.25	5.25	5.25	5.25	5.00	5.00	4.75	4.75	4.50	4.50	4.25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5. 5. 8.

##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가. 경제 통계

#### ■ 영국 통계청,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5. 10.)<sup>519)</sup>

- 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3분기 0.0%, 4분기 0.1%를 기록하였고, 2025년 1분기에는 0.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부문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25년 1분기 성장은 서비스 부문은 0.7%, 생산 부문은 1.1% 증가한 반면 건설 부문은 성장세를 보이지 않음
  -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분기의 성장은 총고정자본형성, 순무역, 가계소비 증가에 기인
  - 2024년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는 0.2%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전 분기 대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3분기 -0.2%, 4분기 -0.1%로, 2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1분기에는 0.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전 분기 대비 명목 GDP는 2025년 1분기에 1.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로 근로자 보수(compensation) 증가에 기인
  - 2024년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명목 GDP는 4.2%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3-V-12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 추이(계절 조정)

(단위: %)

구분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2024년 1분기	0.9	2.1
2024년 2분기	0.5	1.2
2024년 3분기	0.0	1.8
2024년 4분기	0.1	1.1
2025년 1분기	0.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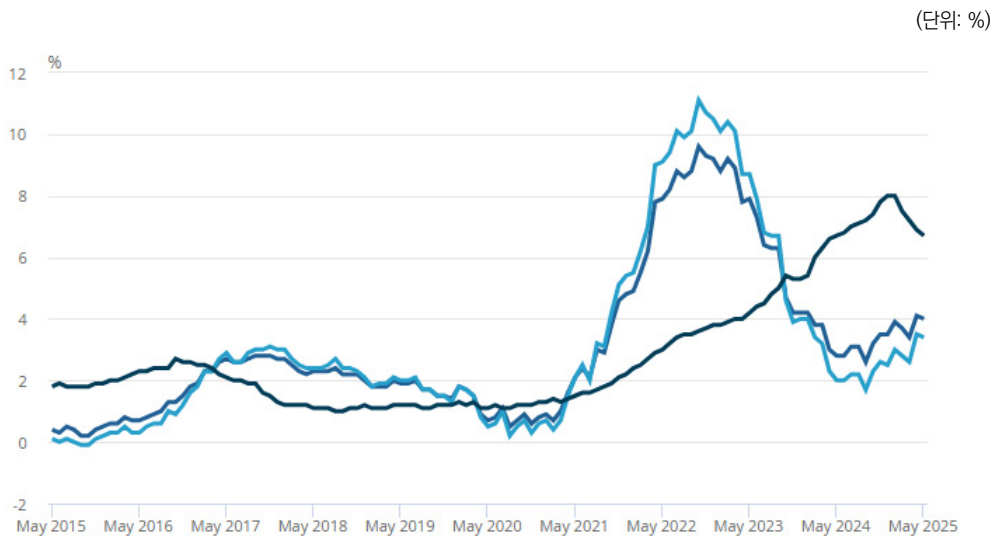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anuary to March 2025," Economy, 2025. 5. 15.

519)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anuary to March 2025," Economy, 2024. 5. 15.,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januarytomarch2025>, 검색일자: 2025. 7. 3.

■ 영국 통계청, 2025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2025. 6. 18.)<sup>520)</sup>

- 2025년 5월 CPIH<sup>521)</sup>는 전년 동월 대비 4.0%, CPI는 3.4% 상승하여, 4월 대비 각각 0.1%p, 0.1%p 하락
  -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운송 부문이 물가 상승률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식료품 및 가구·가정용품 부문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
- OOH<sup>522)</sup>는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하여, 4월 대비 0.2%p 하락
-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Core CPIH와 Core CPI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 3.5% 상승하여, 4월 대비 모두 0.3%p씩 하락

그림 3-V-1 물가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5," 2025. 6. 18.

52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5," 2025. 6. 18.,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may2025>, 검색일자: 2025. 7. 3.

521) 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주민세(Council tax)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소유, 유지, 거주 비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522)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자가 거주비용): CPIH의 구성요소로, CPIH의 16%를 차지하며, CPIH와 CPI 상승률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동인

■ 영국 통계청, 2025년 6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2025. 6. 10.)<sup>523)</sup>

- 2025년 2~4월 16~64세의 고용률은 75.1%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24년 11월~2025년 1월 고용률보다 0.1%p 높은 수치
  - 파트타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수는 감소
- 2025년 2~4월 16세 이상의 실업률은 4.6%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전 3개월에 대한 수치보다 0.2%p 증가한 수치
  - 6월 이하 실업자와 12개월 이상 실업자는 증가한 반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실업자는 감소
- 2025년 2월~4월 16~64세의 비경제활동률은 21.3%로 이전 3개월 대비 0.2%p 감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감소는 주로 50~64세 연령층에서 나타남
  -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가족과 가정을 돌보거나 일시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률 감소를 주도

그림 3-V-2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June 2024," 2024. 6. 11.

5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June 2025," 2024. 6. 10.,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bulletins/uklabourmarket/june2025>, 검색일자: 2025. 7. 3.; "Employment in the UK: June 2025," 2025. 6. 10.,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bulletins/employmentintheuk/latest>, 검색일자: 2025. 7. 11.

## 나. 재정 통계

- 영국 통계청, “2022-23회계연도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2024. 12. 19.)<sup>524)</sup>
  - (배경) 영국 통계청은 매년 직·간접세, 현물·현금 급여 등이 소득 분위별 가구 소득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직접세는 소득세, 국민보험기여금(NICs), 지방세(Council Tax), 학자금 대출 상환금 등을,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담배세, 주세, 유류세, 인지세와 같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포함
    - 현금 급여는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자녀수당(Child Benefit) 등을, 현물 급여는 국가의료서비스(NHS), 교육, 무상보육 등의 비현금 급여를 포함
  - (주요 내용) 2022-23회계연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그림 3-V-3], [그림 3-V-4] 참고)
    -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중위(median) 본원소득은 3만 7,300파운드였으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가 모두 적용된 중위 최종소득은 3만 9,700파운드로 증가
      - 상위 20%의 본원소득은 114,300파운드로 하위 20%의 본원소득 9,800파운드 대비 11.6배 더 컸으나, 최종소득은 각각 8만 2,200파운드와 2만 4,500파운드로 그 비율이 3.4배로 감소
    -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의 재분배 효과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본원소득 지니계수<sup>525)</sup>는 47.2%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2.9%p 감소하였고, 최종소득

52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 2024. 12. 1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theeffectsoftaxesandbenefitsonhouseholdincome/financialyearending2023>, 검색일자: 2024. 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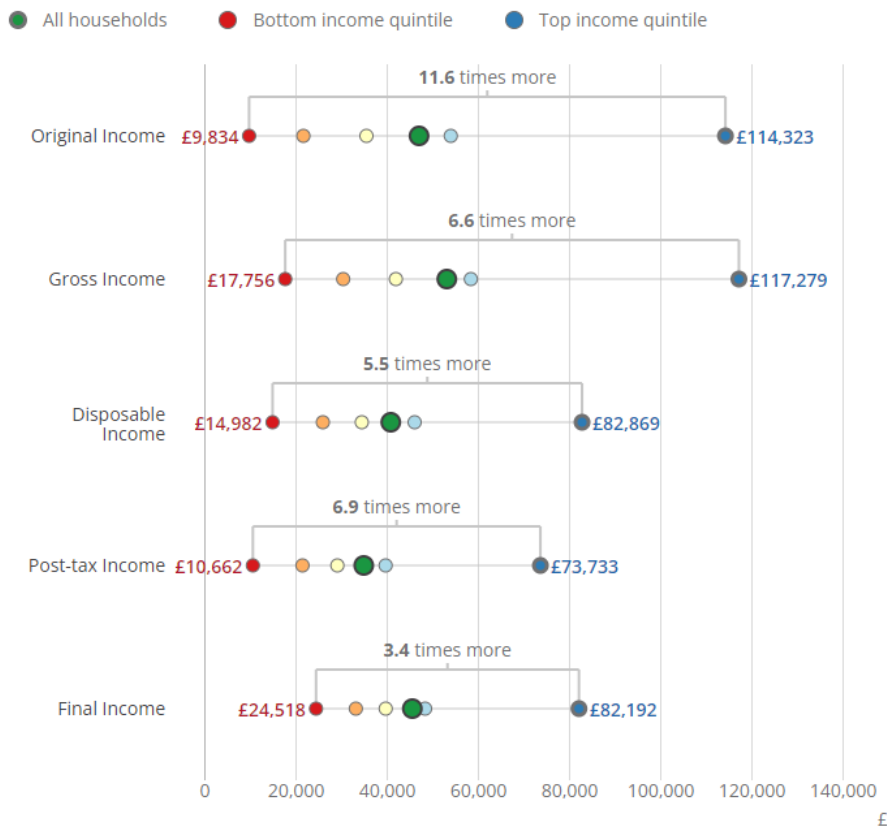
525) Gini coefficient: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0'(완전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지니계수는 27.7%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2.1%p 감소\*

\* 본원소득과 최종소득에서의 지니계수는 모두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

- 하위 20%의 본원소득은 9,834파운드, 총소득은 17,756파운드로, 현금 급여를 통해 소득이 7,922파운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취약 가구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sup>526)</sup> 지급의 영향에 기인
- 순 수혜자(조세부담 대비 재정수혜 규모가 더 큰 개인)의 비율은 53.6%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p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2020-21회계연도) 기간 동안 재정수혜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된 영향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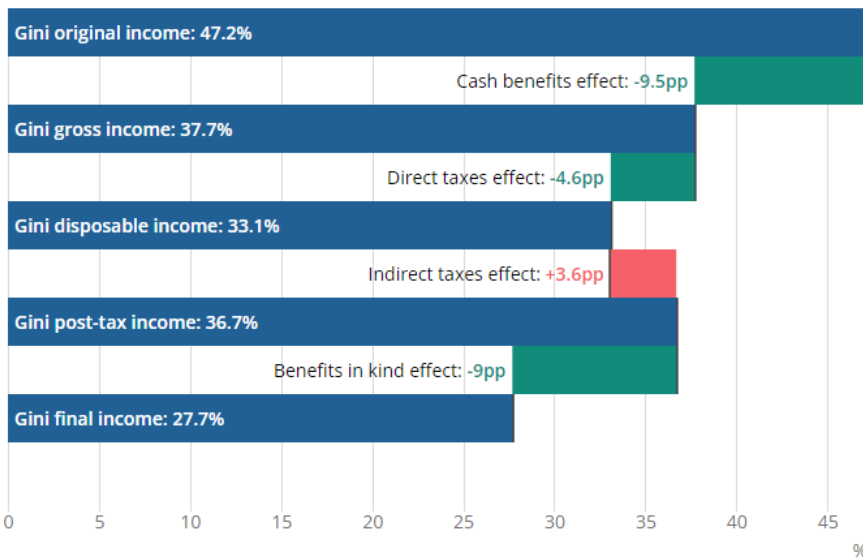
그림 3-V-3 2023-23회계연도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526) cost of living payment: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

- 주: 1. Original Income(본원소득): 근로, 개인연금, 투자, 기타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2. Gross Income(총소득): 본원소득과 현금급여를 합한 소득  
 3. Disposable Income(가처분소득):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제한 소득  
 4. Post Tax Income(세후소득):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제한 소득  
 5. Final Income(최종소득): 세후소득에 현금급여를 합한 소득  
 6. 소득 분위는 총 5개 구간으로 구분. 소득 최하위 분위(Bottom income quintile)는 소득 하위 20%까지를, 소득 최상위 분위(Top income quintile)는 소득 상위 20%(하위 100%)까지를 의미
-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 2024. 12. 19., Figure 1.

그림 3-V-4 2022-23회계연도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 2024. 12. 19., Figure 2.

■ 영국 통계청, 2025년 5월 공공재정 현황 발표(2025. 6. 20.)<sup>527)</sup>

- (재정적자) 2025년 5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월 대비 7억파운드 증가한 177억파운드를 기록
  - 이는 1993년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5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채무) 2025년 5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채무는 2조 8,670억파운드,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는 2조 6,877억파운드를 기록

52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y 2025," 2025. 6. 20.,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may2025>, 검색일자: 2025. 7. 3.

- GDP 대비 순채무(잠정치)는 각각 96.4%, 90.4%로, 196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
- (수입·지출) 2025년 5월 중앙정부 경상수입은 825억파운드,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892억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억파운드, 41억파운드 증가
- (순현금소요액) 2025년 5월 중앙정부 순현금 소요액(Central government net cash requirement)<sup>528</sup>은 전년 동월 대비 4억파운드 감소한 241억파운드를 기록

**표 3-V-13 2024년 5월 공공부문 재정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p)

구분	2024년 5월(a)	2025년 5월(b)	b - a
공공부문 순차입	17.0	17.7	0.7
공공부문 순채무	2,721.2	2,867.0	185.6
(GDP 대비 %)	(95.9)	(96.4)	(0.5)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2,498.4	2,687.7	189.3
(GDP 대비 %)	(88.1)	(90.4)	(2.3)
중앙정부 경상수입	77.2	82.5	5.3
중앙정부 경상지출	85.1	89.2	4.1
중앙정부 순현금 소요액	24.6	24.1	-0.4

주: 1. 순차입과 순채무는 공공부문 은행이 제외된 공공부문 기준

2.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은 UK Asset Resolution Ltd와 Network Rail이 제외된 기준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y 2025," 2025. 6. 20. 재구성

528) 현금 지출과 현금 수입의 차이로 정부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금 규모를 의미

# VI 호주<sup>529)</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 2024-25회계연도: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표 3-V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5.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글로벌 희토류 공급 촉진을 위한 투자 발표
2025. 1. 16.	호주 연방정부, 고속도로 개보수 투자 발표
2025. 1. 31.	호주 재정부, 2024년 12월 재정보고서 발표
2025. 2. 18.	호주 중앙은행, 2025년 2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인하 발표
2025. 3. 25.	호주 연방정부, 2025-26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2025. 4. 7.	호주 재무부, 선거전 경제·재정전망보고서 발표
2025. 5. 3.	2025 호주 총선 실시
2025. 5. 20.	호주 중앙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인하 발표
2025. 6. 3.	호주 재무부, 2025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3.5% 인상 발표
2025. 6. 3.	호주 통계청, 2025년 1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
2025. 6. 4.	호주 통계청, 2025년 1분기 국민계정 발표

자료: 저자 작성

5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진아 선임연구원(jina@kipf.re.kr)

## 01 예산 및 결산

### 가. 예산

- 호주 연방정부, 2025-26회계연도<sup>530)</sup> 예산안 발표(2025. 3. 25.)<sup>531)</sup>
  - (경제) 호주 경제는 2024-25회계연도에 1.5%로 소폭 성장이 회복되었으며, 2025-26회계연도 2.25%, 2026-27회계연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세계 경제는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계 무역, 투자 및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
    - 최근 사이클론 Alfred로 인한 피해는 분기별 성장률을 최대 0.25%p까지 일시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시 실질 GDP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완화, 견고한 노동시장,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은 2024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소비와 경제의 점진적 회복을 견인할 전망
  - (고용) 2024-25회계연도에는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여 4.25%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과 물가상승률 완화로 인해 5분기 연속으로 연간 실질 임금이 상승
  - (물가) 소비자 및 기초 물가상승률 모두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2024-25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은 2.5%로 예상
    - 2024년 12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관찰된 물가상승률 최고치의 1/3 이하 수준
    - 물가상승률은 반기경제·재정전망(MYEFO) 보고서의 예상<sup>532)</sup>보다 빠른 2025년 중반에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530) 2025-26회계연도: 2025. 7월~2026. 6월

531) 호주 예산안 홈페이지, <https://budget.gov.au/>, 검색일자: 2025. 3. 25.

532) 반기경제·재정전망 보고서는 2024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당시 중앙은행 목표 범위내로 물가상승률이 복귀하는 시점은 2025년 말로 예상함(「KIPF 재정동향 2024년 12월호」 참고).

표 3-VI-2 2025-26 Budget 주요 경제 변수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실질 GDP 성장률	1.4	1.5	2.25	2.5	2.75	2.75
고용성장률	2.2	2.75	1	1.25	1.5	1.5
실업률	4.0	4.25	4.25	4.25	4.25	4.25
소비자물가지수	3.8	2.5	3	2.5	2.5	2.5
임금물가지수	4.1	3	3.25	3.25	3.5	3.75
명목GDP 성장률	4.1	4.25	3.25	4	5.25	5.5
GDP 디플레이터	2.7	2.75	1	1.5	.	.

주: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자료: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5-26," Paper No.1, p. 6, <Table 1.1>, 2025. 3. 25.

- (재정) 2024-25회계연도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276억호주달러 (GDP 대비 -1.0%), 2025-26회계연도에는 421억호주달러(GDP 대비 -1.5%)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에는 적자가 소폭 개선될 전망
  - (수입) GDP 대비 수입(Receipts) 비중은 2024-25회계연도에 25.3%에서 2026-27 회계연도 25.6%까지 증가한 후, 2028-29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5.3%로 하락할 전망
  - (지출) 2025-26회계연도 지출(Payments)은 총 7,775억호주달러(GDP 대비 27.0%)로 2024-25회계연도 대비 460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8-29 회계연도에 GDP 대비 26.4%까지 감소할 전망
  - (채무) 총채무는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35.5%를 나타낼 전망이며, 2029-30 회계연도에 정점에 도달한 후 2035-36 회계연도에 31.9%로 개선될 전망
  - 순채무는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21.5%를 기록한 후 전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표 3-VI-3 2025-26 Budget 주요 재정 변수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수입(Payments) <sup>1)</sup>	688.6	703.9	735.4	766.0	797.4	840.8
GDP 대비 비율	25.8	25.3	25.5	25.6	25.3	25.3
지출(Receipts) <sup>1)</sup>	672.8	731.5	777.5	801.7	834.6	877.7
GDP 대비 비율	25.2	26.2	27.0	26.8	26.5	26.4
현금수지 <sup>2)</sup> (Underlying Cash Balance)	15.8	-27.6	-42.1	-35.7	-37.2	-36.9
GDP 대비 비율	0.6	-1.0	-1.5	-1.2	-1.2	-1.1
총채무(Gross Debt)	906.9	940.0	1,022.0	1,092.0	1,161.0	1,223.0
GDP 대비 비율	33.9	33.7	35.5	36.5	36.9	36.8
순채무(Net Debt)	491.5	556.0	620.3	676.3	714.1	768.2
GDP 대비 비율	18.4	19.9	21.5	22.6	22.7	23.1

주: 1) 현금주의 기준

2) 현금주의 기준. 현금수지=수입-지출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5-26," Paper No.1, p. 57, &lt;Table 3.1&gt;, 2025. 3. 25.

- (예산 중점방향) “생계 지원 및 미래를 위한 계획”을 주제로 한 이번 예산안은 1) 생계비 부담 완화 2) 메디케어 강화 3) 주택 구입 지원 4) 보다 강한 경제 5) 기회 확대 및 평등 증진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반영
  - (생계비 부담 완화)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sup>533)</sup> 에너지 요금 감면<sup>534)</sup> 추가 지원, 노인 요양 간호사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근로자 임금 인상, 저렴한 의약품 지원, 학자금 대출 감면 등을 통한 생계비 완화
  - (메디케어 강화) 벌크 빌링<sup>535)</sup> 지원금 인상, 공공 병원 자금 지원, 메디케어 긴급 클리닉 추가, 의료진 확대, 여성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 등 메디케어 강화 중점 추진
  - (주택 구매 지원) 더 많은 주택 건설, Help to Buy<sup>536)</sup> 제도 확대, 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금지 등 국민의 주택 구매 지원 확대
  - (보다 강한 경제)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친환경 금속 생산 업체 지원 등 Future made in

533) 소득 1만 8,201~4만 5,000호주달러 구간의 납세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되며, 2027년 7월에는 다시 14%로 추가 인하

534) 모든 호주 가구와 기업들에 대해 추가 150호주달러 에너지 요금 추가 지원 계획

535) 의사가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하여 의료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환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536) 연방정부의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산층 이하 국민이 첫 주택 구입시 정부와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신규 주택 비용의 최대 40%까지 출자를 제공

Australia를 위한 정책 시행, 중소기업 지원 확대, 무역 다각화 지원, Non-Compete<sup>537)</sup> 조항 폐지, 국가 생산성 기금 투자를 통한 경쟁 정책 활성화 등 보다 강한 호주 경제 건설을 위한 투자에 집중

- (기회 확대 및 평등 증진) 여성 지원 정책, 원주민 지역사회 투자, 노인 돌봄 개혁 지속 지원, 장애인 지원 등 복지 혜택 확대 내용 포함
- (지출) 2025-26회계연도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지출(Expenses)은 7,857억호주 달러이며, 2028-29회계연도에는 8,894억호주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2025-26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국방(18.9%), 교육(11.8%), 사회보장 및 복지(11.2%), 보건(8.0%) 등의 부문에서 높은 지출 증가율이 예상됨
  - 2024-25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기능별 지출 전망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국방(5.5%), 사회보장 및 복지(4.2%), 보건(3.6%) 순으로 높게 나타남<sup>538)</sup>

표 3-VI-4 기능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기능별 분류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연평균 증가율
일반 공공서비스	33,052	31,418	31,695	32,502	32,829	-0.2%
국방	49,344	51,483	52,567	56,487	61,238	5.5%
공공질서 및 안전	8,778	9,145	8,045	7,830	7,815	-2.9%
교육	63,503	54,030	56,157	58,395	60,397	-1.2%
보건	117,067	124,803	125,901	130,423	134,767	3.6%
사회보장 및 복지	274,901	290,966	299,436	309,531	323,612	4.2%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18,122	8,952	7,021	5,562	5,125	-27.1%
여가 및 문화	5,859	5,867	5,709	5,974	6,378	2.1%
연료 및 에너지	16,437	19,237	15,079	16,213	18,273	2.7%
농림·임업·수산	4,461	4,427	4,152	3,511	3,156	-8.3%
광업·제조·건설	5,866	5,522	5,511	5,947	6,663	3.2%
교통·통신	15,980	16,557	16,380	16,320	16,484	0.8%
기타 경제부문	14,063	13,558	12,636	12,263	12,285	-3.3%
기타	135,322	149,706	166,306	181,992	200,374	10.3%
총액	762,756	785,670	806,594	842,949	889,397	3.9%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5-26," Paper No.1, p. 117, <Table 5.3>, 2025. 3. 25., 연평균 증가율 저자 작성

537)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육아, 건설, 미용업 등이 포함

538) 기타 제외

## 나. 추경

- 관련 내용 없음

## 다. 결산

### ■ 호주 재정부, 2024년 12월 재정보고서\* 발표(2024. 1. 31.)<sup>539)</sup>

- \* 공공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제47조에 따라 재정부 장관은 매월 재정상황을 발표
- 2024-25회계연도 시작인 7월부터 12월까지 반기 예산수지는 207억호주달러 적자로 집계
  - 반기 수취는 3,423억호주달러, 지급은 3,630억호주달러이며, 순자산은 -5,460억 호주달러, 순채무는 8,096억호주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표 3-VI-5 2024년 12월 재정 상황

(단위: 십억호주달러)

구분	2024-25회계연도 12월 실적	2024-25회계연도 12월 누계 <sup>1)</sup>	2024-25회계연도 예산안 <sup>2)</sup> 전망	2024-25회계연도 중기 <sup>3)</sup> 전망
수취(Receipts) <sup>4)</sup>	61.8	342.3	698.4	704.2
지급(Payment) <sup>4)</sup>	68.5	363.0	726.7	731.1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sup>4)</sup>	-6.7	-20.7	-28.3	-26.9
재정수입(Revenue) <sup>5)</sup>	58.8	346.9	711.5	718.3
재정지출(Expenses) <sup>5)</sup>	65.1	358.8	734.5	758.6
재정수지(Fiscal balance) <sup>6)</sup>	-6.9	-12.0	-29.3	-45.9
순자산(Net worth) <sup>7)</sup>	.	-546.0	-545.1	-570.6
순채무(Net debt) <sup>8)</sup>	.	522.5	522.5	540.0

주: 1) 2024. 7월~2024. 12월 누계

2) 2024-25 예산안은 2024. 5월 발표

3) 2024-25 중기재정전망(MYEFO)은 2024. 12월 발표

4) 현금주의 기준. 예산수지=수취-지급

5) 발생주의 기준

6) 발생주의 기준.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7) 순자산=총자산-총부채

8) 채무(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자산(현금 및 예금, 선금급,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

자료: 호주 재정부,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Monthly Financial Statements for December 2024," 2025. 1. 31. 재구성

539) 호주 재정부, "Commonwealth Monthly Financial Statements," 2025. 1. 31., <https://www.finance.gov.au/publications/commonwealth-monthly-financial-statements/2025/mfs-december>, 검색일자: 2025. 1. 31.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 호주 재무부,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발표(2025. 4. 7.)<sup>540)</sup>

\* 예산공정법(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제22조 등에 따라 호주 정부는 선거 공고 후 10일 내에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현 회계연도 및 향후 4년간의 경제 및 재정전망을 제공

- (경제전망) 호주 경제는 2025-26회계연도에 2.25% 성장할 전망이며, 지난달 발표된 2025-26 예산안 전망치와 동일<sup>541)</sup>

표 3-VI-6 2025-26 Budget 주요 경제 변수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실질 GDP 성장률	1.4	1.5	2.25	2.5	2.75	2.75
고용성장률	2.2	2.75	1	1.25	1.5	1.5
실업률	4.0	4.25	4.25	4.25	4.25	4.25
소비자물가지수	3.8	2.5	3	2.5	2.5	2.5
임금물가지수	4.1	3	3.25	3.25	3.5	3.75
명목 GDP 성장률	4.1	4.25	3.25	4	5.25	5.5

주: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자료: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p. 4, Table 2, 2025. 4. 7.

- (재정전망) 2024-25회계연도 현금수지는 276억호주달러(GDP 대비 -1.0%), 2025-26 회계연도에는 421억호주달러(GDP 대비 -1.5%)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2025-26회계연도 예산안 전망치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음
  - 예산안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 반영으로 2025-26회계연도에 2억 2,600만호주달러,

540) 호주 재무부 홈페이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EFO2025>, 검색일자: 2025. 4. 8.

541) 2025-26회계연도 예산안 자료는 「KIPF 2025년 3월 재정동향」을 참고

5년간 11억호주달러의 지출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매개변수 및 기타 변동요인에서 지출 증가 대부분을 상쇄함에 따라 현금수지는 기존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주요 정책 결정으로 보건·병원 인프라 프로젝트, 신규 및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퀸즐랜드 주정부 학교에 대한 Schooling Resource Standard<sup>542)</sup> 기여 비율 인상을 위한 추가 지원 등 포함
- 총채무와 순채무 또한 기존 발표된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9년 6월 말 기준 총채무는 GDP 대비 36.8%, 순채무는 23.1%로 예상

표 3-VI-7 2025-26 Budget 주요 재정 변수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추정					총계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35-36
수입(Receipts) <sup>1)</sup>	703.9	735.4	766.0	797.4	840.8	3,843.5	
GDP 대비 비율	25.3	25.5	25.6	25.3	25.3		26.8
지출(Payments) <sup>1)</sup>	731.8	777.5	801.3	834.5	877.9	4,023.0	
GDP 대비 비율	26.3	27.0	26.8	26.5	26.4		24.9
현금수지 <sup>2)</sup> (Underlying Cash Balance)	-27.6	-42.1	-35.7	-37.1	-37.0	-179.5	
GDP 대비 비율	-1.0	-1.5	-1.2	-1.2	-1.1		0.0
총채무(Gross Debt)	940.0	1,022.0	1,092.0	1,161.0	1,223.0		
GDP 대비 비율	33.7	35.5	36.5	36.9	36.8		31.9
순채무(Net Debt)	556.3	620.7	676.3	713.9	768.2		
GDP 대비 비율	20.0	21.6	22.6	22.7	23.1		20.2

주: 1) 현금주의 기준

2) 현금주의 기준. 현금수지=수입-지출

자료: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p. 5, Table 3, 2025. 4. 7.

◦ (중기 재정전망) 중기 전망은 2025-26 예산안과 동일하며 현금수지는 2035-36회계 연도에 균형에 이를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총수입은 2025-26회계연도에 25.5%에서 2035-36회계연도에 26.8%로 증가, 총지출은 2025-26회계연도에 27.0%에서 2035-36회계연도에 26.8%로 소폭 하락 전망

542) Schooling Resource Standard(SRS)는 학생 1인당 필요한 교육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SRS를 기준으로 기여 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함.

- 총채무는 2030년 6월 말 GDP 대비 37.0%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6년에는 31.9%로 개선될 전망

그림 3-VI-1 현금수지 및 총채무 중기 전망

Chart 1: Underlying cash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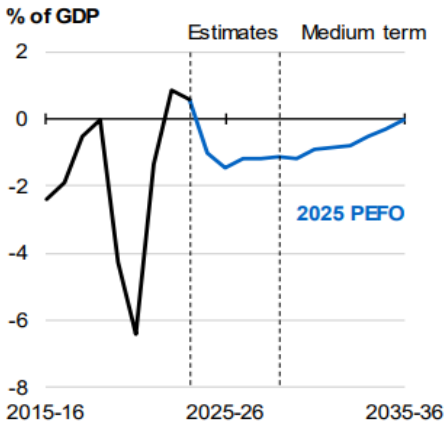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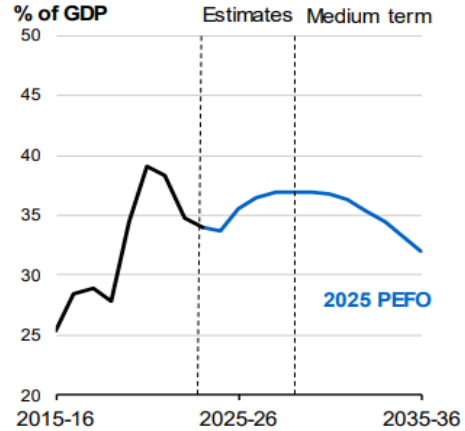


Chart 2: Gross debt



자료: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p. 5, Table 3, 2025. 4. 7.

## 나. 경제전망 업데이트

- 호주 중앙은행(RBA), 2025년 2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인하(4.35→4.10%) 발표(2025. 2. 18.)<sup>543)</sup>

\* 중앙은행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 (경제) 2025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및 2026년 경제성장률은 2.4%, 2.3%로 전망
  - 경제가 균형을 회복하면서 가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염두에 둘 필요

543)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5,” 2025. 2. 18.,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5/feb/>,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5/feb/pdf/statement-on-monetary-policy-2025-02.pdf>, 검색일자: 2025. 2. 20.

- 호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북미 지역은 관세 조정 여파로 2026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중국은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 이상의 추가 재정자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상향 조정됨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4.2% 수준에서 안정화 전망
  - 2024년 후반 경제활동의 침체로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수요를 지지해 향후 몇 년 동안 4.2%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할 전망
- (물가) 2025년 기초물가상승률이 2~3% 목표 범위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금리가 현재 경로를 따른다면 예측 기간 동안 기초물가상승률이 2.5%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의 일부는 일시적 생계비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2025년 말 관련 지원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말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8% 전망
- (금리) 중앙은행 이사회는 2025년 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에서 4.10%로 25bp 인하 결정
  - 호주는 2022년 5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으며, 인상 전 0.1%이던 기준금리는 꾸준히 상승하여 4.35%를 유지한 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하됨
  - 이사회는 제한적 통화정책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며, 물가상승에 대한 상방 위험은 완화되고 예상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더 일찍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 재무장관은 보도자료<sup>544)</sup>에서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모기지 비용 감소는 미래 실질 가치분 소득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며, 현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비 관련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둘 것임을 강조

544) 호주 재무장관 홈페이지, "Reserve Bank cuts cash rate," 2025. 2. 18.,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reserve-bank-cuts-cash-rate>, 검색일자: 2025. 2. 21.

표 3-VI-8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2026년 12월	2027년 6월
GDP 성장률	1.1	2.0	2.4	2.3	2.3	2.2
(11월 전망)	(1.5)	(2.3)	(2.3)	(2.3)	(2.2)	(n/a)
실업률	4.0	4.2	4.2	4.2	4.2	4.2
(11월 전망)	(4.3)	(4.4)	(4.5)	(4.5)	(4.5)	(n/a)
소비지물가상승률	2.4	2.4	3.7	3.2	2.8	2.7
(11월 전망)	(2.6)	(2.5)	(3.7)	(3.1)	(2.5)	(n/a)

주: 전망은 2월 12일 기준. 기준금리는 2025년 말 3.6%, 2026년 말 3.5%로 가정. 실업률은 분기별 평균.  
 자료: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5," p. 5, Table 발췌, 2025. 2. 18.

■ 호주 중앙은행(RBA), 2025년 5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인하(4.10→3.85%) 발표(2025. 5. 20.)<sup>545)</sup>

\* 중앙은행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 (경제) 호주의 2025년 및 2026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하락하여 각각 2.1%, 2.2%로 전망되며, 이는 무역 정책 변화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기인
  - 국내 경제성장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수요 약세 및 소비 모멘텀 약화로 성장 속도는 기존 예측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무역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 시장의 물가상승률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함
    - 관세 인상이 없는 국가의 경우 글로벌 수요 감소는 물가상승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일부 상품에 대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큰 변동 없이 여전히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후 완화될 전망
  - 실업률은 2025년 4.3% 수준까지 소폭 상승한 후 2026년부터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고용증가율은 2월 전망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상승률 또한 약간 낮음

545)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May 2025," 2025. 5. 20.,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5/may/pdf/statement-on-monetary-policy-2025-05.pdf>, 검색일자: 2025. 5. 22.

수준에서 안정화 전망

- (물가) 물가압력은 완화되고 2025년 근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모두 2~3% 목표 범위로 회복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의 일부는 일시적 생계비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2025년 말 관련 지원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예측 기간 후반에는 목표 범위의 중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금리) 중앙은행 이사회는 2025년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10%에서 3.85%로 25bp 인하 결정
  - 2025년 2월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
  - 이사회는 물가 위험이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여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 하였으나 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 전망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염두하고 있음을 강조
  -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보도자료<sup>546)</sup>에서 현 정부 집권 이후 물가상승률 하락, 실질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자평하였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

표 3-VI-9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2026년 12월	2027년 6월
GDP 성장률	1.3	1.8	2.1	2.2	2.2	2.2
(2월 전망)	(1.1)	(2.0)	(2.4)	(2.3)	(2.3)	(2.2)
실업률	4.0	4.2	4.3	4.3	4.3	4.3
(2월 전망)	(4.0)	(4.2)	(4.2)	(4.2)	(4.2)	(4.2)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1	3.0	3.1	2.9	2.6
(2월 전망)	(2.4)	(2.4)	(3.7)	(3.2)	(2.8)	(2.7)
근원물가상승률	3.3	2.6	2.6	2.6	2.6	2.6
(2월 전망)	(3.2)	(2.7)	(2.7)	(2.7)	(2.7)	(2.7)

주: 전망은 5월 14일 기준. 기준금리는 2025년 말 3.4%, 2026년 말 3.2%로 가정. 실업률은 분기별 평균.  
 자료: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May 2025," p. 4, Table 발췌, 2025. 5. 20.

546) 호주 재무장관 홈페이지, "Reserve Bank cuts interest rates again," 2025. 5. 20.,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reserve-bank-cuts-interest-rates-again>, 검색일자: 2025. 5. 22.

## 다. 재난 관련 대응 정책

- 호주 연방정부 및 퀸즐랜드 정부, 북부 퀸즐랜드의 대규모 홍수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복구 패키지 발표(2025. 2. 6., 2. 10., 2. 13.)<sup>547)</sup>
  - (배경) 북부 퀸즐랜드의 타운즈빌과 주변 도시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대규모 홍수가 발생
    - 이로 인해 주택 침수, 공항 운항 중단, 지역 도로망 침수, 건물 수천여 채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 속출
  - (복구 지원 상황) 주요 패키지 자금은 연방-주 재난 복구 기금 약정(Commonwealth-State 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sup>548)</sup>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 긴급지원금, 생산자 및 기업지원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1차 패키지(2025. 2. 6.): 북부 퀸즐랜드 홍수 피해 지역사회의 긴급 복구를 우선 지원하고,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개인 긴급지원금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800만호주달러 투입
    - 8개 지역 위원회에 지역당 최대 100만호주달러를 지원하여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복구 활동에 활용
    - 긴급지원금(Emergency Hardship Assistance Grants):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식량, 의류, 의약품 등 필수품 구매를 위해 1인당 180호주달러, 5인 이상 가족은 최대 900호주달러까지 지급

547) 호주 총리실, "Flood recovery package delivers \$8 million kick start for North Queensland clean-up," 2025. 2. 6., <https://www.pm.gov.au/media/flood-recovery-package-delivers-8-million-kick-start-north-queensland-clean>, 검색일자: 2025. 2. 12.,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North Queensland flood recovery gets \$8 million injection," 2025. 2. 6., <https://www.qra.qld.gov.au/news-case-studies/news/north-queensland-flood-recovery-gets-8-million-injection>, 검색일자: 2025. 2. 12., "Personal Hardship Assistance for more north Queenslanders," 2025. 2. 10., <https://www.qra.qld.gov.au/news-case-studies/news/personal-hardship-assistance-more-north-queenslanders>, 검색일자: 2025. 2. 13., 호주 총리실, "Disaster assistance grants available for flooded North Queensland primary producers, small businesses and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2025. 2. 13., <https://www.pm.gov.au/media/disaster-assistance-grants-available-flooded-north-queensland>, 검색일자: 2025. 2. 17.

548) 2018년 11월1일 시작된 주-연방 재해 복구 기금 약정(State-Commonwealth 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은 이전의 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를 대체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자금으로 지역사회가 재해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

- 필수 가정용품 보조금(Essential Household Contents Grants): 침구 등 손상된 필수 가정용품 교체를 위해 1인당 최대 1,765호주달러, 부부나 가족은 최대 5,300호주달러의 보조금 지급
  - 필수 서비스 지원 보조금(Essential Services Hardship Assistance)<sup>549)</sup>: 1인당 150호주달러, 5인 이상 가족은 최대 750호주달러 지원 등
  - 집수리 보조금(Structural Assistance Grants):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피해자는 재해로 인해 손상된 주택 수리 등을 위해 최대 8만호주달러 수령 가능
  - 2차 패키지(2025. 2. 13.): 홍수 피해를 입은 1차 생산자, 중소기업, 비영리 기관에 1억호주달러 이상의 특별 보조금 지급
  - 북부 퀸즐랜드 홍수 피해를 입은 1차 생산자에게 7,270만호주달러,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을 위한 2,500만호주달러, 최소 10ha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임을 위한 240만호주달러 보조금, 1차 생산자를 위한 비상 사료 지원 100만호주달러 등 지원
-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사이클론 Alfred 관련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발표(2025. 3. 11.)<sup>550)</sup>
- (배경) 3월 8일 상륙한 사이클론 Alfred로 인해 퀸즐랜드 남동부와 NSW 북부 지역은 30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전, 지역 사업체 및 학교 임시 휴무·휴교, 주민 대피 등 큰 피해를 입음
  - (지원내용) 연방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 및 중소 사업자에 대한 개인 긴급지원금, 재난 복구 수당, 호주 정부 재난 복구 지급금 등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해당 내용은 2025-2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
    - 개인 긴급지원금(Personal Hardship Assistance Payment): 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180호주달러) 및 가족(최대 900호주달러)에게 식량, 의류, 의약품 및 긴급 숙박시설 등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일회성 재정지원을 제공

549) 필수 서비스 지원 보조금은 재난으로 인해 5일 연속으로 집에서 필수 서비스(전기, 가스, 물 또는 하수도)가 중단되었을 때 지원하는 제도

550) 호주 총리실, "Financial assistance on the way for Northern New South Wales residents recovering from Cyclone Alfred," 2025. 3. 11., <https://www.pm.gov.au/media/financial-assistance-way-northern-new-south-wales-residents-recovering-cyclone-alfred>, 검색일자: 2025. 3. 18., NSW 주정부, "Tropical Cyclone Alfred grants, payments and financial support," 2025. 3. 13., <https://www.nsw.gov.au/emergency/tropical-cyclone-alfred-recovery-updates/grants-payments-and-financial-support>, 검색일자: 2025. 3. 19.

- 재난 복구 수당(Disaster Recovery Allowance): Alfred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에게 최대 13주간 소득 지원
  - 호주 정부 재난 복구 지급금(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 Alfred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일회성 복구 지급금 제공
    - 성인 1인당 1,000호주달러, 자녀 1인당 400호주달러
  - 이 밖에도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사업체 운영 재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장기 저금리 대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
  - (지원금액) 연방정부는 3월 25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Alfred를 포함한 최근의 자연재해 관련 복구 비용 지급을 위해 12억호주달러를 배정
- 호주 연방정부, NSW<sup>551)</sup>주 주변 대규모 홍수 발생에 따른 재난 지원책 발표(2025. 5. 27.)<sup>552)</sup>
- (배경) NSW주에서 5월 22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시드니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에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
    - 이로 인해 주민 사망 및 고립, 주택 침수, 도로망 침수 및 전철 중단, 건물 수천여 채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 속출
  - (재난 지원책) 앨버니지 총리는 해당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재난 복구 지급금,<sup>553)</sup> 임시 소득지원<sup>554)</sup><sup>555)</sup> 등 긴급 지원책을 즉시 시행하고 조속한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
    - 재난 복구 지급금: 홍수로 인한 주택 피해, 중상, 가족 사망 등 재해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이 대상이며 지급 금액은 성인 1인당 1,000호주달러, 아동 1인당 400호주달러
    - 임시 소득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13주 동안 소득지원 제공
    - 재난 복구 기금 약정<sup>556)</sup>: NSW 주에서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연방-주 공동으로

551) 뉴사우스웨일주

552) 호주 연방정부,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expanded for flood-affected New South Wales communities," 2025. 5. 27., <https://www.pm.gov.au/media/federal-financial-assistance-expanded-flood-affected-new-south-wales-communities>, 검색일자: 2025. 5. 27.

553)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AGDRP)

554) Disaster Recovery Allowance(DRA)

555) 재난 복구 지급금 및 임시 소득지원은 100% 연방 재원으로 조달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 복구 기금 약정이 활성화되었으며, 가구, 중소기업, 1차 생산자, 지방정부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 지원

## 라. 경제 및 재정정책

###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글로벌 희토류 공급 촉진을 위해 ‘Nolans project’에 2억호주달러 투자 발표(2025. 1. 15.)<sup>557)</sup>

- (개요) 호주 정부는 최근 핵심광물 개발 및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Nolans project는 호주 북부 Alice Springs에서 북쪽으로 135km 떨어진 Nolans 부지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인 희토류 원소를 채굴하고 가공하기 위한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2023년 ‘핵심광물전략 2023-2030(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3-2030)<sup>558)</sup>’에서 핵심광물 식별, 우선순위 기술에 집중 투자 등의 계획을 발표
  - 호주 앨버니지(Albanese) 총리는 2024년 3월에도 호주 최초의 복합 희토류 광산 및 정유소 건설에 최대 8억4천만호주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발표
  - 또한 2024-25 호주 예산안에서 핵심광물 가공 및 처리 관련 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10년 간 88억호주달러 투자를 발표
- (내용) 호주 정부는 국가재건기금(NRFC)<sup>559)</sup>을 통해 광물탐사업체인 Arafura사에

556) 2018년 11월 1일 시작된 주-연방 재해 복구 기금 약정(State-Commonwealth 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은 이전의 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를 대체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자금으로 지역사회가 재해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하며 주로 연방 75%, 주 25% 비율로 분담

557)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200 million investment in critical minerals to build Australia’s future,” 2025. 1. 15., <https://www.minister.industry.gov.au/ministers/husic/media-releases/200-million-investment-critical-minerals-build-australias-future>, 검색일자, 2025. 1. 20., 호주 국가재건기금, “NRFC boosting global rare earths supply through cornerstone \$200 million investment commitment in Arafura’s transformational mining project,” 2025. 1. 15., <https://www.nrf.gov.au/news-and-media-releases/nrfc-boosting-global-rare-earths-supply-through-cornerstone-200-million-investment-commitment-arafuras-transformational-mining-project>, 검색일자: 2025. 1. 20.

558)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3-2030,” 2023. 6. 20., <https://www.industry.gov.au/publications/critical-minerals-strategy-2023-2030>, 검색일자, 2025. 1. 21.

559)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 Corporation; NRFC)은 「국가재건기금법 2023(National Reconstruction Fund Corporation Act 2023)」에 따라 호주 정부가 설립한 연방 기관이며, 「국가재건기금법」의 목적은 호주 경제의 우선순위 분야로 자금흐름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임.

2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Nolans project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

- 이 프로젝트는 광산 개발 및 정제시설 운영을 통한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특히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중심으로 한 NdPr<sup>560)</sup> 산화물을 생산할 광산, 가공 공장 및 관련 인프라 건설을 포함
- Nolans project는 38년간 연 4,440톤의 NdPr을 생산할 계획이며, 2032년부터 세계 NdPr 수요의 약 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Nolans project는 건설 단계에서 600개 이상, 운영 단계에서 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원주민을 포함한 고용 기회를 촉진하고, 북부 준주의 개발 지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호주 경제가 넷제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 호주 연방정부, Bruce Highway 업그레이드에 72억호주달러 지원 발표(2024. 1. 16.)<sup>561)</sup>

- 앨버니지 총리는 퀸즐랜드 Bruce Highway 개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전성 증진을 위해 72억호주달러 지원을 발표
  - Bruce Highway는 총 길이 1,673km로 퀸즐랜드의 브리즈번에서 시작하여 퀸즐랜드 최북단 케언즈를 이어주는 주요 남북 도로로, 주 전역의 승객, 화물, 관광객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퀸즐랜드 인구의 62%가 이용
  - Bruce Highway는 New South Wales와 Victoria의 주요 고속도로보다 사망 및 중상해 사고율이 평균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안전성 증진을 위한 조치가 시급
  - 이번 연방정부 지원은 Bruce Highway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이며, 이번 투자로 호주 정부가 해당 도로에 투자한 총비용은 170억호주달러를 초과

560) NdPr은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의 주원료이며, 차량용 모터, 풍력발전용 터빈,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임.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그룹도 호주에서 NdPr를 공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561) 호주 총리실, "Over \$200m in cost-of-living energy upgrades for over 30,000 NSW households," 2024. 1. 16., <https://www.pm.gov.au/media/over-200m-cost-living-energy-upgrades-over-30000-nsw-households>, 검색일자: 2024. 1. 19.

## 마. 기타

### ■ 2025 호주 총선 결과 노동당 재집권 확정\*(2025. 5. 3.)<sup>562)563)</sup>

- \* 호주 선거는 우선순위(선호) 투표제도(preferential ballot)로 투표자들이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선호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상원은 대선거구, 우선순위 투표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며 하원은 소선거구, 우선순위 투표제, 과반수 득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2025년 5월 3일 실시된 연방총선에서 앨버니지 연방총리가 이끈 노동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재집권에 성공
  - (하원) 하원 의석 총 150석 중 노동당 94석, 자유연립당<sup>564)</sup> 43석, 녹색당 1석, 무소속 및 소수정당 11석, 미확정 1석으로 노동당은 2022년 선거보다 현재까지 17석이 늘어 단독 과반을 확보한 상황
  - (상원) 상원 의석 총 76석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임기를 채운 40명의 상원의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노동당 16석(+1 유력), 자유연립당 13석, 녹색당 6석, 무소속 등 2석, 미확정 2석으로 개표가 진행 중
- 최종 개표 완료는 6월 중순경으로 예상

### ■ 호주 재무부, 2025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3.5% 인상 발표(2025. 6. 3.)<sup>565)</sup>

- \* 호주의 최저임금 수준 조정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연례 임금검토(Annual Wage Review<sup>566)</sup>)를 통해 결정되며, 국내외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고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 내용)호주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의 연례 임금 검토에 따라 2025-26회계연도 국가 최저임금 및 modern award<sup>567)</sup> 최저임금을 3.5% 인상하기로 결정

562) 호주 선거위원회, "House of Representatives - who is leading?," 2025. 5. 26., <https://tallyroom.aec.gov.au/HouseDefault-31496.htm>, 검색일자: 2025. 5. 26.; 호주 ABC News, "Federal Election 2025 - Australia Votes," 2025. 5. 26., <https://www.abc.net.au/news/elections/federal-election-2025>, 검색일자: 2025. 5. 26.

563) 2025년 5월 28일 기준 약 91% 개표가 진행 중

564) 자유당+자유국민당+국민당 연합정당

565) 호주 재무부, "National Minimum Wage to rise 3.5 per cent following Annual Wage Review," 2025. 6. 3.,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national-minimum-wage-rise-35-cent-following-annual-wage>, 검색일자: 2025. 6. 19.;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Annual Wage Review 2025 decision announced," 2025. 6. 3., <https://www.fwc.gov.au/about-us/news-and-media/news/annual-wage-review-2025-decision>, 검색일자: 2025. 6. 23.

566) 연례 임금 검토는 *The Fair Work Act 2009*에서 공정근로위원회가 작성하도록 규정

- modern award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21개 산업 및 직종별로 전체 근로자의 20.7%에 해당하며, 전체 임금 중에서는 10.5% 비중을 차지
- award에 속한 근로자는 여성 비율이 높고 2/3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 1/3 이상이 저임금 근로자이며 분야별로는 숙박, 외식, 보건·사회복지, 소매업 등 서비스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24.10호주달러에서 24.95호주달러, 주급(38시간 기준)은 915.90호주달러에서 948.00호주달러로 인상
  - ※ (참고) 국가최저임금 및 award 인상률: (2021~2022) 2.5%/2.5%, (2022~2023) 5.2%/4.6%, (2023~2024) 8.6%/5.75%, (2024~2025) 3.75%/3.75%
- (근거) 2021년 7월 이후 award·국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였으며, RBA(중앙은행)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로 복귀 하면서 실질적 임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
  - 2021~2022년 고물가의 영향으로 modern award 기준 임금의 실질 가치가 4.5% 하락한 것으로 분석
- (평가) 차머스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이 근로자와 경제뿐 아니라, 생계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ACTU)<sup>568</sup>)는 보도자료에서 공정근로위원회가 7월 1일부터 300만명의 근로자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여성·시간제·저임금 근로자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으로 인해 손실된 임금 일부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sup>569</sup>)

567) modern award는 호주의 근로제도로써 산업별·직종별 근로 기준을 담고 있는 법적 문서에 해당하며, 국가 최저임금은 award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의미함(자료: Fair Work Ombudsman, <https://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fact-sheets/minimum-workplace-entitlements/modern-awards>, 검색일자: 2025. 6. 23.)

568)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은 호주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전국 노조의 약90%가 가입된 단체임(자료: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사회문화·사회구조」,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21554/view.do?seq=687741&srchFr=&](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21554/view.do?seq=687741&srchFr=&)”[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21554/view.do?seq=6877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21554/view.do?seq=6877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2009. 5. 6.)

569)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 “Boost to Aussie wages on the way,” <https://www.actu.org.au/media-release/boost-to-aussie-wages-on-the-way/>, 검색일자: 2025. 6. 23.

###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 호주 통계청, 2023-24회계연도 정부재정통계 발표(2025. 4. 22.)<sup>570)</sup>

-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세입(taxation revenue)은 2022-23회계연도 대비 6.1% 증가한 8,017억 1,6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5.9% 증가한 9,785억 8,800만호주달러를 기록
  - 세입에서 개인소득세, 원유·석유제품 물품세, 토지세, GST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광물 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등 하락
-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총비용(total expenses)은 2022-23회계연도 대비 8.4% 증가한 9,597억 1,7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총비용은 노인요양, 건강보험, 양육보조금, 전기요금 보조, 인건비 증가 등에 기인
-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sup>571)</sup>는 188억 7,100만 호주달러 흑자, 순차입<sup>572)</sup>은 441억 3,400만호주달러를 기록

표 3-VI-10 2023-24회계연도 정부재정통계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2-23 대비 2023-24 % 변화분
세입(Taxation revenue)_일반정부	593,105	683,329	755,519	801,716	6.1
총수입(Total revenue)_총공공부문	810,128	925,552	1,024,089	1,090,024	6.4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728,022	831,536	923,695	978,588	5.9
공공 비금융기업(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97,322	103,198	107,277	115,656	7.8
비금융 공공부문(Non-financial public sector)	796,671	907,284	1,001,554	1,064,501	6.3
총비용(Total expenses)_총공공부문	968,150	960,978	1,000,098	1,087,285	8.7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873,531	866,399	885,522	959,717	8.4
공공 비금융기업(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105,134	104,788	109,850	117,687	7.1
비금융 공공부문(Non-financial public sector)	950,241	943,901	966,082	1,047,778	8.5

570)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nual," 2025. 4. 22.,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government-finance-statistics-annual/2023-24>, 검색일자: 2025. 4. 28.

571) 순운영수지: 총수입-총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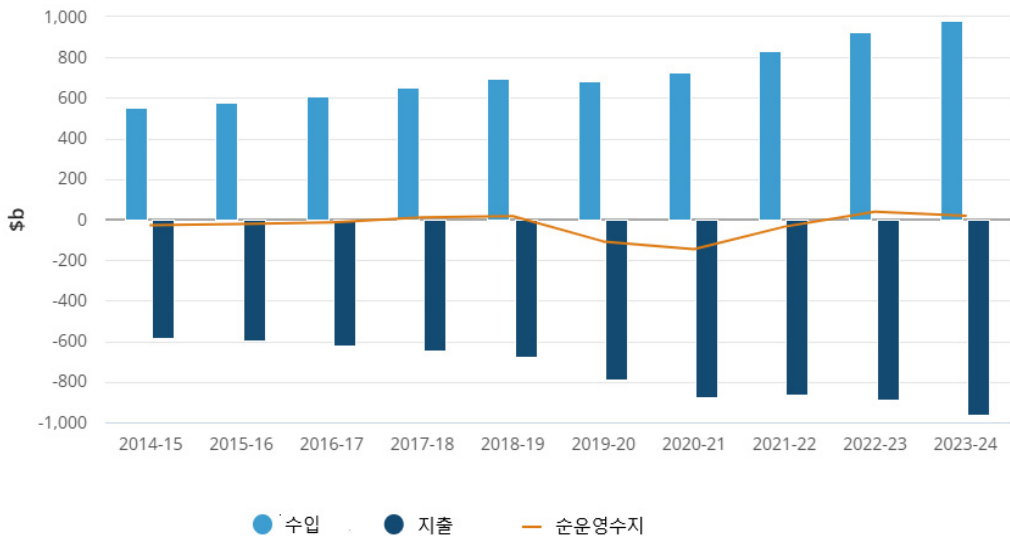
572) 순융자/차입: 총수입-총비용-비금융자산 순취득

표 3-VI-10 의 계속

구분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2-23 대비 2023-24 % 변화분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_총공공부문	-158,021	-35,425	23,992	2,738	-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145,510	-34,862	38,173	18,871	-
공공 비금융기업(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7,811	-1,590	-2,573	-2,031	-
비금융 공공부문(Non-financial public sector)	-153,570	-36,617	35,472	16,723	-
순융자/차입(Net lending(+)/borrowing(-)_총공공부문	-212,356	-98,131	-53,690	-85,115	-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192,911	-87,600	-22,304	-44,134	-
공공 비금융기업(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14,499	-11,386	-19,588	-26,873	-
비금융 공공부문(Non-financial public sector)	-207,872	-99,220	-42,171	-71,066	-

주: 1. 비금융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공 비금융기업으로 구성, 총공공부문은 일반정부, 공공 비금융기업 및 공공 금융기업으로 구성  
 2. 정부 간 이전으로 인해 개별 정부 수준이나 부문의 합계가 비금융 공공부문 및 총공공부문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nual," 2025. 4. 22.

그림 3-VI-2 호주 순운영수지 10년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nual," 2025. 4. 22.

■ 호주 통계청, 2025년 1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2025. 6. 3.)<sup>573)</sup>

- 호주 일반정부의 2025년 1분기 세입(taxation revenue)은 전 분기 대비 3.0% 감소한 2,069억 1,1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전 분기 대비 0.8% 감소한 2,501억 100만 호주달러를 기록
- 총비용(total expenses)은 전 분기 대비 1.9% 감소한 2,507억 8,5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는 -6억 8,500만 호주달러, 여기서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차감한 순차입은 132억 2,100만호주달러를 기록

표 3-VI-11 2025년 1분기 정부재정통계(일반정부)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전 분기 대비
세입(Taxation revenue)	226,859	187,613	213,288	206,911	-3.0
총수입(Total revenue)	270,125	231,676	252,184	250,101	-0.8
총비용(Total expenses)	255,770	250,596	255,743	250,785	-1.9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	14,355	-18,921	-3,559	-685	-
순융자/차입(Net lending(+)/borrowing(-))	-6,818	-30,955	-18,970	-13,221	-

자료: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2025. 6. 3.

■ 호주 통계청, 2025년 1분기 국민계정 발표(2025. 6. 4.)<sup>574)</sup>

- 2025년 1분기 호주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0.2%를 기록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10.2%), 차량구매(2.5%), 의류(1.1%) 등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담배(-6.4%)<sup>575)</sup>, 주류(-1.8%) 등의 지출이 감소해 전 분기 대비 0.4% 증가

573)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2025. 6. 3.,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government-finance-statistics-australia/mar-2025>, 검색일자: 2025. 6. 18.

574)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5. 6. 4.,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national-accounts/australian-national-accounts-national-income-expenditure-and-product/mar-2025>, 검색일자: 2025. 6. 18.

575) 호주는 2023년 9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담배 소비세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국가담배전략 2023-2030(National Tobacco Strategy 2023-2030) 일환으로 추진

- 총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민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0.7% 증가, 공공 투자는 전 분기 대비 2.0% 감소
- 수출은 비통화성 금 31.6%, 금속제품 6.1% 등이 증가한 반면, 석탄 6.4%, 여행서비스 5.4%, 기타 광물연료 3.6%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소비재 10.4%, 가공산업용품 7.0% 등이 상승한 반면, 비산업운송장비 6.5%, 섬유·의류 7.8%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0.4% 감소

표 3-VI-12 호주의 2025년 1분기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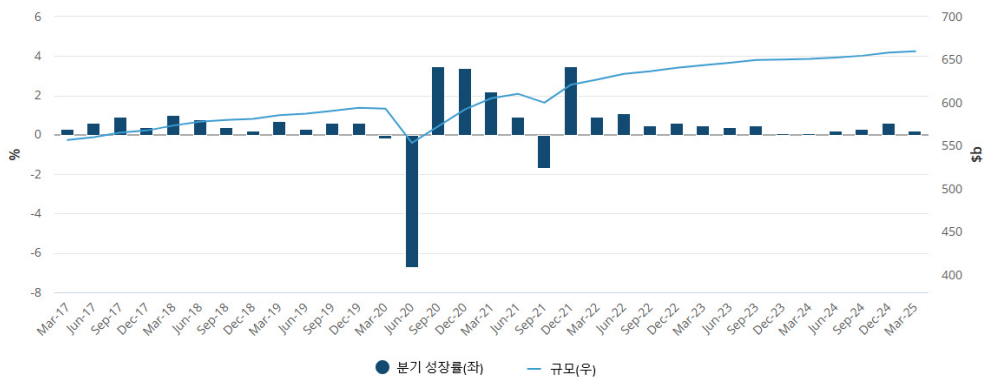
(단위: % 변화)

구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2	1.6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	3.4
가계(Households)	0.4	0.7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1	2.9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na	na
국민총지출(Gross national expenditure)	0.3	1.6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0.8	-0.2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0.4	0.4
통계적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na	na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0.2	1.3

자료: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5. 6. 4.

그림 3-VI-3 호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십억호주달러, 계절조정)



자료: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5. 6. 4.

## VII 중국<sup>576)</sup>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5회계연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표 3-V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25. 1. 17.	중국 국가통계국, 2024년 국민경제운영(国民经济运行) 결과 발표
2025. 2. 4.	중국 재정부 및 상무부, 미국 대중국 관세 부과 관련 WTO 분쟁절차 개시
2025. 3. 26.	중국 재정부, 2025년 중앙정부 예산안 공개
2025. 4. 13.	중국 인민은행, 2025년 3월 금융통계보고서 발표
2025. 4. 16.	중국 국가통계국, 2025년 1분기 국민경제활동지표 발표
2025. 5. 8.	중국 인민은행, 정책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2025. 6. 5.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2024년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연차보고서」 공개

자료: 저자 작성

57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하얀 선임연구원(hypark815@kipf.re.kr), 박신아 선임연구원(sinapark@kipf.re.kr)

## 01 예산 및 결산

■ 중국 재정부, 2025년 중앙정부 예산안 공개(2025. 3. 26.)<sup>577)578)</sup>

- 2025년 중국 중앙정부 총 지출 예산은 4조 3,545억위안<sup>\*579)</sup>으로 2024년 집행액보다 6.9% 증가
  - \* 한화 기준 약 862조 1,910억원이며, 2025년 대한민국 정부의 총 지출 예산은 673조 3천억원
- 과학기술 지출 예산은 3,981억 1,9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10% 증가
  -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예산이 각각 12.1%와 13.6% 증가한 111억 3,900만위안과 215억 6,500만위안씩 증액되어 과학기술 지출 예산 증가에 가장 큰 영향
- 국방비 예산은 1조 7,846억 6,5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7.2%, 공공안전 관련 예산이 2,428억 2,8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7.3% 증가
- 교육비 예산은 1,744억 4,3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5% 증가
  - 주로 대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1인당 기금의 증액과 정부 학자금 대출의 이자 할인과 관련한 지출 증가에서 기인
- 자원 탐사 및 산업 정보 관련 지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집행액 대비 18.2% 증가한 444억 1,200만위안 배정
  - 증가액의 대부분은 제조업 관련 예산액의 증액에서 기인하며, 중국 재정부는 해당 예산의 증액을 실 정산 사업(据实结算项目)<sup>580)</sup> 증가의 영향으로 발표
- 외교 관련 예산은 645억 6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8.4% 증가
- 부채 규모의 증대로 부채 이자 비용 지출 관련 예산에 전년도 집행액 대비 10.2% 증가한 8,345억 5천만위안 배정
- 이 밖에도 문화·관광·스포츠 및 미디어, 위생 및 건강, 금융업, 곡물 및 석유 비축, 방재 및 비상관리, 부채 이자, 채권 발행 등과 관련한 예산 증가

577)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财政部有关负责人就2025年中央预算公开答记者问」, 2025. 3. 26., [https://yss.mof.gov.cn/gongzuodongtai/202503/t20250326\\_3960616.htm](https://yss.mof.gov.cn/gongzuodongtai/202503/t20250326_3960616.htm), 검색일자: 2025. 4. 15.

578)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于2025年中央本级支出预算的说明」, [https://yss.mof.gov.cn/2025zycyzs/202503/t20250324\\_3960481.htm](https://yss.mof.gov.cn/2025zycyzs/202503/t20250324_3960481.htm), 검색일자: 2025. 4. 15.

579) 2025. 4. 29. 고시 환율 기준 1위안은 한화 약 198원

580) 실제 완료된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 모델로, 대금이 계약 체결 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전에 따라 변동

- 사회보장 및 고용,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교통 운송, 상업 부문,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주택 보장 지출 관련 예산은 감소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지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 수준으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농업 관련 이전금 감소에 기인

표 3-Ⅷ-2 2025년 중국 중앙정부 지출 예산표

(단위: 억위안, %)

항목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감율
<b>계</b>	<b>40,720.18</b>	<b>43,545.00</b>	<b>6.9</b>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	1,552.34	1,530.83	-1.4
외교 지출	595.19	645.06	8.4
국방 지출	16,652.09	17,846.65	7.2
공공 안전 지출	2,262.56	2,428.28	7.3
교육 지출	1,660.71	1,774.43	5.0
과학기술 지출	3,619.09	3,981.19	10.0
문화관광, 스포츠 및 미디어 지출	181.96	192.50	5.8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지출	1,108.62	1,104.11	0.4
위생 및 건강 관련 지출	295.25	301.65	2.2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관련 지출	206.28	202.14	-2.0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관련 지출	4.41	4.53	2.7
농업, 임업 및 수자원 부문 지출	209.91	197.28	-6.0
교통 운송 지출	824.98	815.12	-1.2
자원 탐사 및 산업 정보 관련 지출	375.66	444.12	18.2
상업 부문 지출	40.10	40.03	-0.2
금융업 부문 지출	564.91	587.29	4.0
천연자원, 해양학, 기상학 관련 지출	288.72	296.98	2.9
주택 보장 지출	658.10	647.89	-1.6
곡물 및 석유 비축 관련 지출	1,240.38	1,316.60	6.1
방재 및 비상 관리 지출	448.49	480.08	7.0
기타 지출	307.25	337.14	9.7
부채 이자 지출	7,573.15	8,345.50	10.2
채권 발행 비용	50.04	55.60	11.1

자료: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年中央本级支出预算表」, 2025. 3. 26., [https://yss.mof.gov.cn/gongguyodongtai/202503/t20250326\\_3960616.htm](https://yss.mof.gov.cn/gongguyodongtai/202503/t20250326_3960616.htm), 검색일자: 2025. 4. 15. 표 일부 발췌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경제 및 재정 정책

-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sup>581)</sup> 개최(2024. 12. 11.~12.)<sup>582)</sup>
  - (2024년 평가) 2024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十四五规划)<sup>583)</sup>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였으며,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주요 성과) 경제의 질적 발전, 생산력 증대, 개혁 심화, 민생보장 강화
  - (2025년 경제 목표) 안정 속 성장을 목표로 경제발전을 추진
    - (주요 목표) 안정적인 경제성장, 고용 및 물가 안정, 경제성장 목표와 국민소득 증가 동시 달성
  - (정책 방향)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sup>584)</sup>을 실시하고,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
    - (재정 정책) 재정적자 비율 확대,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강화,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출구조 최적화
      - 2024년 중국 재정적자는 GDP의 3% 수준(4조 600억위안)이었으며, 전문가들은 2025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약 4% 수준(약 5조 6천억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sup>585)</sup>
      - 2024년 초장기 특별국채 약 1조위안, 지방특수채권 신규 발행 약 3조9천억위안,

581) 매년 12월 당 최고 지도자와 국무원 및 경제 관련 책임자가 참여하여 내년도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와 주요 경제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582) 인민일보(人民日报), 「中央经济工作会议在北京举行」, 2024. 12. 13., <http://cpc.people.com.cn/n1/2024/12/13/c64094-40381254.html>, 검색일자: 2025. 1. 14.

583) 2020년 10월 26~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5중 전회에서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목표를 담은 중기 계획으로,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됨. 6대 목표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고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0. 12. 2.,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3467&act=view&act=view&list\\_no=3467&cg\\_code=](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3467&act=view&act=view&list_no=3467&cg_code=), 검색일자: 2025. 1. 22.).

584) 2008년 ‘온건적 재정정책’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변경한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다가 16년 만에 재정정책 기조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변경

585)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财政部详解更加积极的财政政策: 政策空间充足, 将梯次拿出政策“后手”」, 2025. 1. 10.,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Oeed0e4420d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일자: 2025. 1. 23.

2023년 4분기 추가 발행된 1조위안의 국채(대부분 2024년 수자원 부문 등 인프라에 투자) 등 약 10조위안의 정부채권 자금 투입

- 2025년 채권발행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1조~2조위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통화 정책) 지급 준비율 및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부동산 정책) 2025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활용하여 토지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성임대주택(保障性租赁住房)<sup>586)</sup>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sup>587)</sup>
- 주택 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부동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 정책) 단계적인 사회보험요율(社保费率)<sup>588)</sup><sup>589)</sup><sup>590)</sup> 인하, 일회성 고용 보조금(一次性扩岗补助)<sup>591)</sup> 연장, 기업 운영비용 절감, 창업 담보 대출, 정부 금융 담보 시스템(政府性融资担保体系)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sup>592)</sup>

586) 보장형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시민(대도시로 순유입되는 시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호적 및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주도로 공급되는 70m<sup>2</sup>이하 소형 주택을 의미, 해당지역의 같은 시장 임대주택 대비 임대료가 낮음(KIEP 북경사무소, 「중국 주택건설부, 보장성 임대주택 확대정책의 주요 내용」, 2023. 1. 19.,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2972&mid=a20200000000&board\\_id=18](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2972&mid=a20200000000&board_id=18), 검색일자: 2025. 1. 24.)

587)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财政部详解更加积极的财政政策: 政策空间充足, 将梯次拿出政策“后手”, 2025. 1. 10.,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0eed0e4420d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일자: 2025. 1. 23.

588) 중국 「사회보험법」 제2조에 의거하여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险一金)이라고 함.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그리고 근로자의 주택 구매, 임대, 또는 주택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을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1. 10. 12.,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3051200&bid=0019&list\\_no=7583&act=view](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3051200&bid=0019&list_no=7583&act=view), 검색일자: 2025. 1. 23.)

589) 중국의 사회보험요율은 지역,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연금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주와 개인의 부담비율이 다르고,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고 있음. 2019년 국무원의 사회보험료 인하 종합대책 고시(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的通知)에 따르면 연금보험 고용주(单位) 부담 16% 이하(16%를 초과하는 지역은 인하 가능), 실업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 단계적 인하 계획 등을 발표.(중국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的通知」, 2019. 4. 4.,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9-04/04/content\\_5379629.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9-04/04/content_5379629.htm), 검색일자: 2025. 1. 24.)

590)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 보험료를 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 행정구역(자치구, 직할 시) 내에서는 고용주와 개인 부담 비율을 같게 하고, 개인부담이 고용부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2024년 말까지 연장)(인력자원사회보장부,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阶段性降低失业保险、工伤保险费率有关问题的通知」, 2023. 3. 29.,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3/31/content\\_5749452.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3/31/content_5749452.htm), 검색일자: 2025. 1. 24.)

591) 일회성 고용 보조금 정책은 2023년 미취업 일반 졸업자, 퇴학 후 2년 이내 일반 대졸자를 고용한 기업, 그리고 실업자로 등록된 16~24세 청년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위해 1개월 이상 실업보험, 업무 관련 상해보험, 근로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 확대 보조금을 지급(1인당 1,500위안 이하로 지급, 12월 31일까지 적용)(중국 재정부, 「我国延续实施一次性扩岗补助政策」, 2023. 11. 17., [https://bj.mof.gov.cn/ztd/czysjg/jyj/202311/t20231117\\_3917106.htm](https://bj.mof.gov.cn/ztd/czysjg/jyj/202311/t20231117_3917106.htm), 검색일자: 2025. 1. 23.)

- (중점 과제) 내수 확대 및 소비·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아홉 가지 중점과제를 발표
  - (내수확대 및 소비·투자 활성화) 소비 진작과 투자 제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및 소비 여력 확대, 두 가지 중점(兩重)<sup>593</sup> 및 두 가지 새로운 정책(兩新)<sup>594</sup> 추진 확대, 서비스 소비 확대,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 정부 투자를 통한 사회 투자 유도 등
    - 양중(兩重) 및 양중(兩新) 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 초장기 특별국채를 추가 발행하여 정책 지원 품목을 확대할 예정<sup>595</sup>)
  - (과학기술혁신 및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지원) 핵심 기술 연구와 기초연구 강화,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전환 지원, 혁신기업 육성 등
  - (경제체제 개혁 심화) 국유기업(国有企业)<sup>596</sup> 개혁, 민영경제 촉진법 도입 등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대외무역 안정화, 자유무역지구 질적 개선,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실행 가속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
  - (중점 분야 리스크 관리) 부동산 시장 회복 및 주택 수요 확대 지원,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불법 금융 활동 단속 강화 등
  - (새로운 도시화 및 농촌 진흥)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 농산물 공급 안정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민 소득 증대, 현대 농업 경제 시스템 구축 등
  - (지역 균형 발전 강화)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 지역 간의 산업 협력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해양 경제 및 만 지역(湾区) 경제권<sup>597</sup>의 발전 가속화 등

592)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财政部详解更加积极的财政政策: 政策空间充足, 将梯次拿出政策“后手」, 2025. 1. 10.,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0eed0e4420d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 일자: 2025. 1. 23.

593) 두 가지 중점(兩重): 국가중대전략시행(国家重大战略实施),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重点领域安全能力建设)을 의미. 국가중대전략시행은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지역 균형 발전 전략, 혁신 주도형 성장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은 에너지, 식량, 산업 공급망, 금융 등 국가의 핵심 산업 및 전략 분야에서 안보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594) 두 가지 새로운 정책(兩新): 노후화된 산업 설비와 장비를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규모 설비 갱신(大规模设备更新), 소비재 제품(가전, 자동차, 가구 등)의 교체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인 소비재 이구환신(消费品以旧换新)을 말함.

595)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实施更加积极有为的宏观政策」, 2025. 1. 17., [https://www.gov.cn/zhengce/202501/content\\_6999226.htm](https://www.gov.cn/zhengce/202501/content_6999226.htm), 검색일자: 2025. 1. 17.

596) 정부가 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경제 발전과 국가 전략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국유기업은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으로 구분되고 비효율성, 과도한 부채, 혁신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친환경 발전 추진) 친환경 기술 혁신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재생 에너지 기반 확충, 생물 다양성 보호 강화 등
- (민생 및 사회 안전 강화) 고용지원 확대, 주요 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강화, 교육·의료·요양 등 기본 공공서비스 개선,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 안전 시스템 강화 등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에 2025년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 초안 검토 요청(2025. 3. 5.)<sup>598)</sup>

- \*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다양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장기 계획(10년 이상), 중기 계획(5년) 및 단기 계획(1년)으로 구분되며 현재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진행 중
- (주요 목표) GDP 성장률 5%,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CPI) 2%,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3% 절감, 도시 실업률 5.5%, 도시 지역 1,2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곡물생산량 약 1조 4천억근(斤) 달성
  - (정책 방향) 안정된 상황에서 발전 및 혁신을 추구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을 역동적으로 조정하여 효과성 증진
    - (적극적 재정정책) 재정 지출의 강도를 높여 핵심 분야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지출구조를 최적화
    - 1조 3천억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하여 양중(两重)<sup>599)</sup> 및 양신(两新)<sup>600)</sup>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대형 국유 상업은행 기본 자기자본(Tier 1)<sup>601)</sup> 보완 목적으로

597)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와 항저우만 경제권(杭州湾经济区)이 있음.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는 광둥성(广东省)의 9개 도시(광저우, 선전, 주하이 등)와 홍콩(香港), 마카오(澳门)를 포함한 경제권으로 중국 남부의 핵심 경제 지역으로 첨단 금융 무역 등이 집중되어 있음. 항저우만 경제권은 저장성(浙江省)을 중심으로 항저우만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으로 창장 삼각주(长三角)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음.

598) 중국 신화통신(新华社), 「关于202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摘要)」, 2025. 3. 6.,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0838.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0838.htm), 검색일자: 2025. 3. 20.

599) 국가 중대 전략 및 정치·군사·금융 등 중점분야의 안보 능력과 관련한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는 도시 가스, 배수 및 기타 지하 배관망과 오래된 도시 공동체 개조와 같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점(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国经济新看点: 高质量做好“两重”建设」, 2024. 10. 28., [https://www.gov.cn/zhengce/202410/content\\_6983392.htm](https://www.gov.cn/zhengce/202410/content_6983392.htm), 검색일자: 2025. 3. 20.)

600)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교체 관련 프로젝트로, 장비 갱신 대출 할인, 자동차 폐차 및 리뉴얼, 휴대폰, 태블릿 등 디지털 신제품 구매 보조금, 주택 개선을 위한 소비재 교체 지원 등이 포함

60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 자본(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천억위안의 특별 국채 발행

- 국민 생활 및 소비 촉진을 위해 4조 4천억위안의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 이전 지출의 강도를 높여 저개발 지역 정부에 대한 '3대 보장(三保)'<sup>602</sup>의 근간 확립
- 2025년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24년 대비 1조 6천억위안<sup>603</sup> 증가한 5조 6,500억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완화) 지급준비율 및 이자율의 적시 인하 및 풍부한 유동성 유지 등 통화정책의 전반적인 완화
- (국민 생활지향성 강화) 국민 생계 증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의 선순환 유도
- (정책 조정 및 협력) 재정, 통화, 고용, 산업, 소비, 환경 보호, 규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의 목표, 도구, 시기, 강도 및 주기의 일치 정도 등을 조정하여 정책 시너지 제고
- (주요 과제) 2025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은 다음의 열 가지 측면을 강조
  - ① (내수 확대) 소비 환경 개선, 수익성 투자 확대, 양중(兩重) 및 양신(兩新)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한 내수 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 동력 마련
    - 양중 및 양신 정책에는 각각 8천억위안과 5천억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 ②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녹색 및 저탄소 개발 조치, 신흥 및 미래 산업 육성,<sup>604</sup> 실물 경제 및 디지털 경제의 통합, 인프라 시스템(철도 등)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촉진하고 현대적인 산업 시스템 마련
  - ③ (과학기술 및 교육을 통한 국가혁신체계 마련) 고등교육의 고도화, 기초 및 신흥 학문 분야 강화, 기초 연구에 대한 지출 비용 확대, 민간기업의 국가 기술 연구과제 선도적 수행, 인재 발굴 및 육성 메커니즘 개선
  - ④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 구현) 거래 제한 품목 외 모든 거래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공정경쟁 심의 규정을 도입하고, 민간 부문의 공정경쟁 보장 및 투자 환경

등)과 기타기본자본(14개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등)을 함께 지칭(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020, p. 66, p. 72, p. 125)

602) 소규모 지방 정부의 기본적인 민생과 임금, 운영 자금을 보장

603) 2025. 3. 24. 고시 기준 1위안은 한화 약 202원

604) 첨단 제조, 바이오, 양자기술, 미래에너지, 6G 등

개선과 관련한 「민간경제진흥법(民营经济促进法)」<sup>605</sup> 시행

- ⑤ (대외 개방 확대) 금융, 결제, 외환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최적화, 수출입 신용 및 수출 신용 보험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등을 통해 외국 자본 활용과 해외 투자의 품질 제고
- ⑥ (기초 안보 역량 구축) 농지 건설 및 관리, 곡물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선과 식량 안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마련, 전략 물자 비축량 증진, 지속적인 중소 금융기관 개혁 추진, 국방동원 체계 개선 등 중점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 강화
- ⑦ (도시 및 농촌 진흥) 도시 재생의 지속적 추진, 고품질 농업 기술 도입으로 전반적인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농업 및 농촌 인프라 건설, 농촌 지역의 기본 공공서비스 개선, 농촌특색산업 발전 및 문명화된 농촌식 건설사업 시행
- ⑧ (지역 연계발전 이행 지속)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 프로젝트, 양쯔강 경제 벨트, 광둥·홍콩·마카오만(灣) 등에서 관련 전략의 이행을 심화시키고, 기타 지역에서 지역 연계의 통합적 발전을 조율
- ⑨ (친환경 발전 추진) 녹지 조성과 관련한 ‘삼북(三北) 프로젝트’<sup>606</sup>와 함께 주요 생태계 보호 및 복원과 관련한 기타 프로젝트의 이행, 핵심 영역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전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건설 촉구
- ⑩ (민생 및 사회 안정 강화) 고용 지원, 임금 보장 및 소득 증대, 사회보장시스템 및 의료 지원시스템 개선, 문화 산업 및 시장 체계 개선, 생계주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보장

605) 민간경제 발전에 관한 중국 최초의 기본법으로, 2024년 2월 초안 작성에 착수하여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全国人民代表大会)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최종 통과 실패로 계류 중(美国之音, 「民营企业促进法未在“两会”通过 分析: 中共内部或仍存分歧」, 2025. 3. 14., <https://www.voachinese.com/a/china-draft-private-sector-promotion-law-not-passed-at-npc-session/8009679.html>, 검색일자: 2025. 3. 26.

606) 1978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중국 사막화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3북방’으로 알려진 북서부, 북동부 지역에 대한 사막화 방지 및 통제 관련 프로젝트. 2024년에는 중앙 정부 예산 320억위안이 배정되었으며, 287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4年“三北”工程攻坚战 完成各项建设任务超5700万亩」, 2024. 6. 5., <http://www.xinhuanet.com/sikepro/20240605/431719ef0cb143adbb2648db7731261a/c.html>, 검색일자: 2024. 3. 20.)

■ 중국 인민은행, 정책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2025. 5. 8.)<sup>607)</sup>

- (RRP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5월 8일부터 공개시장에서 역환매조건부 채권(RRP)<sup>608)</sup> 금리를 기존 1.5%에서 1.4%로 0.1%p 하향 조정
  -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의미하므로, 은행 자금을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25년 1분기까지 낮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유지 중으로, 2025년 3월 신규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약 3.3%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하락했으며, 신규 포괄적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약 3.6%로 전년 동기 대비 0.55%p 하락한 수준
  - 중국 인민은행이 2024년 11월 발표한 ‘통화정책 시행보고서’에서 보여준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실물 경제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절감되고 경제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
-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 인하)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结构性货币政策工具)<sup>\*</sup>의 운영을 시작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0.25%p 낮은 1.5%로 인하
  - \*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는 산업 규제 부서가 지원 산업 범위 등을 결정한 정책 대출을 시중 금융기관이 기업에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인민은행에 재대출이나 인센티브 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의미<sup>609)</sup>
  - 연간 약 150억위안<sup>610)</sup>에서 200억위안의 은행 자본 비용을 절감하여, 시중 은행이 주요 전략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신용 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개인주택공급자금 대출 금리 0.25%p 인하
  - 1주택자는 5년 이하와 5년 초과 금리를 각각 2.1%와 2.6%로, 2주택자는 5년 이하와 5년 초과 금리를 각각 2.525%와 3.075%로 조정<sup>611)</sup>
  -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연간 200억위안 이상 절감하고, 경직된 주택 수요의

607)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年内首次降息降准, ‘量增价降’支持实体经济」, 2025. 5. 7., [https://www.gov.cn/zhengce/202505/content\\_7023062.htm](https://www.gov.cn/zhengce/202505/content_7023062.htm), 검색일자: 2025. 5. 19.

608) 일종의 단기 자금 차입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후 재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채권

609)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结构性货币政策工具介绍」, p. 2,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634812/2022081909062925446.pdf>, 검색일자: 2025. 5. 19.

610) 2025. 5. 18. 고시 환율 기준 1위안은 한화 약 191원

611)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 5. 7.,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7/5700062/index.html>, 검색일자: 2025. 5. 19.

지원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지급준비율 인하) 금융기관(지급준비율 5% 대상 기관 제외)의 지급준비율을 0.5%p 낮은 9%로<sup>612)</sup> 인하
  - 은행의 부채 비용을 줄이고 금융 시장에 약 1조위안의 장기 유동성을 제공

■ 중국인민은행 등 6개 부처,<sup>613)</sup> ‘소비 진작 및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지도의견(关于金融支持提振和扩大消费的指导意见)’ 공동 발표(2025. 6. 24.)<sup>614)</sup>

- (목적) 소비 진작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요 및 공급 양측에 소비 확대를 위한 금융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 중국은 2024년부터 도시 재생과 관련한 ‘양중(两重)’ 프로젝트,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교체와 관련한 ‘양신(两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국가경제 사회발전계획’에서는 ‘내수 확대’를 10대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소비 진작과 관련한 꾸준한 정책 의지 표명
- (소비 역량 강화) 거시 경제 기반 강화 및 소득 증대, 사회보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 및 신뢰, 의욕 제고<sup>615)</sup>
  - 지급준비율 조정, 재대출 및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포괄적 금융비용의 감소를 도모
  - 가계 가처분 소득 및 재산소득 증대를 위한 자산관리 금융상품 혁신 지원
  - 개인연금 상품 개발 장려, 건강 및 요양보험 보장 확대 등 사회보장체계 강화
- (금융 공급 확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및 증장기 대출로 소비 산업 지원
  - 소비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초기대출(首贷), 재대출, 신용 대출, 증장기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확대

612) 잉웨이 파이낸셜 뉴스(英为财经), 「中国人民银行存款准备金率」, <https://cn.investing.com/economic-calendar/pboc-reserve-requirement-ratio-1084>, 검색일자: 2025. 5. 19.

613)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614)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19条新举措! 金融促消费明确‘路线图’」, 2025. 6. 24., [https://www.gov.cn/zhengce/202506/content\\_7029286.htm](https://www.gov.cn/zhengce/202506/content_7029286.htm), 검색일자: 2025. 6. 25.

615) 시나재경(新浪财经), 「中国人民银行等六部门联合印发《关于金融支持提振和扩大消费的指导意见》」, 2025. 6. 24., [https://finance.sina.com.cn/money/bank/bank\\_yhfg/2025-06-24/doc-infcemnk6603411.shtml](https://finance.sina.com.cn/money/bank/bank_yhfg/2025-06-24/doc-infcemnk6603411.shtml), 검색일자: 2025. 6. 25.

- 신규 기업은 초기대출로 자금난을 타개하고, 자산 부실 기업은 신용 대출로 성장 기반을 확보하며, 중장기 대출을 통한 장기적인 자금 확보
- 생활밀접 업종(도소매·외식·숙박·가사·노인·보육서비스 등), 노후 자동차 및 가전제품 회수 및 교체, 주방·욕실 리모델링, 생필품 공급 보장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우대 정책 시행
- 구조적 통화정책<sup>616</sup>의 확대 차원에서 농업 및 중소기업, 서비스 소비 및 노인 돌봄을 위한 전용 재대출 프로그램 등을 신설
- (소비 잠재력 확대) 3대 중점 소비 영역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에 정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잠재 수요를 실질 소비로 전환
  - ① 상품 소비: 노후 제품 교체 및 할부 혜택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옛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양신(兩新)’ 정책과도 연계
  - ② 서비스 소비: 문화·관광·스포츠·교육·거주 관련 분야의 자금 지원 모델 혁신
  - ③ 신형 소비: 디지털, 친환경, 건강 등 미래 소비 트렌드에 맞는 금융 채널 개발
- (소비 효율 제고) 인프라·물류·유통 부문 등 각 소비 공급망의 금융지원을 통해 소비 공급의 효율을 증진
  - 문화·체육·의료·노인요양 등 소비 기반 시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물류·교통·창고·공급망 등 상업 유통 인프라 자금 지원
  - 대형 시장, 냉장 물류, 중소도시 유통 센터 및 재래 시장 등 소비 유통망 전반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지원

616) 산업 규제 부서가 지원 산업 범위 등을 결정한 정책 대출을 시중 금융기관이 기업에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인민은행에 재대출이나 인센티브 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结构性货币政策工具介绍」, p. 2,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634812/2022081909062925446.pdf>, 검색일자: 2025. 6. 25.)

## 나. 기타 정책 및 조치

### ■ 중국 재정부, 티베트 지진피해 재난구호 지원 발표(2025. 1. 7., 2025. 1. 8.)<sup>617)618)</sup>

- 2025년 1월 7일 티베트 시가체시 덩르현(西藏日喀则市定日县)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
  - 사망자 126명, 부상자 188명이며, 주택 3,609가구가 붕괴됨<sup>619)</sup>
- 중국 재정부는 중앙자연재해구호자금(中央自然灾害救灾资金)<sup>620)</sup> 1억위안과 농업 생산 재해 방지 및 복구 자금 8천만위안을 긴급 지원
  - 중앙자연재해구호자금 1억위안은 피해 주민 구조 및 대피, 위험 제거, 2차 재해요소 점검 및 정비, 주택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
  - 농업 생산 재해 방지 및 복구 자금 8천만위안은 손상된 농경지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복구와 재해로 인한 약품, 연료 등의 구입비용 보조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

### ■ 중국 재정부 및 상무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관련 WTO 분쟁절차 개시 및 추가 관세 부과 (2025. 2. 4.)<sup>621)</sup>

- (WTO 제소)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미국과의 분쟁 협의 요청<sup>622)</sup>
  -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10%의 추가 관세와 무관세 최소허용 기준(de minimis) 폐지 관련 조치가「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미국의 최혜국 대우 및 관세 의무와 상충된다는

617)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财政部、应急管理部预拨1亿元中央自然灾害救灾资金 支持西藏做好地震灾害救灾工作」, 2025. 1. 7., [https://zyhj.mof.gov.cn/gzdt/202501/t20250107\\_3951268.htm](https://zyhj.mof.gov.cn/gzdt/202501/t20250107_3951268.htm), 검색일자: 2025. 1. 15.

618)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财政部紧急预拨农业生产防灾救灾资金8000万元 支持西藏做好地震灾损农业生产和畜牧养殖设施修复等相关救灾工作」, 2025. 1. 8., [https://nys.mof.gov.cn/bgtGongZuoDongTai\\_1\\_1\\_1\\_3/202501/t20250108\\_3951351.htm](https://nys.mof.gov.cn/bgtGongZuoDongTai_1_1_1_3/202501/t20250108_3951351.htm), 검색일자: 2025. 1. 15.

619)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财政部详解更加积极的财政政策:政策空间充足,将梯次拿出政策‘后手」」, 2025. 1. 8.,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0eed0e4420d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일자: 2025. 1. 23.

620) 중앙자연재해구호자금은 재정부와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가 집행하는 중국 중앙정부예산의 재난방지 및 긴급관리 지출(灾害防治及应急管理支出)로, 2024년 예산 기준 454.46억위안으로 편성되어 있음

621) 중국 제일재경(第一财经), 「加征关税,诉至WTO并实施出口管制,中方多管齐下反制美对华加征关税」, 2025. 2. 4., <https://www.yicai.com/news/102459716.html>, 검색일자: 2025. 2. 24.

622) (WTO 제소) WTO, “China initiates WTO dispute complaint regarding US tariff measures,” 2024. 2. 5.,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5\\_e/ds633rfc\\_05feb25\\_e.htm](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5_e/ds633rfc_05feb25_e.htm), 검색일자: 2025. 2. 24.

입장

- (수출 통제 등) 중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4일 일부 희귀 금속 제품 및 그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미국 패션브랜드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sup>623)624)</sup>
  - 수출 통제 대상은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25개 품목
- (추가 관세 부과)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는 2025년 2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sup>625)</sup>
  - 미국이 원산지인 석탄 및 액화 천연가스에 15%,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 트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 추가 관세는 현행 적용 관세율에 기초하여 부과하며, 보세,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은 유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중앙정부 예산 50억위안 배정(2025. 2. 14.)<sup>626)</sup>

- (예산액)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5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중앙정부 예산 50억위안<sup>627)</sup>을 배정하여, 전국 1,008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실행 지원
  - 2024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50억위안, 농촌진흥보조금(乡村振兴补助资金)<sup>628)</sup>에서

623) (수출 통제 등) 중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10号公布对钨、碲、铋、钼 钽 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2025. 2. 24.,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e623090907fc4e1092f0a4db72f57b95.html](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e623090907fc4e1092f0a4db72f57b95.html), 검색일자: 2025. 2. 18.

624) (수출 통제 등) 중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不可靠实体清单工作机制关于将美国PVH集团和因美纳公司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 2025. 2. 24.,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ab15d2258dda4e93b8ad1ec4776d37c3.html](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ab15d2258dda4e93b8ad1ec4776d37c3.html), 검색일자: 2025. 2. 24.

625) (추가 관세 부과)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2025. 2. 4., [https://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502/t20250204\\_3955222.htm](https://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502/t20250204_3955222.htm), 검색일자: 2025. 2. 24.

626)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家发展改革委下达以工代赈中央投资50亿元 将吸纳12.3万低收入群众就近就业增收」, 2025. 2. 14., [https://www.ndrc.gov.cn/fggz/dqz/tpgjykpq/202502/t20250214\\_1396120.html](https://www.ndrc.gov.cn/fggz/dqz/tpgjykpq/202502/t20250214_1396120.html), 검색일자: 2025. 2. 18.

627) 약 9,877억 5천만원(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62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농촌진흥보조금 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농촌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广西壮族自治区 发展和改革委员会), 「2025年中央财政衔接推进乡村振兴补助资金1593亿元提前下达」, 2024. 12. 30., <http://fgw.gxzf.gov.cn/fzgggz/xbzx/t19462765.shtml#:~:text=%E8%BF%91%E6%97%A5%EF%BC%8C%E8%B4%A2%E6%94%BF%E9%83%A8%E6%8F%90%E5%89%8D%E4%B8%8B%E8%BE,%E8%A7%84%E6%A8%A1%E5%85%B1%E8%AE%A11593%E4%BA%BF%E5%85%83%E3%8>

40억 5천만원(629)이 선급 배정되어, 2025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총 140억 5천만원(630) 배정

- (목적 및 대상) 건설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프로젝트 대상 지역의 생활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산업 발전 인프라 조건을 향상
  - 저소득층 중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 탈피 대상자나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대상자, 재해로 구호가 필요한 자, 빈곤 탈피 목적 이주자들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시켜 소득 증진 유도
    - 12만 3천명의 농촌 주민과 저소득층을 토목공사에 참여시켜, 17억 1천만원(631) 이상의 노동 보수 지불 계획
    - 인력 고용이 많고 기술 장벽이 낮으며, 기계 작업이 적은 소규모 농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점 지원
    - 마을 도로, 생산 접근 도로, 공업 도로 등 3,550km의 다양한 유형의 도로 건설, 1만 5,000에이커의 농경지 개량, 1,320km의 상하수도 파이프라인의 굴착 또는 부설, 790개의 소규모 침수 교량, 배수로, 저수지, 1,600km 이상의 소규모 제방과 주요 운하 등 건설 예정
  - 832개의 저소득현 및 기타 저개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며, 국가 농촌진흥중점현, 이주에 대한 후속 지원 과제가 많은 지역, 자연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집중 투자 예정

0%82, 검색일자: 2025. 2. 24.)

629) 약 98억 7,750만원(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630) 약 2조 7,755억원(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631) 약 3,378억 1,050만원(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 중국 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sup>632)</sup> 하이엔드 과학기술 자립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금융체계 구축 가속화를 위한 조치 발표(2025. 5. 13.)<sup>633)</sup>
  -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전 생애주기 및 연계 사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자본이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진입하도록 유도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및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 기반
  - (벤처캐피탈 활용)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힘으로써 벤처캐피탈 활용
    - ‘국가벤처캐피탈 지도기금’ 설립, 벤처캐피탈의 자금 조달 채널 확대 및 출구(배분) 채널 개선, 국유 벤처캐피탈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 최적화
  - (자금 및 신용 지원) 과학기술 혁신 지원에 있어 자금과 신용의 역할을 강조
    -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활용, 과학기술 혁신 관련 특별 신용 메커니즘의 구축, 금융기관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확대 장려
  - (자본시장의 활용) 자본시장 지원 강화 및 채권시장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 적격 기업의 상장 및 자금 조달 지원 강화, 채권시장 내 기술위원회 설립, 관련 채권의 고품질 발전 및 투자 확대 촉진
  - (과학기술보험의 품질 제고) 과학기술보험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립하고 조정체계를 개선
  - (정부 역할 강조) 과학기술금융을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
    - 전국적인 ‘혁신포인트 제도’ 등 중앙 및 지방정부 공동 사업 추진, 국내 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편의성 확대, 과학기술금융의 전반적 추진 체계 개선

632) 과학기술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633)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科技部 中国人民银行 金融监管总局 中国证监会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国务院国资委 关于印发《加快构建科技金融体系 有力支撑高水平科技自立自强的若干政策举措》的通知」, 2025. 5. 13., <https://www.nfra.gov.cn/cn/view/pages/governmentDetail.html?docId=1208683&itemId=861&generalType=1>, 검색일자: 2025. 5. 22.

■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 등 8개 부처,<sup>634)</sup> 중소 및 영세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조치 발표(2025. 5. 19.)<sup>635)</sup>

※ 중소 및 영세기업은 종업원 수, 사업소득, 총자산<sup>636)</sup>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업 특성에 따라 15개 업종별로 그 기준값은 상이하게 적용. 공업의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소득이 각각 1,000명 미만이고 4억위안 미만이면 중형, 300명 미만이고 2천만위안 미만이면 소형, 20명 미만이거나 300만위안 미만이면 영세기업으로 분류<sup>637)</sup>

-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중앙금융사업회의, 중앙경제사업회의 발표 내용을 반영하고, 포용금융<sup>638)</sup>의 발전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확대
  - (구조적 통화정책 활용) 농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대출과 같이 구조적 통화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을 확대하도록 안내
  - (자금조달 매칭)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자금조달 수요 전면 조사 후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은행에 추천하고, 적절한 이자율의 신용 대출 보장
  - (기타) 대출 갱신 요건 최적화, 중소기업 대출의 감독 및 지도 강화, 자기자본 조달 지원
- 중소기업의 종합금융비용 절감
  - (대출금리 관리 강화) 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 자기자본비용, 자사 중소기업 고객층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에 정책적 혜택 적시에 전달
  - (추가 대출 비용 감축) 중소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가격 관리를 통해 불법

634)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635)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等八部门关于印发《支持小微企业融资的若干措施》的通知」, 2025. 5. 19., <https://www.nfra.gov.cn/cn/view/pages/governmentDetail.html?docId=1210257&itemId=878&generalType=1>, 검색일자: 2025. 5. 22.

636)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운영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만 해당 기준을 반영

637)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工信部联企业[2011]300号」, [https://www.gov.cn/zwggk/2011-07/04/content\\_1898747.htm](https://www.gov.cn/zwggk/2011-07/04/content_1898747.htm), 검색일자: 2025. 5. 28.

638) 개인과 기업이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합리적인 가격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World Bank, "Financial Inclusion," [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text=Financial%20inclusion%20means%20that%20individuals,Sustainable%20Development%20Goals%20\(SDGs\)](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text=Financial%20inclusion%20means%20that%20individuals,Sustainable%20Development%20Goals%20(SDGs),)), 검색일자: 2025. 5. 22.)

- 비용을 정리하고, '7금'<sup>639)</sup>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안내
- (절차적 효율성 향상) 대출신청 서류 간소화 및 승인 절차 최적화와 온라인 대출 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효율성 향상
  -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위험 및 이행 관리
    - (재정 지원의 정확도 향상) 중소기업 분류 기준 개정 및 자금조달 지원 시 중소기업 평가 결과의 적용
    - (규제 정책 이행 관리) 정기적인 평가 수행과 그 기준을 정교화하고 포용금융 메커니즘을 개선
    - (위험관리 강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분류 방법 개정과 부실채권 처리의 효율성 향상
  - 관련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 (관련 정책 확대 및 개선) 금융 및 신용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중소 및 영세기업 자금조달 지원 정책 개선
    - (부처간 협력 및 이행 보장)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정책 구체화 및 시중 은행의 이행 보장

639) 2012년 1월 20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가격 책정과 관련한 7가지 금지 사항으로, ① 대출금의 예금으로의 이체 ② 대출 승인 및 발행의 전제조건을 위한 예금 ③ 불합리한 중개 사업 혹은 기타 금융서비스나 수수료 요청을 위한 대출 발행 및 기타 자금 제공 ④ 이자와 수수료의 합산 징수 ⑤ 대출과 기타 금융 상품의 끼워 팔기 ⑥ 대출 이자율의 최대 한도 인상 ⑦ 실사, 담보 평가 및 기타 관련 비용 등의 고객 전가가 이에 해당(중국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公示‘七不准’‘四公开」」, [https://www.cdb.com.cn/cpfw/cpsfbz/201512/t20151220\\_1407.html](https://www.cdb.com.cn/cpfw/cpsfbz/201512/t20151220_1407.html), 검색일자: 2025. 5. 22.)

###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중국 국가통계국, 2024년 국민경제운영(国民经济运行) 결과 발표(2025. 1. 17)<sup>640</sup>
  - 2024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 목표를 달성했으나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국내 수요 부진 등의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
  - 향후 정부는 내수 확대와 경제 및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국내총생산량(全年国内生产总值)은 134조 9,084억위안<sup>641</sup>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2024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 증가<sup>642</sup>
    - 2024년 1차 산업 전년 대비 3.5% 증가, 2차 산업 전년 대비 5.3% 증가, 3차 산업 전년 대비 5.0% 증가
    - 2024년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 증가
  - 2024년 수출(出口) 및 수입(进口)은 전년 대비 각각 7.1%, 2.3% 크게 증가
  -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全年居民消费价格, CPI)는 전년 대비 0.2%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 2024년 도시조사실업률(全国城镇调查失业率)<sup>643</sup>은 5.1%(전년 대비 0.1%p 감소)
  - 2024년 인구수는 14억 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감소(2024년 말 기준)

표 3-VII-3 중국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3Q1	2023Q2	2023Q3	2023Q4	2024Q1	2024Q2	2024Q3	2024Q4
GDP 성장률	1.7	1.2	1.5	0.9	1.5	0.9	1.3	1.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24년经济运行稳中有进 主要发展目标顺利实现」, 2025. 1.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640)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经济运行稳中有进 主要发展目标顺利实现」, 2025. 1. 17., [https://www.stats.gov.cn/sj/zxfb/202501/t20250117\\_1958332.html](https://www.stats.gov.cn/sj/zxfb/202501/t20250117_1958332.html), 검색일자: 2025. 1. 17.

641) 2경 4,283조 5,120억원(1위안=180원 기준)

642) 중국의 국내총생산(国内生产总值)은 최종소비지출(最终消费支出)+총자본형성(资本形成总额)+상품 및 서비스의 순 수출(货物和服务净出口)로 계산됨.

643) 중국 도시 지역 주민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실업률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추산한 실업인구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함.

■ 중국 인민은행, 2025년 3월 금융통계보고서 발표(2025. 4. 13.)<sup>644)</sup>

- (통화량) 3월 말 기준 광의통화(M2)<sup>645)</sup> 잔액은 326조 6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 이 중 협의통화(M1)<sup>646)</sup> 잔액은 113조 4,9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했으며, 본원통화(M0) 잔액은 13조 7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 \* 2025년 1월 협의통화(M1) 통계 기준이 비은행 결제 기관의 개별 요구금과 고객 준비금까지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율이 확인되었으나,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협의통화(M1)의 실질적인 증가율을 1.6%로 발표

표 3-Ⅶ-4 전년 동기 대비 통화 분류별(M0, M1, M2) 잔액 비교

(단위: 조위안, %)

통화 분류	2024. 3.	2025. 3.	전년 대비 증감율
본원통화(M0)	11.72	13.07	11.5
협의통화(M1)	68.58	113.49(69.68) <sup>1)</sup>	65.5(1.6) <sup>1)</sup>
광의통화(M2)	304.80	326.06	7.0

주: 1) 협의통화(M1)의 경우 2025년 통계 기준의 확대로 잔액이 명목상 크게 증가하여, 괄호 안에 기존 통계기준에 따른 중국 인민은행의 증가율 발표값과 그에 따른 2025년 3월 추산액을 기재  
 자료: 1. 시나재경(新浪财经), 「2024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4. 4. 12., [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p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p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 검색일자: 2025. 4. 30.  
 2.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2025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 (대출 잔액) 국내외 외화 대출 잔액은 269조 2,6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위안화 대출 잔액은 265조 4,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 2025년 1분기 동안 위안화 대출은 9조 7,800억위안 증가
    - 가계 대출은 1조 400억위안, 기업 및 기관 대출은 8조 6600억위안 증가

644)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2025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645)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M1), MMF, 수익증권, 시장형상품과 2년 미만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을 포함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통화 및 유동성」, <https://snapshot.bok.or.kr/dashboard/A5>, 검색일자: 2025. 4. 17.)  
 646)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1월 이후 개정된 협의통화(M1) 통계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본원통화(M0), 단위 요구불 예금, 개별 요구불 예금, 비은행 결제 기관 고객 준비금을 포함

표 3-VII-5 전년 대비 중국의 국내외 외화대출 및 위안화 대출 잔액 비교

(단위: 조위안, %)

통화 분류	2024. 3. <sup>1)</sup>	2025. 3. <sup>2)</sup>	전년 대비 증감율
국내외 외화대출	251.81	269.26	6.9
위안화 대출	247.05	265.41	7.4

자료: 1. 시나재경(新浪财经), 「2024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4. 4. 12., [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n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n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 검색일자: 2025. 4. 30.

2.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2025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 (예금 잔액) 외화 예금 잔액은 322조 1,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고, 위안화 예금 잔액은 315조 2,2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 2025년 1분기 기간 동안은 위안화 예금이 12조 9,900억위안 증가
    - 가계 예금은 9조 2,200억위안, 비금융 기업 예금은 1조 7,400억위안, 재정성 예금은 8,190억위안,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은 3,090억위안 증가

표 3-VII-6 중국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전년 대비 중국의 국내외 외화예금 및 위안화 예금 잔액 비교

(단위: 조위안, %)

통화 분류	2024. 3. <sup>1)</sup>	2025. 3. <sup>2)</sup>	전년 대비 증감율
국내외 외화예금	301.41	322.11	6.9
위안화 예금	295.51	315.22	6.7

자료: 1. 시나재경(新浪财经), 「2024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4. 4. 12., [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n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n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 검색일자: 2025. 4. 30.

2.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2025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 (은행 간 금리) 3월 위안화 시장 내 은행 간 대출의 월 가중평균금리는 1.85%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p와 0.03%p 낮은 수준
- (채권 환매 금리) 담보부 채권 환매의 월 가중평균금리는 1.87%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3%p와 0.04%p 하락
- (외환보유잔액) 외환보유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억달러 감소한 3조 2,400억달러로, 3월 말 환율 기준 약 23조 2,574억위안을 보유

■ 중국 국가통계국, 2025년 1분기 국민경제활동지표 발표(2025. 4. 16.)<sup>647)</sup>

- (1분기 GDP) 중국의 1분기 GDP는 31조 8,75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 산업별 부가가치는 1차 산업이 1조 1,713억위안, 2차 산업이 11조 1,903억위안, 3차 산업이 19조 5,142억위안
- (농업 및 축산업) 농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였으며, 돼지·소·양·가금류의 생산은 2% 증가
- (공업) 공업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장비 및 첨단기술 관련 제조업에서 빠른 성장세
  - 지정 규모 이상 기업<sup>648)</sup>의 부가가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p 높은 6.5%<sup>649)</sup> 수준
    - 3대 항목별로는 광산이 6.2%, 제조업이 7.1%, 전기·열·가스·수도의 생산 및 공급이 1.9% 증가
  - 장비 제조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2%p 높은 10.9%, 하이테크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8%p 더 높은 9.7% 수준으로 증가
-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5.8%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
  - 정보 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운송·창고 및 우편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케이터링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각각 10.3%, 10.2%, 7.2%, 5.8%, 5.1% 증가
- (고정자산 투자) IT 및 항공우주 등 특정 첨단기술 산업 관련 고정자산 투자의 급격한 증가
  - 농촌 가구를 제외한 전체 고정자산 투자액은 10조 3,17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p 상승한 4.2%<sup>650)</sup> 수준

647)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一季度国民经济开局良好」, 2025. 4. 25., [https://www.stats.gov.cn/sj/zxfb/202504/t20250416\\_1959321.html](https://www.stats.gov.cn/sj/zxfb/202504/t20250416_1959321.html), 검색일자: 2025. 4. 17.

648) 연간 주요 사업 소득이 2천만위안 이상인 공업 법인을 의미(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什么是规模以上工业企业? 如何认定? 限额以上和规模以上有何区别?」, 2021. 2. 18., [https://www.stats.gov.cn/zt\\_18555/zthd/lhfw/2021/rdwt/202302/t20230214\\_1903909.html#:~:text=%E2%80%9C%E8%A7%84%E6%A8%A1%E4%BB%A5%E4%B8%8A%E5%B7%A5%E4%B8%9A%E4%BC%81%E4%B8%9A%E2%80%9D%EF%BC%8C,%E4%BB%A5%E4%B8%8A%E7%9A%84%E5%B7%A5%E4%B8%9A%E6%B3%95%E4%BA%BA%E5%8D%95%E4%BD%8D%E3%80%82](https://www.stats.gov.cn/zt_18555/zthd/lhfw/2021/rdwt/202302/t20230214_1903909.html#:~:text=%E2%80%9C%E8%A7%84%E6%A8%A1%E4%BB%A5%E4%B8%8A%E5%B7%A5%E4%B8%9A%E4%BC%81%E4%B8%9A%E2%80%9D%EF%BC%8C,%E4%BB%A5%E4%B8%8A%E7%9A%84%E5%B7%A5%E4%B8%9A%E6%B3%95%E4%BA%BA%E5%8D%95%E4%BD%8D%E3%80%82), 검색일자: 2025. 4. 25.)

649) 부가가치 성장률은 모두 실질 성장률로 계산

650) 고정자산 투자액과 이후 언급하는 총 수출입 금액의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로 계산

- 첨단기술 산업 관련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 이 중에서도 정보서비스, 항공우주 및 장비 제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 전문 및 기술 서비스 관련 고정자산 투자가 각각 34.4%, 30.3%, 28.5%, 26.1%의 높은 증가율
  - (무역) 1분기 상품의 총 수출입 금액은 10조 3,01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수출은 6조 1,314억위안으로 6.9% 증가하고, 수입은 4조 1,700억위안으로 6.0% 감소
  -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는 등 안정세였으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
  - (실업률 및 가처분소득) 1분기 도시 지역 실업률 평균은 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2,17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경상 가격 기준 5.6% 상승
-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2024년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연차보고서」 공개(2025. 6. 5.)<sup>651)</sup>
- (연차보고서 공개) 주택공적금은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발행하여, 관련 고시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각 부처 포털 사이트에 공개
  - (주택공적금 개관) 근로자가 본인 주택을 매입, 건축, 재건축 또는 개축할 목적으로 국가 기관 및 기업, 민영 기관 및 기업, 비기업 단위, 사회단체와 그 임직원이 예치하는 장기 주택 저축 제도<sup>652)</sup>
    - (운영)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성(省) 및 자치구 단위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를 설립 하여 관리 및 운영<sup>653)</sup>
      - 주택공적금의 인출, 대출 및 기타 금융 업무는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상업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2024년 말까지 관리센터 341개, 서비스 지점 3,569개, 담당자 4만 3,700명 계획
    - (납입) 근로자 1인에 대한 기여금은 단위(고용주) 및 근로자분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651)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全国住房公积金 2024 年年度报告年度报告」, 2025. 6. 5., [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 검색일자: 2025. 6. 20.

652) 「주택공적금관리조례(住房公积金管理条例)」,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653)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全国住房公积金 2024 年年度报告年度报告」, 2025. 6. 5., [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 검색일자: 2025. 6. 20.

직원 월평균 임금에 단위 및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기여율을 곱하여 결정

- 주택공적금 기여율은 5~12%<sup>654)</sup> 수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근로자 기여분은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적용
- 단위 및 근로자의 기여금은 위탁은행에 개설된 근로자별 주택공적금 전용 계좌에 입금되며, 납입하는 날로부터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이자 적립
-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채 매수를 통한 주택공적금 납입 자금 운용 가능
  - (인출) 규정된 상황에서 계좌 내 잔액 인출 허용
    -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매수, 건축, 개축 또는 보수, 근로의 종료, 이민 등
  - (대출) 가입 여부를 근거로 주택 구매 및 건축, 재건축 또는 개축 시 대출 또한 가능
    - 시중 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공적금 계좌 내 잔액으로 대출액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허용
- (납입 현황) 2024년에는 529만개의 사업장과 약 1억 7,600만명이 주택공적금을 납입하여, 전년 대비 각각 6.92% 및 1.00% 증가
  - 신규 계좌 가입 사업장은 73만 9,900개, 신규 계좌 가입 인원은 약 1,863만명
  - 2024년 주택공적금 납입액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약 3조 6,318억위안<sup>655)</sup>
    - 2024년 말 누적 납입 총액은 약 32조 7,941억위안, 납입 잔액은 약 10조 9,25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61% 증가

표 3-VII-7 중국의 2024년 주택공적금 납입 현황

(단위: 만개, 만명, 억위안)

납입 사업장 수	납입자 수	2024년 납입액	누적 납입액	납입 잔액
529.00	17628.75	36,317.83	327,941.35	109.252.79

자료: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全国住房公积金 2024 年年度报告年度报告」, 2025. 6. 5., p. 4, [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 검색일자: 2025. 6. 20.

654) 주택공적금 관리센터(中央国家机关住房资金管理中心), 「关于做好2024住房公积金年度月缴存额调整工作的通知(国机房资[2024]8号)」, <https://www.zzz.gov.cn/html/zcfg/jc/17109.html>, 검색일자: 2025. 6. 25.

655) 2025. 6. 25 고시 환율 기준 1위안은 한화 약 189원

- (인출 현황) 2024년 주택공적금 인출자 수는 약 8,127만명으로, 납입자 수의 46.10%를 차지
  - 인출액은 2조 7,654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 증가했으며, 2024년 납입액의 76.15% 수준
  - 2024년 말 기준 주택연금 인출 누적 총액은 약 21조 8,689억원으로, 누적 납입 총액의 66.69%를 차지

**표 3-Ⅶ-8 중국의 2024년 주택공적금 인출 현황**

(단위: 억위안, %)

2024년 인출액	납입대비 인출비중	2024년 납입액	누적 납입액	납입 잔액
27,654.84	76.15	36,317.83	327,941.35	109,252.79

자료: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全国住房公积金 2024 年年度报告年度报告」, 2025. 6. 5., p. 4, [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https://zhs.mof.gov.cn/zhengcefabu/202506/t20250603_3965009.htm), 검색일자: 2025. 6. 20.

VIII 스웨덴<sup>656)</sup>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 2025회계연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표 3-V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0.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1월 경제 현황 발표
2025. 1. 17.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2월 총부채 현황 발표
2025. 1. 15.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5. 1. 22.	스웨덴 보건사회부,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지원 계획 발표
2025. 1. 17.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EU의 유럽연결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2025. 1. 2.	스웨덴 국방부, UN 평화 유지 노력 강화 효율화·현대화 사업에 1,500만코로나 지원 계획 발표
2024. 12. 27.	스웨덴 보건사회부,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에 1.5억코로나 지원 계획 발표
2024. 12. 21.	스웨덴 문화부, 교육부,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 구매 사업에 4.8억코로나 지원 계획 발표
2025. 1. 30.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5. 1. 29.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 금리 2.25%로 0.25%p 인하
2025. 2. 11.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주요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 착공 결정 발표
2025. 2. 28.	스웨덴 통계청·재무부,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5. 3. 21.	스웨덴 노동부·재무부·농촌인프라부, 경기부양책 발표
2025. 4. 15.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춘계재정정책법안 발표
2025. 3. 31.	스웨덴 통계청, 2023년 사회복지 지출 규모 발표
2025. 5. 22.	스웨덴 재무부, 2024년 중앙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2025. 5. 2.	스웨덴 재무부, EU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 발표
2025. 5. 8.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금리 2.25%로 동결
2025. 5. 6.	스웨덴 통계청, 2025년 1분기 고용 지표 발표
2025. 6. 5.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5. 5. 30.	스웨덴 통계청,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5. 6. 18.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금리 2%로 인하

자료: 저자 작성

65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인유 선임연구원(enew@kipf.re.kr)

## 01 예산 및 결산

### 가. 예산 및 추경

####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5. 1. 30.)<sup>657)</sup>

- 재무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 국방 및 사회 위기 대비”에 할당된 예산을 총 62억크로나 감액하는 내용을 제안<sup>658)</sup>
  - “6. 국방 및 사회 위기 대비” 중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군사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수정<sup>659)</sup>
- 스웨덴의 외교 및 안보의 정책적 이익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sup>660)</sup>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재무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스웨덴 주변의 안보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 예산이 감소
  - 이에 따라 스웨덴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국회 심의 기간 단축 제안,<sup>661)</sup> 향후 추가 지원 계획<sup>662)</sup>도 함께 발표한 것으로 보임

657)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5 – Stöd till Ukraina,” 2025. 1. 30.,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5/01/prop.-20242594>, 검색일자: 2025. 2. 17.

658) 스웨덴 의회, “Extra ändringsbudget: Finansutskottet föreslår försvarsmateriel som stöd till Ukraina,” 2025. 2. 18., [https://www.riksdagen.se/sv/aktuellt/aktuelltnotiser/2025/feb/18/extra-andringsbudget-finansutskottet-foreslar\\_cms69044190-8b21-4cfc-87ee-d5effc3453ddsv/](https://www.riksdagen.se/sv/aktuellt/aktuelltnotiser/2025/feb/18/extra-andringsbudget-finansutskottet-foreslar_cms69044190-8b21-4cfc-87ee-d5effc3453ddsv/), 검색일자: 2025. 2. 24.

659)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의 ‘1:14 우크라이나 지원’을 감액하고 ‘1:1 군 조직 활동 및 대비 태세’, ‘1:2 해외에서의 국방군 활동’, ‘1:3 군사 장비 및 장비 도입’, ‘1:9 국방 연구소’, ‘2:1 해안 감시’, ‘2:4 위기 대비’, ‘2:8 심리 방위청’ 중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증액하였으며, 구체적인 변경 규모는 <표 3-VIII-2> 참고

660) 스웨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매년 4월과 9월에 총 2번 제출할 수 있으나(「의회법」 제9장 제6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외의 시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제출이 가능(「의회법」 제9장 제6조 제2항)

661) 재무부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할 것을 제안

662) 2025년에 감액한 62억크로나는 2026년부터 3년간 추가 지원 예정(2026년에는 29억크로나, 2027년에는 20억크로나, 2028년에는 13억크로나)

표 3-VIII-2 지출분야 “6. 국방 및 사회 위기 대응”의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천크로나)

지출 분야·항목	결정된 예산 한도	예산 변경	새로운 예산 한도
6. 국방 및 사회 위기 대비	169,680,344	-6,186,200	163,494,144
1:1 군 조직 활동 및 대비 태세	66,245,663	731,000	66,976,663
1:2 해외에서의 국방군 활동	2,799,759	2,432,500	5,232,359
1:3 군사 장비 및 장비 도입	59,558,574	954,600	60,513,471
1:9 국방 연구소	572,134	89,500	661,634
1:14 우크라이나 지원	22 740 000	-10,479,900	12,260,100
2:1 해안 감시	1,890,822	24,000	1,914,822
2:4 위기 대비	2,391,608	52,000	2,443,608
2:8 심리 방위청	156,248	10,000	166,248
변경 예산 합계		-6,186,200	

주: 스웨덴의 예산은 국가 전체의 예산 총액한도를 설정한 이후 이를 27개의 지출분야(utgiftsområde)로 배분하고 이후 세부적인 지출항목(anslag)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출분야(utgiftsområde)는 총 27개로 1~27번으로 표시하며, 지출항목(anslag)은 1:1번과 같은 형태로 분류

자료: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5 – Stöd till Ukraina(Regeringens proposition 2024/25:94),”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0dc216a486f54fda8935deddfac9d02/extra-andringsbudget-for-2025—stod-till-ukraina\\_.pdf](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0dc216a486f54fda8935deddfac9d02/extra-andringsbudget-for-2025—stod-till-ukraina_.pdf), 검색일자: 2025. 2. 17.

표 3-VIII-3 지출항목별 향후 지출 확대 계획

(단위: 천크로나)

지출항목	결정된 예산 한도	예산 변경	새로운 예산 한도	기간
1:1 군 조직 활동 및 대비 태세	37,500,000	10,100	37,510,100	2026-2033
1:2 해외에서의 국방군 활동	-	5,948,450	5,948,450	2026-2027
1:3 군사 장비 및 장비 도입	244,200,000	2,821,900	247,021,900	2026-2036
2:4 위기 대비	3,000,000	50,000	3,050,000	2026-2031
변경 예산 합계		8,830,450		

주: 스웨덴의 예산은 국가 전체의 예산 총액한도를 설정한 이후 이를 27개의 지출분야(utgiftsområde)로 배분하고 이후 세부적인 지출항목(anslag)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출분야(utgiftsområde)는 총 27개로 1~27번으로 표시하며, 지출항목(anslag)은 1:1번과 같은 형태로 분류

자료: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5 – Stöd till Ukraina(Regeringens proposition 2024/25:94),”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0dc216a486f54fda8935deddfac9d02/extra-andringsbudget-for-2025—stod-till-ukraina\\_.pdf](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0dc216a486f54fda8935deddfac9d02/extra-andringsbudget-for-2025—stod-till-ukraina_.pdf), 검색일자: 2025. 2. 17.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춘계재정정책법안 발표(2025. 4. 15.)<sup>663)664)665)</sup>

- ※ 정부는 매년 4월15일까지 춘계재정정책법안을 스웨덴 의회에 제출해야 함. 춘계재정정책법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및 재정정책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 가을에 진행되는 예산법안의 구체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sup>666)</sup>
- (경제전망) 스웨덴 GDP 성장률은 2024년 1.0%, 2025년 2.1%, 2026년 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과거에 비해 안정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 감소, 금융 시장 변동성,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투자 및 가계소비가 감소
  - (재정전망) 스웨덴 정부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중한 재정운용을 지속할 계획
    - (재정수지) 2025년 재정수지는 -1.3%로 2024년 -1.5%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2026년부터 경기회복과 함께 세입 증가 및 지출 둔화로 인해 재정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28년 0.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부채) 총부채는 2027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 증가율을 하회하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5년 34.3%에서 2028년 3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663) 스웨덴 재무부, "Artikel från Finansdepartementet Vårbudgeten 2025 på fem minuter," 2024. 4.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5/04/varbudgeten-2025-pa-fem-minuter/>, 검색일자: 2025. 4. 16.

664) 스웨덴 재무부, "From 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2025: Guidelines for economic and budget policy," 2025. 4. 15., <https://www.government.se/information-material/2025/04/from-the-spring-fiscal-policy-bill-2025-guidelines-for-economic-and-budget-policy/>, 검색일자: 2025. 4. 29.

665) 스웨덴 재무부, "2025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 prop. 2024/25:100," 2025. 4. 15.,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ad1f4ceed7ab41c2a268f7be57bc5e2f/2025-ars-ekonomiska-varproposition-prop.-202425100.pdf>, 검색일자: 2025. 4. 30.

666)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Den ekonomiska vårpropositionen lämnas till riksdagen,"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budgetprocessen/>, 검색일자: 2024. 4. 16.;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4년 4월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 5. 13., p. 64. 재인용

표 3-VIII-4 주요 수치 전망(2025년 4월 15일)

(단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GDP	1.0	2.1	2.8	2.4	1.4
고용, 15~74세	-0.5	0.2	1.1	1.1	0.6
실업률, 15~74세 노동률 대비 %	8.4	8.6	8.2	7.8	7.6
CPI	2.8	0.7	1.8	1.9	2.1
CPIF	1.9	2.5	1.9	2.0	2.0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	-1.5	-1.3	-0.6	0.2	0.4
일반정부 총부채, GDP 대비 %	33.6	34.3	33.4	32.4	31.0

주: 1. 2024년은 결과, 2025~2028년은 전망을 나타냄.

2.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며,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뱅크(Riksbank)는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은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재정동향 2024년 1월호』 참고).

자료: 스웨덴 재무부, "Artikel från Finansdepartementet Vårbudgeten 2025 på fem minuter," 2024. 4.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5/04/varbudgeten-2025-pa-fem-minuter/>, 검색일자: 2025. 4. 16.

- (재정계획) ① 가계 부양 및 경기 회복 지원 ② 노동시장 회복 및 실업률 감소 ③ 성장 및 투자 증대로 구성된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
  -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대상 소득세 인하, 근로 경력 기반 세금 혜택 제공,<sup>667)</sup> 온실가스 감축의무(Reduktionsplikt)<sup>668)</sup> 완화 및 유류세 감면을 통한 연료 가격 인하, 저축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을 추진
  -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수요를 촉진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며, 스웨덴의 공공고용 서비스를 통해 장기 실업 상태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 확대, 실업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sup>669)</sup> 이민자 취업 지원 등을 추진

667) 2007년에 도입된 근로소득세 공제(Jobbskatteavdrag) 제도(스웨덴 재무부, "Sänkt skatt på förvärsinkomster," 2008. 6. 17., <https://www.regeringen.se/rapporter/2008/06/sankt-skatt-pa-forvarvsinkomster/>, 검색일자: 2025. 4. 30.)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2025년 춘계재정법안에는 구체적인 정책 명칭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나와있지 않음

668)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 혼합 의무제도로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가능한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 이에 따라 기업의 증가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연료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국민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속도가 다소 조정되고 있음(스웨덴 기후기업부, "Reduktion av växthusgasutsläpp genom inblandning av biodrivmedel i bensin och dieselbränslen," 2017. 6. 8.,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lagratsremiss/2017/06/reduktion-av-vaxthusgasutslapp-genom-inblandning-av-biodrivmedel-i-bensin-och-dieselbranslen/>, 검색일자: 2025. 4. 21.).

669) 스웨덴의 실업급여는 월소득의 80%를 최대 3만 3,000코로나(세전, 원화로 486만 3,87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한액이 3만 4,000코로나(세전, 원화로 501만 2,620원)로 상향됨. 참고로 2023년 스웨덴의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스웨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억크로나<sup>670</sup> 이상의 교통 인프라 재정 지원, 연구 및 혁신 기금과 세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 촉진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
- (2025 봄 추경예산안) 스웨덴 재무부는 경기부양책, 안전 및 보안을 위한 법 집행 강화, 군사 방어 능력 강화 등에 대해 115억크로나<sup>671</sup>)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 (경기부양책) 경제 회복을 위해 58억크로나<sup>672</sup>)를 배정하여 ROT 세액공제 강화, 노동시장 및 교육 이니셔티브, 도로 및 주택 투자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sup>673</sup>)
  - (ROT 세액공제<sup>674</sup>) 강화) 2025년 5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ROT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일시적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한도는 과세연도당 최대 5만크로나에서 7만 5,000 크로나로 상향함에 따라 43억 5,000만크로나<sup>675</sup>)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도로 및 주택 투자) 도로 유지 보수에 5억크로나<sup>676</sup>) 스웨덴 북부 지역 노르란드(Norrland) 지원에 1억 6,000만크로나를 제안
  - (노동시장 및 교육 이니셔티브) 고등직업교육에 4억 680만크로나<sup>677</sup>), 지자체의 학생·성인 직업교육에 3억 200만크로나, 고용서비스 보조금에 6,000만크로나,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은 3만 9,900크로나(원화로 약 588만 2,856원)(자료: 스웨덴 통계청, "Löneutveckling 1992-2023," 2024. 6. 18.,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arbetsmarknad/loner-och-arbetskostnader/lonestrukturstatistik-hela-ekonomin/pong/tabell-och-diagram/loeutveckling/>, 검색일자: 2025. 4. 30.)

670) 원화로 약 29조 5,400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71) 원화로 약 1조 6,985억 5,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72) 원화로 약 8,566억 2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73) 스웨덴 노동부·재무부·농촌부, "Satsningar för att stötta ekonomins återhämtning," 2025. 3. 2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satsningar-for-att-stotta-ekonomins-aterhamtning/>, 검색일자: 2025. 4. 17.

674) ROT 세액공제는 주택소유자 개인이 주택 수리·유지보수·재건 작업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재료비, 장비비, 출장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스웨덴어로 "rotavdraget"라 하며, 앞의 rot는 "Renovering, Ombyggnad, Tillbyggnad"의 약자로 "Renovation, Remodeling, and Extension"이라는 뜻. 주택 소유자의 소비를 통해 건설 부문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세입자의 경우 정원 가구기, 가사 서비스, 청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RUT 공제(rutavdraget)를 별도로 운영 중(자료: Sweden's solar tax incentives in 2023: ROT and Green Deduction (grön teknik), <https://solarstone.com/blog/swedens-solar-tax-incentives-in-2023#what-is-the-rot-deduction>, 검색일자: 2025. 3. 25.; Sweden - ROT & RUT avdrag, <http://impact-phs.eu/national-practices/sweden-rot-rut-avdrag/>, 검색일자: 2025. 3. 25.; 스웨덴 국세청, Rot och rut - priva 제도 설명, <https://skatteverket.se/privat/fastigheterochbostad/rotarbet ochrutarbete.4.2e56d4ba1202f95012080002966.html>, 검색일자: 2025. 3. 25.)

675) 원화로 약 6,423억 2,1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76) 원화로 약 738억 3,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77) 원화로 약 600억 6,808만 8,000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상향에 5,600만크로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투자 및 공공 고용서비스 증설 등을 제안

- (안전 및 보안 강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군사 방어 강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지원 패키지, 교정 및 보호 관찰 서비스 확장 투자, 청소년 범죄 대응, 폭발물 사용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 민간방위 역량 강화 등을 제안
- (군사 방어 강화) 장기 방위 투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국방력 강화 투자, 하이브리드 위협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크로나<sup>678)</sup>를 배정<sup>679)</sup>
- (교도소 및 보호 관찰 서비스 확장) 수감자 수 증가로 인해 교도소 및 보호 관찰 서비스 증대를 위한 4억 8,400만크로나<sup>680)</sup> 투자<sup>681)</sup>
- (청소년 범죄 대응) 청소년 교정시설 증대, 지자체 재정지원, 아동·청소년 범죄 위험 대응 등에 3억 5,700만크로나<sup>682)</sup> 배정<sup>683)</sup>
- (폭발물 사용 감소) 폭발물 사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400만크로나를 배정<sup>684)</sup>
- 그 밖에 민간방위 역량 강화에 8,500만크로나,<sup>685)</sup> 학교 안전 강화에 5,300만크로나를 배정<sup>686)</sup>

678) 원화로 약 3조 6,912억 5,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79) 스웨덴 국방부, "Största stödpaketet till Ukraina hittills höjer det svenska stödet för 2025 till 29,5 miljarder kronor," 2025. 3. 3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storsta-stodpaketet-till-ukraina-hittills-hojer-det-svenska-stodet-for-2025-till-295-miljarder-kronor/>, 검색일자: 2025. 4. 17.

680) 원화로 약 714억 6,26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81) 스웨덴 법무부, "Satsningar för att hålla uppe trycket i utbyggnaden av Kriminalvården," 2025. 4. 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satsningar-for-att-halla-uppe-trycket-i-utbyggnaden-av-kriminalvarden/>, 검색일자: 2025. 4. 17.

682) 원화로 약 527억 1,105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83) 스웨덴 법무부·보건사회부·교육연구부, "Satsningar för att motverka ungdomars brott," 2025. 4. 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satsningar-for-att-motverka-ungdomars-brott/>, 검색일자: 2025. 4. 17.

684) 스웨덴 국방부, "Satsning för att minska kriminell användning av explosiva varor," 2025. 4. 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satsning-for-att-minska-kriminell-anvandning-av-explosiva-varor/>, 검색일자: 2025. 4. 17.

685) 스웨덴 재무부·국방부·기후기업부, "85 miljoner kronor för att öka förmågan i det civila försvaret," 2025. 4. 11., <https://www.regeringen.se/debattartiklar/2025/04/85-miljoner-kronor-for-att-oka-formagan-i-det-civila-forsvaret/>, 검색일자: 2025. 4. 17.

686) 법무부·교육연구부, "Regeringen föreslår lagändringar och nytt statsbidrag för ökad skolsäkerhet," 2025. 3. 20.,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regeringen-foreslar-lagandringar-och-nytt-statsbidrag-for-okad-skolsakerhet/>, 검색일자: 2025. 4. 17.

- (기후전환 이니셔티브) 기후발전 프로젝트에 65억크로나, 산업 기후 전환 프로젝트에 22억크로나<sup>687)</sup> 배정<sup>688)</sup>
-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5년에 5억크로나<sup>689)</sup>가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유연한 치료를 확대할 계획<sup>690)</sup>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5. 6. 5.)<sup>691)692)</sup>

- 재무부는 필수 의약품 제조업체인 국영기업 APL(Apotek Produktion & Laboratorier AB)\*이 항생제 생산 공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민간제약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스웨덴 국유기업으로, 1923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가 1970년대 초 국유화되어 운영 중<sup>693)</sup>

- 스웨덴은 전쟁, 경제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의약품 접근성과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APL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APL이 의약품 생산 기업 인수를 앞두고 따라 추가경정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를 편성<sup>694)</sup>
- 칼 오스카 볼린(Carl-Oskar Bohlin) 민방위부 장관은 “항생제 국내 생산력 확보는 스웨덴의 민방위 전략적으로 중요한 단계이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687) 원화로 약 3,247억 8,6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88) 스웨덴 기후기업부, “Nya satsningar för att stärka Sveriges klimatomställning,” 2025. 4. 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nya-satsningar-for-att-starka-sveriges-klimatomställning/>, 검색일자: 2025. 4. 17.

689) 원화로 약 737억 8,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690) 스웨덴 재무부·보건사회부, “En halv miljard kronor i förstärkt satsning på den specialiserade psykiatriska vården under 2025,” 2025. 4. 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en-halv-miljard-kronor-i-forstarkt-satsning-pa-den-specialiserade-psykiatriska-varden-under-2025/>, 검색일자: 2025. 4. 17.

691)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5 – Kapitaltillskott till Apotek Produktion & Laboratorier AB,” 2025. 6. 5.,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5/06/prop.-202425185>, 2025. 6. 18.

692) 스웨덴 국방부, 보건사회부, “Köp av antibiotikafabrik stärker Sveriges beredskap,” 2025. 6. 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kop-av-antibiotikafabrik-starker-sveriges-beredskap/>, 검색일자: 2025. 6. 20.

693) 스웨덴 APL 홈페이지, <https://www.apl.se/om-apl/var-historia.html>, 검색일자: 2025. 6. 20.

694) 스웨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매년 4월과 9월에 총 2번 제출할 수 있으나(「의회법」 제9장 제6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외의 시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제출이 가능(의회법 제9장 제6조 제2항)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전시에 필요 항생제에 대한 스웨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예산은 “9. 건강, 의료 및 사회복지” 중 ‘1:14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7억크로나 감액하고, 이를 “24. 기업” 중 ‘1:17 국유기업에 대한 자본투자’에 7억크로나 증액하여 마련할 계획
  - 1:14 예산 항목은 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1:17 예산 항목 증액 사유가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정

표 3-VIII-5 2025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크로나)

지출항목	결정된 예산 한도	예산 변경	새로운 예산 한도
9. 건강, 의료 및 사회복지	120,254,872	-700,000	119,554,872
1:14 보건 및 의료 서비스	1,732,500	-700,000	1,032,500
24. 기업	8,315,298	700,000	9,015,298
1:17 국유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11,000	700,000	711,000

자료: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5 – Stöd till Ukraina(Regeringens proposition 2024/25:94),”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0dc216a486f54fda8935deddfac9d02/extra-andringsbudget-for-2025-stod-till-ukraina\\_.pdf](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0dc216a486f54fda8935deddfac9d02/extra-andringsbudget-for-2025-stod-till-ukraina_.pdf), 검색일자: 2025. 2. 17.

## 나. 결산

- 스웨덴 재무부, 2024년 중앙정부 연차보고서 발표(2025. 5. 22.)<sup>695)696)</sup>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5%로 960억크로나<sup>697)</sup> 적자이고, 2023년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470억크로나 확대
    -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재정수지가 악화된 이유는 경기 안정화 정책, 국방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조치 때문

695)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중앙정부 연차보고서를 스웨덴 의회에 제출, 본문은 2025년 5월 22일 발표된 영어로 된 요약 보고서를 정리함.

696) 스웨덴 재무부, “Central government annual report 2024 – summary,” 2025. 5. 22., <https://www.government.se/legal-documents/2025/05/central-government-annual-report-2024-summary/>, 검색일자: 2025. 5. 26.

697) 원화로 약 13조 7,184억원(2025. 5. 28. 환율 기준)

- 스웨덴 의회가 정한 2024년 지출 상한선은 1조 7,470억코로나<sup>698</sup>)였으나, 중앙정부 결산에 의하면 지출 상한선에 따른 지출은 1조 6,860억코로나<sup>699</sup>)로 한도보다 610억코로나 적게 나타남
- 중앙정부 예산수지는 -1,040억코로나<sup>700</sup>)이며, 이는 2023년에 비해 1,230억코로나 확대
- 중앙정부 채무는 2024년 1조 770억코로나<sup>701</sup>)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도 2023년 15.6%에서 2024년 16.7%로 증가

표 3-Ⅷ-6 2024년 재정 결산에 대한 주요 지표

(단위: 십억코로나)

구분	2023년	GDP 대비 <sup>1)</sup>	2024년	GDP 대비 <sup>2)</sup>
일반정부 재정수지	-49	-0.8%	-96	-1.5%
중앙정부	-4	-	-71	-
노령연금제도	16	-	29	-
지방정부	-60	-	-54	-
중앙정부 예산수지	19	0.3%	-104	-1.6%
지출 상한선	1,665	26.8%	1,747	27.1%
지출 상한선에 따른 지출	1,575	25.4%	1,686	26.1%
중앙정부 순자산	160	2.6%	330	5.1%
중앙정부 채무	970	15.6%	1,077	16.7%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금액의 합이 총액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음

1) 2024년의 잠정 GDP는 6조 4,475억코로나(현재 가격)

2) 2023년의 수정 GDP는 6조 2,121억코로나(현재 가격)

자료: 스웨덴 재무부, "Central government annual report 2024 – summary," 2025. 5. 22., Table 1, 2를 참고하여 재구성, <https://www.government.se/legal-documents/2025/05/central-government-annual-report-2024-summary/>, 검색일자: 2025. 5. 26.

698) 원화로 약 249조 6,463억원(2025. 5. 28. 환율 기준)

699) 원화로 약 240조 7,776억 6,000만원(2025. 5. 28. 환율 기준)

700) 원화로 약 14조 8,522억 4,000만원(2025. 5. 28. 환율 기준)

701) 원화로 약 153조 7,525억 2,000만원(2025. 5. 28. 환율 기준)

## 02 주요 정책 및 이슈

### 가. 경제 및 재정 정책

#### ■ 스웨덴 재무부, EU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 발표(2025. 5. 2.)<sup>702)</sup>

- \* 2024년 4월에 승인된 유럽연합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안에 따라 회원국들은 4년 중기재정계획(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PSMT)을 수립하고, 매년 4월 30일 전에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 (경제) 2023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25년은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
  - (성장률) 스웨덴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1%에서 2025년 2.1%로 성장할 전망
  - (물가) 2024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와 상품 물가상승률이 낮아짐에 따라 평균 수준에 가깝게 하락하였으며, 2025년 초 물가상승률은 임대료 인상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1%로 소폭 상승
  - (고용) 취업자수는 2025년에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2025년 8.6%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스웨덴의 재정은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지원, 스웨덴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한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정적자)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1.5%로 악화되었으며, 2025년은 -1.3%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총부채) 총부채는 2024년 GDP 대비 33.5%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은 34.3%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순지출) 2024년 순지출 증가율은 권고 수준보다 0.3%p 낮은 6.1%로 나타났으며, 2025년은 이보다 낮은 4.1%로 전망되어 권고 수준인 4.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23~2025년 누적 순지출 증가율은 권고 수준인 10.7%보다 0.2%p 낮은 10.5%로 전망

702)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lägesrapport 2025," 2025. 5. 2., <https://www.regeringen.se/rapporter/2025/05/sveriges-lagesrapport-2025/>, 검색일자: 2025. 5. 20.

- (투자 및 개혁 방향) 스웨덴 정부는 중기계획에 따라 투자 및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우선순위에 바탕을 두고 있음
  - ① 주택시장 불균형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 해소 ② 공정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 ③ 교육 및 노동시장 지원 ④ 국가 방위 역량 강화

## 나. 금리 정책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 금리 2.25%로 0.25%p 인하(2025. 1. 29.)<sup>703)</sup>
  - (배경)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위험이 제한적임에 따라 중앙은행에서는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
    - (경제상황) 스웨덴 경제는 소비가 비교적 강하게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노동 시장 추세가 반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전히 경제가 약한 상태
    - (물가) 작년 12월 이후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경제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
      -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sup>704)</sup> 상승률이 억제되어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 수준에 가깝게 유지
  - (정책금리) 8년 만에 금리를 인하<sup>705)</sup>한 2024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현재까지 총 1.75%p 인하
    - 작년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직 그 영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
  - (전망)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무역 장벽 증가, 지정학적 분열,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스웨덴 경제회복과 환율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금리 변경 필요성을 신중히 평가할 예정

703)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25 procent," 2025. 1. 2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t-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25-procent/>, 검색일자: 2025. 2. 17.

704)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7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 5., p. 53.

표 3-VIII-7 2023~2025년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9월	1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2월
기준금리	4.00	4.00	4.00	4.00	3.75	3.75	3.50	3.25	2.75	2.50	2.25
변동폭(%p)	+0.25	0.00	0.00	0.00	-0.25	0.00	-0.25	-0.25	-0.50	-0.25	-0.25

자료: 1. 2023년: 스웨덴 통계청,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5 procent," 2024. 12. 1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5-procent/>, 검색일자: 2024. 12. 20., 표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 2024년 이후: 스웨덴 중앙은행, "Sifferunderlag: Penningpolitisk uppdatering januari 2025," 2025. 1. 29., <https://www.riksbank.se/globalassets/media/rapporter/ppr/sifferunderlag/svenska/2025/sifferunderlag-penningpolitisk-uppdatering-januari-2025.xlsx>, 검색일자: 2025. 2. 21.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금리 2.25%로 동결(2025. 5. 8.)<sup>706)</sup>

- (정책금리) 2024년 5월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오던 스웨덴 중앙은행이 2025년 5월에는 정책금리를 2.25%로 동결
- (배경) 스웨덴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통화정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발표
  - 4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sup>707)</sup> 상승률은 2.3%,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3.1%로 현재 목표치(2.0%)보다 다소 높은 수준
  -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스웨덴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지속될지 판단하기 이른 상황
- (전망) 스웨덴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분석한 후 정책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

706)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oförändrad på 2,25 procent," 2025. 5. 8.,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oforandrad-pa-225-procent2/>, 검색일자: 2025. 5. 20.

707)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금리 2%로 인하(2025. 6. 18.)<sup>708)</sup>
  - (정책금리)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달 5월에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
    - 2.25%(2025년 2월) → 2.25%(2025년 5월) → 2%(2025년 6월)
  - (배경) 스웨덴 중앙은행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및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로 인해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
    - (세계 경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소폭 감소하였고 관세도 4월 초에 발표된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여전히 향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고용 및 성장률) 스웨덴의 실질임금은 상승 추세이지만 예상치를 밑돌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과 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물가는 하락 추세이나 향후 수요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임
  - (전망)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5월과 같이 정책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불확실한 세계 경제전망 및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결정할 계획

표 3-Ⅷ-8 2024~2025년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4								2025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2월	5월	6월
기준금리	4.00	4.00	3.75	3.75	3.50	3.25	2.75	2.50	2.25	2.25	2.00
변동폭(%p)	0.00	0.00	-0.25	0.00	-0.25	-0.25	-0.50	-0.25	-0.25	0.00	-0.25

자료: 다음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 2024년~2025년 2월: 스웨덴 중앙은행, “Sifferunderlag: Penningpolitisk uppdatering januari 2025,” 2025. 1. 29., <https://www.riksbank.se/globalassets/media/rapporter/ppr/sifferunderlag/svenska/2025/sifferunderlag-penningpolitisk-uppdatering-januari-2025.xlsx>, 검색일자: 2025. 2. 21.
2. 2025년 5월: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oförändrad på 2,25 procent,” 2025. 5. 8.,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oforandrad-pa-225-procent/>, 검색일자: 2025. 5. 20.
3. 2025년 6월: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till 2 procent,” 2025. 6. 18.,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sanks-till-2-procent/>, 검색일자: 2025. 6. 23.

708)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till 2 procent,” 2025. 6. 18.,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sanks-till-2-procent/>, 검색일자: 2025. 6. 23.

## 다. 기타 정책

- 스웨덴 문화부, 교육부,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 구매 사업에 4.8억크로나 지원 계획 발표 (2024. 12. 21.)<sup>709)</sup>
  - 스웨덴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독서 시간 증가 및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감소를 위해 2024년에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구매를 위한 국가보조금을 신설 하였으며, 2025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
    - 유치원에 도서관을 만들거나 학교 도서관에 책을 구매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소설 작품 세트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
  - 보조금 규모는 2024년 1.76억크로나에서 2025년 4.8억크로나로 증가
- 스웨덴 보건사회부,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에 1.5억크로나 지원 계획 발표(2024. 12. 27.)<sup>710)</sup>
  - 정신 건강 증진, 정신 질환 및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동안 7천만크로나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1.5억크로나로 해당 사업을 확대할 예정
- 스웨덴 국방부, UN 평화 유지 노력 강화·효율화·현대화 사업에 1,500만크로나 지원 계획 발표(2025. 1. 2.)<sup>711)</sup>
  - UN 평화유지활동의 운영 효과 개선, 의사결정용 디지털 도구 개발, 정보 수집 역량 강화, 허위 및 왜곡 정보 대응,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과 대응을 지원할 계획

709) 스웨덴 문화부·교육부, “480 miljoner för nya böcker till Sveriges barn och elever nästa år,”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480-miljoner-for-nya-bocker-till-sveriges-barn-och-elever-2025/>, 검색일자: 2025. 1. 20.

710) 스웨덴 보건사회부, “150 miljoner kronor till det civila samhällets organisationer i kraftigt förstärkt satsning för psykisk hälsa och suicidprevention,” 2024. 12. 27.,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150-miljoner-kronor-till-det-civila-samhallets-organisationer-i-kraftigt-forstarkt-satsning-for-psykisk-halsa-och-suicidprevention/>, 검색일자: 2025. 1. 20.

711) 스웨덴 국방부, “15 miljoner kronor för att stärka FN:s fredsbevarande insatser,” 2025. 1. 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1/15-miljoner-kronor-for-att-starka-fns-fredsbevarande-insatser/>, 검색일자: 2025. 1. 20.

■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EU의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2025. 1. 17.)<sup>712)</sup>

\*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은 운송, 에너지, 통신 등 세 개 분야 회원국 간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여 EU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함<sup>713)</sup>

○ 이 프로젝트는 2021~2027년 기간 동안 EU 유럽연결기금(CEF)에 7,170만유로를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EU의 횡단 교통망 네트워크(TEN-T)\*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U의 횡단 교통망 정책으로 회원국 간의 철도, 내륙 수로, 짧은 해상 운송 경로 및 도시 노드, 해상 및 내륙 항구, 공항 및 터미널을 연결하는 사업<sup>714)</sup>

- 유럽위원회는 봄에 프로젝트 지원 신청서를 받고 7월에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자격요건은 EU 횡단 교통망 네트워크(TEN-T)의 확장에 기여하고 EU의 장기적인 탄소감축 목표에 부합해야 함

표 3-Ⅷ-9 EU 유럽연결기금(CEF) 지원을 받는 20개 인프라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목록
1	Preem 트럭 정류장 그리드
2	TISGRADE-교통 관리 정보 서비스 업그레이드
3	VERKKO-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디지털화된 교통 관리, 다중화물, 그리고 TEN-T 회랑을 따라 국경을 넘는 이동성 개선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4	노르셰핑의 새로운 중앙역
5	업살라 중앙역
6	도시 대중교통을 TEN-T 네트워크와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SVEA 허브
7	EASIER-지역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손쉬운 접근 역
8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원격 타워를 가상화하여 공항 교통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접근성, 회복력, 안전성 및 효율성)
9	북부 철광석 노선의 눈 보호 솔루션(스노우갬러리 말뚝바나)
10	ERTMS 탑재 스웨덴 2025-2028
11	교차 국경 상호 운용성 향상(TSI)을 통한 화물 차량 이동 관리

712)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Regeringen tillstyrker tjugo infrastrukturprojekt för ansökan om EU-stöd," 2025. 1. 17.,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1/regeringen-tillstyrker-tjugo-infrastruktururprojekt-for-ansokan-om-eu-stod/>, 검색일자: 2025. 1. 23.

7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 11., p. 8.

714) EC,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https://transport.ec.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ucture-and-investment/trans-european-transport-network-ten-t\\_en](https://transport.ec.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ucture-and-investment/trans-european-transport-network-ten-t_en), 검색일자: 2025. 1. 23.

표 3-VIII-9 의 계속

연번	사업목록
12	DCM IMP 25-29-디지털 용량 관리 구현 2025-2029
13	PioDAC-Pioneer DAC 열차
14	트렐레보르그-트라베뤼데 Ro-Pax 링크 업그레이드: SSE 배치 및 친환경 운영을 위한 항구 흐름 디지털화
15	NELSON-미래 수로의 항법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16	GRAVITY-운영 선박의 친환경 감축 및 제로 배출 향해
17	WINMOS IV-유럽 해양 공간에서 겨울 향해 보호
18	CLEAN ATM 3
19	유럽 CNS 네트워크 통합 현대화(2차)- GREEN CNS2
20	NAPCORE X

자료: 스웨덴 농촌 인프라부, "Regeringen tillstyrker tjugo infrastrukturprojekt för ansökan om EU-stöd," 2025. 1. 17.,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1/regeringen-tillstyrker-tjugo-infrastrukturprojekte-for-ansokan-om-eu-stod/>, 검색일자: 2025. 1. 23.를 인용하여 재작성

■ 스웨덴 보건사회부, 양질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에 36억 7,400만크로나 지원 계획 발표(2025. 1. 22.)<sup>715)</sup>

- 정부는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정부 보조금법을 통해 지방의 1차 병원을 중심으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 동 사업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차 병원 진료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 ① 정기적인 진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치료의 연속성 ② 1차 병원 접근성 ③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④ 재활 및 재활사업 ⑤ 인간 중심의 건강 관리 ⑥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간의 계획 및 협력 ⑦ 1차 병원의 기술 공급 및 작업 환경 ⑧ 농촌 및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1차 병원 설치에 대해 지원
  -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정부와 매년 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2025년부터 신설된 국가지원법으로 대체
    - 근거 법: 밀착 진료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715) 스웨덴 보건사회부, "Regeringen fortsätter satsningen på god och nära vård med ny statsbidragsförordning," 2025. 1. 2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1/regeringen-fortsatter-satsningen-pa-god-och-nara-var-d-med-ny-statsbidragsforordning/>, 검색일자: 2025. 1. 23.; 스웨덴 보건사회부, "Presentationbilder från pressträff om omställningen till god och nära vård," <https://www.regeringen.se/globalassets/regeringen/bilder/socialdepartementet/folkhalsa-och-sjukvard/presentationbilder-fran-presstraff-om-omstallningen-till-god-och-nara-var-d.pdf>, 검색일자: 2025. 1. 24.

법령(2024:1253)<sup>716)</sup>■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주요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 착공 결정 발표(2025. 2. 11.)<sup>717)</sup>

- 국가 교통 인프라 계획(2022~2033년)에 따라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의 착공을 결정
  - 화물 및 여객 운송을 위한 철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르보트니아철도(Norrbotniabanan) 및 광석철도(Malmbanan)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착공될 예정
    - 이를 통해 철도가 없는 도시인 셀레프테오(Skellefteå)에 철도 교통이 연결되며, 광석철도(Malmbanan) 개선을 통해 화물 운송 용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 이번 정부 결정은 2022~2033년 국가 교통 인프라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교통청(Trafikverket)이 제안한 여러 프로젝트 중 일부가 착공 승인을 받음
  - 2025~2027년에는 12개 프로젝트가 착공 승인을 받았으며, 2028~2030년에는 6개 프로젝트가 해당 기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승인 준비 중
- 정부는 이번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 기후 전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약 1,200억코로나 규모의 교통 인프라 예산을 향후 12년간 투입할 예정
- 또한 정부는 교통청(Trafikverket)에 예산 초과 문제를 점검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 스웨덴 노동부·재무부·농촌인프라부, 경기부양책 발표(2025. 3. 21.)<sup>718)</sup>

- (제안배경) 스웨덴 경제는 국내수요 증가에 힘입어 경제회복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웨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

716) 스웨덴 의회, "Förordning (2024:1253) om statsbidrag till kommuner och regioner för utveckling av en god och nära vård," <https://beta.rkrattsbaser.gov.se/sfs/item?bet=2024%3A1253&tab=forfattningstext>, 검색일자: 2025. 1. 24.

717)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Regeringen beslutar om byggstarter för viktiga projekt inom väg- och järnväg," 2025. 2. 1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2/regeringen-beslutar-om-byggstarter-for-viktiga-projekt-inom-vag-och-jarnvag/>, 검색일자: 2025. 2. 25.

718) 스웨덴 노동부·재무부·농촌인프라부, "Satsningar för att stötta ekonomins återhämtning," 2025. 3. 2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satsningar-for-att-stotta-ekonomins-aterhamtning/>, 검색일자: 2025. 3. 25.

- (예산 규모) 관련 부처가 58억크로나<sup>719</sup>) 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4월 춘계재정법안<sup>720</sup>)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
- (주요 사업) 경기부양책은 크게 ROT 세액공제율\* 인상, 주택건설 및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 회복을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로 구성
  - \* ROT 세액공제는 주택소유자 개인이 주택 수리·유지보수·재건 작업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재료비, 장비비, 출장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스웨덴어로 “rotavdraget”라 하며, 앞의 rot는 “Renovering, Ombyggnad, Tillbyggnad”의 약자로 “Renovation, Remodeling, and Extension”이라는 뜻. 주택소유자의 소비를 통해 건설 부문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세입자의 경우 정원 가꾸기, 가사 서비스, 청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RUT 공제(rutavdraget)를 별도로 운영 중<sup>721</sup>)
- (ROT 공제율 인상) 2025년 5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sup>722</sup>)까지 ROT 공제율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가계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건설산업을 지원
  - 세액공제 한도는 과세연도당 최대 5만크로나에서 7만 5,000크로나로 상향<sup>723</sup>)
  -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이 주택 수리에 지불하는 총 비용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소비가 촉진되어 건설산업의 비공식적인 노동<sup>724</sup>)의 감소로 인한 탈세 예방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전환과 함께 건설산업의 고용 증가를 기대<sup>725</sup>)

719) 원화로 약 8,432억 규모(2025. 3. 24. 오후 23:50 환율 기준)

720) 스웨덴의 예산 편성 주기는 다음과 같음.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4월 춘계재정법안에서 사전예산서 형태로 먼저 발표되며, 약 5개월 후인 9월에 본예산이 발표됨. 이후 3개월 후인 12월에 의회를 통해 확정함.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발표하는 4월 춘계재정법안이나 9월 본예산과 함께 발표함(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시기에도 편성이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4월 춘계재정법안과 9월 본예산에서 발표하여 2024년 12월 의회에서 확정하였음. 한편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2025년 4월 춘계재정법안과 9월 본예산에서 발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2025년 2월에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

721) Sweden's solar tax incentives in 2023: ROT and Green Deduction (grön teknik), <https://solarstone.com/blog/swedens-solar-tax-incentives-in-2023#what-is-the-rot-deduction>, 검색일자: 2025. 3. 25.; Sweden - ROT & RUT avdrag, <http://impact-phs.eu/national-practices/sweden-rot-rut-avdrag/>, 검색일자: 2025. 3. 25.; 스웨덴 국세청, Rot och rut - priva 제도 설명, <https://skatteverket.se/privat/fastigheterochbostad/rotarbeteochrutarbete.4.2e56d4ba1202f95012080002966.html>, 검색일자: 2025. 3. 25.

722) 스웨덴 재무부, “Tillfälligt höjd subventionsgrad för rotavdraget,” 2025. 3. 21.,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25/03/tillfalligt-hojd-subventionsgrad-for-rotavdraget/>, 검색일자: 2025. 3. 25.

723) 스웨덴 재무부, “Tillfälligt höjd subventionsgrad för rotavdraget,” 2025. 3. 21., p. 4,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1f8eb20df51a4cb9a0140f6d481c92e8/tillfalligt-hojd-subventionsgrad-for-rotavdraget.pdf>, 검색일자: 2025. 3. 27.

724) 세금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세금 납부를 생략하는 노동 활동을 의미

725) 스웨덴 재무부, “Tillfälligt höjd subventionsgrad för rotavdraget,” 2025. 3. 21., pp. 13-14, <https://www.>

- (주택건설 및 인프라 투자) 도로 유지관리 강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 (노동시장) 직업대학 및 직업교육 강화, 청년층 일자리 확대, 정부 고용 서비스 예산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가. 경제 통계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1월 경제 현황 발표(2025. 1. 10.)<sup>726)727)</sup>
  - 2024년 11월, 가계 소비와 기업 생산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 순환 시계가 회복 단계로 전환
    - 대부분의 지표는 장기 추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11월 계절 조정 GDP는 전월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일수 조정(Calendar-adjusted) GDP는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 경제 활동은 11월에 상승세를 보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들과 함께 공공 기관의 생산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 서비스 생산 부문 중에서 정보통신 산업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상품 부문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강한 회복을 보임

regeringen.se/contentassets/1f8eb20df51a4cb9a0140f6d481c92e8/tillfalligt-hojd-subventionsgrad-for-rotavdraget.pdf, 검색일자: 2025. 3. 27.

726) 스웨덴 통계청, "Ekonomiskt uppsving i November," 2025. 1. 2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amnesovergripande-statistik/sveriges-ekonomi-statistiskt-perspektiv/pong/statistiknyhet/sveriges-ekonomi--statistiskt-perspektiv-nr-1-2025/>, 검색일자: 2025. 1. 21.

727) 스웨덴 통계청, "BNP upp i November," 2025. 1. 1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ovrigt/nationalrakenskaper-ovrigt/pong/statistiknyhet/nationalrakenskaper-ovrigt-bnp-indikator-manad-november-2024/>, 검색일자: 2025. 1. 17.

표 3-VIII-10 2024년 11월 스웨덴 경제 현황

(단위: %)

지표	전월 비 <sup>1)</sup>	전년 동월 비 <sup>2)</sup>
GDP	1.4	2.1
기업		
기업생산	1.4	2.7
산업생산	2.4	2.6
산업 신규 수주	2.8	5.1
서비스생산	1.1	3.9
무역 및 소비		
가계소비	1.1	1.6
소매판매	-0.2	1.6
대외무역		
물품 수출 <sup>3)</sup>	0.6	-4.4
물품 수입 <sup>3)</sup>	0.3	-2.9
물가		
소비자가격(CPIF)	0.5	1.8
생산자가격	3.1	0.3
노동시장		
취업률 <sup>4)</sup>	-0.1	-0.9
실업률 <sup>5)</sup>	0.0	0.3
근무시간 <sup>6)</sup>	0.1	0.3

주: 1) 해외무역, 물가, 노동시장을 제외한 일수 조정(calendar-adjusted) 및 계절 조정

2) 대외무역, 물가 및 노동시장을 제외한 일수 조정(calendar-adjusted)

3) 조정되지 않은 현재 가격 기준이며, 월간 변화는 추세를 나타냄.

4) 15~74세 인구 대비 고용률을 의미하며, 백분율 변화를 나타냄. 월간 변화는 계절 조정 및 평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연간 변화는 원시값을 기준으로 함.

5) 15~74세 노동력 대비 실업률을 의미하며, 백분율 변화를 나타냄. 월간 변화는 계절 조정 및 평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연간 변화는 원시값을 기준으로 함.

6) 해외취업을 포함한 15~74세의 근무시간을 나타냄. 월간 변화는 계절 조정 및 평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연간 변화는 원시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스웨덴 통계청, "Sveriges ekonomi Statistiskt perspektiv - Ekonomiskt uppsving i november," 2025. 11. 1., [https://www.scb.se/contentassets/ad0c576dc445477eadc412e7a530a7b0/nr0001\\_2025m01\\_ti\\_a28ti2501.pdf](https://www.scb.se/contentassets/ad0c576dc445477eadc412e7a530a7b0/nr0001_2025m01_ti_a28ti2501.pdf), 검색일자: 2025. 1. 23.를 인용하여 저자 재작성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2025. 1. 15.)<sup>728)</sup>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1월 1.6%에서 12월 0.8%로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sup>729)</sup> 상승률은 11월 1.8%에서 12월 1.5%로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에너지 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 상승률은 11월 2.4%에서 12월 2.0%로 하락

표 3-Ⅷ-11 2024년 12월 CPI, CPIF, CPIF-XE 변화

(단위: %)

구분	전월 비	전년 동월 비
소비자물가지수(1980=100)	0.0	0.8
CPIF(1987=100)	0.3	1.5
CPIF-XE(1987=100)	0.3	2.0

자료: 스웨덴 통계청, "Inflationstakten enligt KPI 0,8 procent i december 2024 Statistiknyhet från," <표> 'Indextal, månads- och årsförändring för KPI, KPIF och KPIF-XE',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priser-och-ekonomiska-tendenser/priser/konsumentprisindex-kpi/pong/statistiknyhet/konsumentprisindex-kpi-december-2024/>, 검색일자: 2025. 1. 17.

- 통계청의 가격통계학자인 칼 마르텐슨(Carl Mårtensson)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12월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 0.7%에서 2024년 0.0%로 하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이 기여
  - 12월에는 여행과 운송 서비스 모두 가격이 상승(특히 국제선 가격)하였으며, 의류 분야의 가격도 상승
  - 반면 전기와 숙박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11월부터 소유주 점유 주택과 임차인 소유 주택의 이자 비용이 계속 하락

728) 스웨덴 통계청, "Inflationstakten enligt KPI 0,8 procent i december 2024 Statistiknyhet från," 2025. 1. 15.,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priser-och-ekonomiska-tendenser/priser/konsumentprisindex-kpi/pong/statistiknyhet/konsumentprisindex-kpi-december-2024/>, 검색일자: 2025. 1. 17.

729)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또한 에너지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자주 사용됨.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기여
  - 주택 임대료와 임차인 소유 주택 관리비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기요금 하락과 임차인 소유 주택 이자 비용 감소로 상쇄
  - TV, 영화, 음악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락 및 문화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였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도 상승
  - 반면 연료 가격은 하락

표 3-Ⅷ-12 2024년 12월 상품 및 서비스별 CPI의 등락률

(단위: %)

구분	전월 비	전년 동월 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01)	-	1.7
의류(03)	1.3	-
전기(04.5.1)	-2.7	-6.9
소유주 점유 주택 이자비용(04.x)	-3.4	-
임차인 소유 주택 이자비용(04.y)	-4.0	-9.4
주택 임대료(04.S.1)	-	4.9
임차인 소유 주택 관리비(04.S.2)	-	6.5
연료(07.2.2)	-	-13.3
운송 서비스(07.3)	10.0	-
오락 및 문화(09.4)	-	4.5
여행(09.6)	14.3	-
숙박(11.2)	-5.7	-
기타 상품 및 서비스(12)	-	3.7

자료: 스웨덴 통계청, "Inflationstakten enligt KPI 0,8 procent i december 2024 Statistisknyhet från," 중 <표> 'Varor och tjänster som främst påverkade månadsförändringen enligt KPI'와 'Varor och tjänster med störst bidrag till inflationstakten enligt KPI'를 인용하여 저자 재작성

■ 스웨덴 통계청·재무부,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2. 28.)<sup>730)731)</sup>

- 스웨덴의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재화의 순수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8% 증가
  - (최종 소비 지출) 가계 최종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7%, 일반 정부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가계 최종 소비는 다양한 소비 항목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7% 증가
    - 일반 정부 소비는 지방정부 소비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재고 변화) 재고변화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0.6%p로 나타남
  -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 투자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1.8% 증가
  - (수출입) 수출이 0.7% 증가한 반면, 수입은 0.5% 감소, 순수출은 GDP 성장에 0.6%p 기여
- 이에 대해 재무부는 스웨덴 경제가 2024년 4분기 GDP 성장, 투자, 가계소비 증가로 인해 2024년 하반기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으며, 2025년 및 202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5년부터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가깝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730) 스웨덴 통계청, “BNP ökade fjärde kvartalet 2024,” 2025. 2. 28.,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kvartals-och-arsberakningar/pong/statistiknyhet/nationalrakenskaper-4e-kvartalet-2024/>, 검색일자: 2025. 3. 19.

731) 스웨덴 재무부, “Återhämtningen i svensk ekonomi är påbörjad,” 2025. 3. 19.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aterhamtningen-i-svensk-ekonomi-ar-paborjad/>, 검색일자: 2025. 3. 21.

■ 스웨덴 통계청,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5. 30.)<sup>732)733)734)</sup>

- 재무부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GDP 성장률의 증가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총고정자본형성의 감소로 인해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이 0.2% 감소하여 하락세로 전환
  - (소비) 가계 소비는 지난 2분기 동안 증가하였으나, 2025년 1분기에는 식료품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0.2% 감소
  -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건물과 시설 투자 하락으로 인해 3.8% 감소하였으며, GDP 성장률 1%p 감소에 기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수출입) 수출은 1.8%, 수입은 0.3% 증가하여 GDP 성장률 0.8%p 증가에 기여

표 3-VIII-13 스웨덴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sup>1)</sup>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3 Q1	2023 Q2	2023 Q3	2023 Q4	2024 Q1	2024 Q2	2024 Q3	2024 Q4	2025 Q1
GDP 성장률	0.2	-0.3	0.3	-0.2	0.8	-0.3	0.3	0.8	-0.2
가계 최종 소비	-1.8	0.2	0.0	0.5	-0.6	-0.2	0.0	0.7	-0.2
일반 정부 소비	0.1	0.3	0.0	0.4	0.3	0.1	0.4	0.1	0.1
총고정자본형성 <sup>2)</sup>	-0.3	-0.1	0.1	-1.6	0.2	-1.7	0.3	1.8	-3.8
수입	-0.2	0.2	-1.6	0.9	0.6	-0.6	1.7	-0.5	0.3
수출	1.1	-0.2	1.6	0.3	-0.1	1.0	0.6	0.7	1.8

주: 1) 계절 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자료: 스웨덴 통계청, "GDP increased in the fourth quarter 2024," 2025. 2. 28., GDP - Expenditure approach 및 National Accounts, quarterly and annual estimates를 참고하여 재구성

732) 스웨덴 통계청, "BNP minskade första kvartalet 2025," 2025. 5. 3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kvartals-och-arsberakningar/pong/statistiknyhet/nationalrakenskaper-1a-kvartalet-2025/>, 검색일자: 2025. 6. 19.

733) 스웨덴 통계청, "Kommentarer till BNP-beräkningarna (korrigerad 2025-06-03),"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kvartals-och-arsberakningar/pong/publikationer/kommentarer-till-bnp-berakningarna2/>, 검색일자: 2025. 6. 20.

734) 스웨덴 통계청, "Ekonomi mattades av första kvartalet 2025," 2025. 6. 16.,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amnesovergripande-statistik/sveriges-ekonomi-statistik-perspektiv/pong/statistiknyhet/sveriges-ekonomi-statistiskt-perspektiv-nr-6-2025/>, 검색일자: 2025. 6. 20.

■ 스웨덴 통계청, 2025년 1분기 고용 지표 발표(2025. 5. 6.)<sup>735)736)</sup>

- 스웨덴의 청년층 고용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고용 지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
  - 2025년 1분기 15~74세 기준 취업자수(계절조정)는 524만 6,000명이며, 고용률은 68.8%로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
    - 15~24세 청년 취업자수(계절조정)는 52만명이며, 고용률은 42.9%로 전 분기에 비해 증가
  - 2025년 1분기 15~74세 기준 실업자수(계절조정)는 50만 2,000명이며, 실업률은 8.7%로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
    - 15~24세 청년 실업자수(계절조정)는 16만 4,000명이며, 청년 실업률은 23.9%로 전 분기에 비해 하락
- 정부는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할 계획
  - 2025년에 약 13만명이 직업전문대학과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표 3-Ⅷ-14 2024~2025년 분기별 고용률 및 실업률(계절조정)

(단위: %)

	'24년 1분기	'24년 2분기	'24년 3분기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1분기 연간 변화율
고용률	69.2	69.0	68.9	68.8	68.8	0.3
15~24세 청년	43.4	43.1	42.8	42.7	42.9	0.9
실업률	8.2	8.4	8.5	8.7	8.7	0.4
15~24세 청년	23.8	24.2	24.3	24.2	23.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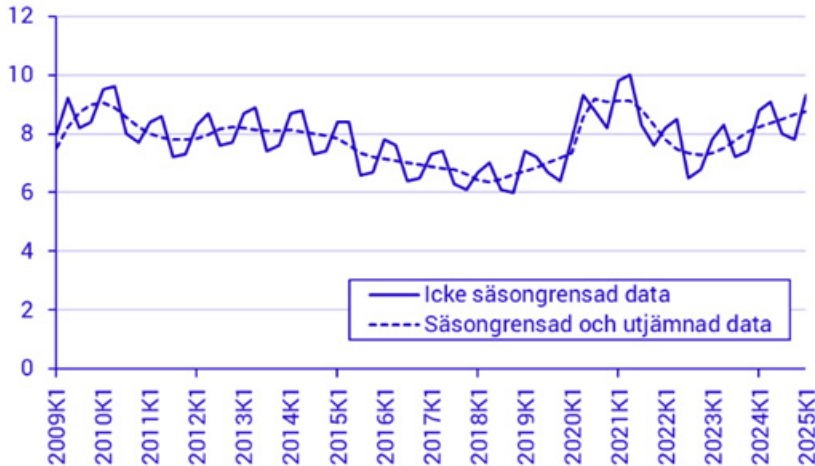
자료: 스웨덴 통계청, “Arbetslösheten ökade under första kvartalet,” 2025. 5. 6. 중 ‘Arbetskraftsundersökningarna 15-74 år och 20-65 år, säsongrensade och utjämnade data (trendvärde)’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arbetsmarknad/utbud-av-arbetskraft/arbetskraftsundersokningarna-aku/pong/statistiknyhet/arbetskraftsundersokningarna-aku-forsta-kvartalet-2025/>, 검색일자: 2025. 5. 20.)

735) 스웨덴 통계청, “Arbetslösheten ökade under första kvartalet,” 2025. 5. 6.,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arbetsmarknad/utbud-av-arbetskraft/arbetskraftsundersokningarna-aku/pong/statistiknyhet/arbetskraftsundersokningarna-aku-forsta-kvartalet-2025/>, 검색일자: 2025. 5. 20.

736) 스웨덴 노동부, “Lediga jobb finns att söka trots osäker omvärld,” 2025. 4. 24.,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lediga-jobb-finns-att-soka-trots-osaker-omvard/>, 검색일자: 2025. 5. 20.

그림 3-VIII-1 2009~2025년 스웨덴 15~74세 실업률

(단위: %)



주: 실선은 계절조정 전의 실업률, 점선은 계절조정된 실업률  
 자료: 스웨덴 통계청, "Arbetslösheten ökade under första kvartalet," 2025. 5. 6. 중 'Arbetskraftsundersökningarna 15-74 år och 20-65 år, säsongrensade och utjämnade data (trendvärde)'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arbetsmarknad/utbud-av-arbetskraft/arbetskraftsundersokningarna-aku/pong/statistiknyhet/arbetskraftsundersokningarna-aku-forsta-kvartalet-2025/>, 검색일자: 2025. 5. 20.)

## 나. 재정 통계

###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2월 총부채 현황 발표(2025. 1. 17.)<sup>737)</sup>

- 2024년 12월 말 기준 총부채는 9,315억크로나로, 11월 대비 2,800억크로나 감소
  - 이는 주로 스웨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업들의 차입이 감소했기 때문
    - 12월 말 기준 총부채 중 81%는 채권(bonds), 19%는 화폐시장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은 11월 대비 620억크로나, 화폐시장상품 부채는 2,190억크로나 감소
    -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1,280억크로나, 금융기관에서 2,150억크로나, 비금융 기업에서 40억크로나가 감소한 반면, 스웨덴 정부에서 660억크로나 증가

737) 스웨덴 통계청, "Minskad upplåning i räntebärande värdepapper," 2025. 1. 17.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finansmarknad/emitterade-vardepapper/emitterade-vardepapper/pong/statistiknyhet/emitterade-vardepapper16/>, 검색일자: 2025. 1. 21.

■ 스웨덴 통계청, 2023년 사회복지 지출 규모 발표(2025. 3. 31.)<sup>738)</sup>

- 통계청에서 집계한 2023년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조 7,020억코로나<sup>739)</sup>로 전년 대비 890억코로나<sup>740)</su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증가율은 5.5%로, 2022년 5.1%에서 증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경우, GDP 증가율과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2022년과 동일한 27.5%를 유지
  -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은 ① 노령 ② 질병/건강·의료 ③ 가족/아동 ④ 장애 ⑤ 실업 ⑥ 기타 사회적 취약성 ⑦ 주거 ⑧ 유족 총 8개로 구분되며, 이 중 노령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노령) 전년 대비 331억코로나<sup>741)</sup> 증가하여 4.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노령연금(Ålderspension)<sup>742)</sup>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질병/건강·의료) 노령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37억코로나<sup>743)</sup> 증가하여 7.4%의 증가율을 보임
    - 질병/건강·의료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에서 각각 10% 증가하였으며, 유급 병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되었던 특정 혜택이 중단되어 26억코로나<sup>744)</sup> 감소
  - (가족/아동) 전년 대비 76억코로나<sup>745)</sup> 증가하여 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모수당 및 자녀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 규모는 690억코로나<sup>746)</sup>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고 미취학 아동 보육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현물지원 규모는 1,000억코로나<sup>747)</sup>로 전년

738) 스웨덴 통계청, "Utgifter för socialt skydd som andel av BNP i stort sett oförändrade 2023," 2025. 3. 31.,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utgifter-for-det-sociala-skyddet-i-sverige-och-europa-samt-utgifternas-finansiering-esspros/pong/statistiknyhet/socialt-skydd-i-sverige-2023/>, 검색일자: 2025. 4. 21.

739) 원화로 약 251조 1,471억 2,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0) 원화로 약 13조 1,328억 4,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1) 원화로 약 4조 8,848억 9,8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2) 스웨덴의 노령연금(Ålderspension)은 공적연금 제도로 근로소득에 기반해 산정되며(자료: 스웨덴 연금청, "Riktålder - när kan jag ta ut allmän pension?," 2025. 4. 28.,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ga-i-pension/planera-din-pension/pensionsaldrar-och-riktalder>, 검색일자: 2025. 5. 8.), 노령연금이 없거나 노령연금이 최저보장연금액(독신 1만 1,907크로나, 기혼 1만 780크로나)보다 적은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보장연금(Garantipension)을 지급(자료: 스웨덴 연금청, "Garantipension - om du har låg pension," 2025. 1. 9.,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forsta-din-pension/sa-fungerar-pensionen/garantipension>, 검색일자: 2025. 4. 30.)

743) 원화로 약 4조 9,734억 4,6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4) 원화로 약 3,837억 8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5) 원화로 약 1조 1,213억 4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6) 원화로 약 10조 1,802억 6,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대비 증가

- (장애) 전년 대비 114억크로나<sup>748)</sup> 증가한 1,580억크로나<sup>749)</sup> 규모로 이 중 현금지원 제도인 ‘병가 및 활동 지원금’과 ‘연금’이 11.5%(42억크로나<sup>750)</su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현물지원 제도인 ‘특별 거주 시설의 간호 및 지원’이 9.1%(35억크로나<sup>751)</sup>) 증가
- (실업)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기타 현물급여 등을 포함한 실업 관련 지출은 총 420억크로나<sup>752)</sup> 규모로 전년 대비 0.8%(3억크로나) 증가
- (기타 사회적 취약성) 주거비 및 소득 지원, 성인 약물 남용자 치료 등을 포함한 기타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지출은 총 292억크로나 규모<sup>753)</sup>로 전년 대비 2억크로나<sup>754)</sup> 감소

표 3-Ⅷ-15 2018~2023년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단위: 백만크로나, %)

기능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질병/건강 관리	358,504	376,044	414,854	434,639	452,108	485,762
2. 장애	135,594	135,334	134,360	136,161	146,389	157,832
3. 노령	591,908	612,459	641,268	667,053	719,547	752,694
4. 생존자	12,767	12,412	12,050	11,458	11,058	10,766
5. 가족/자녀	148,449	153,246	153,507	156,698	161,563	169,149
6. 실업	37,777	36,258	50,007	50,978	41,794	42,115
7. 숙박 시설	19,168	19,043	20,858	20,682	21,596	23,858
8. 기타 사회적 취약성	39,786	34,930	31,292	29,425	29,384	29,226
사회 복지 혜택에 대한 총 지출	1,343,953	1,379,726	1,458,196	1,507,094	1,583,439	1,671,402
관리비/기타비용	27,032	27,603	27,960	27,051	29,154	30,223
사회 보호에 대한 총 지출	1,370,985	1,407,329	1,486,156	1,534,145	1,612,593	1,710,989
GDP 대비 점유율	28.6	28.0	29.6	28.1	27.5	27.5

자료: 스웨덴 통계청, "Utgifter för socialt skydd som andel av BNP i stort sett oförändrade 2023," 2025. 3. 31.,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utgifter-for-det-sociala-skyddet-i-sverige-och-europa-samt-utgifternas-finansiering-esspros/pong/statistiknyhet/socialt-skydd-i-sverige-2023/>, 검색일자: 2025. 4. 21.

747) 원화로 약 14조 7,540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8) 원화로 약 1조 6,819억 5,6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49) 원화로 약 23조 3,208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50) 원화로 약 6,199억 2,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51) 원화로 약 5,166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52) 원화로 약 6조 1,971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53) 원화로 약 4조 3,084억 6,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754) 원화로 약 295억 1,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 주요 자료 출처

### - 국제기구-

- EU, [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en](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en)
- IMF, <https://www.imf.org/en/Home>
- OECD, <https://www.oecd.org/en.html>

### - 미국 -

-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
- 미국 관리예산처(OMB), <http://www.whitehouse.gov/omb>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https://www.bls.gov>
-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s://www.bea.gov>
- 미국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
- 미국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
-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appropriations.house.gov>
- 미국 의회예산처(CBO), <https://www.cbo.gov>
-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http://www.crfb.org>

### - 일본 -

- 일본 금융청, <https://www.fsa.go.jp>
- 일본 내각관방, <https://www.cas.go.jp>
- 일본 내각부, <http://www.cao.go.jp>
- 일본 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
- 일본 법령정보, <https://laws.e-gov.go.jp>
- 일본 아동가정청, <https://www.cfa.go.jp>
- 일본은행, <https://www.boj.or.jp>
-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 일본 총리 관저, <https://www.kantei.go.jp>

- 일본 총무성 통계국, <https://www.stat.go.jp>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

### - 독일 -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공동경제전망, <https://gemeinschaftsdiagnose.de>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
-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https://www.bmas.de>
- 독일 연방 의회, <https://www.bundestag.de>
- 독일 연방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 <http://www.stabilitaetsrat.de>
- 독일 연방 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
- 독일 연방 통계청, <http://www.bundesregierung.de>
- 유럽연합 통계청, <https://ec.europa.eu/eurostat>

### - 프랑스 -

-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conomie.gouv.fr>
-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포털, <https://www.vie-publique.fr>
- 프랑스 국고청, <https://www.aft.gouv.fr>
- 프랑스 법률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
- 프랑스 사회보장서비스포털, <https://www.securite-sociale.fr/accueil>
- 프랑스 상원, <https://www.senat.fr>
- 프랑스 엘리제궁, <https://www.elysee.fr>
-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
- 프랑스 의회,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 프랑스 재무총국, <https://www.tresor.economie.gouv.fr>
- 프랑스 정부포털, <https://www.info.gouv.fr>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https://www.hcfc.fr>
- 프랑스 통계청, <https://www.insee.fr/fr/accueil>
- 프랑스 회계감사원, <https://www.ccomptes.fr>

## - 영국 -

- 영국 정부, <https://www.gov.uk>
- 재무부(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and-social-care>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work-pensions>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science-innovation-and-technology>
- 내각부(Cabinet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rime-ministers-office-10-downing-street>
- 영국 의회(UK Parliament), <https://www.parliament.uk>
-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127/public-accounts-committee>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https://obr.uk>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https://www.bankofengland.co.uk>

## - 호주 -

-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https://www.fwc.gov.au>
- 호주 국가재건기금, <https://www.nrf.gov.au>
-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 <https://www.actu.org.au>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https://www.industry.gov.au>
- 호주 선거위원회, <https://tallyroom.aec.gov.au>
- 호주 예산안, <https://budget.gov.au/content/documents.htm>

- 호주 의회, <https://www.aph.gov.au>
-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
- 호주 재정부, <https://www.finance.gov.au>
- 호주 중앙은행, <https://www.rba.gov.au>
- 호주 총리실, <https://www.pm.gov.au>
-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https://www.qra.qld.gov.au>
-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
- 호주 NSW 주정부, <https://www.nsw.gov.au>

### - 중국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https://www.ndrc.gov.cn>
- 중국 국가통계국, <https://www.stats.gov.cn>
- 중국 국무원, <https://www.gov.cn>
- 중국 상무부, <https://www.mofcom.gov.cn>
- 중국 시나재경, <https://finance.sina.com.cn>
- 중국 신화통신, <http://www.xinhuanet.com>
- 중국 인민은행, <http://www.pbc.gov.cn>
- 중국 인민일보, <http://cpc.people.com.cn>
- 중국 재정부, <https://yss.mof.gov.cn>
- 중국 21세기경제보도, <https://m.21jingji.com>

### - 스웨덴 -

-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https://www.konj.se>
- 스웨덴 국방부(Försvars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orsvarsdepartementet>
- 스웨덴 노동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arbetsmarknadsdepartementet>
- 스웨덴 농촌인프라부(Landsbygds- och infrastruktur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landsbygds--och-infrastrukturdepartementet>

- 스웨덴 문화부(Kultur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kulturdepartementet>
- 스웨덴 보건사회부(social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socialdepartementet>
- 스웨덴 재무부(Finans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
- 스웨덴 정부, <https://www.regeringen.se>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https://www.riksbank.se>
- 스웨덴 통계청(Statistikmyndigheten), <https://www.scb.se>

## 2025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

2025년 7월 25일 인쇄  
2025년 7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이 영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044-865-8115)

I S S N 2093-3541



ISSN 2093-3541

# 재정 동향

2025 | 상반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